ISSN 2093-3541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2.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N 2093-3541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2.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재정동향

Contents

제1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 1

Ⅰ. 재정정책 동향 ····· 3

Ⅱ.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 21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 21
2.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 22
3.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 24

제2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 29

Ⅰ. 국제기구 ····· 33

1. EU ····· 33
2. IMF ····· 82
3. OECD ····· 103

Ⅱ. 미국(FY2022: 2021.10.~2022.9.) ····· 131

Ⅲ. 일본(FY2022: 2022.4.~2023.3.) ····· 191

Ⅳ. 독일(FY2022: 2022.1.~2022.12.) ····· 223

Ⅴ. 프랑스(FY2022: 2022.1.~2022.12.) ····· 261

Ⅵ. 영국(FY2022-23: 2022.4.~2023.3.) ····· 287

[주요 자료 출처] ····· 329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I 재정정책 동향*

01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2. 1. 21.)

□ 1월 21일,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방역 추가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

- ○ 이번 추경은 ①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 ②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③ 예비비로 구성
- ○ 재원은 국채발행(11.3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2.7조원)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편성
- ○ 재정 총량 변화로는 총지출 본예산 대비 14.0조원 증가, GDP 대비 재정수지 본예산 △2.5% → △3.2%, 본예산 대비 국가채무 11.3조원 증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진아 선임연구원(jina@kipf.re.kr)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발표·게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표 1-Ⅰ-1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단위: 조원)

주요 내용	규모
① 소상공인 지원	11.5
• 2차 방역지원금	9.6
• 소상공인 손실보상	1.9
② 방역 보강	1.5
• 중증환자 병상확보	0.4
•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0.6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0.5
③ 예비비 보강	1.0
총규모	**14.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2022. 1. 21.

02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2022. 2. 11.)

□ 2월 10일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및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 마감 결과, 총세입 524.2조원, 총세출 496.9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원이었으며, 이월액 4.0조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3조원(일반회계 18.0조, 특별회계 5.3조) 흑자를 기록

표 1-Ⅰ-2 2021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예산 <2차 추경 기준>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불용
합계	2021(a)	506.7	524.2	496.9	27.3	4.0	23.3	8.4
	2020(b)	460.0	465.5	453.8	11.7	2.3	9.4	6.6
	(a-b)	46.7	58.7	43.1	15.6	1.7	13.9	1.8
일반회계	2021(a)	424.4	438.4	417.7	20.6	2.6	18.0	5.5
	2020(b)	389.1	392.4	385.2	7.1	1.4	5.7	3.8
	(a-b)	35.3	46.0	32.5	13.5	1.2	12.3	1.7
특별회계	2021(a)	82.3	85.8	79.1	6.7	1.3	5.3	2.9
	2020(b)	70.8	73.1	68.6	4.5	0.9	3.6	2.9
	(a-b)	11.5	12.7	10.5	2.2	0.4	1.7	0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 2. 11.

0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2. 2. 21.)

□ 2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

-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

표 1-Ⅰ-3 재정 총량표

(단위: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본예산 (A)	2022년 1회 추경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B)	국회 확정 (C)	본예산 대비 (C-A)	정부안 대비 (C-B)
◇ 총수입	482.6	514.6	553.6	553.6	553.6	-	-
(증가율)	(0.2)	(6.8)	(7.6)[1)]	(7.6)[1)]	(7.6)[1)]		
◇ 총지출	558.0	604.9	607.7	621.7	624.3	+16.6	+2.6
(증가율)	(8.9)	(18.1)	(8.9)	(11.4)	(11.9)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4.1	△68.1	△70.8	△16.6	△2.6
(GDP 대비, %)	(△3.7)	(△4.4)	(△2.5)	(△3.2)	(△3.3)	(△0.7%p)	(△0.1%p)
■ 국가채무	956.0	965.3	1,064.4	1,075.7	1,075.7	11.3	-
(GDP 대비, %)	(47.3)	(47.3)	(50.0)	(50.1)	(50.1)	(+0.1%p)	(-)

주: 1) 2022년 총수입 증가분/증가율은 2021년 제2회 추경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2.21., p.3

□ 주요 증액내역

○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 소상공인 지원 +1.3조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보정률 80% → 90% 상향 조정(+0.5조원),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0.45조원), 2차 방역지원금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요건 확대 등(+0.36조원)

-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0.41조원),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0.16조원),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0.09조원), 돌봄지원(+0.09조원)

○ (방역지원: +1.3조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정부안 대비 +1.0조원 증액, 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 +0.2조원, 방역인력 지원 +0.1조원

□ 주요 감액내용

○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예산을 추가 보강(1.5조 → 2.8조원)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 추경안 대비 예비비 증액 규모를 일부 조정(1.0조 → 0.6조원)

표 1-Ⅰ-4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안 (A)	2022년 제1회 추경확정 (B)	증감 (B-A)
◇ 총지출	558.0	607.7	621.7	624.3	+2.6
1. 보건·복지·고용	199.7	217.7	219.2	221.0	+1.8
2. 교육	71.2	84.2	84.2	84.2	-
3. 문화·체육·관광	8.5	9.1	9.1	9.2	+0.1
4. 환경	10.6	11.9	11.9	11.9	-
5. R&D	27.4	29.8	29.8	29.8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6	31.3	42.8	43.8	+1.0
7. SOC	26.5	28.0	28.0	28.1	+0.1
8. 농림·수산·식품	22.7	23.7	23.7	23.7	-
9. 국방	52.8	54.6	54.6	54.6	-
10. 외교·통일	5.7	6.0	6.0	6.0	-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22.3	22.3	-
12. 일반·지방행정	84.7	98.1	98.1	98.1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별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전체 모습」, 2022.2.21., p.8

04 2021년 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발표(2022. 2. 23.)

□ 2월 23일, 정부는 2021년 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를 발표

○ 2021년 말 대외채권은 1조 779억달러로 전년 말(1조 278억달러) 대비 502억달러 증가

-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200억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 민간기업 등)의 무역신용 증가(+103억달러) 및 채무상품 직접투자(+82억달러) 확대가 주된 요인

○ 대외채무는 6,285억달러로 전년 말(5,449억달러) 대비 836억달러 증가

-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662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69억달러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4,622억달러로 767억달러 증가
- 단기외채 증가폭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및 교역 개선에 따른 민간 무역신용 증가에 기인

□ (평가)외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단기외채/총외채(26.4%) 비중은 2015년 이후 최저 수준,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5.9%)도 전년 대비 감소

표 1-Ⅰ-5 대외채무 현황

(단위: 억달러,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년비
총 외채	3,821	4,120	4,412	4,707	5,449	6,285	+836
단기외채	1,048	1,160	1,256	1,355	1,593	1,662	+69
장기외채	2,774	2,961	3,156	3,353	3,856	4,622	+767
단기외채/총외채(%)	27.4	28.1	28.5	288	29.2	26.4	△2.8%p
단기외채/보유액(%)	28.2	29.8	31.1	33.1	36.0	35.9	△0.1%p
대외채권	7,814	8,774	9,188	9,572	10,278	10,779	+502
순대외채권	3,993	4,654	4,777	4,864	4,828	4,494	△334

자료: 한국은행, 「2021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20. 2.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022. 2. 23.

□ (향후 대응) 우크라이나 긴장 확대, 미 통화긴축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금 유출입 흐름과 대외채무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 지속 계획

05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발표(2022. 3. 29.)

□ 3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

*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 2021년 국세감면액은 55.9조원, 국세감면율은 13.3%로 추정

□ 2021년 국세감면율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추세 둔화*와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증가율(전년 대비): ('21년) 5.7%, (직전 5개년도 평균) 8.1%

** 국가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국가재정법」 제88조)

표 1-Ⅰ-6 국세감면율 추이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추정)	2022년(전망)
상승률	12.7%	13.9%	14.8%	13.3%	13.9%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2. 3. 29.

표 1-Ⅰ-7 국세감면한도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실적)	2021년(추정)	2022년(전망)
■ 국세감면액(A)[1]	52.9	55.9	59.5
■ 국세수입 총액(B)[2]	303.6	363.9	367.4
■ 국세감면율[A/(A+B)]	14.8	13.3	13.9
■ 국세감면 한도	13.6	1.4	14.5

주: 1) 국세감면액: (2021~2022년)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추정·전망치
2) 국세수입총액: (2020~2021년) 실적치, (2022년) 국회 확정 세입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2022. 3. 29.

□ 2022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 (성과평가 내실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

06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2022. 3. 29.)

□ 3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

○ 이번 지침은 3월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2023년도 예산안은 ① 확고한 경제도약, ②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③ 미래투자 확대, ④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

○ (확고한 경제도약)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민간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생활물가 안정 지원, 위기 소상공인 회복·재기 뒷받침 등 민생안정 기반을 공고화

○ (미래투자 확대)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투자 확대

○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경제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① 재정지출 재구조화, ② 재량지출 10% 절감, ③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④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도 병행

○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 추진

○ 집행실적·성과평가 등을 고려, 경직성 경비 외 전 재량지출 10% 절감

○ 신규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준칙 도입 준비 등 중기재정관리 강화

○ 정책협의 활성화, 현장소통 확대 등으로 열린재정 구현

07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2022. 4. 5.)

□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

○ 총세입 전년 결산 대비 58.7조원 증가한 524.2조원, 총세출 전년 결산 대비 43.1조원 증가한 496.9조원,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3조원 발생

○ 큰 폭의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결산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40.8조원(GDP 대비 +2.2%p) 개선

○ 순자산(자산-부채)은 재무결산 도입(2011년) 이래 가장 큰 폭인 27.3% 증가한 643.5조원(전년 대비 +138.1조원)

표 1-Ⅰ-8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분	2020년 결산	2021년		증감			
		예산 (2차 추경 기준)	**결산**	결산 대비	(%)	예산 대비	(%)
총수입(A)[1]	478.8	514.6	**570.5**	+91.7	19.2	+55.9	10.9
총지출(B)[1]	549.9	604.9	**600.9**	+51.0	9.3	△4.0	△0.7
통합재정수지(A-B)	△71.2	△90.3	**△30.4**	+40.8		+59.9	
(GDP 대비)	(△3.7)	(△4.4)	**(△1.5)**	(+2.2%p)		(+2.9%p)	
사회보장성기금수지(C)	40.8	36.2	**60.1**	19.3		23.9	
관리재정수지(A-B-C)	△112.0	△126.6	**△90.5**	+21.5		+36.1	
(GDP 대비)	(△5.8)	(△6.2)	**(△4.4)**	(+1.4%p)		(+1.8%p)	

주: 1) 일반·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 4. 5.

08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2. 5. 12.)

□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59조원 규모의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 (규모) 59.4조원(지방이전지출 제외 시 36.4조원)
- ○ (내용) ① 소상공인·민생·방역지원 등 36.4조원, ② 지방재정 보강 23.0조원
- ○ (재원)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원, 지출구조조정 7.0조원, 초과세수 44.3조원

규모	59.4조원	
주요 내용	**Ⅰ. 일반지출**	**36.4조원**
	①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손실보전금(600만~1,000만원 맞춤형 지원)	23.0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 금융지원	1.7조원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② 방역 보강	6.1조원
	■ 방역소요 보강(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3.5조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원(치료제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2.6조원
	③ 민생·물가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1.7조원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1조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0.3조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0.1조원
	④ 예비비 보강	1.0조원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23.0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2022. 5. 12.

09 「2022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2022. 5. 26.)

□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2022년 기금평가 결과(자산운용평가, 존치평가)를 5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

□ (자산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2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하여 14개 기금을 '우수' 이상으로 평가

○ 중장기자산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평가 대상 기금의 운용성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며, 각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현금성자금 축소 및 중장기 자산 확대 등을 권고

○ 코로나19 지속 등 불안정한 기금운용 여건에 대응하여 위기관리 고도화 및 기금운용 안정성 제고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산운용·위험관리 등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권고

○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

□ (기금존치평가 결과) 주택도시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8개 기금의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여, 4개 기금 통·폐합(조건부존치 1, 폐지 1, 통합 2), 11개 기금 31개 사업 및 10개 기금 자산운용의 개선을 권고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2019년 폐지 권고 유지,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운영을 권고

○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평가 대상 18개 기금의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

- 사업효과가 불충분하고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노후 소형 유조선 현대화 등 3개 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유사사업으로 이관이 바람직한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28개 사업의 개선 권고

○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수산발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4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를 권고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2022. 5. 29.)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지출증액 2.6조원+감액사업 조정 0.2조원)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 → 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포함한 추경 규모는 59.4조원 → 62.0조원으로 확대

□ 주요 증감내역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최대 200만원 → 300만원)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 방역예산 +1.1조원 증액,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을 위해 +0.2조원 증액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 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조원 → 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 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 최종 총량 변화

○ 총수입 1회 추경 대비 +55.5조원 증가, 총지출 1회 추경 대비 +55.2조원 증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5.2%(1회 대비 +0.1%p), 국가채무 49.7%(1회 대비 △0.4%p)

표 1-Ⅰ-9 재정 총량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1회 대비	정부안 대비
					정부안	확정		
◇ 총수입	482.6	514.6	553.6	553.6	608.3	609.1	+55.5	+0.8
(증가율)	(0.2)	(6.8)	(14.7)	(14.7)	(26.0)	(26.2)		
◇ 총지출	558.0	604.9	607.7	624.3	676.7	679.5	+55.2	+2.8
(증가율)	(8.9)	(18.1)	(8.9)	(11.9)	(21.3)	(21.8)		
■ 통합재정수지	△75.4	△90.3	△54.1	△70.8	△68.5	△70.4	0.3	△1.9
(GDP 대비, %)	(△3.7)	(△4.4)	(△2.5)	(△3.3)	(△3.2)	(△3.3)	(-)	(△0.1)
■ 관리재정수지	△112.5	△126.6	△94.1	△110.8	△108.8	△110.8	0.0	△1.9
(GDP 대비, %)	(△5.6)	(△6.2)	(△4.4)	(△5.2)	(△5.1)	(△5.1)	(0.1)	(-)
■ 국가채무	956.0	965.3	1,064.4	1,075.7	1,067.3	1,068.8	△7.0	1.5
(GDP 대비, %)	(47.3)	(47.3)	(50.0)	(50.1)	(49.6)	(49.7)	(△0.4)	(0.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 2. 21., p. 3

표 1-Ⅰ-10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구분	2022년 본예산	2022년 제1회 추경	2022년 제2회 추경안 (A)	2022년 제2회 추경 (B)	증감 (B-A)
◇ 총지출	607.7	624.3	676.7	679.5	2.8
1. 보건·복지·고용	217.7	221.0	227.1	229.1	2.0
2. 교육	84.2	84.2	95.0	95.0	-
3. 문화·체육·관광	9.1	9.2	9.0	9.1	0.1
4. 환경	11.9	11.9	11.5	11.5	-
5. R&D	29.8	29.8	29.5	29.5	0.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43.8	69.0	69.4	0.3
7. SOC	28.0	28.1	27.5	27.6	0.1
8. 농림·수산·식품	23.7	23.7	23.5	23.7	0.3
9. 국방	54.6	54.6	53.0	53.1	-
10. 외교·통일	6.0	6.0	5.8	5.8	0.0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22.2	22.2	0.0
12. 일반·지방행정	98.1	98.1	110.8	110.8	△0.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2. 2. 21., p. 3

1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2022. 6. 16.)

□ 6월 16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목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운용 4대 기조로 발표

표 1-Ⅰ-11 4대 정책방향별 주요 내용

① 민간중심 역동경제	•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 육성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② 체질개선 도약경제	• 공공·연금개혁
	• 노동시장 개혁
	• 교육개혁
	• 금융·서비스산업 혁신
③ 미래대비 선도경제	• 과학기술·R&D 혁신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④ 함께 가는 행복경제	• 사회안전망 강화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복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 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p.5

○ (당면현안 대응)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계획

12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2022. 6. 20.)

□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

○ 2020년 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

○ 130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평가됨

- 실적부진기관(미흡등급 이하) →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호, 18개 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기획재정부는 금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 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표 1-Ⅱ-1 세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성장률											
	IMF 전망(1월)				IMF 전망(4월)				OECD 전망(5월)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2020	2021	2022	2023
세계	-3.1	5.9	4.4	3.8	-3.1	6.1	3.6	3.6	-3.4	5.8	3.0	2.8
미국	-3.4	5.6	4.0	2.6	-3.4	5.7	3.7	2.3	-3.4	5.7	2.5	1.2
유로	-6.4	5.2	3.9	2.5	-6.4	5.3	2.8	2.3	-6.5	5.3	2.6	1.6
일본	-4.5	1.6	3.3	1.8	-4.5	1.6	2.4	2.3	-4.6	1.7	1.7	1.8
중국	2.2	8.1	4.8	5.2	2.2	8.1	4.4	5.1	2.2	8.1	4.4	4.9
한국	-0.9	4.0	3.0	2.9	-0.9	4.0	2.5	2.9	1.3	4.1	2.7	2.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2*, 20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2022.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2022, Table 1.1. 재구성

■ IMF는 *World Economic Outlook April*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1년 6.1%로 추정하고 2022년 3.6%로 전망

- ○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2022년과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 선진국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어 2022년 3.3%, 2023년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은 일부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성장이 하락되어 2022년 3.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전쟁 노출도, 팬데믹 상황 및 회복 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과 다국 간 대처가 중요함

- IMF는 *Fiscal Monitor April 2022*에서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 러시아 제재의 영향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
  - 전쟁, 상품가격의 높은 변동성, 인플레이션 및 차입비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가 점차 종료되어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5%p 개선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 세계 국가채무 또한 2022~2024년 동안 GDP의 약 9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취약층 및 우선 분야에 집중하여 지원을 지속하되 제한된 재정 여력과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선택한 정책을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

- OECD의 *Economic Outlook June 2022*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되며,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2년 8.5%, 2023년 6.0%로 예상됨
  - (경제전망)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1.5%p 하향, 2022년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4.3%p 상향 조정되었음
  - (상하방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장기화,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 노출 등 위험요인이 존재
  - (정책권고) 백신 및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을 권고

Ⅱ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요약

0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 본 보고서는 IMF 회원국들의 경제 및 정책의 동향·전망 및 관련 이슈 분석을 제시함. 아래의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22 No.1]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를 참고 바람

□ (동향)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오미크론 변이의 단기적 영향 이후 2분기부터 글로벌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으로 1월 전망 이후 크게 악화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6.1%에서 2022년과 2023년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2021년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차 둔화되어 2022년 3.3%, 2023년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2021년 6.8%에 이어 2022년 3.8%, 2023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전쟁 노출도, 팬데믹 상황 및 회복 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과 다국 간 대처가 중요함

○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 확장 이후 부채관리는 필요하나, 코로나19 및 전쟁 취약층에 대한 지원 축소는 신중해야 하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등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각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 인상 확대도 고려

○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 등을 위한 교육, 고용안전망 확충, 탄소가격 설정,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필요

02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 본 보고서는 IMF 회원국들의 재정 관련 동향·전망 및 관련 이슈 분석을 제시함. 아래의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22. No.2]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을 참고 바람

□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가격과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재정정책 운영 환경이 급변함

○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경제성장 둔화, 높은 부채 및 차입비용으로 인해 예산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동향) 팬데믹 초기에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한 후 경제가 회복되고, 예외적 지원을 철회하면서 2021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4%, 일반정부 채무는 97.0%를 기록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에서 -7.3%, 신흥 시장국에서 -5.3%, 저소득 개도국에서 -4.9%에 달했음

- 선진국의 재정수지는 2020년보다 개선되었으며, 세수 회복과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 철회로 2022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시장국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 적자가 확대된 신흥 시장국은 거의 없었음

□ (전망) 2022년 세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9%, 채무는 94.4%로 전망

○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가 점차 종료되어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5%p 개선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 세계 국가채무 또한 2022~2024년 동안 GDP의 약 9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고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수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정책권고) 재정정책은 향후 전망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 러시아 제재의 영향이 강한 국가는 재정정책으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층이나 우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된 재정 여력과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선택한 정책을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

03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1), 2)]

※ 본 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함. 아래의 내용은 보고서의 제1장을 요약한 내용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의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22. No.3]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을 참고 바람

○ (세계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되며,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2년 8.5%, 2023년 6.0%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zero-COVID policies)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식품 및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1.5%p 하향, 2022년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4.3%p 상향 조정되었음

○ (주요국 경제전망) 러시아 대외무역 의존도, 각 국가별 원자재 생산 여부 등에 따라 경제충격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 심화, 유가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 2023년 1.2%로 전망
- (일본) 2022년 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 약한 외부수요, 주요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등이 단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의 반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22년 1.7%, 2023년 1.8%로 예상됨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6.20.

2)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유로지역)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각각 2.6%, 1.6%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추가 자극을 가하고 실질가계소득과 기업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5%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민간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의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민간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며, 핵심 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등으로 기업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등을 지적
-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 및 강화된 규제, 부동산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4%, 4.9%로 예상
- (인도 및 브라질)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교역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어 2023년 OECD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12월 전망치 대비 2배 수준인 8.5%로 전망
- (고용)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지난 2022년 5.2%, 2023년 5.3%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일부 국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팬데믹 이후 국제 이주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실질 임금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중국의 봉쇄조치, 유럽의 수요 둔화, 미국의 소비전환(재화에서 서비스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이 4.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5.0%, 2023년 -3.8%로 예상됨

○ (리스크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장기화,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 노출 등 위험요인이 존재

-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단으로 인한 유럽의 생산활동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핵심원자재 공급 부족과 물류비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리스크의 확대 및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위험 존재 등

○ (정책권고) 백신 및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을 권고함

- (코로나19)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지원을 통해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 공급 관련 물류 장벽 완화 및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
-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각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강도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재정적 지원 정책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으로 전환, 높은 에너지가격 등의 영향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이후 부채상환의 부담이 늘어 공공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공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
-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이 필요

표 1-Ⅱ-2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Q4	2022 Q4	2023 Q4
실질GDP 성장률[1]								
세계[2]	3.3	-3.4	5.8	3.0	2.8	4.3	1.9	3.0
G20[2]	3.5	-3.0	6.2	2.9	2.8	4.3	1.9	2.9
OECD[2]	2.2	-4.6	5.5	2.7	1.6	4.8	1.5	1.6
미국	2.4	-3.4	5.7	2.5	1.2	5.5	1.2	0.7
유로지역	1.9	-6.5	5.3	2.6	1.6	4.6	1.2	1.8
일본	0.8	-4.6	1.7	1.7	1.8	0.3	2.5	0.9
한국	-	1.3	4.1	2.7	2.5	-	-	-
비OECD[2]	4.3	-2.3	6.1	3.3	3.8	3.8	2.3	4.2
중국	6.8	2.2	8.1	4.4	4.9	3.9	4.9	4.5
인도[3]	6.8	-6.6	8.7	6.9	6.2	-	-	-
브라질	-0.4	-4.2	5.0	0.6	1.2	-	-	-
실업률[4]	6.5	7.1	6.2	5.2	5.3	5.5	5.3	5.3
인플레이션[1], [5]	1.7	1.5	3.7	8.5	6.0	5.2	8.9	5.2
재정수지[6]	-3.2	-10.4	-7.4	-5.0	-3.8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1]	3.4	-8.1	10.0	4.9	3.9	8.5	2.6	4.1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2022, Table 1.1. 재구성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Ⅰ. 국제기구

Ⅱ. 미국(FY2022: 2021.10.~2022.9.)

Ⅲ. 일본(FY2022: 2022.4.~2023.3.)

Ⅳ. 독일(FY2022: 2022.1.~2022.12.)

Ⅴ. 프랑스(FY2022: 2022.1.~2022.12.)

Ⅵ. 영국(FY2022-23: 2022.4.~2023.3.)

주요국 재정동향 요약

(국제기구) EU, IMF, OECD에서 논의된 세계 경제·재정 관련 이슈와 보고서를 요약·정리

- (EU) EU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주요 회의에서 European Semester 등을 논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및 Fiscal Monitor 보고서와 지역경제보고서 등이 발표됨
- (OECD)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된 세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상반기 주요 보고서인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를 발표함
-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3 회계연도(2022.10.~2023.9.) 대통령 예산안 발표
  - (예산 규모 및 목표) 전년 대비 1.0% 감소한 5조 7,920억달러 규모의 ①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②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③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3]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편성
  - (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올해(FY2022) 추정치 대비 4.5%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올해(FY2022) 추정치 대비 약 1.0%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일본)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및 2022년 회계연도 제1차 추경 편성
  - (본예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 규모의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
    - 2022년 예산은 신형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에 중점
  - (1차 추경)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가 등 물가 급등에 따른 종합 긴급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2조 7,009억엔(26.5조원) 규모의 추경이 정부안대로 통과

3) 법인세율은 28%(현행 21%)로 인상 계획, 부유세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상위 0.01%를 대상으로 최저세율 20% 신설 계획

- (독일) 연방하원, 2022년 2차 예산안 승인
  -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2022년 2차 예산안은 4,958억유로로 확정되어 의회에서 통과됨
  - 연방경제기후부,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2.4.27.)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의 상승, 각종 제재,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을 2022년 2.2%, 2023년 2.5%로 전망
- (프랑스) 2022년 예산법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 지원대책, 연료가격 인하 지원방안, 임대료 인상제한 등을 발표
  - (2022 예산법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 GDP 대비 재정수지는 -5%로 전망되며, 보건의료 및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예산은 204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안정 지원대책) ① 에너지 지원금 지급 연장, ② 저소득층 대상 '푸드 체크(food check)' 지원, ③ 연금 및 사회급여 조기수령, ④ 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⑤ TV시청료 폐지 등의 주요 조치 시행
  - (연료가격 인하 지원방안)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연료가격을 리터당 15센트씩 인하(재정소요 약 20억유로)
  - (임대료 인상제한) 2023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임대료를 3.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시행
- (영국) 2022년 3월, 영국 재무부는 'Spring Statement 2022'를 발표
  - 2022년 영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2021년 10월 전망치(6.0%) 대비 하향 조정한 3.8%로 전망
  - FY2022-23에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9,875억파운드, 총관리지출은 1조 870억파운드로 직전 전망(2021.10.) 대비 모두 상향 조정됨
  - 국민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 연료세(휘발유·경유) 인하, 녹색 기술에 대한 비주거 재산세 면제,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2024년) 등 '조세 계획(Tax Plan)'과 가계 및 기업 지원정책을 추가 발표

Ⅰ 국제기구

01 EU*

표 2-Ⅰ-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6.	EU 집행위, 중·저소득국 백신 공여 실적 및 목표 발표
2022.2.1.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거시금융지원 발표
2022.2.8.	EU 집행위, 반도체 투자 확대 발표
2022.2.10.	EU 집행위, 2022년 겨울 경제전망 발표
2022.2.23.~6.3.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제재 발표
2022.2.28.~5.24.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국방 지원 발표
2022.3.1.	EU 집행위, 경제회복기금 연차 보고서 발표
2022.3.10.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
2022.3.11.	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및 베르사유 성명 채택
2022.3.15.	EU 이사회, 2023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
2022.3.2.	EU 집행위, 2023 재정정책 지침 발표
2022.3.24.	EU 집행위,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 반기 보고서 발표
2022.4.25.	EU 집행위, 2021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2.4.27.	EU 집행위, 코로나19의 다음 단계를 대비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
2022.5.9.	유럽미래회의, 최종 보고회 개최
2022.5.12.	EU 집행위, 국가 지원 단계적 종료 발표
2022.5.16.	EU 집행위,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
2022.5.16.	EU 집행위, 재정 규정 개정안 발표
2022.5.18.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대응 및 재건 계획 발표
2022.5.18.	EU 집행위, 국방력 강화 조치 발표
2022.5.23.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
2022.6.7.	EU 집행위, 2023년 EU 예산안 발표
2022.6.9.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
2022.6.22.	유럽재정위원회, 2023년 유로지역의 재정기조 평가보고서 발표
2022.6.24.	EU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 부여 결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장준희 선임연구원(jhjang@kipf.re.kr)

가.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간 예산은 집행위 예산안 편성, 이사회 입장 채택, 의회 입장 채택, 이사회·의회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사회와 의회 입장이 다를 경우 개시되며 합의 실패 시 집행위가 새로운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EU 이사회, 2023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22.3.15.)[4]

○ 경제 재무 이사회는 2023년 예산이 EU가 합의한 장기 목표와 정치적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여파로부터 유럽 경제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 모든 EU 기관들은 예산 편성과 집행 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의 모든 요소와 관련 재정 규정들의 예산 원칙[5]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적으로 지난해 지침과 동일

- 실제 필요에 따라 현실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을 보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년도 재정체계 한도 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함
- 동시에, EU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하고 현재 및 지난 다년도 재정체계에 따라 이뤄진 승인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함
- 지난 지침에서 모든 EU 기관들의 인력을 2020년 수준으로 최적화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다년도 재정체계의 공공행정 분야 예산에 맞춰 관리 지출을 감축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것을 강조
-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NGEU)의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투명성과 채무 및 기타 모든 부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4) EU 이사회, Council sets its priorities for the 2023 EU budget, 2022.3.1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15/council-sets-its-priorities-for-the-2023-eu-budget/, 검색일자: 2022.3.22.

5) 예산단일의 원칙(unity), 단년도 예산주의(annuality), 건전 재정의 원칙(sound financial management), 투명성(transparency) 준수의 원칙 등

□ EU 집행위, 2023년 EU 예산안 발표(2022.6.7.)[6]

○ (방향) 2023년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고 유럽을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끌며 일자리를 보호·창출하고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 및 인접국의 시민·기업·피해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단일시장 강화, 미래 지향적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
- 이와 동시에 유럽 녹색협약 등 유럽의 정치적 우선순위를 계속 지원
  - EU 집행위원장이 EU의 6가지 주요 목표로 제시한 1) 유럽 녹색협약, 2)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럽, 3) 모두를 위한 경제, 4) 유럽식 생활방식의 증진, 5) 세계에서 더 강한 유럽, 6)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이행

○ (규모[7]) 2023년 EU 예산안으로 승인기준 1,856억유로, 지급기준 1,663억유로를 편성

- 전년 대비 승인기준으로는 2.1% 증가, 지급기준으로는 2.6% 감소
- 정확한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에 대한 추가 지출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
- 여기에 더해 최대 8,070억유로의 경제회복기금(NGEU) 중 대출을 제외한 보조금 운용안도 함께 편성되어 2023년 1,139억유로가 추가 지원될 예정

○ (주요 내용[8])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에 216억유로, 결속, 회복력 및 가치분야에 700억유로 등을 편성

6) EU 집행위, EU budget 2023: Empowering Europe to continue shaping a changing world, 2022.6.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473, 검색일자: 2022.6.20.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Draft annual budget 2023, 2022.6.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3474, 검색일자: 2022.6.20.
EU 집행위,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2022.,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about_the_european_commission/eu_budget/wd_0_final_web_v4_kvao22002enn.pdf

7)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혹은 그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함.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함

8) 승인기준 금액

- (Heading 1-연구 및 혁신)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9]에 123억유로(NGEU에서 18억유로 추가 보조) 등 136억유로 편성
- (Heading1-유럽 전략적 투자) InvestEU[10] 3억유로(NGEU에서 25억유로 추가 보조), 유럽 연결 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11] 29억유로,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12] 13억유로 등 48억유로 편성
- (Heading2-지역 개발 및 결속) 경제, 사회, 지리적 통합과 친환경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461억유로 편성
- (Heading2-회복 및 복구) 팬데믹 경제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문제 대응을 위해 NGEU에서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13]에 1,035억유로 지원
- (Heading2-사람, 사회적 결속 및 가치) 교육 이동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rasmus+[14]에 35억유로, 유럽 전역의 예술가와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Creative Europe[15]에 3억유로, 정의, 권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해 2억유로 등 48억유로 편성
- (Heading3-농수산정책) 유럽 농어민 지원, 농수산 부문 회복력 강화,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관리를 위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16]에 536억유로, 유럽해양양식기금(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에 11억유로 등 549억유로 편성

9) 기후 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 EU의 경쟁력 및 성장 촉진 등을 위해 기후 변화 적응, 암 예방·치료, 해양 및 강 복원,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토양 회복 등 5개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
10) 연구 및 혁신,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야, 전략적 기술 관련 프로그램
11) 교통, 에너지, 디지털 등 세 부문의 유럽 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인프라 투자로, 교통 부문(7년간 258억유로) 내 군사 이동성 예산이 17억유로 편성됨
12)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디지털 기술 강화,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지원
13)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6,725억유로(2018년 불변 가격), 7,238억유로(경상 가격) 규모 자금을 회원국에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녹색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대비하도록 함
14)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5) 유럽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과 문화유산을 보호·발전시키고 문화·창조 부문의 경쟁력과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16) 농민 소득 지원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직불금 지원, 농촌 개발, 시장 조치를 시행하는 프로그램

- (Heading6-대외 정책) 인근국 지원, 개발원조 및 국제협력(NDICI) 120억유로, 인도적 지원 16억유로 등 143억유로 편성

○ (향후 일정) 집행위가 이사회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장 채택(7월), 의회의 공식 입장 발표(가을)가 이뤄지며,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 조정을 위한 위원회가 10월 25일~11월 14일, 21일간 열릴 예정

표 2-Ⅰ-2 2023년 EU 예산안과 NGEU 기금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지급기준		
	금액	전년 대비 변화율(%)	Next Generation EU	금액	전년 대비 변화율(%)	Next Generation EU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568	-1.0	4,299	20,901	-2.7	2,983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0,087	3.6	104,149	55,841	-10.0	125,109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2,923	2.6	3	49,131	-12.8	15,532
2.b. 회복력 및 가치	7,164	13.2	104,146	6,709	17.7	109,577
3. 천연자원 및 환경	57,223	1.0	5,472	57,445	1.5	2,597
4. 이주 및 국경관리	3,727	10.9	-	3,067	-5.7	-
5. 안보 및 국방	1,901	4.9	-	1,111	-10.2	-
6. 파트너 및 세계	16,782	-2.3	-	13,774	6.6	-
7. 유럽 공공 행정	11,449	7.8	-	11,449	7.8	-
기타 특수 기금	2,855	2.0	-	2,680	2.2	-
합계 (EU27 GNI 대비 %)	185,591 (1.14%)	2.1	113,921	166,268 (1.02%)	-2.6	130,689

자료: EU 집행위, *Statement of estimat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3*, 2022, Policy highlights, pp. 12~15; pp. 99~100

나. European Semester

※ European Semester는 회원국들의 경제·재정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통상 EU의 차년도 우선순위 설정(11월) 및 회원국별 평가(1~3월), 회원국의 국가별 계획 제출 및 EU의 국가별 정책권고 발표(4~7월), 회원국의 권고 반영 및 국가별 예산안 제출(7~10월) 등으로 진행

※ 올해는 회복·복구기금과 연계해, 우선순위 설정(11월), 회원국의 국가개혁 및 안정화·수렴 보고서 제출(4월), 회원국별 평가 및 정책권고(5월), 회복·복구기금 검토 및 연간 보고서 발표(7월) 순으로 진행됨[17]

□ EU 집행위, 2023 재정정책 지침 발표(2022.3.2.)[18]

○ 집행위는 회원국들에 2023년 예비적 재정정책 지침을 제시

- EU 차원의 일반 원칙들을 제공함으로써 회원국이 이에 맞춰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19]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유로지역[20] 및 회원국 재무장관회의를 거쳐[21] 5월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에서 세부 재정정책 지침을 권고

○ 먼저 겨울 경제전망을 기초로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을 검토

- EU 경제는 2021년 강하게 반등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동 제한조치 재도입, 의료 시스템 부하, 인력 부족,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

17) EU 집행위, "The European Semester in the time of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european-semester/european-semester-timeline/2022-european-semester-cycle_en, 검색일자: 2022.6.27.

18) EU 집행위, "Commission presents fiscal policy guidance for 2023," 2022.3.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476, 검색일자: 2022.3.22.

19) 매년 4월 EU 회원국은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유로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에서 재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함

20)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1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21) 3월 14일 유로지역 재무장관회의, 15일 회원국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음

로 인해 연말을 기점으로 확장세가 둔화되었음

- 그러나 노동시장 개선, 높은 가계저축,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 회복·복구기금 시행 등 강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동 전망에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집행위는 최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침을 조정할 계획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에너지가격 상승, 지속적인 공급망 병목현상, 시장 심리 악화 등을 통해 EU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방 위험을 높임

○ 2023년 재정정책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설정

- 회원국들은 2022년까지 확장적(supportive) 재정 기조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중립 기조로 전환이 필요하되,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2023년부터 점진적인 재정 조정(fiscal adjustment)을 시작하되, 지나치게 급격한 재정건전화는 성장과 채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제고와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하며, EU 차원의 회복·복구기금 외에도 회원국 차원의 공공 투자 및 개혁이 필요
- 공공채무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투자 및 개혁을 중기 계획에 제시해야 함
-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채무 회원국은 2023년에 재정 조정을 시작하고 중·저채무 회원국은 중립적 기조를 목표로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를 강화해야 함

○ 일반 면책 조항[22]을 2022년에도 계속 적용하되 봄 전망(5월)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고, 초과적자시정절차[23] 역시 2022년 봄까지 적용을 유보하고 2022년 가

22) 일반 면책 조항(general escape clause)은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준수 의무로부터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EU 규정임

23)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는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corrective arm)로 재정수지 기준(GDP 대비 3%) 또는 채무기준(GDP 대비 60%)을 위반한 국가에 적용함. 집행위에서 위반 사항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를 기초로 기준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 시 권고와 함께 시정기한을 부과하는 순서로 진행됨. 부과한 기한 내에 초과적자를 시정해야 하며, 권고를 불이행했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적 제재 등의 조치를 발동함

을에 재검토할 예정

□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2022.5.23.)[24]

○ (재정정책 지침) 2023년 재정정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충격의 양상과 EU의 에너지 안보 요구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careful) 설계가 필요

-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더 높은 투자를 달성하는 데 회복·복구계획의 완전하고 적시적인 시행이 중요
- 자동 안정화 장치의 작동을 허용하고, 에너지 위기 완화 및 러시아 침공 관련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제공하는 한편, 회원국 자체 재원을 통한 기초 경상지출의 증가를 통제함으로써 신중하게(prudent) 운영돼야 함
- 팬데믹으로 GDP 대비 채무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차년도 재정 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반영한 신중한(prudent) 중기 조정 경로에 기반해야 함
-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지출을 조정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함

○ (일반 면책 조항) 일반면책조항 적용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2024년부터 비적용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 및 하방 위험 강화, 전례 없는 에너지가격 상승, 지속적인 공급망 붕괴 상황을 고려
-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원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팬데믹 기간 중의 광범위한 지원 기조에서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조치 및 중기 지속가능성 보장 기조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울 것으로 기대

○ (재정준칙) 적자 및 채무 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18개국의 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결과, 상당수 국가가 적자 또는 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팬데믹과

24) EU 집행위,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Sustaining a green and sustainable recovery in the face of increased uncertainty," 2022.5.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82, 검색일자: 2022.5.24.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uropean Semester 2022 Spring Package," 2022.5.2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3216, 검색일자: 2022.5.24.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신규 초과적자시정절차는 건의하지 않기로 함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적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핀란드가 채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거시경제 불균형[25]) 2022년 경고체계보고서에서 지적된 12개국을 심층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가들이 거시경제 불균형 상태로 평가됐으나 전반적으로 취약점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등 7개국은 불균형(imbalances), 그리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 3개국은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s) 상태임[26]
  - (독일) 지속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저축 대비 저조한 투자
  - (스페인) 높은 실업률, 높은 대외·정부·민간 채무
  - (프랑스) 낮은 생산성 성장, 높은 정부 부채, 낮은 수출 경쟁력
  - (이탈리아) 높은 정부 채무, 낮은 생산성 성장,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 아일랜드와 크로아티아는 채무 비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견고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유럽재정위원회,[27] 2023년 유로지역의 재정기조 평가보고서 발표(2022.6.22.)[28]

25)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

26) EU 집행위, "2022 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 Communication," 2022.5.23.,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2022-european-semester-spring-package-communication_en, 검색일자: 2022.5.26.

27) 유럽재정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 EFB)는 유로지역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EU 집행위에 자문하고, EU 재정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집행을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2015년 말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2016년 10월 운영을 시작하였음. 유럽재정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유로지역의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유럽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에 속해 있는 회원국들이 안정성장협약을 잘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28) 유럽재정위원회, "The European Fiscal Board assesses the appropriate fiscal stance for the euro area in 2023," 2022.6.2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ropean-fiscal-board-assesses-appropriate-fiscal-stance-euro-ar ea-2023_en, 검색일자: 2022.6.29.
European Fiscal Board, *Assessment of the fiscal stance appropriate for the euro area in 2023*, 2022.,

※ 유럽재정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European semester에 속한 절차로 회원국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준비하는 데 안내 역할을 함[29]

○ 유로지역 경제는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등 역풍을 맞았지만, 강건한 소비지출과 투자에 힘입어 2022년에 코로나19 이전 GDP를 회복하고 2023년에는 잠재GDP를 상회할 전망

○ 2023년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fiscal stance)[30]를 유지하되([그림 2-Ⅰ-1]) 전년보다는 긴축적일(제한적 재정충격, restrictive fiscal impulse) 전망([그림 2-Ⅰ-2] 참조)

- 전반적인 재정정책 규모는 여전히 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이 부분적으로 종료됨

○ 위원회는 금융 여건이 급격히 긴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3년 다소 긴축적인(moderately restrictive) 재정 충격을 권고하고 채무가 높은 회원국은 특히 재정 건전화가 중요하다고 평가

- 회원국의 재정 계획이 대체로 위원회의 권고와 일치
- 광범위한 확장 재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ECB의 물가 안정 임무를 어렵게 하는 역효과(counterproductive)를 낳을 수 있으며, 정부는 취약가구에 대한 선별적이고(targeted) 일시적인 조치에 집중해야 함
- 특히 채무가 높은 회원국은 에너지 대응 조치들이 공공채무의 하향 추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한편, 집행위가 일반 면책 조항 적용을 1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합의된 재정 준칙 및 절차에 기반을 둔 정량적 권고를 집행위가 제시하지 않으면 규정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경계

https://ec.europa.eu/info/system/files/efb_assessment_of_euro_area_fiscal_stance.pdf, 검색일자: 2022.6.29.

29) European Semester 주기에서 6월에 유럽재정위원회가 다음 연도 유로지역의 재정기조가 적합한지 평가함. 이후 여름 혹은 초가을에 유로지역 회원국은 다음 연도 예산을 준비하는 절차를 거침. 회원국은 가을에 예산 계획을 EU 집행위 및 유로그룹에 제출하고, 다음 해 회원국들이 예산을 집행함

30) '재정기조'는 잠재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로 측정되고, 재량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나타냄. 재정기조 값이 양수(+)이면 재정기조가 긴축적 운용이고, 음수(-)이면 확장적 운용을 의미
'재정충격'은 잠재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연간 변화로 곧 재정기조의 변화를 나타냄. 재정충격 값이 양수(+)이면 긴축이고, 음수(-)이면 확장을 의미

그림 2-Ⅰ-1 유로지역 재정기조(Fiscal stance)

구조적 기초재정수지(Structural primary balance, % of potential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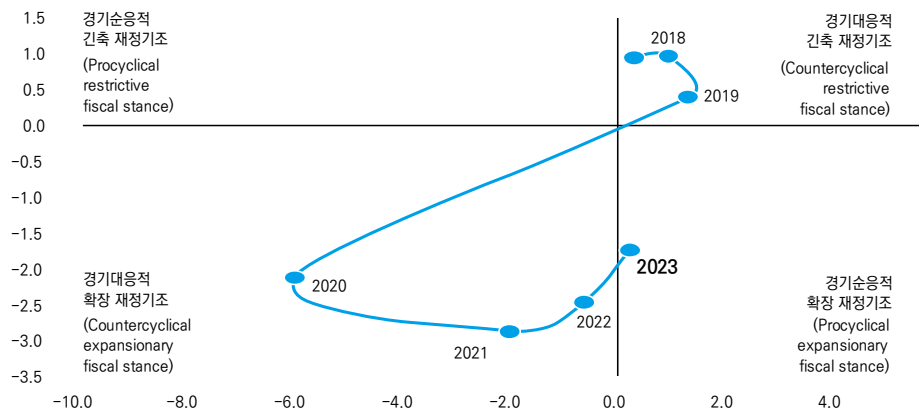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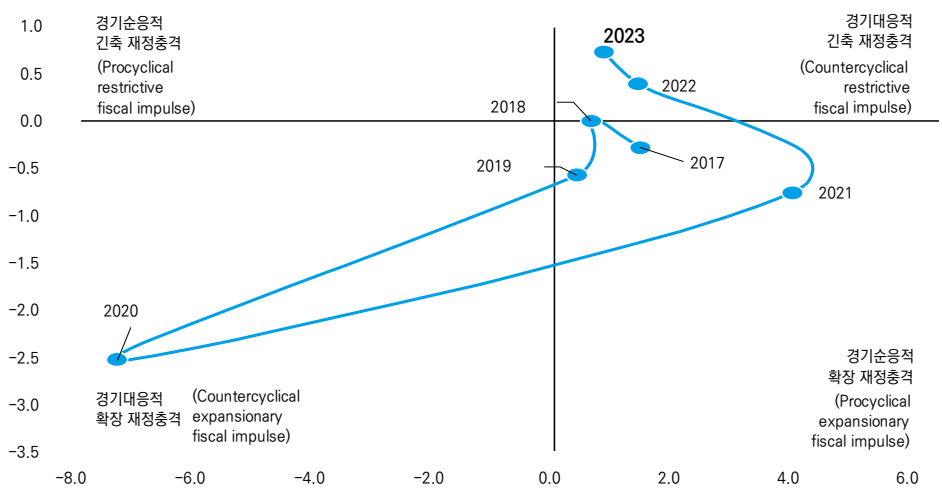


그림 2-Ⅰ-2 유로지역 재정충격(Fiscal impulse)

구조적 재정수지 연간 변화(Annual change in the structural primary balance)



주: 1. '재정기조'는 잠재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로 측정되고, 재량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나타냄. 재정기조 값이 양수(+)이면 재정기조가 긴축적 운용이고, 음수(-)이면 확장적 운용을 의미
2. '재정충격'은 잠재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연간 변화로 곧 재정기조의 변화를 나타냄. 재정충격 값이 양수(+)이면 긴축이고, 음수(-)이면 확장을 의미

자료: European Fiscal Board, *Assessment of the fiscal stance appropriate for the euro area in 2023*, 2022, graph 2.3; graph 2.4.

다. 정책적 이슈

1) 코로나19 대응

□ EU 집행위, 중·저소득국 백신 공여 실적 및 목표 발표(2022.1.6.)[31]

○ EU는 Team Europe[32]을 통해 2021년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억 5천만회분을 중·저소득국에 공여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에 3억 8천만회분을 공급

○ 2022년 중반까지 누적 7억회분 공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접종률이 낮은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 EU 집행위, 경제회복기금 연차 보고서 발표(2022.3.1.)[33]

○ 이번 보고서는 회복·복구기금 규정에 따른 경제회복기금의 1차 연도 보고서로, 2021년 2월 규정 채택부터 2021년 12월 정규 지급까지의 진행 상황을 수록

○ 집행위와 이사회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26개국이 제출한 계획 중 22개국의 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 2,910억유로, 대출 1,540억유로 등 총 4,450억유로를 배정

○ 집행위는 아일랜드(비신청)를 제외한 21개 회원국에 566억유로를 사전 지급[34]하였고, 정규 지급을 신청한 5개국(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중 스페인에 1차 정규분으로 100억유로를 지급

○ 각 사업들은 여섯 가지 중점 분야(pillar) 중 두 가지(주·보조)로 분류되는데, 지출 추정액의 49.8%가 친환경 전환에, 28.7%가 디지털 혁신에 배정됨[35]

31) EU 집행위, "Statement by President von der Leyen on vaccine sharing in 2021 and targets for 2022," 2022.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121, 검색일자: 2022.1.19.

32)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개시된 460억유로(2022.1. 기준)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백신 보급, 의료체계 강화,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 등을 협력국에 제공

33) EU 집행위, "NextGenerationEU: First annual report on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finds implementation is well underway," 2022.3.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98, 검색일자: 2022.3.22.

34) 사업 착수금으로 배정액의 13%까지 신청 가능

35) 각 지출액의 총합은 총 지출액의 200%임

- 특히 규정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기후 목표(object)와 디지털 목표에 각각 총액의 37%, 20%[36]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데 모두 이를 준수하였고 EU 전체로는 각각 40%, 26%가 배정되어 기준을 상회

○ 한편 보고서에 각 중점 분야별 사례들이 소개됨

- (친환경-루마니아) 무공해 및 저배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고배출 차량 대체를 위한 폐차 등이 포함됨
- (디지털-크로아티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바일 e-서비스 플랫폼 구축 투자 등이 포함됨

□ EU 집행위,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 반기 보고서 발표(2022.3.24.)[37]

○ 집행위는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SURE)의 집행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연 2회 작성하여 이사회, 의회 등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3차 보고서를 발표

○ 현재까지 19개 회원국, 944억유로가 승인되었고 이 중 약 900억유로를 지원

- 2020년에 근로자 3,100만명(자영업자 800만명 포함)과 기업 250만개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수혜 회원국 근로자의 약 30%,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며, 수혜 대상은 소기업과 도소매·숙박·식품서비스·제조업에 집중되었음
- 2021년에도 근로자 300만명과 기업 40만개를 지원하였고 지난 보고서 이후 헝가리의 신규 조치에 대한 지원을 승인

○ 본 정책이 팬데믹에 따른 피해 완화와 회복 지원에 성공적이었다는 지난 두 보고서의 분석을 업데이트하고 결론을 재확인

- 예비적 분석[38]에 따르면 2020년 수혜 회원국 내 150만명의 실직을 효과적으로 예방했을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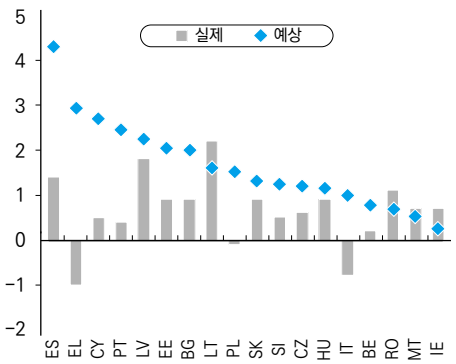
36) 각 사업이 기후 및 디지털 목표에 기여(100%), 부분적으로 기여(40%) 또는 비기여(0%)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규정의 부표 6~7)에 각 지출액을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기후 계수가 40%인 사업은 지출액의 40%만 목표에 반영됨

37) EU 집행위, "SURE: Third report shows continued success in protecting jobs and supporting recovery," 2022.3.2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987, 검색일자: 2022.4.22.

38) 보고서는 SURE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어려우며, 생산과 고용 간의 관계에 SURE 외 여러 요인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첨언

- 수혜 회원국의 2020년 실업률 상승은 예상보다 현저히 낮았고([그림 2-Ⅰ-3])
  2020년 SURE 수혜금액이 클수록 실업률 증가가 완만했음([그림 2-Ⅰ-4])
- 이러한 노동시장 조치, 특히 단기 근로 계획은 다른 정책 대응과 함께 예상 실업률 상승과 비교하여 SURE 수혜 회원국의 실업률을 약 1%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약 150만명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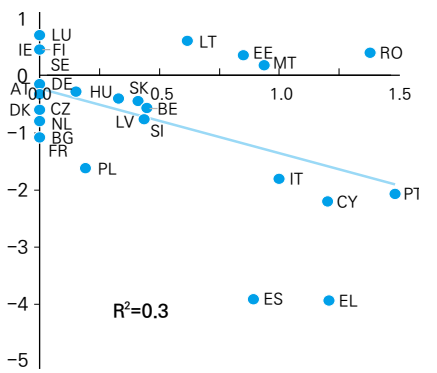
그림 2-Ⅰ-3 2020년 SURE 수혜 회원국의 실제와 예상 실업률 차이



주: 1. Y축은 1999~2019년 국가별 회귀분석을 통한 실업률의 예상 변화. 오쿤의 법칙 접근법에 따라 실업률 변화를 실질 성장률과 기타 통제 변수들에 대해 패널 회귀분석함
2. ES 스페인, EL 그리스, CY 키프로스, PT 포르투갈, LV 라트비아, EE 에스토니아, BG 불가리아, LT 리투아니아, PL 폴란드, SK 슬로바키아, SI 슬로베니아, CZ 체코, HU 헝가리, IT 이탈리아, BE 벨기에, RO 루마니아, MT 몰타, IE 아일랜드, HR 크로아티아(제외)

자료: EU 집행위, "SURE at 18 months: third bi-annual report," 2022.

그림 2-Ⅰ-4 2020년 SURE 지급액과 실업률 차이 간 관계



주: 1. X축은 국가별 2020년 SURE 지급액(GDP 대비 %), Y축은 좌측 도표에서 설명된 실제 실업률에서 예상 실업률을 차감한 수치임
2. 좌측 도표 참고. FR 프랑스, SE 스웨덴, AT 오스트리아, DE 독일, DK 덴마크, FI 핀란드, NL 네덜란드, LU 룩셈부르크

자료: EU 집행위, "SURE at 18 months: third bi-annual report," 2022.

- SURE 프로그램이 수혜국들의 단기 근로 지원정책 채택과 고용 유지정책 연장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존 설문결과에 덧붙여, 최근 설문[39]에서 EU 시민들의 동 정책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39) EU 집행위 여론조사기관(Eurobarometer)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회원국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EU가 대출을 제공한 것이 좋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2%가 그렇다고 응답

- 또한 EU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SURE 사회적 채권(SURE social bond)을 직접 발행해 저리 조달함으로써 회원국들이 82억유로의 비용을 절감[40]했다고 추정

참고 2-Ⅰ-1 EU의 실업위험완화긴급지원(SURE)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회원국의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한 EU의 단시간 근로 지원 정책으로,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자영업자 소득 보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회원국에 대출

○ (지원 대상 정책)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단시간 근로제(short-time work schemes)의 신설 혹은 연장, 자영업자 대상의 유사 조치 등 회원국 차원의 고용 지원책으로 급증하는 공공지출 상황을 지원

- 근로자가 근로 단축 시간에 대해 공공소득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한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와 유사 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임금보조금 제도, 자영업자에 대한 일회성 소득 지원 급여와 운영비용 절감 지원, 특별 육아휴직 수당 등 지원

○ (재원) 금융시장에서 EU 집행위가 차입을 통해 조달하며, 회원국은 그중 최소 보증금액(최대 1천억유로 대출 금액의 25%)인 250억유로를 보증하고, 회원국별 보증 비율은 2020년 EU 예산의 총 국민소득에 비례

- 2020년 10월 10년물 100억유로와 20년물 70억유로 등 170억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작으로 2022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5~30년물, 총 918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

40) 회원국들이 SURE 대출을 하지 않고 동일한 일자에 SURE 채권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채권을 발행했을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각 SURE 채권의 발행 가격과 이 반사실적 채권의 발행 가격 간 차이를 고려해 계산

- EU의 조달 금리는 만기와 발행일에 따라 -0.51%~+0.32%(1차 보고서 기준)였으며 회원국에 백투백 대출(back to back lending)됨

○ (지원 현황)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금액순) 등 19개국 944억유로가 승인되었고 그중 900억유로가 지불됨

표 2-Ⅰ-3 국가별 지원 금액

(단위: 백만유로)

국가	승인금액	지불금액
이탈리아	27,438	27,438
스페인	21,324	21,324
폴란드	11,236	8,236
⋮	⋮	⋮
합계	94,415	89,637

자료: EU 집행위, "SURE at 18 months: third bi-annual report," 2022, table 1 편집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0.
EU 집행위, "SURE: Taking Stock After Six Months," 2021.
EU 집행위, "SURE: One Year On," 2021.
EU 집행위, "SURE at 18 months: third bi-annual report," 2022.
EU 집행위, SURE 홈페이지,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financial-assistance-eu/funding-mechanisms-and-facilities/sure_en, 검색일자: 2022.4.25.

□ EU 집행위, 코로나19의 다음 단계를 대비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2022.4.27.)[41]

○ 코로나19 팬데믹의 현 단계(phase)를 관리하고 다음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 회원국에 새로운 팬데믹 접근방식을 제시

○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중증 또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 향후 예상되는 신종 변이 발생과 확산 위험에 대비해야 함

○ 현 상황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되 대응 방향을 전환하고 대비를 강화해야 함

-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동시 확산을 고려해 백신 및 추가 접종을 강화
- 모든 코로나19 사례를 식별·보고하기보다는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전파 강도, 중증 영향 등을 추정하는 데 집중하고, 여러 급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통합 감시 시스템을 설정
- 병상 수용력, 진단 역량 확대 등 의료 시스템 복구에 투자
-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및 백신 제조 능력 확보를 지원

□ EU 집행위, 국가 지원 단계적 종료 발표(2022.5.12.)[42]

○ EU는 2020년 3월 국가 지원(State aid)[43] 임시 완화를 통해 회원국이 자국 예산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 및 기업(특히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수차례 확대·연장한 바 있음

41) EU 집행위, "COVID-19: Commission calls on Member States to step up preparedness for the next pandemic phase," 2022.4.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646, 검색일자: 2022.5.23.
EU 집행위, "Speech by Commissioner Kyriakides at the Press Conference on COVID-19-Sustaining EU Preparedness and Response: Looking ahead," 2022.4.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2_2709, 검색일자: 2022.5.23.

42) EU 집행위, "State aid: Commission will phase out State aid COVID Temporary Framework," 2022.5.1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2_2980, 검색일자: 2022.5.23.

43) EU 기능조약 제107조 제1항은 조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의 경쟁 왜곡 지원이 역내시장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역내시장과 양립하는 지원 형태를 규정. 집행위는 제2항 제b호(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와 제3항 제b, c호에 따라 국가 지원을 승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12008E107&from=EN, 검색일자: 2022.5.26.
https://ec.europa.eu/competition-policy/state-aid/coronavirus/temporary-framework_en, 검색일자: 2022.5.26.

○ 현재까지 승인된 조치는 950여개, 3조 2천억유로에 달하며, 회원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7,300억유로가 실제 지출됨

○ 2022년 6월 30일 만료되는 현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 단, 일정 조건하에서 보증, 대출 등 채무 상품을 직접 보조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만기·금리 등에 대해 대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하는 경우 2023년 6월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21년 11월 신규 도입한 투자지원 조치[44]와 지급여력 지원(solvency support)[45]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2월까지 유지

2)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거시금융지원 발표(2022.2.1.)[46]

○ 집행위는 신규 긴급 거시금융지원(MFA)[47]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2억유로의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발표

- 우크라이나는 부패 퇴치 등 광범위한 개혁 의제를 조건으로 2014년부터 다섯 차례 거시금융지원을 통해 총 56억유로를 지원받은 바 있음

○ 우크라이나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으며, 이번 지원으로 거시경제 안정과 전반적인 회복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이사회 및 의회 승인 즉시 6억유로를 지급하고 향후 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6억유로를 분할 지급

44) 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45)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 중개인에게 회원국이 보증을 제공
46) EU 집행위, "Commission tables proposal for €1.2 billion emergency macro-financial assistance package for Ukraine, as announced by President von der Leyen," 2022.2.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674, 검색일자: 2022.2.22.
47) 거시금융 패키지(Macro-financial Assistance: MFA)는 EU의 인접 국가들 및 협력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의 일부로, 예외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 MFA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전제조건(민주주의 원칙, 인권, 법치)을 충족해야 함

- 16일 의회,[48] 21일 이사회[49]에서 채택되었으며 3월 6억유로, 5월 6억유로 지급을 완료[50]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제재 발표(2022. 2. 23. ~6. 3.)[51]

○ EU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조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경제 제재, 경제협력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최근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독립 인정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EU 이사회는 2월 23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패키지를 채택[52]

- 러시아 두마(연방 하원) 의원 전원과 주요 연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적 제한 조치, 비정부 통제 지역과의 경제관계 제한, 금융 제재 등

○ EU 회원국 정상들은 2월 24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제재 성명을 발표[53]

48) EU 의회, "Parliament approves €1.2 billion in loans to Ukraine," 2022. 2. 16.,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211IPR23122/parliament-approves-EU1-2-billion-in-loans-to-ukraine, 검색일자: 2022. 2. 22.

49) EU 이사회, "Council adopts €1.2 billion assistance to Ukraine," 2022. 2.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1/council-adopts-1-2-billion-assistance-to-ukraine/, 검색일자: 2022. 2. 22.

50) EU 집행위, "EU disburses €600 million in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Ukraine," 2022. 5. 2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83, 검색일자: 2022. 5. 23.

51) EU 이사회, "EU restrictiv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risis in Ukrain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ukraine-crisis/, 검색일자: 2022. 2. 25.,
EU 이사회, "EU adopts fifth round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ver it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 4. 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08/eu-adopts-fifth-round-of-sanctions-against-russia-over-its-military-aggression-against-ukraine/, 검색일자: 2022. 4. 22.
EU 이사회,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dopts sixth package of sanctions," 2022. 6.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6/03/russia-s-aggression-against-ukraine-eu-adopts-sixth-package-of-sanctions/, 검색일자: 2022. 6. 20.

52) EU 이사회, "EU adopts package of sanctions in response to Russian recognition of the non-government controlled areas of the Donetsk and Luhansk oblasts of Ukraine and sending of troops into the region," 2022. 2. 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3/russian-recognition-of-the-non-government-controlled-areas-of-the-donetsk-and-luhansk-oblasts-of-ukraine-as-independent-entities-eu-adopts-package-of-sanctions/, 검색일자: 2022. 2. 25.

53) EU 이사회,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24 February 2022," 2022. 2. 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2/24/european-council-conclusions-24-february-2022/, 검색일자: 2022. 2. 25.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군사적 공격을 강력 규탄
- 금융, 에너지 및 운송, 이중용도품목,[54] 수출, 비자, 제재 명단 추가 및 신규 기준 추가 등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에 동의
- EU는 우크라이나와 결속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정치·금융·인도주의적·물자 지원을 지속할 것임

○ 5차 제재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석탄 및 기타 고체 화석연료 수입,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러시아 및 벨라루스 운송 사업자의 EU 진입, 목재 등 상품 수입, 항공유 등 수출, 암호화폐 예금 등을 금지

○ 6차 제재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및 특정 석유류 구매, 수입, 이전을 금지하기로 결정

- 단, 원유는 6개월, 기타 석유류는 8개월 후 시행하고, 러시아 공급 의존도가 높고 대안이 없는 일부 회원국이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도 원유 및 감압석유 해상 수입에 대한 유예를 적용

54) dual-use goods, 민간과 군사 용도에 모두 사용 가능한 품목

표 2-Ⅰ-4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주요 제재 조치

주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임시보호 제공	-	거주, 노동시장 및 주택 접근, 의료, 아동 교육 지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3억 3,500만유로, EU 시민 보호 메커니즘을 통한 현물 지원, RescEU를 통한 의료용품 지원
우크라이나 거시금융 지원	-	12억유로 추가 제공, 최대 90억유로 지원 계획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	유럽평화기금 20억유로 지원
러시아 1차 제재 패키지	2.23.	러시아 의원·주요 개인 및 단체 제재, 비정부 통제 지역과의 경제 교류 제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러시아 2차 제재 패키지	2.25.	푸틴 러 대통령 등에 대한 자산 동결, 제재 대상 확대, 금융·에너지·교통·기술 제재, 비자 제재
러시아 3차 제재 패키지	2.28.; 3.2.; 3.9.	러시아 항공사 EU 영공 비행 금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제재 대상 확대, 러시아 국영매체 방송 금지, 러시아 은행 SWIFT 배제, 대 러시아 수출 제재
러시아 4차 제재 패키지	3.15.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거래·투자 등 금지, 수출 제재 확대, 제재 대상 추가
러시아 5차 제재 패키지	4.8.	석탄 및 기타 고체 화석연료 수입 금지, EU 항구 진입 금지, 러시아 선박의 EU 입항 금지, 제재 대상 추가 등
러시아 6차 제재 패키지	6.3.	원유 및 석유류 수입 금지, 러시아 은행 SWIFT 추가 배제, 러시아 방송국 EU 내 방송 중단, 제재 대상 추가

자료: EU 이사회,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sponse-ukraine-invasion/, 검색일자: 2022.6.27.
EU 이사회,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sponse-ukraine-invasion/eu-solidarity-ukraine/, 검색일자: 2022.6.27.를 바탕으로 정리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국방 지원 발표(2022.2.28.; 3.23.; 4.13.; 5.24.)[55]

○ EU 외교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전력 강화 및 러시아 군사 공격으로부터의 민간

55) EU 이사회,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doubles funding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2022.3.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3/23/eu-support-to-ukraine-council-doubles-funding-under-the-european-peace-facility/, 검색일자: 2022.4.22.
EU 이사회,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agrees on third tranche of support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for total €1.5 billion," 2022.4.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4/13/eu-support-to-ukraine-council-agrees-on-third-tranche-of-support-under-the-european-peace-facility-for-total-1-5-billion/, 검색일자: 2022.4.22.
EU 이사회, "EU support to Ukraine: Council agrees on further increase of support under the European Peace Facility," 2022.5.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5/24/eu-support-to-ukraine-council-agrees-on-further-increase-of-support-under-the-european-peace-facility/, 검색일자: 2022.5.25.

인 보호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에서 총 20억유로를 지원

* 유럽평화기금은 글로벌 안보 제공자로서의 EU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대체·신설된 예산 외(off-budget)[56] 기금으로, 2021~2027년 최대 56억 9천만유로(경상가격 기준)가 채택됨

○ 개인 보호 장비, 응급 키트, 연료, 방어 목적의 살상(lethal equipment)[57] 및 비살상 군사 장비 등 공급에 활용

□ EU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 및 베르사유 성명 채택(2022.3.11.)[58]

○ EU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정당하지 않은 군사적 침략이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EU와 세계의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온전히 이행할 것임을 결의

○ 우크라이나의 민주적 재건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물질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선언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을 약속

○ EU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기로 한 지난 선언(2021.12.)을 재확인하고, 국방비 대폭 증액 등 국방력과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 합의

○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러시아 가스, 석유 및 석탄 수입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대응 및 재건 계획 발표(2022.5.18.)[59]

56) 연간 예산 추정액에 맞춰 회원국들이 매년 기여금을 분담

57)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번 지원이 EU가 제3국에 살상 장비를 제공한 첫 사례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58) EU 이사회, "Informal meeting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Versailles, 10-11 March 2022," 2022.3.11.,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2/03/10-11/, 검색일자: 2022.3.22.

59) EU 집행위, "Ukraine: Commission presents plans for the Union's immediate response to address Ukraine's financing gap and the longer-term reconstruction," 2022.5.18.,

○ EU 정상회의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에 따라 집행위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와 장기 재건 계획을 발표

○ 기존 거시금융지원(MFA), 예산 지원, 긴급 지원, 위기 대응, 인도적 지원, 군사적 지원에 더해 최대 90억유로의 추가 거시금융지원을 제안

- EU 보증을 바탕으로 한 장기 양허성 대출과 이자 지급에 대한 보조금으로 구성되며, 분할 지급될 계획
-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며 G7, G20, 국제금융기구 등 협력국들의 동참도 요청

○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후 재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계획을 준비할 것을 제안

- 사회기반시설 등 재건, 국가와 국가기관의 현대화, 구조·규제 개혁, 경제·사회 회복 지원 등 4개 목표를 구상
- 집행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국을 동참시킴으로써 협력국 간 조율, 분업화, 중복 방지를 유도
- EU 예산 내에 'RebuildUkraine'를 신설해 투자와 개혁을 명확히 연결하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건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 부여 결정(2022.6.24.)[6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21, 검색일자: 2022.5.23.
EU 집행위, "Remarks by Executive Vice-President Dombrovskis and Commissioner Gentiloni on the EU's immediate response to address Ukraine's financing gap, as well as the longer-term reconstruction framework," 2022.5.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2_3178, 검색일자: 2022.5.23.

60) EU 집행위, "The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s to Council confirming Ukraine, Moldova and Georgia's perspective to become members of the EU and provides its opinion on granting them candidate status," 2022.6.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790, 검색일자: 2022.6.29.
EU 의회, "Grant EU candidate status to Ukraine and Moldova without delay, MEPs demand," 2022.6.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616IPR33216/grant-eu-candidate-status-to-ukraine-and-moldova-without-delay-meps-demand, 검색일자: 2022.6.29.
EU 이사회,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on Ukraine, the membership applications of Ukraine, the Republic of Moldova and Georgia, Western Balkans and external relations, 23 June 2022," 2022.6.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2/06/23/european-council-conclusions-on-ukraine-the-membership-applications-of-ukraine-the-republic-of-moldova-and-georgia-western-balkans-and-external-relations-23-june-2022/, 검색일자: 2022.6.29.

※ EU조약(TEU) 제49조에 따라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행위의 협의, 의회의 과반 동의, 정상회의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며, 기존 가입 후보국은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튀르키예(터키) 등 5개국, 잠재 가입 후보국은 2개국이었음

○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하고 4월과 5월 질의답변서를 EU에 제출

○ 이에 집행위는 가입 조건 평가 후 6월 17일 승인 의견을 발표했으며 의회에서도 6월 23일 결의안을 채택

○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를 결정하고,[61] 우크라이나의 집행위 권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결정할 예정

- 집행위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기준, 경제적 기준, 회원국 의무 이행 능력에 대해 대체적으로 양호 혹은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의 책임, 능률, 반부패 개선이 필요하고 시장 경제 기능 개선을 위해 부패 척결, 국가 영향력 축소, 사유 재산권 강화, 노동 유연성 강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
- 조건 충족 후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공식 협상 개시를 결정하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등 35개 정책 영역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전 회원국과 후보국의 비준이 필요

3) 인플레이션 급증 및 ECB 통화정책

□ EU 통계청, 2021년 12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 상승률 발표(2022. 1. 20.)[62]

○ (유로지역) 2021년 12월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 상승률(HICP)[63]은 전월(4. 9%)보다 상승한 5. 0%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EU 집행위, "Enlargement Policy,"
https://ec.europa.eu/neighbourhood-enlargement/enlargement-policy_en, 검색일자: 2022. 6. 29.

61) 이와 함께 몰도바의 후보국 지위를 승인, 조지아의 후보국 지위를 조건부 승인함

62) EU 통계청, "Euro area annual inflation up to 5. 0%," 2022. 1.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083883/2-07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1. 19.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5. 0% in the euro area," 2022. 1. 20.,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59/2-20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 1. 21.

63) HICP(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HICP는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임

- 근원 인플레이션[64]은 전월(2.6%)과 동일한 2.6%로 집계

○ (EU) 2021년 12월 EU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전월(5.2%)보다 상승한 5.3%로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 (국가별)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2.0%), 리투아니아(10.7%), 폴란드(8.0%) 순이며, 낮은 국가는 몰타(2.6%) 포르투갈(2.8%) 핀란드(3.2%) 순임

○ (부문별) 유로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9% 상승한 에너지가 절반(2.46%p) 가량 기여하였고 그 뒤로 서비스(1.02%), 비에너지 산업재[65](0.78%p), 식품, 주류 및 담배(0.71%p)가 기여

○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속보치 발표 후 COSAC 회의[66]에 참석해, 경제의 급속한 재개로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했고 수급 불일치로 내구재 및 일부 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은 올해 중 완화(ease)될 것이라고 전망[67]

□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2022.3.10.)[68]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

○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의 월간 순 매입 규모를 축소하고 3분기에 조기 종료

64)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기준

65) 비에너지 산업재(Non-energy industrial goods)는 의류 소재 및 의류, 신발, 가구 및 가전, 제약제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의 품목을 포함

66) EU 회원국 의회들의 합동 회의

67) 유럽중앙은행, "Introductory statement by Christine Lagarde, President of the ECB, at the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Parliamentary Committees for Union Affairs of the Parliaments of the European Union (COSAC)," 2022.1.14.,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2/html/ecb.sp220114~fe1e70ec1a.en.html, 검색일자: 2022.1.19.

68)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3.10.,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310~2d19f8ba60.en.html, 검색일자: 2022.3.22.
유럽중앙은행, "Press conference," 2022.3.1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2022/html/ecb.is220310~1bc8c1b1ca.en.html, 검색일자: 2022.3.22.

○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 -0.50%)는 유지하되 자산매입 종료 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

○ 긴급매입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69] 순 매입은 예정대로 2022년 3월 말 종료하고 2024년 말까지는 원금 재투자 예정

□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개최(2022.6.9.)[70]

○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및 식품 물가가 급증하면서 5월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확대·강화됨

- 인플레이션 전망이 2022년 6.8%, 2023년 3.5%, 2024년 2.1%로 모두 3월 전망[71](각각 5.1%, 2.1%, 1.9%)보다 상승
-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도 2022~2024년 각각 3.3%, 2.8%, 2.3%로 3월 전망(각각 2.6%, 1.8%, 1.9%)보다 상승

○ 기 발표한 바와 같이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순 매입을 7월 1일 종료하고 긴급매입프로그램 순 매입은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0.0%, 한계대출금리 0.25%, 수신금리 -0.50%)를 25bp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2011년 7월[72] 이후 11년 만의 인상임

○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속되거나 더 악화된다면 9월에 더 큰 폭의 인상(a larger increment)이 적절하다고 발표

69) 팬데믹 대응을 위해 2020년 3월 신규 도입된 자산 매입 조치로, 최초 7,500억유로에서 현재 1조 8,500억유로 규모로 확대됨

70)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2.6.9.,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2/html/ecb.mp220609~122666c272.en.html, 검색일자: 2022.6.20.
유럽중앙은행, "Press conference," 2022.6.9.,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2022/html/ecb.is220609~abe7c95b19.en.html, 검색일자: 2022.6.20.

71) 유럽중앙은행, "Combined monetary policy decisions and statement," 2022.3.10., https://www.ecb.europa.eu/press/pressconf/shared/pdf/ecb.ds220310~c4c5a52570.en.pdf, 검색일자: 2022.6.20.

72)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2.6.20.

□ EU 통계청, 2022년 5월 유로지역 및 EU 물가 상승률 발표(2022.6.17.)[73]

○ (유로지역) 2022년 5월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 상승률(HICP)은 전월(7.4%)보다 상승한 8.1%로 집계되었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74]은 3.8%로 상승

○ (EU) 같은 기간 EU의 연간 물가 상승률 역시 전월(8.1%)보다 상승한 8.8%로 집계되었으며 근원 물가 상승률은 4.5%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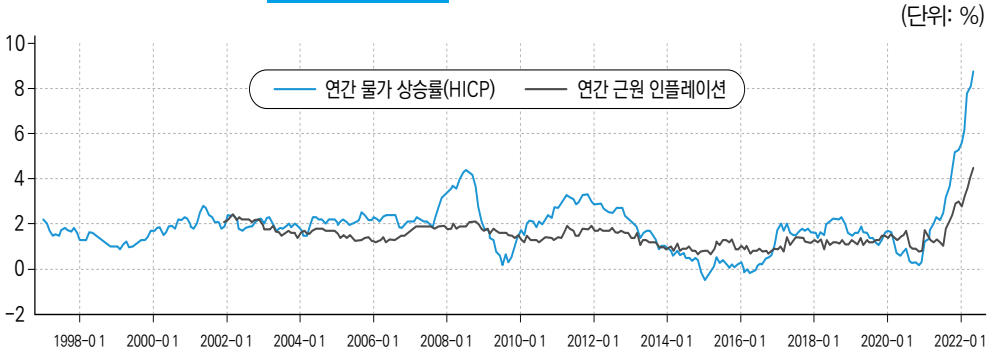
○ 유로지역과 EU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들어서면서 상승하기 시작해 2021년 11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매월 경신 중임[75]

○ (국가별)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20.1%), 리투아니아(18.5%), 라트비아(16.8%) 순이며, 낮은 국가는 프랑스(5.8%), 몰타(5.8%), 핀란드(7.1%) 순임

○ (부문별) 유로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39.1% 상승한 에너지가 3.87%p를 기여하였고 이어서 식품, 주류 및 담배(1.59%p), 서비스(1.46%p), 비에너지 산업재(1.13%p) 순으로 기여

그림 2-Ⅰ-5 EU의 물가 상승률 추세

(단위: %)



자료: EU 통계청, HICP - monthly data (annual rate of chang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PRC_HICP_MANR__custom_2951726/default/line?lang=en, 검색일자: 2022.6.20.

73) EU 통계청, "Annual inflation up to 8.1% in the euro area," 2022.6.1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44605/2-17062022-AP-EN.pdf, 검색일자: 2022.6.20.

74)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기준

75) EU 통계청, "HICP - monthly data (annual rate of chang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PRC_HICP_MANR__custom_2951726/default/table?lang=en, 검색일자: 2022.6.20. 단, 2022년 4월 유로지역 인플레이션은 3월과 동일

4) 기타

□ EU 집행위, 몰도바에 거시금융지원 발표(2022.1.4.)[76]

○ 집행위는 몰도바에 대한 최대 1억 5천만유로의 거시금융지원(MFA) 안건을 채택

- 이 중 3천만유로는 보조금, 1억 2천만유로는 저금리 중기 대출 형식으로 지원
- 몰도바는 2020년 4월 10개국 30억유로 MFA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과 2021년 10월에 자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은 신규 지원임

○ 몰도바는 부패 및 거버넌스 문제로 지난 몇 년간 재정 및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최근에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도 직면해 있으며, 이번 지원이 몰도바의 단기 국제수지 및 재정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몰도바는 거버넌스 시스템, 반부패, 법치 확립, 에너지 안보 등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결하는 등 지원 조건을 이행해야 함

□ EU 집행위, Creative Europe의 사업 계획 채택 및 개시(2022.1.13.)[77]

○ 집행위는 Creative Europe의 정책 프레임워크, 우선순위, 시행계획 등을 제시한 2022년 사업 계획을 채택

○ 2022년 예산은 음악, 문화유산, 공연예술 등 문화 부문 약 2억 2,100만유로, 시청각, 영화 등 미디어 부문 1억 3,100만유로, 부문 간 협업을 위한 교차 부문 약 3,400만유로 등 3억 8,600만유로로 전년보다 약 1억유로 증가

□ EU 집행위, REACT-EU를 통해 스페인에 3억 8,270억유로 지원 발표(2022.1.17.)[78]

76) EU 집행위, "EU-Moldova: Commission proposes €150 million in Macro-Financial Assistance," 2022.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7101, 검색일자: 2022.1.19.

77) EU 집행위, "Creative Europe: Increased budget in 2022 to support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2022.1.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86, 검색일자: 2022.1.19.

78) EU 집행위, "REACT-EU: €382.7 million to help Spain's regions fighting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supporting a digital and green transition," 2022.1.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25, 검색일자: 2022.1.19.

○ 집행위는 REACT-EU[79]를 통해 카탈루냐 1억 3,010만유로, 카나리아 제도 5,850만유로 등 스페인 각 지역에 총 3억 8,27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금은 지역 내 의료 및 교육 시설 건축 및 개축,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

○ 스페인은 이번 지급에 앞서 2021년 109억유로를 지원받는 등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혜국임

○ 집행위는 EU 회원국과 특정 비EU 국가에 대해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

□ EU 집행위, 2022년 인도주의적 예산 발표(2022.1.17.)[80), 81)]

○ 집행위는 전 세계적인 분쟁 및 폭력,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 2022년 인도주의적 예산으로 15억유로를 채택

- 사헬 지역 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영양 위기 경감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지원 등을 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4억 6,900만유로 배정
- 시리아 위기, 중동 주변 난민, 예멘 위기 등 지원을 위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3억 5,100만유로 배정
- 아프가니스탄, 로힝야, 베네수엘라 등을 돕기 위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 1억 8,800만유로 배정

79) REACT-EU(Recovery Assistance for Cohesion and the Territories of Europe)는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내 506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의료 서비스 투자, 친환경·디지털 전환 투자, 일자리 유지 지원 등을 회원국 지역에 제공

80) EU 집행위, "EU at forefront of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1.5 billion for 2022," 2022.1.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63, 검색일자: 2022.1.19.

81) 인도주의적 지원은 EU 집행위가 EU 예산 내(긴급구호금 요청 가능)에서 수요 평가(needs assessment)와 잊힌 위기("forgotten crises")에 기반해 매년 결정
EU 집행위, "Funding for humanitarian aid," https://ec.europa.eu/echo/funding-evaluations/funding-humanitarian-aid_en, 검색일자: 2022.1.19.
EU 집행위, "Financing decisions (HIPs)," https://ec.europa.eu/echo/funding-evaluations/funding-humanitarian-aid/financing-decisions-hips_en, 검색일자: 2022.1.19.

- 우크라이나, 서부 발칸 반도, 터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남동부와 유럽 지역의 프로젝트에 1억 5,200만유로 배정
- 3억 7,000만유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 또는 기존 위기의 급격한 악화 등에 사용

□ EU 집행위, 반도체 투자 확대 발표(2022. 2. 8.)[82]

○ 집행위는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의 공급 안보, 회복력 및 기술적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반도체칩법(European Chips Act)을 제안

○ EU는 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이 10%에 못 미치고 역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의 공장 가동 중단을 겪음

○ 이에 2030년 시장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차세대 기술 투자, 생산 역량 강화, 위기 예측 및 대응 제고 등을 추진

○ 기존 Digital Europe, Horizon Europe 등 디지털 분야 예산과 회복·복구기금 외에 이번 법안으로 150억유로를 추가해 총 430억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확보할 계획

○ EU 의회와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채택되면 EU 전역에 발효될 예정

□ EU 정상회의, 아프리카 투자 계획 발표(2022. 2. 18.)[83]

○ EU와 AU(아프리카연합) 정상들은 제6차 EU-AU 정상회의에서 결속, 안보, 평화, 지속가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번영이라는 공동 비전에 합의

○ 또한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1,500억유로의 아프리카-유럽 투자 패키지를 발표

-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건 시스템 강화, 교육 및 훈련 개선 등의 분야를 지원할 계획

82) EU 집행위, "Digital sovereignty: Commission proposes Chips Act to confront semiconductor shortages and strengthen Europe's technological leadership," 2022. 2. 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29, 검색일자: 2022. 2. 22.

83) EU 이사회, "European Union - African Union summit, 17-18 February 2022," 2022. 2.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22/02/17-18/, 검색일자: 2022. 2. 22.

○ 2022년 중반까지 아프리카에 최소 4억 5천만회분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하고, Team Europe를 통해 접종 가속화, 효율적 분배, 의료진 교육 등에 4억 2,500만유로를 투입할 예정

□ 유럽미래회의, 최종 보고회 개최(2022.5.9.)[84]

○ 유럽미래회의(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는 유럽의 날(Europe Day)을 맞이해 범 EU 차원의 시민 제안을 발표하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

* 시민 주도로 미래 유럽의 우선순위와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회의로, 2021년 3월 EU 3개 기구 수장의 공동 합의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다국어 디지털 플랫폼 방문자 500만명, 패널 70만명이 참가

○ 다국어 디지털 플랫폼, 유럽 시민패널 및 국가별 시민패널, 총회 등을 거쳐 9개 주제, 49개 제안, 325개의 조치가 제안되었으며 그중 재정, 예산 관련 제안 및 조치도 포함됨

- (재정 및 조세 정책) 회원국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보다 유리한 차입 조건을 얻기 위해 EU 차원에서의 공동 차입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 및 지방 단위에서 EU 지출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기후 변화, 에너지, 교통) 전환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전환, 노동자 및 일자리 보호를 보장해야 함
- (지속가능 성장 및 혁신) 친환경·디지털 전환, 사회적 정의, 사회적 진보, 경제적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EU 경제 거버넌스와 European Semester를 검토해야 함
- (시민과의 관계) EU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특정 예산을 배정하여, 회원국이 이를 교육과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보고서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에 전달되어 기관들이 각각의 권한 내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 가을 피드백 행사가 개최될 예정

84) EU 집행위,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concludes its work," 2022.5.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2862, 검색일자: 2022.5.23.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Report on the final outcome*, 2022.

- 6월 17일 집행위는 후속 조치에 필요한 범주화, 정책 및 입법 방법 등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85]

□ EU 집행위, 재정 규정 개정안 발표(2022.5.16.)[86]

○ EU 재정 규정(Financial Regulation)*을 2021~2027 장기 예산 및 경제회복기금에 합치시키고 관련 재정 지침들을 본 규정으로 일원화하며 EU 기관들의 선언과 합의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 예산 수립, 집행, 통제에 대한 원칙과 지침들을 모은 규정으로, 현 규정은 2018년에 대폭 개정·일원화된 규정임

○ 기존 규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투명성, 보호, 민첩성 강화 등 주요 사항만 개정하는 일부 개정(targeted adjustment) 방식으로 진행

- (투명성) EU 예산 지출과 EU 자금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 공시하고, 시행자가 자금 수급자에 대한 정보를 EU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통제 및 감사를 강화하며, IT 시스템을 통합해 부정수급 탐지를 개선
- (보호) EU 규정을 위반한 수급자를 식별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기 탐지 및 배제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직접 관리 사업에서 회원국과의 공동 수행 사업까지 확대하며, 이해 관련자, 조사 비협조자 등 배제 대상을 확대
- (민첩성) 위기 상황 시 EU 기구가 회원국을 대신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위가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실행 수단을 신설

85) EU 집행위, "Commission sets out first analysis of the proposals stemming from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 2022.6.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750, 검색일자: 2022.6.27.

86) EU 집행위, "Commission proposes to further reinforce key rules for EU budget management," 2022.5.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023, 검색일자: 2022.5.23.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Targeted adjustments to the Financial Regulation," 2022.5.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3030, 검색일자: 2022.5.23.

○ 본 개정안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송부되어 논의될 예정

□ EU 집행위, 국방력 강화 조치 발표(2022.5.18.)[87]

○ 지난 3월 베르사유 정상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가 EU의 국방 투자 격차를 분석하고 유럽 방위 산업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제안

- 유럽미래회의에서 논의된 방위 행동 강화 요구에도 부응

○ 국방비 지출, 방위산업 격차, 방위력 격차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 투자 격차를 평가하고 특히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낮은 규모와 파편화를 지적

- 과거 상당한 군축과 과소 투자가 지속돼 지난 20년간 EU의 국방비 증가율이 20%에 그친 데 반해 미국은 66%, 러시아는 292%, 중국은 592% 증가
- 또한 지출이 주로 국가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공동 투자 비중이 목표(35%)에 미달한 11%에 불과

○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조달과 방산 능력 강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

- 공동 조달을 통해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회원국 간 경쟁을 피하고, 공동 조달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회원국이 긴급하고 중요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5억유로의 예산을 투입
- 중기적으로는 EU 다년도 예산 중간 검토 시 유럽방위기금(European Defence Fund)[88]과 유럽연결프로젝트(Connecting Europe Facility) 내 군사 이동성 등의 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87) EU 집행위, "EU steps up action to strengthen EU defence capabilitie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towards an EU framework for Joint defence procurement," 2022.5.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3143, 검색일자: 2022.5.23.
EU 집행위, "Questions and Answers: Defence Investment Gaps and measures to address them," 2022.5.1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2_3144, 검색일자: 2022.5.23.

88)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공동 방위 R&D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21~2027년 80억 유로가 편성됨

라.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1) 경제 동향·전망

□ EU 집행위, 2022년 겨울 경제전망 발표(2022.2.10.)[89]

※ EU에서는 연 4회 경제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함

○ (경제) 유로지역과 EU는 모두 2021년 5.3%, 2022년 4.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뒤 2023년 유로지역 2.7%, EU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1년 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장애 등이 심화되면서 두 지역 모두 2022년 성장률이 0.3%p 하향 조정되었으며, 빨라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물류 및 공급망 병목현상이 계속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임
-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노동시장 개선, 높은 가계저축,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 회복·복구기금(RRF) 시행 등 여전히 탄탄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점차 경제활동이 재개될 전망

○ (물가)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HICP)은 2021년 2.6%에서 2022년 3.5%까지 상승한 뒤 2023년 1.7%로 하락할 전망이며 EU 물가 상승률도 동 기간 2.9%, 3.9%, 1.9%의 유사한 추이를 보일 전망

89)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2*, 2022.
EU 집행위, "Winter 2022 Economic Forecast: Growth expected to regain traction after winter slowdown," 2022.2.1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926, 검색일자: 2022.2.22.

-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러 범주의 상품 및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지난 전망 대비 2022년 1.3%p(유로지역 기준) 상향 조정됨
- 유로지역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분기 4.8% 고점을 기록한 뒤 3분기까지 3%보다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점차 공급망 제약과 에너지가격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4분기에는 2.1%로 하락할 전망
- 2023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인 2%보다 낮게 유지될 전망

○ (위험) 팬데믹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 및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대체로 중립적, 인플레이션은 상방 위험이 우세

-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와 인력 부족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공급망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는 반면, 가계 수요가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하거나 회복·복구기금으로 촉진된 투자가 부문·국가 간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를 강화할 수 있음
- 비용 압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물가로 전이되어 2차 효과가 증폭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

표 2-Ⅰ-5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겨울 경제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2년 2월 겨울 전망		2021년 11월 가을 전망		2022년 2월 겨울 전망		2021년 11월 가을 전망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벨기에	2.7	2.2	2.6	1.9	4.3	1.3	2.3	1.6
독일	3.6	2.6	4.6	1.7	3.7	2.1	2.2	1.7
에스토니아	3.1	4.0	3.7	3.5	6.1	2.1	3.9	2.1
아일랜드	5.5	4.5	5.1	4.1	4.6	2.5	3.1	1.5
그리스	4.9	3.5	5.2	3.6	3.1	1.1	1.0	0.4
스페인	5.6	4.4	5.5	4.4	3.6	1.1	2.1	0.7
프랑스	3.6	2.1	3.8	2.3	2.8	1.7	2.1	1.4
이탈리아	4.1	2.3	4.3	2.3	3.8	1.6	2.1	1.4
키프로스	4.1	3.5	4.2	3.5	2.6	1.2	1.7	1.2
라트비아	4.4	3.8	5.0	4.0	5.9	0.9	3.6	0.8
리투아니아	3.4	3.4	3.6	3.4	6.7	2.2	3.1	2.0
룩셈부르크	3.9	2.9	3.7	2.7	3.8	1.5	2.2	1.8
몰타	6.0	5.0	6.2	4.8	2.1	1.9	1.6	1.5
네덜란드	3.0	2.7	3.3	1.6	4.0	1.4	2.2	1.5
오스트리아	4.3	2.3	4.9	1.9	3.3	2.2	2.5	2.0
포르투갈	5.5	2.6	5.3	2.4	2.3	1.3	1.7	1.2
슬로베니아	3.8	3.6	4.2	3.5	3.7	2.1	2.1	1.7
슬로바키아	5.0	5.1	5.3	4.3	6.4	2.4	4.3	2.2
유로지역	**4.0**	**2.7**	**4.3**	**2.4**	**3.5**	**1.7**	**2.2**	**1.4**
불가리아	3.7	3.9	4.1	3.5	6.3	3.9	2.9	1.8
체코	4.4	3.9	4.4	3.2	5.8	2.2	3.4	2.3
덴마크	2.8	2.3	2.7	2.4	2.5	2.1	1.9	1.6
크로아티아	4.8	3.0	5.6	3.4	3.5	1.6	2.0	1.5
헝가리	5.0	3.2	5.4	3.2	5.4	3.6	4.8	3.4
폴란드	5.5	4.2	5.2	4.4	6.8	3.8	5.2	2.6
루마니아	4.2	4.5	5.1	5.2	5.3	2.5	4.0	2.8
스웨덴	3.8	2.0	3.5	1.7	2.9	1.2	1.9	1.1
EU 27개국	**4.0**	**2.8**	**4.3**	**2.5**	**3.9**	**1.9**	**2.5**	**1.6**

자료: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2*, 2022, Table 1; Table 3.

□ EU 통계청, 2021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2.3.8.)[90]

○ 전분기 대비 2021년 4분기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3%, 0.4%로 집계되어 3분기 성장률(각각 2.3%, 2.2%)보다 하락

- 반면,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4.6%, EU 27개국 4.8%를 기록해 3분기 성장률(각각 4.0%, 4.2%)보다 상승
- 2021년 연간 성장률은 유로지역과 EU 27개국 모두 5.3%를 기록해, 2020년 성장률(각각 -6.4%, -5.9%)보다 크게 상승

○ 유로지역 기준, 전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3%p,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0.1%p, 총고정자본형성이 0.7%p, 재고 증감이 0.3%p, 수출이 1.4%p, 수입이 -2.0%p를 기여

○ 전분기 대비 슬로베니아(5.4%), 몰타(2.3%), 스페인(2.0%), 헝가리(2.0%)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아일랜드(-5.4%), 오스트리아(-1.5%), 독일(-0.3%) 순으로 낮았음

○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GDP 규모가 각각 0.2%, 0.6%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90)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1," 2022.3.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358089/2-08032022-AP-EN.pdf, 검색일자: 2022.3.22.

표 2-Ⅰ-6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1])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1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1.2	1.7	2.0	0.5	0.0	15.1	4.9	5.6
불가리아	1.8	0.9	0.8	1.0	-1.4	7.4	5.0	4.7
체코	-0.3	1.4	1.6	0.9	-2.3	8.7	3.5	3.6
덴마크	-0.2	2.3	1.2	1.1	-0.1	8.8	3.7	4.4
독일	-1.7	2.2	1.7	-0.3	-2.8	10.4	2.9	1.8
에스토니아	3.3	2.4	1.0	1.8	3.1	12.1	9.3	8.8
아일랜드	9.7	4.6	1.2	-5.4	11.9	20.7	11.3	10.0
그리스	4.1	1.0	2.0	0.4	-1.4	15.1	11.4	7.7
스페인	-0.7	1.2	2.6	2.0	-4.3	17.7	3.4	5.2
프랑스	0.2	1.3	3.1	0.7	1.7	19.0	3.5	5.4
크로아티아	7.4	1.1	1.4	-0.1	-0.4	16.9	15.3	9.9
이탈리아	0.3	2.7	2.5	0.6	0.1	17.6	3.9	6.2
키프로스	1.7	1.6	1.7	0.7	-2.0	13.3	5.7	5.9
라트비아	0.7	2.0	0.5	-0.1	0.3	10.2	4.9	3.1
리투아니아	1.7	1.2	0.7	1.1	1.0	8.6	5.3	4.8
룩셈부르크	3.8	0.0	0.5	0.5	5.6	12.7	4.8	4.8
헝가리	1.8	2.2	0.9	2.0	-1.3	17.7	6.5	7.0
몰타	3.0	1.0	3.3	2.3	-0.5	16.0	12.7	10.0
네덜란드[2]	-0.8	3.8	2.1	0.9	-2.2	10.4	5.2	6.0
오스트리아	-0.4	4.1	3.4	-1.5	-4.1	12.7	5.2	5.6
폴란드	1.6	1.8	2.3	1.7	-1.1	10.9	5.5	7.6
포르투갈	-2.9	4.3	2.8	1.6	-5.3	16.5	4.4	5.8
루마니아	2.0	1.5	0.4	-0.1	-0.5	12.7	8.0	3.9
슬로베니아	1.5	2.0	1.3	5.4	2.6	15.5	4.7	10.5
슬로바키아	-1.4	1.9	0.4	0.3	0.2	10.0	1.2	1.2
핀란드[2]	-0.3	1.8	0.9	0.6	-0.9	7.8	3.5	2.9
스웨덴	1.3	0.8	1.9	1.1	0.0	9.4	4.2	5.2
유로지역(EA19)	-0.1	2.2	2.3	0.3	-0.9	14.6	4.0	4.6
EU 27개국(EU27)	0.1	2.1	2.2	0.4	-0.9	14.0	4.2	4.8

주: 1. 음영 처리된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
1) 본 표의 수치는 계절조정 및 달력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ourth quarter of 2021," 2022.3.8.

□ EU 집행위,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2.5.16.)[91]

○ (경제)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면서 EU 경제는 장기적으로 확장 국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됨

- 지정학적 긴장이 전망기간 전에 정상화되지 않고, 코로나19가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
- EU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3%로 전망되며, 지난 겨울 전망(2022년 4.0%, 2023년 2.8%)보다 하향 조정됨
- 높은 에너지가격이 경제 악화의 주요 요인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에너지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데 이어 전쟁 발발 후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하고 에너지가격 압력이 더욱 증가
  -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2.5%p, 1%p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3%p, 1%p 상승
- 다만, 노동시장 개선, 가계저축률 감소, 유리한 자금 조달 여건, 회복·복구기금 시행 등은 경제의 긍정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물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에너지 부문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망기간 동안 에너지 도매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상승 압력이 다른 상품 및 서비스로 전이될 전망

- EU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2022년 6.8%로 크게 상승한 뒤 2023년 3.2%로 하락할 전망이며, 지난 전망(3.9%, 1.9%)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됨
-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2년 4.2%, 2023년 3.3%로 전망되어 3%를 웃돌 전망

91)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EU 집행위, "Spring 2022 Economic Forecast: Russian invasion tests EU economic resilience," 2022.5.16.,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performance-and-forecasts/economic-forecasts/spring-2022-economic-forecast_en, 검색일자: 2022.5.23.

○ (노동) 지난해 EU 전역에서 일자리가 520만개 창출되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전망기간 중 계속될 전망

- 2022년 고용 증가율은 지난해 하반기 강력한 성장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실업자 수 감소, 경제활동 참가자 증가로 2021년 7.0%에서 2022년 6.7%, 2023년 6.5%로 더욱 개선될 전망
- 임금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인 2022년 3.8%, 2023년 3.7%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에는 못 미쳐, 실질 임금은 올해 하락했다가 내년에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재정) 코로나19 조치가 감소하면서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국가채무도 하락할 전망

- (재정수지) 코로나19 조치가 감소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1년 4.7%에서 2022년 3.6%로 개선되고, 2023년에는 코로나19 조치가 종료되고 에너지 대응 조치가 감소하면서 2.5%로 더욱 개선
- (국가채무) 우호적인 금리-성장률 여건으로 EU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1년 89.7%에서 2023년 85.2%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

○ (위험) 전쟁으로 촉발된 충격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한 가운데 하방 위험이 우세

- 지정학적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원자재 시장 및 무역 등에 악영향을 미치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 위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요소로 작용
- 반면, 회복·복구기금에 의해 촉진된 투자가 부문 간, 국가 간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활동이 강화될 수 있으며,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친환경 전환 가속화는 에너지가격 급증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

표 2-Ⅰ-7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봄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1]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벨기에	6.2	2.0	1.8	3.2	7.8	1.9	6.3	5.8	5.6	-5.5	-5.0	-4.4
독일	2.9	1.6	2.4	3.2	6.5	3.1	3.6	3.3	3.2	-3.7	-2.5	-1.0
에스토니아	8.3	1.0	2.4	4.5	11.2	2.5	6.2	6.8	6.9	-2.4	-4.4	-3.7
아일랜드	13.5	5.4	4.4	2.4	6.1	3.1	6.2	4.6	5.0	-1.9	-0.5	0.4
그리스	8.3	3.5	3.1	0.6	6.3	1.9	14.7	13.7	13.1	-7.4	-4.3	-1.0
스페인	5.1	4.0	3.4	3.0	6.3	1.8	14.8	13.4	13.0	-6.9	-4.9	-4.4
프랑스	7.0	3.1	1.8	2.1	4.9	3.1	7.9	7.6	7.6	-6.5	-4.6	-3.2
이탈리아	6.6	2.4	1.9	1.9	5.9	2.3	9.5	9.5	8.9	-7.2	-5.5	-4.3
키프로스	5.5	2.3	3.5	2.3	5.2	2.7	7.5	7.8	7.3	-1.7	-0.3	-0.2
라트비아	4.5	2.0	2.9	3.2	9.4	3.5	7.6	7.3	7.1	-7.3	-7.2	-3.0
리투아니아	5.0	1.7	2.6	4.6	12.5	3.0	7.1	7.2	7.2	-1.0	-4.6	-2.3
룩셈부르크	6.9	2.2	2.7	3.5	6.8	2.3	5.3	5.2	5.1	0.9	-0.1	0.1
몰타	9.4	4.2	4.0	0.7	4.5	2.6	3.5	3.6	3.6	-8.0	-5.6	-4.6
네덜란드	5.0	3.3	1.6	2.8	7.4	2.7	4.2	4.0	4.2	-2.5	-2.7	-2.1
오스트리아	4.5	3.9	1.9	2.8	6.0	3.0	6.2	5.0	4.8	-5.9	-3.1	-1.5
포르투갈	4.9	5.8	2.7	0.9	4.4	1.9	6.6	5.7	5.5	-2.8	-1.9	-1.0
슬로베니아	8.1	3.7	3.1	2.0	6.1	3.3	4.8	4.8	4.6	-5.2	-4.3	-3.4
슬로바키아	3.0	2.3	3.6	2.8	9.8	6.8	6.8	6.7	6.3	-6.2	-3.6	-2.6
핀란드	3.5	1.6	1.7	2.1	4.5	2.3	7.7	7.2	6.9	-2.6	-2.2	-1.7
유로지역	5.4	2.7	2.3	2.6	6.1	2.7	7.7	7.3	7.0	-5.1	-3.7	-2.5
불가리아	4.2	2.1	3.1	2.8	11.9	5.0	5.3	5.4	5.3	-4.1	-3.7	-2.4
체코	3.3	1.9	2.7	3.3	11.7	4.5	2.8	2.6	2.6	-5.9	-4.3	-3.9
덴마크	4.7	2.6	1.8	1.9	5.1	2.7	5.1	4.8	4.7	2.3	0.9	0.6
크로아티아	10.2	3.4	3.0	2.7	6.1	2.8	7.6	6.3	6.0	-2.9	-2.3	-1.8
헝가리	7.1	3.6	2.6	5.2	9.0	4.1	4.1	3.8	4.0	-6.8	-6.0	-4.9
폴란드	5.9	3.7	3.0	5.2	11.6	7.3	3.4	4.1	3.9	-1.9	-4.0	-4.4
루마니아	5.9	2.6	3.6	4.1	8.9	5.1	5.6	5.5	5.3	-7.1	-7.5	-6.3
스웨덴	4.8	2.3	1.4	2.7	5.3	3.0	8.8	7.8	7.0	-0.2	-0.5	0.5
EU 27개국	5.4	2.7	2.3	2.9	6.8	3.2	7.0	6.7	6.5	-4.7	-3.6	-2.5
영국	7.4	3.4	1.6	2.5	7.0	3.6	4.5	4.0	4.0	-8.3	-3.9	-2.3
중국	8.1	4.6	5.0	-	-	-	2.1	1.6	1.1	-	-	-
일본	1.7	1.9	1.8	-0.2	1.6	1.5	2.8	2.7	2.6	-7.6	-6.5	-4.1
미국	5.7	2.9	2.3	4.7	7.3	3.1	5.4	3.6	3.5	-11.7	-5.7	-4.9
세계	5.8	3.2	3.5	-	-	-	-	-	-	-	-	-

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2*, 2022, Table 1. 일부 발췌

□ EU 통계청,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2.6.8.)[92)]

○ 2022년 1분기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7개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0.6%, 0.7%로 집계되어 2021년 4분기 성장률(각각 0.2%, 0.5%)보다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 역시 유로지역 5.4%, EU 5.6%를 기록해 4분기 성장률(각각 4.7%, 4.9%)보다 상승

○ 유로지역 기준, 전분기 대비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3%p,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0.1%p 기여한 반면, 재고 증감이 0.6%p, 수출이 0.2%p, 수입이 0.2%p, 총고정자본형성이 0.0%p를 기여

○ 전분기 대비 아일랜드(10.8%) 루마니아(5.2%) 라트비아(3.6%)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고 스웨덴(-0.8%), 프랑스(-0.2%), 덴마크(-0.1%) 순으로 낮았음

○ 코로나19 이전(2019년 4분기)과 비교해 유로지역과 EU의 GDP 규모가 각각 0.8%, 1.5%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표 2-Ⅰ-8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1)])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2	2021			2022
	Q2	Q3	Q4	Q1	Q2	Q3	Q4	Q1
벨기에	1.7	2.1	0.4	0.5	15.2	5.1	5.7	4.9
불가리아	0.9	0.9	1.3	0.8	7.8	5.1	5.0	4.0
체코	1.4	1.7	0.8	0.9	8.7	3.6	3.6	4.8
덴마크	2.2	1.5	3.0	-0.1	8.6	3.8	6.8	6.7
독일	2.2	1.7	-0.3	0.2	10.4	2.9	1.8	3.8
에스토니아	2.3	0.9	1.3	0.1	12.1	9.3	8.4	4.7
아일랜드	5.0	1.9	-6.2	10.8	20.7	11.5	9.9	11.3

92)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2," 2022.6.8.,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36268/2-08062022-AP-EN.pdf, 검색일자: 2022.6.20.

표 2-Ⅰ-8 의 계속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1			2022	2021			2022
	Q2	Q3	Q4	Q1	Q2	Q3	Q4	Q1
그리스	1.3	2.3	0.8	2.3	15.0	11.7	8.1	7.0
스페인	1.1	2.6	2.2	0.3	17.8	3.5	5.5	6.4
프랑스	1.0	3.2	0.4	-0.2	19.2	3.0	4.9	4.5
크로아티아	1.5	1.3	1.0	2.7	16.9	14.7	10.1	6.7
이탈리아	2.7	2.6	0.7	0.1	17.5	4.0	6.4	6.2
키프로스	1.8	1.9	0.9	1.0	13.4	5.8	5.9	5.6
라트비아	2.4	0.5	-0.2	3.6	10.1	4.8	2.7	6.4
리투아니아	1.2	0.7	1.3	1.0	8.6	5.3	5.0	4.3
룩셈부르크	0.8	0.9	1.0	1.2	12.9	5.1	4.9	4.0
헝가리	2.4	1.1	2.2	2.1	17.6	6.5	7.1	8.0
몰타	0.2	3.7	2.5	1.0	16.4	14.1	11.7	7.6
네덜란드[2)]	3.8	2.0	1.0	0.0	10.7	5.4	6.3	6.8
오스트리아	4.3	3.4	-0.8	1.5	12.9	5.3	6.5	8.7
폴란드	2.0	2.6	1.8	2.5	11.0	6.1	8.0	9.2
포르투갈	4.4	2.7	1.7	2.6	16.5	4.4	5.9	11.9
루마니아	3.3	-2.9	1.0	5.2	15.4	6.9	2.4	6.5
슬로베니아	1.9	1.3	5.3	0.8	15.5	4.7	10.5	9.6
슬로바키아	1.9	0.4	0.4	0.4	10.0	1.2	1.2	3.0
핀란드[2)]	1.7	1.0	0.7	0.2	7.9	3.6	3.4	3.6
스웨덴	0.8	2.0	1.2	-0.8	9.8	4.3	5.6	3.1
유로지역(EA19)	2.2	2.3	0.2	0.6	14.7	4.0	4.7	5.4
EU 27개국(EU27)	2.1	2.2	0.5	0.7	14.1	4.2	4.9	5.6

주: 1. 음영 처리된 국가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
1) 본 표의 수치는 계절조정 및 달력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2," 2022.6.8.

2) 재정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1년 3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1.21.)[93]

○ (재정수지) 유로지역과 EU의 2021년 3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4.0%, -3.7%로 두 지역 모두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됨

- 전분기에 비해 GDP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총수입이 증가하고 총지출이 감소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 (정부채무) 유로지역과 EU의 2021년 3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97.7%, 90.1%로 전분기 대비 각각 0.6%p, 0.8%p 하락

-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 조치로 채무 규모가 증가했으나 GDP도 증가하면서 GDP 대비 비중이 하락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200.7%), 이탈리아(155.3%), 포르투갈(130.5%)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9.6%), 불가리아(24.2%), 룩셈부르크(25.3%) 순으로 집계됨
- 전분기 대비 헝가리(2.9%p), 프랑스(1.5%p), 루마니아(1.1%p) 등 7개국은 채무 비율이 상승한 반면, 그리스(-6.6%p), 포르투갈(-4.9%p), 크로아티아(-3.7%p) 등 20개국은 하락

93)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7% of GDP in the EU," 2022.1.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65/2-21012022-BP-EN.pdf, 검색일자: 2022.2.2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7.7% of GDP in euro area," 2022.1.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62/2-21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2.22.

표 2-Ⅰ-9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1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Q3	2021 Q2(잠정치)	2021 Q3(잠정치)
유로지역(EA19)			
재정수지	-6.4	-6.4	-4.0
정부수입	46.0	46.8	47.0
정부지출	52.4	53.2	51.0
정부채무	96.6	98.3	97.7
EU 27개국(EU27)			
재정수지	-6.0	-5.8	-3.7
정부수입	45.9	46.5	46.5
정부지출	51.9	52.3	50.2
정부채무	89.2	90.9	90.1

주: 1.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0%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7% of GDP in the EU," 2022.1.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65/2-21012022-BP-EN.pdf, 검색일자: 2022.2.2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7.7% of GDP in euro area," 2022.1.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176362/2-21012022-AP-EN.pdf, 검색일자: 2022.2.22.

□ EU 통계청, 2021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2.4.22.)[94]

○ (재정수지)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각각 -3.6%, -3.5%로 전분기 대비 유로지역은 개선, EU는 유지됨

- 유로지역의 GDP 대비 적자 감소는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GDP 규모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대응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하회

94)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5% of GDP in the EU," 2022.4.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2/2-22042022-CP-EN.pdf, 검색일자: 2022.4.25.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5.6% of GDP in euro area," 2022.4.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5/2-22042022-BP-EN.pdf, 검색일자: 2022.4.25.

○ (정부채무)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95.6%, 88.1%로 전분기 대비 각각 1.9%p, 1.8%p 하락

- 두 지역 모두 GDP가 증가한 가운데 유로지역은 채무 수준 자체가 감소한 반면, EU는 채무가 소폭 증가
- 채무 비율이 높은 회원국은 그리스(193.3%), 이탈리아(150.8%), 포르투갈(127.4%) 순이며, 낮은 회원국은 에스토니아(18.1%), 불가리아(24.4%), 룩셈부르크(25.1%) 순으로 집계됨
- 전분기 대비 슬로바키아(1.8%p), 체코(1.5%p) 라트비아(1.3%p) 등 7개국은 채무 비율이 상승한 반면, 독일은 유지, 그리스(-8.3%p) 키프로스(-5.4%p) 슬로베니아(-5.0%p) 등 19개국은 하락

표 2-Ⅰ-10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1년 4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Q4	2021 Q3	2021 Q4
유로지역(EA19)			
재정수지	-7.5	-3.8	-3.6
정부수입	46.5	47.3	48.2
정부지출	54.0	51.1	51.8
정부채무	97.2	97.5	95.6
EU 27개국(EU27)			
재정수지	-7.0	-3.5	-3.5
정부수입	46.2	46.8	47.5
정부지출	53.2	50.3	50.9
정부채무	90.0	89.9	88.1

주: 1.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6%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5% of GDP in the EU," 2022.4.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2/2-22042022-CP-EN.pdf, 검색일자: 2022.4.25.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5.6% of GDP in euro area," 2022.4.22.,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497745/2-22042022-BP-EN.pdf 검색일자: 2022.4.25.

□ EU 집행위, 2021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2022.4.25.)[95]

*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는 3년마다 EU 집행위가 경제전망, Aging Report의 인구전망 등을 기초로 EU 회원국의 단·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변화를 분석하는 보고서임[96]

○ (단기*) 2개국이 고위험국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국가는 저위험국으로 분류됨

* 단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지표인 S0 지표는 12개의 재정변수(재정수지, 총채무, 채무 변화율, 총자금조달필요 등)와 13개의 금융 관련 변수(순국제투자지위, 민간부문 채무, 단기 가계채무, 단위당 명목 노동비용, 실질GDP 성장률 등)로 구성

- 그리스와 키프로스는 재정과 거시 금융 변수 때문에 단기 취약점에 직면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자와 거시경제 불균형이 단기 재정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17개국 고위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
-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례적인 통화정책과 경제회복기금 등 정책 조치들이 국채 발행 조건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

○ (중기*) 11개국이 고위험, 8개국이 중위험, 8개국이 저위험으로 나타남

* 중기 지속가능성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로 파악하며, S1 지표는 중기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조정 규모를 측정. 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비용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하여 15년 내에 GDP 대비 채무 비율 60%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5년 누적)의 조정 규모

- 채무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이상 채무 비율이 높거나 상승), 포르투갈(확률적 분석[97]), 크로아티아(거시 금융 조건 악화에 따른 취약성 증가), 몰타(재정상태 악화) 등 10개국이 고위험으로 평가됨
- S1 평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루마니아가 고위험으로 추가 분류됨

95) EU 집행위,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 Volume 1, 2022.,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fiscal-sustainability-report-2021_en

96) 기존 보고서와 같이, 재정정책 변화가 없다는 시나리오에 기반하되, 기존 보고서는 마지막 전망 시점 이후 고령화 요소를 제외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이번 보고서는 예외적인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한다고 가정함.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을 온전히 회복

97)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충격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경로의 분포를 분석

○ (장기*) 9개국이 고위험, 13개국이 중위험, 5개국이 저위험으로 평가됨

* 장기 지속가능성은 DSA 분석과 S2 지표로 파악하고, 정부의 시점 간 예산 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달성과 관련이 있음. 예산제약은 장기(무한 기간)적으로 미래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채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냄. 이 조건에서 정부채무가 장기적으로(2070년까지) 안정화되어야 함. S2 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조정 규모를 측정

- S2 지표 기준 2070년까지 고령화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벨기에, 체코,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고위험으로 평가됨
- 스페인, 이탈리아 2개국은 채무 취약성이 지적됨

○ 지난 2020년 채무지속가능성보고서(Debt Sustainability Monitor)와 비교하면 단기 위험이 개선된 반면, 중장기 위험이 소폭 악화

- (단기)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경제회복기금 등에 힘이어 고위험 국가가 11개국에서 2개국으로 감소
- (중기) 크로아티아(이자율-성장률 채무 동학 악화)와 몰타(2023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악화)가 고위험국으로 추가 분류되었고 불가리아, 체코, 독일이 중위험으로 상승
- (장기) 체코,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가 S2 지표 악화에 따라 중위험에서 고위험으로 상승한 반면, 루마니아는 고위험에서 중위험으로 개선

표 2-Ⅰ-11 EU 회원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표

구분	**단기 리스크 (Overall Short-term risk category)**	**중기 리스크 (Overall Medium-term risk category)**	S1 (S1 indicator - overall risk assessment)	채무 지속가능성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 overall risk assessment)	S2 (S2 indicator - overall risk assessment)	**장기 리스크 (Overall Long-term risk category)**
벨기에	저(고)	고	고	고	고(중)	고
불가리아	저	중(저)	저	중(저)	중	중
체코	저	중(저)	중(저)	중(저)	고(중)	고(중)
덴마크	저	저	저	저	저	저
독일	저	중(저)	중(저)	저	중	중
에스토니아	저	저	저	저	저	저
아일랜드	저	저	저	저	중	중
그리스	고	고	고	고	저	중
스페인	저(고)	고	고	고	중(저)	고(중)
프랑스	저(고)	고	고	고	저	중
크로아티아	저(고)	고(중)	중(저)	고(중)	저	중
이탈리아	저(고)	고	고	고	중(저)	고(중)
키프로스	고	중	중(저)	중	저	중
라트비아	저(고)	저	저	저	저	저
리투아니아	저	저	저	저	저	저
룩셈부르크	저	저	저	저	고	고
헝가리	저	중	중(저)	중	고(중)	고(중)
몰타	저	고(저)	중(저)	고(저)	고(중)	고(중)
네덜란드	저	중	중	중	중	중
오스트리아	저	중	중(저)	저(중)	중	중
폴란드	저	저	저	저	중(저)	중(저)
포르투갈	저(고)	고	고(중)	고	저	중
루마니아	저(고)	고	고	중(고)	중(고)	중(고)
슬로베니아	저	고	고(중)	고	고(중)	고
슬로바키아	저(고)	고	고	고	고	고
핀란드	저(고)	중	중	저(중)	중	중
스웨덴	저	저	저	저	저(중)	저(중)

주: 1. ( ) 안은 2020 채무지속가능성보고서(DSM) 분류 결과(이번 보고서에서 달라진 경우)
2. 단기 분석은 S0 지표(단기 재정지속가능성 분석 지표), 중기 분석은 DSA(Debt Sustainability Analysis) 분석과 S1 지표, 장기 분석은 DSA 분석과 S2 지표로 판단

자료: EU 집행위,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 2022, table 1.

02 IMF*

표 2-Ⅰ-12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25.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 업데이트 발표
2022.1.26.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2.3.23.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가 지원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 공동 성명 발표
2021.3.25.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2.4.13.	취약국을 위한 회복과 지속가능성 기금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신설에 대한 발표
2022.4.19.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 발표
2022.4.20.	재정감시보고서 발표
2022.4.20.	유럽지역경제전망보고서 업데이트 발표
2022.5.14.	SDR 통화 바스켓에 새로운 가중치 적용 발표

가. 경제전망 및 평가

□ IMF,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022.1.25.)[98)]

○ (동향) 오미크론 확산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어 2022년 성장률은 4.4% 전망(전년 10월 대비 0.5%p 하향 조정)

- 2023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의 하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4.4%, 2023년 3.8%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2021년 10월 예측 대비 각각 -0.5%p, 0.2%p 조정됨)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정은 선임연구원(jekim@kipf.re.kr)

9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1/25/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2, 검색일자: 2022.1.26

- (주요 원인)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 혼란, 미국과 중국의 큰 폭의 하향 개정이 주요 원인
  - (유로지역) 장기 공급 제한과 펜데믹으로 인해 0.4%p 하향 개정되었으며, 2021년 말 이동 제한은 2022년 초 유로지역의 성장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재정정책 패키지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의 재검토와 금융 완화 정책의 조기 해제, 공급망 차질로 인해 1.2%p 하향 개정
  - (영국) 오미크론 관련 및 공급 제약(특히 노동 및 에너지 시장)의 영향으로 0.3%p 하향 개정
  -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이동제한, 저조한 민간소비, 부동산 시장 리스크로 인해 장기화된 금융 스트레스 등에 의해 0.8%p 하향 개정되었으며 무역 상대국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위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펜데믹 장기화 및 백신 공급격차, ②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③ 미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금융시장 충격, ④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⑤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 추가 둔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오미크론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었으며, 선진국 정책 금리 인상으로 금융 안정성,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자본 흐름, 통화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위험(특히 지난 2년 동안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경우)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다른 글로벌 위험이 확고해질 수 있으며, 기후 비상사태는 주요 자연재해의 가능성 또한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정책권고) 각국의 상황에 맞춘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하며, 대외 충격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

- (재정정책) 확대된 재정적자의 축소 필요성은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시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피해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보건 및 사회지출에 우선해야 함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회복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필요
- (기타) 관세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공급 차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를 통한 교육 및 근무형태에 대한 구조개혁,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 설정 및 정책 대응 등을 권고

표 2-Ⅰ-13 2022년 세계 경제전망 업데이트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추정	전망		2021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	2022	2023	2022	2023
세계 경제	**5.9**	**4.4**	**3.8**	**-0.5**	**0.2**
선진국	**5.0**	**3.9**	**2.6**	**-0.6**	**0.4**
미국	5.6	4.0	2.6	-1.2	0.4
유로지역	5.2	3.9	2.5	-0.4	0.5
독일	2.7	3.8	2.5	-0.8	0.9
프랑스	6.7	3.5	1.8	-0.4	0.0
이탈리아	6.2	3.8	2.2	-0.4	0.6
스페인	4.9	5.8	3.8	-0.6	1.2
일본	1.6	3.3	1.8	0.1	0.4
영국	7.2	4.7	2.3	-0.3	0.4
캐나다	4.7	4.1	2.8	-0.8	0.2
한국	4.0	3.0	2.9	-0.3	0.1
신흥개도국	**6.5**	**4.8**	**4.7**	**-0.3**	**0.1**
아시아 신흥개도국	7.2	5.9	5.8	-0.4	0.1
중국	8.1	4.8	5.2	-0.8	-0.1
유럽 신흥개도국	6.5	3.5	2.9	-0.1	0.0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6.8	2.4	2.6	-0.6	0.1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2	4.3	3.6	0.2	-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0	3.7	4.0	-0.1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2]	**9.3**	**6.0**	**4.9**	**-0.7**	**0.4**
선진국	8.3	6.2	4.6	-0.7	0.6
신흥개도국	11.1	5.7	5.4	-0.7	0.0

표 2-Ⅰ-13 의 계속

(단위: 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추정	전망		2021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	2022	2023	2022	2023
원자재 가격(미달러)					
오일[3]	67.3	11.9	-7.8	13.7	-2.8
비연료	26.7	3.1	-1.9	4.0	-0.4
소비자물가(미달러)					
선진국[4]	3.1	3.9	2.1	1.6	0.2
신흥개도국[5]	5.7	5.9	4.7	1.0	0.4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2) 수출입량 증가율의 단순 평균
3) 영국 브렌트, 두바이 파테, 서부텍사스 중질유의 단순 평균 가격. 2021년 원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69.0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2년 77.31달러, 2023년은 71.29달러
4)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3.0%, 1.7%(유로지역), 0.7%(일본), 5.9%, 2.7%(미국)
5) 베네수엘라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22, p.5, Table 1.
한국 수치는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2/Update/January/English/Data/WEOJanuary2022update.ashx, Real GDP Growth 항목 참고

□ IMF,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발표(2022.4.19.)[99]

○ (동향)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전망임

- 오미크론 변이의 단기적 영향 이후 2분기부터 글로벌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러시아 제재 등의 영향으로 1월 전망 이후 크게 악화됨
- 전쟁으로 인한 상품 시장, 무역 및 금융 채널을 통한 전 세계적인 파급효과 및 에너지가격과 식품 가격의 급상승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9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 APR,"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2/04/19/world-economic-outlook-april-2022, 검색일자: 2022.4.20.

-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신흥 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6.1%에서 2022년과 2023년 3.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20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8%p, -0.2%p)

- 2023년 이후에는 중기적으로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100]되며, 고용과 생산량은 2026년까지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2021년 5.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점차 둔화되어 2022년 3.3%, 2023년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20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0.6%p, -0.2%p)
  - 유럽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등에 따라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1월에 이미 하향 조정된 미국과 캐나다는 소폭 하향 조정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2021년 6.8%에 이어 2022년 3.8%, 2023년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2022년 1월 전망 대비 각각 –1.0%p, -0.3%p)
  - 물가 상승,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 상황, 관광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산유국은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됨

○ (위험) 비정상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확대

- 전쟁 악화로 공급망 훼손, 에너지가격 상승,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난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 코로나19 신종 변이 재확산 우려,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인한 중국 성장 둔화 장기화, 금리 인상 및 부채 부담 증가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이는 앞으로의 전망에 더욱 부담을 줄 것임

○ (정책권고) 전쟁 노출도, 팬데믹 상황 및 회복 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과 다국 간 대처가 중요함

100) 단, 이 예측은 분쟁이 우크라이나에 국한되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는 제외하며(2022년 3월 31일까지 발표된 러시아 에너지 및 금융 조치로 인한 영향은 기준선에 포함),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영향은 2022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가정한 전망임

- (재정정책)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 확장 이후 부채관리는 필요하나, 코로나19 및 전쟁 취약층에 대한 지원 축소는 신중해야 하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 등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함
- (통화정책) 각 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 인상 확대도 고려
- (미래 대비) 디지털화 등을 위한 교육, 고용안전망 확충, 탄소가격 설정,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표 2-Ⅰ-14 세계 경제전망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2년 1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세계 경제	**6.1**	**3.6**	**3.6**	**-0.8**	**-0.2**	**-1.3**	**0.0**
선진국	**5.2**	**3.3**	**2.4**	**-0.6**	**-0.2**	**-1.2**	**0.2**
미국	5.7	3.7	2.3	-0.3	-0.3	-1.5	0.1
유로지역	5.3	2.8	2.3	-1.1	-0.2	-1.5	0.3
독일	2.5	2.1	2.7	-17	0.2	-2.5	1.1
프랑스	7.0	2.9	1.4	-0.6	-0.4	-1.0	-0.4
이탈리아	6.6	2.3	1.7	-1.5	-0.5	-1.9	0.1
일본	1.6	2.4	2.3	-0.9	0.5	-0.8	0.9
영국	7.4	3.7	1.2	-1.0	-1.1	-1.3	-0.7
캐나다	4.6	3.9	2.8	-0.2	0.0	-1.0	0.2
기타선진국[2]	5.0	3.1	3.0	-0.5	0.1	-0.6	0.1
한국	4.0	2.5	2.9	-0.5	0.0	-0.8	0.5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6.8**	**3.8**	**4.4**	**-1.0**	**-0.3**	**-1.3**	**-0.2**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7.3	5.4	5.6	-0.5	-0.2	-0.9	-0.1
중국	8.1	4.4	5.1	-0.4	-0.1	-1.2	-0.2
인도[3]	8.9	8.2	6.9	-0.8	-0.2	-0.3	0.3
아세안-5[4]	3.4	5.3	5.9	-0.3	-0.1	-0.5	-0.1

표 2-Ⅰ-14 의 계속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2년 1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년 10월 전망 대비 차이[1]	
		2021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6.7	-2.9	1.3	-6.4	-1.6	-6.5	-1.6
러시아		4.7	-8.5	-2.3	-11.3	-4.4	-11.4	-4.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6.8	2.5	2.5	0.1	-0.1	-0.5	0.0
저소득 개도국		4.0	4.6	5.4	-0.7	-0.1	-0.7	-0.1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10.1**	**5.0**	**4.4**	**-1.0**	**-0.5**	**-1.7**	**-0.1**
수입	선진국	9.5	6.1	4.5	-0.2	0.0	-1.2	0.4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11.8	3.9	4.8	-1.7	-0.9	-3.2	-0.9
수출	선진국	8.6	5.0	4.7	-1.1	0.0	-1.6	0.7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	12.3	4.1	3.6	-1.7	-1.5	-1.7	-1.4
원자재 가격(미달러)								
오일[5]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26.8	11.4	-2.5	8.3	-0.6	12.3	-1.0
소비자물가								
선진국[6]								
신흥 시장국 및 개도국[7]		5.9	8.7	6.5	2.8	1.8	3.8	2.2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7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1) January 2022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October 2021 World Economic Outlook
2) G7 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이며, 2011년부터 GDP는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 년으로 삼은 시장가격 기준 GDP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 파테(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21년 평균 유가는 배럴당 69.0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22년 106.83달러, 2023년은 92.63달러
6) 2022년, 2023년 인플레이션은 각각 5.3%, 2.3%(유로지역), 1.0%, 0.8%(일본), 7.7%, 2.9%(미국)
7) 베네수엘라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2, Table 1.1.
한국은 WEO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추출

□ IMF, Fiscal Monitor 보고서 발표(2022.4.20.)[101]

○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가격과 글로벌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재정정책 운영 환경이 급변함
-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 경제성장 둔화, 높은 부채 및 차입 비용으로 인해 예산 제약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팬데믹 기간 동안의 재정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단기 채무 상승을 가져왔으며, 2020년 총 채무는 28%p 증가하여 세계 GDP의 256%를 기록함

○ (동향) 팬데믹 초기에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한 후 경제가 회복되고, 예외적 지원을 철회하면서 2021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4%, 일반정부 채무는 97.0%를 기록(2020년 -9.9%, 99.2%)

-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선진국에서 -7.3%, 신흥 시장국에서 -5.3%, 저소득 개도국에서 -4.9%에 달했음
  - 선진국의 재정수지는 2020년 보다 개선되었으며, 세수 회복과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 철회로 2022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시장국 또한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 적자가 확대된 신흥 시장국은 거의 없었음

○ (전망) 2022년 세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4.9%, 채무는 94.4%로 전망됨

- 팬데믹 관련 재정 조치가 점차 종료되어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5%p 개선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 세계 국가채무 또한 2022~2024년 동안 GDP의 약 94%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고 불확실성이 커져 재정수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101)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2/04/12/fiscal-monitor-april-2022, 검색일자: 2022.4.21.

- 선진국의 평균 채무는 2024년까지 GDP의 1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음
- 주로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 시장국의 채무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까지 GDP의 7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음

- 전쟁, 상품가격의 높은 변동성, 인플레이션 및 차입비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장기화되고 심화된 전쟁은 원자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인플레이션을 더욱 압박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이는 또한 민간부문 파산 및 금융부문 위기의 위험을 증가시켜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며,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부채 취약성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높아짐
- 또한 국가 간에 백신접종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종 변이의 출현 등 팬데믹에 대한 위험 요소가 상존

○ (정책권고) 재정정책은 향후 전망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춰야 함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 러시아 제재의 영향이 강한 국가는 재정정책으로 인도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취약층이나 우선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된 재정 여력과 재정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선택한 정책을 시기적절하고 목표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

표 2-Ⅰ-15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비중)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정수지							
세계	**-6.4**	**-4.9**	**-4.0**	**-3.9**	**-4.0**	**-4.0**	**-3.9**
선진국	**-7.3**	**-4.3**	**-2.9**	**-2.8**	**-3.0**	**-3.0**	**-3.0**
미국	-10.2	-4.8	-4.0	-4.4	-5.2	-5.1	-5.2
유로존	-5.5	-4.3	-2.5	-2.0	-1.8	-1.7	-1.7
일본	-7.6	-7.8	-3.5	-2.5	-2.5	-2.6	-2.8
영국	-8.0	-4.3	-2.3	-1.5	-1.4	-1.3	-1.0
캐나다	-4.7	-2.2	-0.8	-0.7	-0.5	-0.4	-0.3
기타	-2.6	-1.7	-0.9	-0.6	-0.5	-0.4	-0.3
한국	-0.6	-1.6	-1.1	-1.1	-1.2	-1.1	-1.2
신흥 시장국	**-5.3**	**-5.7**	**-5.5**	**-5.4**	**-5.3**	**-5.3**	**-5.2**
국가채무							
세계	**97.0**	**94.4**	**94.1**	**94.5**	**95.0**	**95.4**	**95.5**
선진국	**119.8**	**115.5**	**113.7**	**113.1**	**113.0**	**112.9**	**112.7**
미국	132.6	125.6	123.7	124.0	125.1	126.2	127.4
유로존	96.0	95.2	93.4	92.1	91.0	90.0	88.9
일본	263.1	262.5	258.3	258.7	259.4	260.5	261.8
영국	95.3	87.8	82.7	79.6	76.3	73.4	70.7
캐나다	112.1	101.8	98.5	96.2	93.4	90.5	87.7
한국	49.8	52.0	53.3	55.1	56.8	58.3	59.8
신흥 시장국	**66.1**	**67.4**	**69.8**	**72.1**	**74.2**	**75.9**	**77.2**

주: 미달러로 환산된 명목GDP 기준. 2021년 수치는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잠정치임
자료: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 Table 1.1, 1.2 편집, 한국은 statistical appendix Table A1, A7 편집

□ IMF, 유럽 지역 경제전망 발표(2022.4.20.)[102)]

○ (동향) 전쟁은 아직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유럽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전쟁 이전에 유럽의 선진 및 신흥 시장국은 2020년 GDP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지만(2021년 각각 5.6%와 6.7% 성장), 민간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102)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Europe, April 202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REO/EU/Issues/2022/04/20/regional-economic-outlook-for-europe-april-2022, 검색일자: 2022.4.21.

팬데믹 이전 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추세임

- 전쟁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급 혼란이 심화되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자동차 산업 등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음

○ (전망) 2022년 GDP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2년 1월 전망보다 감소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가파른 감소가 예상됨(우크라이나 3.6% → -35.0%, 러시아 2.8% → -8.5%)

-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유럽 최대 경제국은 2022년 중반에 분기별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매우 약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위험) 장기화된 전쟁은 난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공급망 병목현상을 악화시키며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생산량 손실을 심화시킬 것임

- 가장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이며, 이는 특히 중부 및 동유럽의 많은 국가에 상당한 생산 손실을 초래할 것임

○ (정책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급 쇼크 요인인 전쟁은 팬데믹 관련 현안들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전쟁으로 촉발된 충격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함

- (재정정책) 새로운 충격에 대처하기에 통화정책보다 적합하며,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되도록 해야 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저소득 가구 및 취약하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 지출이 필요함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유지해야 함.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고정 수준에서 벗어날(de-anchoring) 위험이 있는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가격의 순환 상승을 저지하는 것임
- (미래 대비)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탄력성을 강화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형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노동 조건 개선, 전환 비용 절감, 인력 기술을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및 교육 정책이 필요

나. 연례협의

□ IMF, 한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 결과 발표(2022.1.26.)[103]

* 이사회 상정 전 협의단 입장문

○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한 방역대응, 포괄적 재정·통화·금융조치 이행으로 약화되었던 경제 기반이 회복되어 2022년 및 2023년에는 각각 3.0%, 2.9%의 성장이 전망됨

- 다만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및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소비회복,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정부의 신속한 정책대응이 중요함

○ 향후 정책은 팬데믹 이후 경기부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 확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으로 바뀌어야 할 것임

-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 및 경쟁 활성화,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린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IMF, 프랑스와의 연례협의 마무리[104](2022.1.26.)[105]

○ 프랑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대규모 재정패키지 및 2021년 상반기 구호 프로그램 시행으로 2022년 성장률은 3.5%로 전망

103) IMF, "IMF Staff Completes 2022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1/25/pr2214-imf-staff-completes-2022-article-iv-mission-to-republic-of-korea, 검색일자: 2022.1.27.

104)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정 제4조에 따라 매년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갖음. 협의단이 방문, 경제 및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자들과 국가의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 본부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집행위원회의 논의의 토대가 됨

105)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Franc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1/26/pr2215-france-imf-executive-board-concludes-2021-article-iv-consultation-with-france, 검색일자: 2022.1.27.

- 생산성 손실로 인해 성장률은 이전 추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 지원과 탄탄한 민간부문 투자에 힘입어 강력한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106]은 기저 효과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용 성장은 견조하고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며, 금융부문은 다양한 건전성 및 시기적절한 통화정책 실행으로 위기에 대응함

표 2-Ⅰ-16 프랑스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9	2020	전망	
			2021	2022
경제성장률(%)	0.8	-8.0	6.7	3.5
실업률(%)	8.4	8.0	8.0	8.1
물가 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	1.3	0.5	2.1	2.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balance, GDP 대비 %)	-3.1	-9.2	-8.3	-5.2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97.5	115.0	114.6	113.5
10년물 국채 수익률(%)	0.1	-	-	-
경상수지(GDP 대비 %)	-0.3	-1.9	-1.4	-1.4

자료: IMF, "France: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France," 2022.1.26. 편집

○ IMF 이사회는 백신접종 강화, 강력한 재정지원, 견고한 민간부문 주도의 투자에 힘입어 강력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또한 당국이 계획한 대로 근로자 기술 향상, 녹색 및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 잠재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에 중점을 둔 완만한 확장 재정 기조를 통해 단기적으로 회복을 지원할 것을 권고

106) Headline Inflation. 에너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큰 필수 소비재의 전체 제품 상승률

- 취약가구에 대한 완화 조치와 함께 적절한 탄소 가격 책정을 포함하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 정책을 강화하도록 권장

□ IMF, 일본과의 연례협의 마무리 성명*(2022.1.27.)[107]

* IMF 협의단의 공식 방문 종료에 따른 발표. IMF 협의단의 초기 평가로 반드시 이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일본 경제는 강력한 정책 지원과 높은 접종률을 바탕으로 펜데믹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실질GDP 성장률은 2020년 -4.5%에서 2021년 1.6%로 추정됨

- 단, 3차례 추경예산 편성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2019년에 GDP 대비 2.4%였던 기초적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에는 8.3%, 2021년에는 7.2%로 확대
-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은 2021년에 서서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2%의 물가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음
- 2021년 경상 수지 흑자는 GDP 대비 3.1%로 추정되며 대외 포지션은 중기적인 펀더멘털과 정책에 힘입어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고 잠정적으로 평가됨

○ 세계 경제 둔화는 일본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어, 거시 금융 위험을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음

- 채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저금리 환경에 따라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서비스 소비 회복 둔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인해 자원의 재분배가 방해할 수 있음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회복을 위해 ① 채무 지속 가능성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재정 건전화, ② 금융 완화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 ③ 리스크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부문 정책 강화, ④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포함한 노동 공급과 투자 확대가 필요함

107) IMF, "Japan: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2 Article IV Mission,"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1/27/mcs012722-japan-staff-concluding-statement-of-the-2022-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2.2.3.

□ IMF, COUNTRY FOCUS: Strong Policies Help Korea Navigate Uncertain Times (2022.5.12.)[108]

○ IMF는 COUNTRY FOCUS를 통해 한국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과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팬데믹에서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한국은 올해와 내년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또한 점차 목표치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공급망 혼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등 국내 경기가 하방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감안할 때 정책 정상화는 적절하지만, 정상화 속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상황을 감안해야 함

- 특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안정되고 기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를 계속 조정해야 함
- 재정정책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문과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함
- 거시건전성 정책은 특히 과열된 주택시장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로 인해 증가한 취약성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또한 정책 초점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하여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 우선 과제로 옮겨가야 할 필요가 있음

108) IMF, "Strong Policies Help Korea Navigate Uncertain Time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5/12/CF-Korea-strong-policies, 검색일자: 2022.5.13.

다. 금융지원

□ IMF, 네팔에 3억 9,590만달러 규모 ECF 협정 승인(2022.1.13.)[109]

○ IMF 이사회는 네팔에 대한 2억 8,242만SDR(약 3억 9,590만달러, 쿼터의 180%)의 ECF(Extended Credit Facility)[110] 협정을 승인했으며 즉시 지출 가능한 7,850만SDR(약 1억 1천만달러)을 확보함

- 38개월 자금 조달 패키지는 코로나19가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 보존,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
- 이 프로그램의 주요 정책 조치에는 세입과 공공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부문 규제 및 감독 강화, 재정 투명성 지원,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됨

○ 네팔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어 FY2019/20 GDP는 -2.1%로 크게 감소하였고, FY2020/21에 2.7%로 부분적으로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FY2021/22에는 4.4%의 성장률을 예상

- 성장의 핵심 동력인 관광 및 서비스 부문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 소비 재개로 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함(FY2020/21 GDP의 8.3%)
- 재정 적자는 FY2020/21 GDP의 4.2%에서 FY2021/22에는 6.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IMF 집행이사회, SDR 통화 바스켓에 새로운 가중치 적용 발표(2022.5.14.)[111]

109)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395.9 Million ECF Arrangement for Nepal," 2022.1.1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1/13/pr2206-nepal-imf-executive-board-approves-us-million-ecf-arrangement

110) 확장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저소득국가를 위한 IMF의 양허성 차관제도 중 하나로 국제수지 적자를 보정해 줌

111)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Quinquennial SDR Valuation Review and Determines New Currency Weights for SDR Valuation Basket,"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5/14/pr22153-imf-board-concludes-sdr-valuation-

○ IMF 집행이사회는 2022년 5월 11일 특별 인출권(SDR)을 구성하는 통화 바스켓의 5년 주기 검토[112]를 완료하고 바스켓 가중치 조정을 발표함

- SDR 통화 및 이자율 바스켓의 현재 구성은 유지하되, 통화 간 가중치가 조정되어, 초기 가중치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달러와 위안화의 가중치는 약간 더 높아지고 파운드, 유로, 엔의 비중이 다소 낮아짐
  - 달러 41.736% → 43.38%, 유로 30.93% → 29.31%, 위안 10.92% → 12.28%, 엔 8.33% → 7.59%, 파운드 8.09% → 7.44%
- 변경된 가중치는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 이사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역 및 금융 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중치를 조절하였으며, 코로나19 대유행과 핀테크 발전은 통화의 상대적 역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밝힘

□ IMF, 칠레와 첫 단기 유동성 제도[113] 협정 체결(2022.5.20.)[114]

○ 칠레는 IMF와 약 35억달러(쿼터의 145% 또는 25억 2,900만SDR, 이 약정에 따른 최대 한도)에 해당하는 1년 단기 유동성 제도(SLL)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2년 탄력 대출 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계약을 종료함[115]

- 이는 IMF가 승인한 최초의 SLL이며, 칠레 당국은 국제수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유동성 제도를 통해 인출할 수 있음
- SLL은 단기 유동성 수요에 대한 백스톱(안전장치)을 제공함으로써 칠레의

review, 검색일자: 2022.5.16.

112) 마지막 SDR 평가 검토는 2015년이었으며,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 한 기존 SDR 평가방법에 따라 5년마다 검토됨. 이번 검토는 2021년 3월 집행이사회가 현재 바스켓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약 1년 늦게 진행됨

113) Short-term Liquidity Line(SLL).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21일 제정됨. 탄력 대출 제도(FCL)와 동일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국제수지상 특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됨. 리볼빙 방식 대출이 가능하여 12개월 동안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한 8bp의 약정 수수료(commitment fee)와 21bp의 봉사료(service charge)가 있음. 완전히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동일한 액세스 수준에서 FCL보다 저렴함

114) IMF, "Chile Receives IMF's First Short-term Liquidity Lin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5/20/pr22164-chile-receives-imfs-first-short-term-liquidity-line, 검색일자: 2022.5.23.

115) SLL의 자격 기준은 FCL의 경우와 동일하여 전환이 용이함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것임

○ 칠레는 매우 강력한 펀더멘털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큰 충격에 직면했을 때 국가의 회복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 SLL은 거시 경제 정책을 재조정하고 유동성 완충 장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을 보완하고 유동성을 지원하여 칠레의 회복과 충격 대응 능력을 지원함으로써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라.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국제협력

□ IMF,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성명 발표(2022.3.5.)[116]

○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경제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이미 매우 심각한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 외에도 기타 곡물을 포함한 1차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의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식품과 연료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갈등이 확대된다면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임
- 러시아에 대한 제재 또한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 이미 자산 가격과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무역 상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116) IMF, "IMF Staff Statement on the Economic Impact of War in Ukrain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3/05/pr2261-imf-staff-statement-on-the-economic-impact-of-war-in-ukraine, 검색일자: 2022.3.7.

○ 우크라이나는 이미 IMF의 신속금융제도(RFI)[117]에 따라 14억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다음 주 내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할 계획이며, 인근 국가인 몰도바 또한 기존의 IMF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상환 일정 조정을 요청하여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IMF, 우크라이나에 긴급자금지원 승인(2022.3.9.)[118]

○ IMF 집행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자금 수요 및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금융제도(RFI)에 따라 14억달러(10억 590만SDR)의 지출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함

- 이는 우크라이나 할당량(quota)의 50%에 해당하며, 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국제수지 요구 충족 및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우크라이나 당국은 기존 22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협정을 취소했으며(3월 3일 발효)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재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적절한 경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IMF와 협력할 의사를 표명함

○ 이번 지원은 재정 격차를 메우고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양허성 대출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전쟁이 끝나고 적절한 피해 규모 산정 뒤 재건을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IMF는 직원 보고서[119]를 통해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약 10%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쟁이 더 길어지면 국내 생산량은 25~3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함

117) Rapid Financing Instrument.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없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회원국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118)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 1.4 Billion in Emergency Financing Support to Ukraine,"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3/09/pr2269-ukraine-imf-executive-board-approves-usd-billion-in-emergency-financing-support-to-ukraine, 검색일자: 2022.3.10.

119) IMF, "Ukraine: Request for Purchase under the Rapid Financing Instrument and Cancellation of Stand-by Arrangement-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Ukraine," 2022.3.14.

□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가 지원에 대한 국제 금융기관 공동 성명 발표(2022.3.17.)[120]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유럽개발은행협의회(CE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G)은 재정 및 정책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웃 국가를 지원하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 및 지원책을 발표함

- (EBRD)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규모 20억유로의 "우크라이나 전쟁-EBRD 복원 패키지"를 승인
  - 본 패키지는 에너지 안보, 원자력 안전, 기초 행정 서비스(municipal services), 무역 금융 지원 및 우크라이나 및 인접 국가의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분야를 포괄하는 즉각적인 회복 및 생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EIB) 우크라이나 당국에 즉각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6억 6,800만유로를 제공을 포함한 20억유로의 긴급 연대 패키지를 준비
  - 긴급 연대 패키지는 EU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 패키지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13억유로의 추가 지원 또한 이행 중
  - 긴급 유동성 지원 중 지난주에 3억 2,900만유로가 지출되었으며 앞으로 3억 2,900만유로를 추가로 지출할 예정
- (CEB) 난민을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 긴급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난민을 수용하는 인접 국가 및 기타 국가의 재정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고 빠른 대출을 제공할 준비를 마침
- (IMF) 3월 9일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14억달러를 긴급 지원하여 전쟁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긴급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
- (WBG) 9억 2,50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위해 동원할 계획이며, 그중 3억 5천만달러가 지출 완료됨

120) IMF, "Joint Statement of Hea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ith Programs in Ukraine and Neighboring Countries,"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3/17/pr2280-joint-statement-heads-ifis-programs-ukraine-neighboring-countries, 검색일자: 2022.3.18.

- 이 자금 조달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30억달러 패키지의 일부이며, 보조금 전달을 위해 다자출연 방식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MDTF)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억 4,500만달러의 기여금이 조성됨

□ IMF, 아프리카의 식량 안보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재무장관과 농업장관 긴급회의(2022.5.19.)[121]

○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프리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임

- 식품 및 비료 가격의 급등은 가계, 특히 식품 소비가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극빈층 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직면한 심각한 식량 안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높은 연료가격은 수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대유행으로 이미 악화된 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팬데믹에서 회복 중인 아프리카 경제를 위협하고 있음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작년 4.5%에서 2022년 3.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은 올해 지역 평균 12.2%, 내년 9.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2008년의 식량 위기 이후 최고 수준임
- 북아프리카 또한 성장률이 2021년 3.7%에서 2022년 4%로 소폭 확대되는데 그치는 등 성장세가 꺾일 전망임. 인플레이션은 주로 식량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2년 17.8%(수단 제외 8.8%)로 상승할 것이며, 많은 국가에서 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식량 위기는 아프리카 지역에 이미 상당히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IMF는 식량 및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악화된 국가의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5월 초 모잠비크에 4억 5,6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세네갈 당국의 기존 프로그램 1억 7,300만달러 증액 요청을 협의 중

12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2/05/19/sp051922-emergency-meeting-on-the-looming-food-security-crisis-in-africa, 검색일자: 2022.5.20.

03 OECD*

표 2-Ⅰ-17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21.	코로나19 관련 보고서(*First lessons from government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s: A synthesis*) 보고서 발표
2022.1.25.	2021년 3분기 고용률 발표
2022.2.7.	2021년 3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2.2.21.	2021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
2022.3.17.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발표
2022.2.25.; 2022.3.8.	OECD 이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2022.4.21.	2021년 4분기 고용률 발표
2022.5.5.	2021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2.5.9.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관한 보고서(*Rights and Support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 발표
2022.5.11.	2022년 차입전망 보고서(*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2*) 발표
2022.6.8.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발표
2022.6.9.~6.10.	2022년 제1차 OECD 각료이사회 회의 개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박신아 선임연구원(sinapark@kipf.re.kr)

가. 경제·재정전망 및 평가

□ OECD 중간경제전망 보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 및 사회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발표(2022.3.17.)[122), 123), 124)]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전망함

○ (전쟁 이전 경제전망) 세계 경제는 글로벌 백신접종 노력, 주요 경제국의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 지원 등으로 인해 2022~2023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을 예상

- 2021년 12월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GDP 성장률을 2022년 4.5%, 2023년 3.2%로 전망하였으며, 2023년 완전 고용 전망,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 도달, 통화정책, 긴급 재정 조치 등의 단계적인 정상화를 예상하였음

○ (전쟁의 영향 및 현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주요 식품, 광물, 에너지 부문의 주요 생산 및 수출국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 규모는 세계 GDP 대비 약 2%이며 양자무역이 제한적이라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세계 총액의 1~1.5% 수준임
-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식품 및 에너지 등 일부 상품시장의 주요 공급처이며 금융시장, 기타 부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식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30%, 옥수수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밀 수출이 중단될 경우 많은 신흥시장과 개발도

122)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4181d61b-en.pdf?expires=1647844324&id=id&accname=guest&checksum=5762FA0C0CA0D9BAA03D53782E1A7DD6, 검색일자: 2022.3.21.

123)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는 연 2회 OECD Economic Outlook(통상 5월, 11월 발표)의 중간시점(3월 및 9월)에 발표하는 G20 국가 중심의 경제전망보고서임

124) 본 보고서는 개요 및 주요 내용의 요약본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원문 보고서를 참고

상국의 심각한 식량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에너지 수출시장에서 광물질 및 천연가스의 20%, 석유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팔라듐, 니켈 등 금속 수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금융시장) 러시아의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 제재*는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많은 신흥시장 및 러시아와 비즈니스 관계가 강한 중동부 유럽 경제의 위험이 증가하고 통화가치의 하락이 발생함

  * 개인과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접근 제한[125] 등의 금융제재로 인해 루블화 가치의 하락, 러시아 중앙은행 정책금리 20%로 급등, 러시아 국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함

- 또한 국방비 지출의 증가,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지급시스템 분절화(payment system fragmentation),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 변화 등의 장기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NiGem 모델 시뮬레이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초기 1년간 세계 GDP 성장률을 1%p 이상 감소시키고 세계 소비자물가지수를 2.5%p 증가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그림 2-I-6] 참고)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2주 동안 발생한 원자재 및 금융시장의 충격이 최소 1년간 지속되고 러시아의 심각한 경기 침체(약 10% 이상 역성장, 인플레이션 약 15%p 증가)가 포함된다는 가정을 전제 조건으로 함
  - 본 시뮬레이션은 추가 제재, 소비자 및 기업 보이콧, 운송 및 항공 교통의 중단,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 공급 불가, 식품 수출 금지와 같은 무역 제한 등의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기간과 정책적 대응에 따라 향후 경제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쟁이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125) 예시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 보유한 달러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러시아 외환보유액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 러시아의 외환자산이 동결될 경우 러시아는 달러를 매도해 루블화를 매입하는 등의 환율개입이 불가능해짐

압력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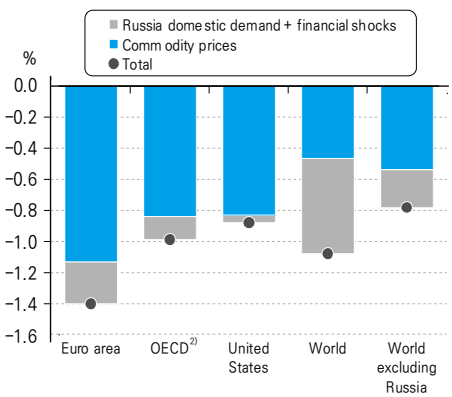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를 중심으로 가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유럽지역에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진국 및 미국의 경우 러시아와 무역 및 투자 관련 영향이 적은 편이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높은 상품가격이 가계소득 및 지출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신흥국가들의 경우 높은 식품 및 에너지가격으로 선진국 대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위험 요인은 러시아에서 EU로의 에너지 수출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며 에너지 수입 감소는 유럽 전역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전쟁 직후 유럽 가스가격이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스가격은 1월 가스가격 대비 170%이었으며,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한 가스가격의 2배 수준이었음
  - 러시아에서 EU로의 에너지 수출 전면 중단은 유럽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1.25%p 증가시키고 유럽 경제성장률을 0.5%p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가장 빠른 난민 유입이 진행 중이며 난민을 위한 사회 및 주택지원, 식량 공급, 의료지원,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나 난민 수, 체류기간 등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전쟁 발발 이후 3주간 약 300만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였으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OECD에 따르면 2015~2016년 시리아 사태의 난민 관련 지출은 난민 1인당 약 1만유로 수준이었으며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최대 1만 2,500유로로 추정되었으며 국가별, 지원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보임
  - 현재 300만명의 난민 유입으로 인해 초기 1년간 난민 관련 직접적인 비용은 EU GDP의 최소 0.25% 수준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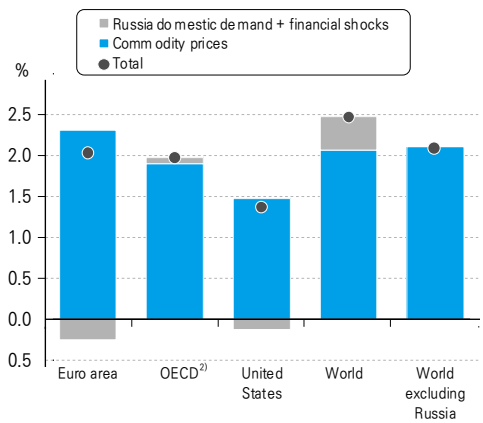
그림 2-Ⅰ-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시뮬레이션

(단위: baseline 대비 차이)

GDP에 미치는 영향[1), 3)]



인플레이션 영향[1), 3)]



주: 1) 전쟁 발생 이후 1년 기준
2) the NiGEM global macroeconomic model을 이용하여 OECD 계산
3) 러시아 국내수요 및 금융부문 충격을 회색 막대로 표기, 원자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파란색 막대로 표기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2: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Figure 5.

○ (정책 시사점) 통화, 재정,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완화,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개선 관련 정책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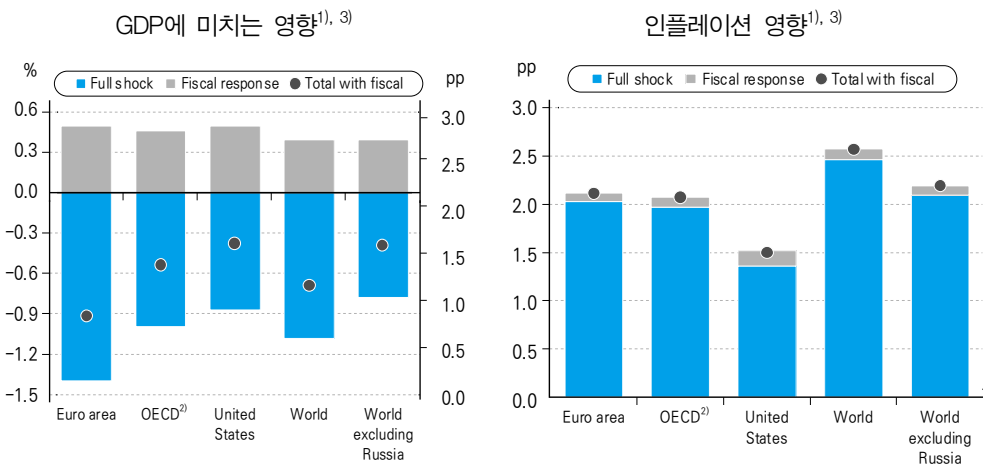
- 통화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 필요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 확보를 위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내 난민 지원,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1년간 모든 OECD 회원국에서 GDP 대비 0.5% 규모의 선별적 정부지출이 있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크게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50% 정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I-6] 참고)

• 또한 재정지출 확대여력이 부족한 OECD 비회원국에도 선진국의 수요 및 무역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통해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도 제한적인 확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및 식료품 관련 지출 비중은 저소득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에너지가격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 에너지 요금 감면, 세금 인하 등)을 일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화석연료 수입의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OECD 회원국은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함

그림 2-Ⅰ-7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

(단위: baseline 대비 차이)



주: 1) 전쟁 발생 이후 1년 기준
2) OECD 자체 계산
3) 재정충격을 파란색 막대로 표기, 선별적 재정 대응(GDP 대비 0.5% 수준) 회색 막대로 표기, 재정지출 확대의 경제적 영향을 검은 점으로 표기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2: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War in Ukraine," 2022.3.17., Figure 8.

□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발표(2022.6.8.)[126), 127)]

○ (세계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2년 3.0%, 2023년 2.8%로 전망되며,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2년 8.5%, 2023년 6.0%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zero-COVID policies)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식품 및 에너지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1.5%p 하향, 2022년 OECD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1월 전망 대비 4.3%p 상향 조정되었음

○ (주요국 경제전망) 러시아 대외무역 의존도, 각 국가별 원자재 생산 여부 등에 따라 경제충격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조치로 공급 차질 심화, 유가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요인이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 2023년 1.2%로 전망
- (일본) 2022년 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 약한 외부수요, 주요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 등이 단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의 반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은 2022년 1.7%, 2023년 1.8%로 예상됨
- (유로지역)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각각 2.6%, 1.6%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조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추가 자극을 가하고 실질가계소득과 기업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126)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Volume 2022 Issue 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2022.2022.6.8., https://www.oecd-ilibrary.org/sites/62d0ca31-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62d0ca31-en, 검색일자: 2022.6.20.

127) OECD는 일반적으로 3월과 9월에 중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5월과 11월에 정식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경제전망보고서는 세계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재정동향은 제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5%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민간소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의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민간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며, 핵심 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수출 등으로 기업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내수시장의 하방 위험으로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등을 지적
-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 및 강화된 규제, 부동산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및 2023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4.4%, 4.9%로 예상
- (인도 및 브라질) 인도는 대외여건 악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교역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물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어 2023년 OECD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 12월 전망치 대비 2배 수준인 8.5%로 전망
- (고용) OECD 국가들의 실업률은 지난 2022년 5.2%, 2023년 5.3%로 전망되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일부 국가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팬데믹 이후 국제 이주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은 실질 임금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 중국의 봉쇄조치, 유럽의 수요 둔화, 미국의 소비 전환(재화에서 서비스로)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이 4.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2년 -5.0%, 2023년 -3.8%로 예상됨

표 2-Ⅰ-18 세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13~2019 평균	2020	2021	2022	2023	2021 Q4	2022 Q4	2023 Q4
실질GDP 성장률[1]								
세계[2]	3.3	-3.4	5.8	3.0	2.8	4.3	1.9	3.0
G20[2]	3.5	-3.0	6.2	2.9	2.8	4.3	1.9	2.9
OECD[2]	2.2	-4.6	5.5	2.7	1.6	4.8	1.5	1.6
미국	2.4	-3.4	5.7	2.5	1.2	5.5	1.2	0.7
유로지역	1.9	-6.5	5.3	2.6	1.6	4.6	1.2	1.8
일본	0.8	-4.6	1.7	1.7	1.8	0.3	2.5	0.9
한국	-	1.3	4.1	2.7	2.5	-	-	-
비OECD[2]	4.3	-2.3	6.1	3.3	3.8	3.8	2.3	4.2
중국	6.8	2.2	8.1	4.4	4.9	3.9	4.9	4.5
인도[3]	6.8	-6.6	8.7	6.9	6.2	-	-	-
브라질	-0.4	-4.2	5.0	0.6	1.2	-	-	-
실업률[4]	6.5	7.1	6.2	5.2	5.3	5.5	5.3	5.3
인플레이션[1), 5]	1.7	1.5	3.7	8.5	6.0	5.2	8.9	5.2
재정수지[6]	-3.2	-10.4	-7.4	-5.0	-3.8	-	-	-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1]	3.4	-8.1	10.0	4.9	3.9	8.5	2.6	4.1

주: 1) % 변화
2)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GDP의 가중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ties)
3) 회계연도 기준
4) 노동인구 대비 %
5)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rivate consumption deflator)
6) GDP 대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10 database;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Table 1.1. 재구성

○ (주요국 재정전망) 각 국가별 재정건전화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검토되고 있으며,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는 점차 철회되고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가계와 지방정부로의 재정이전지출로 2021년 종료된 팬데믹 관련 지원조치의 효과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GDP의 -6.7%, GDP의 -5.3%로 전망됨
- (일본) 재정 및 통화지원 정책을 유지 할 예정이며, 재정수지는 2022년 GDP의 -6.9%, 국가채무는 GDP 대비 244.7%로 전망됨
- (영국) 2021년 말 코로나19 재정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점진적인 재정긴축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5.3%, 국가채무는 GDP 대비 139.2%로 전망
- (유로지역) 유로지역 내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 재정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함
  • 팬데믹 대응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추가 재정지원을 도입하고 있음
- (독일) 재정적자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단기 보조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은 6월 말 단계적으로 중단되나 에너지가격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GDP의 약 1.1% 수준의 지원 조치)가 2022년 추경에 포함될 예정
- (한국)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통화정책 목표로 해야 하며, 보편적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
  • 2022년 및 2023년 재정수지는 각각 -2.5%, -1.9%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8%, 2023년 3.8%, 일반정부 총채무는 2023년 GDP의 51.1%로 증가할 전망

- (중국) 세금 삭감 및 예비비(reserve funds) 지출의 형태로 재정정책은 보다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됨

표 2-Ⅰ-19 OECD 주요국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수지					
미국	-6.4	-15.4	-11.8	-6.7	-5.3
일본	-3.0	-9.0	-5.7	-6.9	-4.6
영국	-2.3	-12.8	-8.3	-5.3	-4.1
유로지역	-0.7	-7.1	-5.1	-4.1	-3.0
프랑스	-3.1	-8.9	-6.4	-5.4	-4.7
독일	1.5	-4.3	-3.8	-3.4	-1.8
중국	-3.7	-6.9	-6.6	-6.5	-6.6
한국	1.0	-2.3	-3.0	-2.5	-1.9
국가채무					
미국	108.6	134.1	127.6	126.1	126.8
일본	223.5	240.9	240.5	244.7	244.7
영국	118.5	149.1	143.1	139.2	138.6
유로지역	103.1	121.1	115.7	115.0	114.0
프랑스	97.3	114.7	112.6	114.1	114.9
독일	58.8	68.9	69.5	70.5	69.6
중국	-	-	-	-	-
한국	44.2	45.4	47.9	49.9	51.1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2, Ch.3의 국가별 경제 및 재정전망 표 재구성

○ (리스크 요인)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장기화,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신흥국의 취약성 노출 등 위험요인이 존재

-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단으로 인한 유럽 생산활동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핵심원자재 공급 부족과 물류비 상승,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리스크의 확대 및 신흥국의 취약한 금융시스템에 위험 존재 등

○ (정책권고) 백신 및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거시여건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등을 권고함

- (코로나19) 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지원을 통해 신규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차단, 식량 공급 관련 물류 장벽 완화 및 국제원조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
-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각 국가별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강도와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재정적 지원정책은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함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으로 전환, 높은 에너지가격 등의 영향에 대응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이후 부채상환의 부담이 늘어 공공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프레임워크를 통한 공공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
- (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이 필요

나. COVID-19 관련 보고서

□ 코로나19 관련 보고서(First lessons from government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s: A synthesis) 발표(2022.1.21.)[128), 129)]

○ 코로나19 발생 이후 15개월간 OECD 18개국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67개 평가를 근거로 평가하여, 향후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대응 및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한 보고서임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프레임워크는 주요 정책 대응의 유형을 팬데믹 대비(pandemic preparedness),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대응 및 회복(response and recovery) 세 가지로 구분함

- 팬데믹 대비: 전염병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정부의 능력을 분석하며 실제로 위험과 위협을 이해하고 위험예측 및 평가를 위한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국가는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예방 정책과 완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음
  - 전염병 관리 프로토콜(Pandemic management protocols), 리스크 예측 능력(Risk anticipation capacities), 주요 기반시설의 대비(Critical sectors preparedness)에 대해 평가함
- 위기관리: 위기가 구체화된 이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를 평가함
  - 일반적인 위기관리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관리하나 하위 정부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위기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함

128) OECD, "First lessons from government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s: A synthesis," 2022.1.21., https://read.oecd-ilibrary.org/view/?ref=1125_1125436-7j5hea8nk4&title=First-lessons-from-government-evaluations-of-COVID-19-responses, 검색일자: 2022.2.21.

129)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프레임워크, 위기관리, 대응 및 회복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프레임워크, 대응 및 회복 부분의 경제 및 재정지원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 참고

- 거버넌스 준비(Governance arrangements),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 사회 전체의 대응(Whole-of-society response)에 대해 평가함

- 대응 및 회복: 팬데믹과 경제위기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완화, 향후 경제회복 지원, 후생손실 감소를 목표로 하며 이러한 정책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를 포함함
  - 경제 및 재정지원(Economic and financial support), 사회정책(Social policies), 의료 조치(Health measures), 봉쇄 및 제한 조치(Lockdown and restriction)

그림 2-Ⅰ-8 코로나19 대응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자료: OECD, "First lessons from government evaluations of COVID-19 responses: A synthesis," 2022. 2. 7., Figure 2.

○ 대응 및 회복 유형의 경제 및 재정지원 조치인 세금기반 조치(tax-based measures), 대차대조표 관련 조치(balance-sheet measures), 지출조치(spending measures) 세 가지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평가는 주로 조치의 관련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영향평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130)]

- 세금기반 조치: 세율 인하, 세금 납부연기 및 세금공제 제공을 포함한 조치의 프로세스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
  - 각 국가들이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전반적으로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전달 및 수혜대상 식별이 구호조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었음
- 대차대조표 관련 조치: 부채 및 대출 등의 형태로 마련한 재원은 정부적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나 정부의 예산 운영 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
- 지출조치: 경제 및 재정조치 관련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출조치 평가는 가계, 기업, 일자리 및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가계: 재정지원을 통한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조치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기업: 고용지원, 대출보증 또는 세금기반 지원(세금 감면 또는 연기)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영향을 크게 받은 특정 부문(관광, 항공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
  - 일자리 및 근로자 지원: 고용 관련 조치는 여러 수혜집단(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역할이 큰 것으로 보임
- 인프라 조치, 금융시장 지원 조치, 장기회복 지원 조치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 조치들에 대한 평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남

130) 경제 및 재정 조치 외의 정책 대응 평가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 참고

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 OECD 이사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2022.2.25.; 2022.3.8.)[131), 132)]

○ (초기 조치) OECD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133)]하고 관련 조치를 결정

- OECD 이사회는 러시아의 OECD 가입협상 종료, OECD 모스크바 사무소 폐쇄, 러시아 분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도록 결정함
-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OECD 지원방안을 검토

○ (추가 조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복구 및 재건지원 등을 포함)을 강화하고 OECD 주관 행사에 러시아, 벨라루스의 참여를 즉시 중단하기로 결정

□ OECD,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에 관한 보고서(Rights and Support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를 발표(2022.5.9.)[134), 135)]

131) OECD, "Statement from OECD Secretary-General on initial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Russia's large scale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2.25., https://www.oecd.org/newsroom/statement-from-oecd-secretary-general-on-initial-measures-taken-in-response-to-russia-s-large-scale-aggression-against-ukraine.htm, 검색일자: 2022.3.16.

132) OECD, "Statement from OECD Secretary-General on further measures in response to Russia's large-scale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3.8., https://www.oecd.org/newsroom/statement-from-the-oecd-council-on-further-measures-in-response-to-russia-s-large-scale-aggression-against-ukraine.htm, 검색일자: 2022.3.16.

133) OECD, "Statement of OECD Council on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2.24., https://www.oecd.org/newsroom/statement-of-oecd-council-on-the-russian-aggression-against-ukraine.htm, 검색일자: 2022.3.16.

134) OECD, *Rights and Support for Ukrainian Refugees in Receiving Countries*, 2022.5.9., https://www.oecd.org/publications/rights-and-support-for-ukrainian-refugees-in-receiving-countries-09beb886-en.htm, 검색일자: 2022.5.15.

135)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정책 주요 내용」, 2022.5.23.,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258&page=1, 검색일자: 2022.5.24.

○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주 현황)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2년 4월 27일 까지 530만명[136]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난민 중 미성년자 비율이 40~50%, 18세 이상 성인 중 여성이 80~90%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인 수용을 위한 국가별 신속·간소화 조치) OECD 및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체류기간 연장, 이민신청 우선권 부여 등의 이주혜택을 부여함

- EU 이사회는 2022년 3월 4일 임시보호지침[137]을 통해 우크라이나인 수용 절차를 신속·간소화하였음
- OECD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및 체류 간소화 조치를 실시함
  - (미국) 2022년 4월 11일 미국 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체류 및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캐나다)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간 긴급여행 허가제도(CUAET[138])를 신설하고 일시적으로 비자요건을 간소화함
  - (호주) 우크라이나인 전용 비자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7천개 이상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며 3천명 이상이 호주로 입국함
  - (한국·캐나다·뉴질랜드) 비자만료일이 2022년 말 이전인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체류 연장 조치함
  - (영국) 우크라이나인의 체류 허가기간 연장(3년)을 골자로 하는 우크라이나 체류 연장제도(Ukraine Extension Scheme) 시행을 준비 중임

136) 유럽연합국가로 이주한 450만명을 포함하여 폴란드 300만명, 헝가리 50만명, 슬로바키아 36만명 순으로 이주함

137) 2002년 발효되었으며 비EU 국가에서 오는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임시보호를 실시하는 지침임. 임시보호에 대한 적절한 정보, 숙박시설, 고용이나 사회복지, 생계 등에 대한 접근과 미성년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38) Canada-Ukraine authorization for emergency travel

○ (OECD 및 EU 회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지원) 각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정부와 각종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난민들의 안정적인 수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정보제공을 위한 디지털 도구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139)]

-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시민사회단체연합(Alliance for Ukraine)과 협력하여 이동수단, 쉼터, 병원진료 등을 제공(독일), 국영 항공사(Air Canada) 및 자선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최소 1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캐나다로 무료로 이동(캐나다), 에스토니아 정부와 협력하여 에스토니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교통수단(Ferry)을 제공하여 핀란드로 이동(핀란드) 등
-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도구 및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
  - 우크라이나 난민 공식 웹사이트 개설(포르투갈), 원스톱숍 운영으로 종합적 서비스 제공(체코), 연중무휴 난민 수용센터 운영(룩셈부르크) 등
- 난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주거, 아동 교육권 보장, 고용, 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실시
  -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용센터를 중심으로 난민을 거주시킨 후 민간 주거로 보충하고 있으며, 수용센터 이후 주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난민에게 직접 금전 제공, 지자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거나 온라인으로 우크라이나 교육 커리큘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임시보호지위의 난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내국인과 유사하게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함
  - 난민 통합을 위한 수용국 언어에 대한 교육의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139) 국가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원문 보고서 내용 참고

라. 재정 및 기타 이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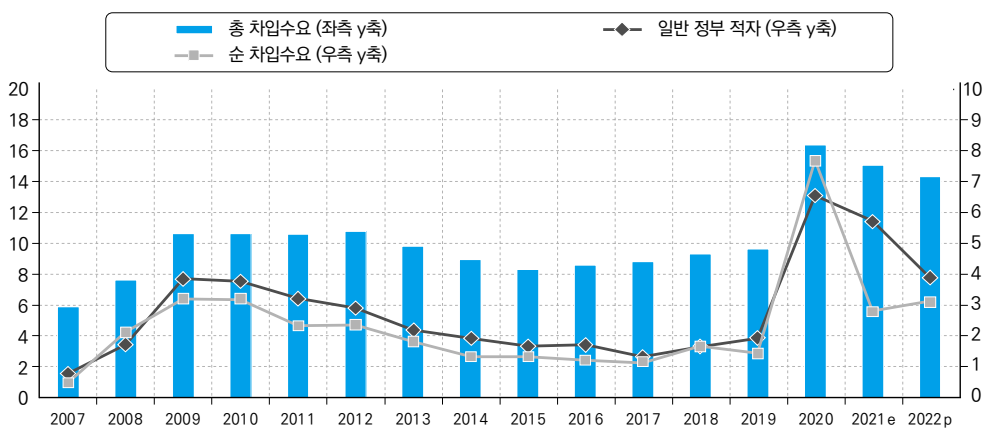
□ OECD, 2022년 차입전망 보고서(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2) 발표(2022.5.11.)[140]

○ (현황) 코로나19의 여파로 OECD 회원국의 차입수요가 급증했으나 2022년부터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의 총 차입수요는 약 9.5조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 채권 총액은 2020년 16.4조달러, 2021년 15.1조달러로 크게 증가함
-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총 차입금에서 순차입금의 비중(현재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있음

그림 2-Ⅰ-9 2007~2022년 OECD 회원국의 재정 및 차입 전망

(단위: 조달러)



주: 총 차입수요(standardised gross borrowing requirement: GBR), 순 차입수요(net borrowing requirement: NBR)

자료: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2*, 2022.5.11., Figure 1.1.

140)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2*, 2022.5.11., https://www.oecd.org/sdd/na/Growth-and-economic-well-being-oecd-05-2022.pdf, 검색일자: 2022.5.9.

○ (전망) OECD 회원국의 2022년 총 차입수요는 약 14.4조달러로 예상되며, 지난 2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준이나 팬데믹 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의 전체 차입금 대비 순차입금의 비율은 2020년 50%에서 2021년 20%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에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OECD 회원국의 미상환 채무에 대한 만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환 및 재융자 채무 규모가 상당하여 2024년 말까지 20조달러 이상의 만기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최근 OECD 회원국의 재정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통화정책의 정상화(less supportive monetary policies) 및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열악해졌으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신용상태 악화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채시장의 잠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무관리당국(DMO[141])의 면밀한 모니터링, 채무관리당국과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소통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권장
  - 신용상태가 악화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142]의 채무 지속 가능성과 경제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보조금, 대출 및 기타 재정지원 등이 필요

○ (권고) 공공채무관리의 관점에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과제해결이 필요하고 신흥경제의 국채관리 중요성을 강조함

- 모든 영역에서 ESG 관련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 환경, 지속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정부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ESG 라벨이 부착된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발행자(sovereign issuers)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채무 관리자(sovereign debt managers)의 전문성 부족, 예산 내 적격한 프로젝트의 가용성 부족 등 문제해결이 필요
  - 부서 간 협업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투명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약속, 이해 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등을 강조

141) Debt Management Office

142) 팬데믹 이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채무 신용도 및 투자 등급이 하락하였고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들 국가에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또한 글로벌 유동성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하방 위험으로 인해 채무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마. 주요 경제지표 동향

□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 발표(2022.2.21.)[143]

○ 2021년 4사분기 OECD 회원국들의 실질GDP 성장률(잠정)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1.2%를 기록하였으며 유럽국가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됨

- G7 국가들의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2%로 OECD 전체 성장률 추세와 일치하며 각 국가별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미국 1.7%, 캐나다 1.6%, 일본 1.3% 등으로 성장세를 주도함
  - 미국의 경우 최종 국내수요 0.5% 증가가 GDP 성장률에 기여하였으며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의 주요 동인은 민간소비 및 수출 등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실질GDP 성장률은 2021년 4사분기 팬데믹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0.2% 초과함
- 2021년 4사분기 유럽국가들의 실질GDP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각 국가별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프랑스 3.1% → 0.7%, 이탈리아 2.6% → 0.6%, 독일 1.7% → 0.7%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1.0%로 나타남

※ 한국 실질GDP 성장률(잠정치): (2021.3Q) 0.3%, (2021.4Q)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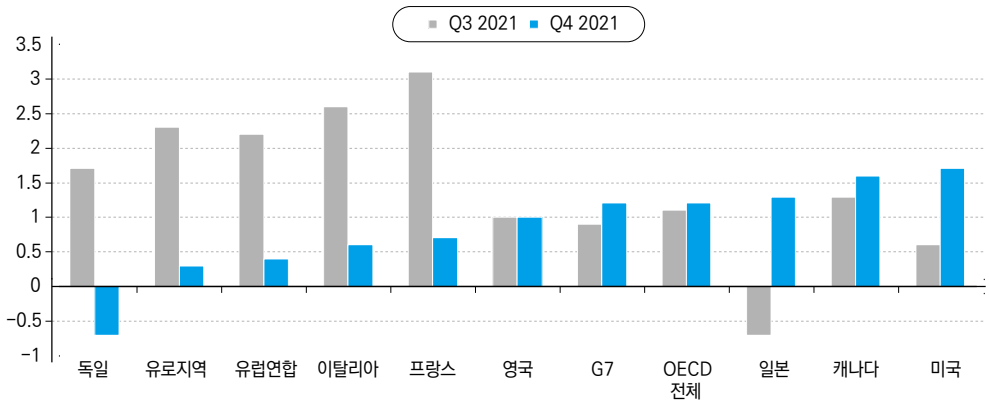
○ 미국, 프랑스,[144]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격차가 가장 큰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2019년 4분기 대비 1.5% 낮은 수준임

143) OECD, 2022.2.21.,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third-quarter-2021-oecd.htm, 검색일자: 2022.2.21.

144) 미국, 프랑스는 각각 2021년 2분기와 3분기에 실질GDP 성장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바 있음

그림 2-Ⅰ-10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자료: OECD, *GDP Growth-the Fourth quarter of 2021*, 2022. 2. 21.

표 2-Ⅰ-20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누적 성장 (2019 Q4부터 2021년 Q3까지)
	Q4	Q1	Q2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0.0	-1.7	-10.4	9.4	1.0	0.8	1.7	1.1	1.2	2.1
G20	0.3	-3.2	-6.9	8.6	1.9	0.6	0.4	1.8	-	-
유럽연합	0.0	-3.1	-11.3	11.7	-0.2	0.0	2.1	2.2	0.4	0.4
유로지역	0.0	-3.5	-11.7	12.6	-0.4	-0.2	2.2	2.3	0.3	0.0
G7	-0.2	-1.9	-10.4	9.4	0.9	0.5	1.8	0.9	1.2	1.4
캐나다	0.3	-2.2	-11.0	9.0	2.2	1.2	-0.8	1.3	1.6	0.2
프랑스	-0.4	-5.7	-13.5	18.6	-1.1	0.1	1.3	3.1	0.7	0.9
독일	-0.1	-1.8	-10.0	9.0	0.7	-1.7	2.2	1.7	-0.7	-1.5
이탈리아	-0.5	-5.8	-12.7	15.8	-1.7	0.3	2.7	2.6	0.6	-0.5
일본	-2.8	-0.4	-7.9	5.3	1.8	-0.5	0.6	-0.7	1.3	-0.2
영국	0.0	-2.6	-19.4	17.6	1.5	-1.2	5.6	1.0	1.0	-0.4
미국	0.5	-1.3	-8.9	7.5	1.1	1.5	1.6	0.6	1.7	3.1
한국	1.3	-1.3	-3.2	2.2	1.1	1.7	0.8	0.3	1.1	-

자료: OECD, *GDP Growth-the Fourth quarter of 2021*, 2022. 2. 21.

표 2-Ⅰ-21 2021년 4사분기 실질GDP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0				2020	2021				2021
		Q1	Q2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1.7	-0.7	-11.6	-3.7	-2.7	-4.6	-0.2	13.2	4.7	4.9	5.5
G20	2.9	-1.5	-9.0	-2.0	-0.5	-3.2	3.6	11.7	4.8	-	-
유럽연합	1.8	-2.5	-13.7	-3.9	-4.1	-5.9	-1.1	13.8	4.1	4.8	5.1
유로지역	1.6	-3.0	-14.5	-4.0	-4.4	-6.4	-1.1	14.4	3.9	4.6	5.1
G7	1.6	-1.2	-11.9	-4.0	-3.0	-4.9	-0.5	13.0	4.2	4.5	5.1
캐나다	1.9	-0.4	-12.6	-5.1	-3.1	-5.2	0.3	11.8	4.0	3.4	4.7
프랑스	1.8	-5.4	-18.6	-3.6	-4.3	-7.9	1.7	19.0	3.5	5.4	7.0
독일	1.1	-1.9	-11.3	-3.7	-2.9	-4.6	-2.8	10.4	2.9	1.4	2.8
이탈리아	0.4	-5.8	-18.1	-5.4	-6.4	-8.9	-0.3	17.3	4.0	6.4	6.4
일본	-0.2	-2.2	-10.2	-5.4	-0.8	-4.5	-1.8	7.3	1.2	0.7	1.7
영국	1.7	-2.2	-21.4	-8.1	-6.4	-9.4	-5.0	24.6	7.0	6.5	7.5
미국	2.3	0.6	-9.1	-2.9	-2.3	-3.4	0.5	12.2	4.9	5.5	5.7
한국	-	1.5	-2.7	-1.0	-1.1	-	1.9	6.0	4.0	4.0	-

자료: OECD, *GDP Growth-the Fourth quarter of 2021*, 2022.2.21.

□ 2021년 4분기 고용률 발표(2022.4.21.)[145), 146)]

○ OECD 회원국의 2021년 4분기 고용률(15~64세)은 전분기 68.2%보다 0.5%p 상승한 68.7%로 나타남

- 고용률은 2019년 4분기 수준(2019년 대비 0.2%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률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분기 72.5%에서 72.8%로 소폭 증가함에 기인

145) OECD, "Employment situation, OECD, fourth quarter 2021," 2022.4.21., https://www.oecd.org/newsroom/employment-situation-oecd-fourth-quarter-2021.htm, 검색일자: 2022.4.22.

146) OECD 고용률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2020년 4분기 고용률 산정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함.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일시해고 노동자를 실업자로 산정하였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이들을 고용된 상태로 산정. 또한 EU 노동조사 방법론의 변경되어 2020년 4분기를 기점으로 분기 간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 미국 및 캐나다의 2021년 4분기 고용률은 각각 70.5%, 74.7%를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각각 0.7%p, 0.9%p 상승
- 2021년 4분기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한 68.8%를 기록
- 한국의 2021년 4분기 고용률은 67.2%로 전분기 66.8%에 비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3분기 대비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국가(증가율이 1.0%p 이상)는 칠레 60.2%, 아이슬란드 81.8%, 튀르키예(터키) 51.8%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미국, 영국, 일본 등 제외)의 2021년 4분기 고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함

○ OECD 회원국의 2021년 4분기 성별 고용률은 여성 61.5%, 남성 76.0%로 전분기 대비 각각 0.4%p, 0.5%p 증가하였고 여성과 남성 간 고용률 격차는 전분기와 동일한 14.5%p로 나타남

- 한국의 2021년 4분기 성별 고용률은 여성 58.4%, 남성 75.8%로 전분기 대비 각각 0.3%p, 0.4%p 증가하였음

표 2-Ⅰ-22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68.8	66.0	67.8	68.9	65.6	66.5	66.9	67.6	68.2	68.7
G7	72.1	69.6	71.1	72.2	69.1	69.9	70.2	70.7	71.4	71.9
유럽연합	68.1	67.1	68.4	68.0	66.6	66.9	67.2	68.2	68.8	69.3
유로지역	67.9	66.7	68.0	67.8	66.1	66.5	66.7	67.9	68.4	68.8
호주	74.3	72.7	75.0	74.3	72.1	73.5	74.4	75.4	74.8	75.2
캐나다	74.2	70.0	73.2	74.1	70.2	71.9	72.1	72.5	73.8	74.7
프랑스	66.4	66.1	67.3	66.5	65.6	66.2	66.5	67.1	67.6	67.7
독일[1)]	75.7	76.2	75.8	75.8	74.1	74.6	74.8	75.4	76.3	76.7
이탈리아	59.1	57.5	58.3	59.0	57.0	57.3	56.7	58.0	58.8	59.4

표 2-Ⅰ-22 의 계속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Q4	Q3	Q4	Q1	Q2	Q3	Q4
일본	78.1	77.7	77.9	78.0	77.2	77.4	77.7	77.8	78.0	78.0
한국	66.8	65.9	66.5	67.0	65.7	65.6	65.6	66.5	66.8	67.2
스페인	63.3	61.0	62.7	63.5	60.7	61.1	61.1	62.6	63.4	63.9
영국	76.2	75.4	75.2	76.4	74.9	74.6	74.8	75.1	75.3	75.5
미국	71.4	67.1	69.4	71.7	66.4	67.8	68.4	68.9	69.8	70.5

주: 1.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 ~ 64세 인구수}} \times 100$

1) 독일의 2020년 고용률(분기별 수치 포함) 값의 경우 신뢰도 낮음, 2020년 1분기 시계열 중단 자료, 독일의 새로운 통합가구조사시스템 도입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2020년 1~4분기 값은 잠정데이터임

자료: OECD,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News Release: 4th Quarter 2021," 2022. 4. 21., Table 1 재구성

□ OECD, 2021년 4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2. 5. 5.)[147]

○ OECD 회원국의 2021년 4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real household income per capita)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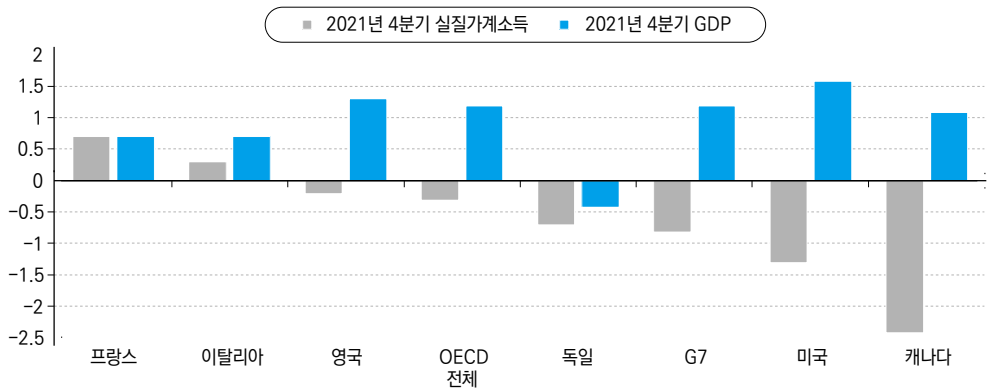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2021년 4분기 1인당 실질GDP가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것과 대조됨
  - 1인당 GDP 성장률의 추이는 팬데믹 초기 급격한 하락 이후 경제활동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2021년 초 이후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가계에 대한 지원의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G7 국가[148] 중 2021년 4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 -2.4%, 미국 -1.3%, 독일 -0.7%, 영국 -0.2%로 나타남
- 2021년 4분기 대비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한 국가는 프랑스 0.7%, 이탈리아 0.3%로 나타남

147) OECD, 2022. 5. 5., https://www.oecd.org/sdd/na/Growth-and-economic-well-being-oecd-05-2022.pdf, 검색일자: 2022. 5. 9.

148) 2021년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으로 비교

그림 2-Ⅰ-11 2021년 4사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과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 대비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의 경우 2021년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7 국가에서 제외됨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1*, 202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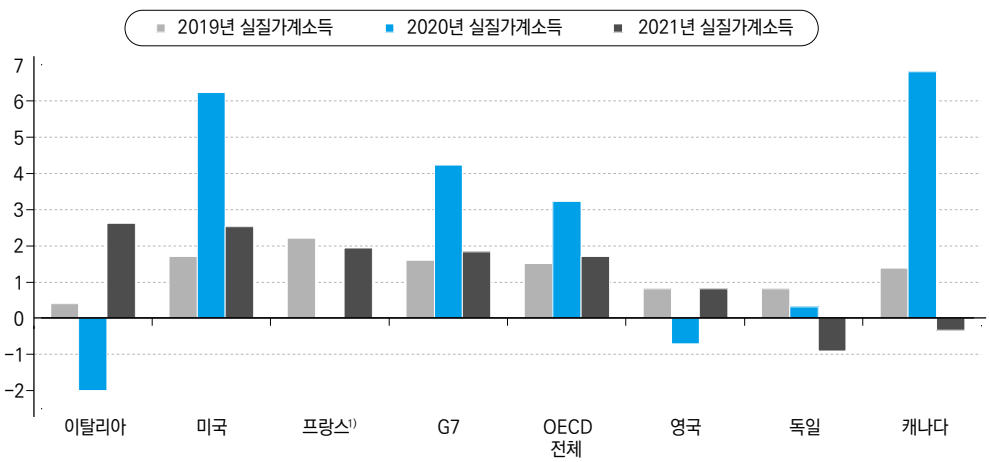
○ OECD 회원국들의 2021년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1.7%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실질가계소득은 팬데믹 이전(2019년 4분기) 대비 3.8% 높은 수준임

- 2021년 1인당 실질가계소득이 증가한 국가는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2020년 및 2021년 모두 증가한 유일한 G7 국가로 나타남
  -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2분기 가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했으며, 미국은 2021년 1분기에 해당 정책[149]을 반복한 바 있음
  - G7의 유럽국가의 경우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위해 기업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149)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및 구호지출법(Coronavirus Response and Relief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및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그림 2-Ⅰ-12 2019~2021년 1인당 실질가계소득 증가율

(단위: 전년 대비 %)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1) 프랑스의 경우 2020년 제로(Zero) 성장률을 기록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1*, 2022.5.5.

바. 기타

□ 2022년 OECD 각료이사회[150] 회의 개최(2022.6.9.~10.)[151), 152)]

○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The Future We Want: Better Polic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a Sustainable Transition)'을 주제로 개최됨

150) OECD 각료 이사회는 38개 회원국 최고위급 포럼으로 국제기구 대표,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재무·경제·외교장관급 각료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1년 동안 OECD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임

151) OECD 각료이사회, https://www.oecd.org/mcm/

152) OECD 각료이사회 회의 결과, 2022.6.10., https://www.oecd.org/newsroom/oecd-2022-ministerial-statement-and-outcomes.htm, 검색일자: 2022.6.20.

- 각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식량 및 에너지, 공급망 약화 등 리스크 완화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주장함

○ 각료 성명이 채택되고 OECD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IFCMA)[153]이 출범함

- 코로나19에 따른 청년회복 지원 확대, 조세범죄 근절을 위한 원칙, 국제 규제협력, 환경 정보 및 보고,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책, 블록체인 및 기타 기술,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8개 권고안을 채택함
- 주요 성과문서 고령화 및 고용정책에 관한 OECD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 OECD 성별 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보고서 등을 채택

153) OECD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포럼(The OECD's 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은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G20-OECD의 포괄적 프레임 워크의 성공 모델을 기본으로 다자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탄소 완화 및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됨

Ⅱ 미국(FY2022: 2021.10.~2022.9.)*

표 2-Ⅱ-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1.7.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고용통계 발표
2022.1.12.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1.12.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2022.1.13.	연방대법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무효화 판결
2022.1.27.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1년 4분기 GDP(속보) 발표
2022.2.16.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
2022.2.17.	의회, 2022 회계연도 3차 임시 예산안(H.R. 6617) 가결
2022.2.17.	재무부 재정관리국(BFS), 2021 회계연도 발생주의 결산보고서 발표
2022.2.25.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서동규 연구원(dkseo@kipf.re.kr)

표 2-Ⅱ-1 의 계속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22.3.	바이든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 요청안 및 대 러시아 제재 방침 발표
2022.3.2.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3.4.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2월 고용통계 발표
2022.3.10.	의회, 2022 회계연도 4차 임시 예산안 가결
2022.3.15.	2022 회계연도 정규 세출예산법안 최종 입법 완료
2022.3.28.	관리예산처(OMB),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2022.4.6.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및 경제전망 공개
2022.4.8.	의회예산처(CBO), 2022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추정치 발표
2022.4.15.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3월 주 및 지역별 실업 통계 발표
2022.4.20.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4.28.	상무부(BEA), 2022년 1분기 GDP(속보) 발표
2022.5.4.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발표
2022.5.6.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4월 고용 통계 발표
2022.5.11.	감사원, 2022년 분절·유사·중복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 연례보고서 발표
2022.5.19.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추경세출예산안(H.R. 7691) 가결
2022.5.23.	백악관, 인도태평양 경제협정프레임워크 출범 발표
2022.5.25.	의회예산처, 2022~2032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 발표
2022.6.1.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
2022.6.10.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
2022.6.15.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 전망 공개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FY2022 임시 예산

□ 미 의회, 2022 회계연도 3차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6617) 가결(2022.2.17.)[154]

○ (배경) 2022 회계연도(2022.10.1. 개시) 정규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후 의회는 1차 임시 예산안(H.R. 5305)을 통과(2021.9.21.)시켰으며, 이후 2차 임시 예산(H.R. 6119, 2021.12.3.)을 통해 정부가 운영됨

* (임시예산별 만료 시한) 1차(2021.12.3.) → 2차(2022.2.18.)

○ (규모 및 만료시한) 3차 임시 예산법(P.L. 117-86)은 1·2차 임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로 진행되며, 만료 시한은 2022년 3월 11일로 규정함

* (법안 진행) 하원 통과(2.8.; 272:162) → 상원 통과(2.17.; 65:27) → 대통령 서명(2.18.)

□ 미 의회, 2022 회계연도 4차[155] 임시 예산안[156] 가결 (2022.3.10.)[157]

○ (임시 예산안 제정 목적) 4차 임시 예산안은 3차 임시예산안 통과 후에 당시 진행 중에 있던 2022 회계연도의 정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 조치로 제정됨[158]

○ (규모 및 만료 시한) 4차 임시 예산법은 1·2·3차 임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로, 만료 시한은 2022년 3월 15일로 규정함

* (법안 진행) 하원(3.9.)과 상원(3.10.) 표결 모두 구두투표(voice vote)로 진행

154)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2/18/bill-signed-h-r-6617/, 검색일자: 2022.2.22.
155) 각 회차별 임시 예산 입법 번호: 1차(P.L. 117-43), 2차(P.L. 117-70), 3차(P.L. 117-86), 4차(P.L. 117-86)
156) H.J.Res.75; P.L. 117-95
157)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11/bill-signed-h-j-res-75/, 검색일자: 2022.3.14.
158) CRFB,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2, 검색일자: 2022.3.15.

참고 2-Ⅱ-1 2022 회계연도 부분세출예산안[159]

□ 한편, 의회 하원에서는 2022 회계연도 개시 수개월 전부터 분야별로 구성된 부분세출예산안(minibus[160])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미 의회 하원, 2022 회계연도 9개 세출분야 예산법안[161] 통과 의결(2021.7.28.~29.)[162), 163), 164)]

- 총 9개의 세출예산법안 중 7개의 법안(① 농업, ② 에너지・수자원, ③ 재무・일반정부, ④ 내무・환경, ⑤ 군사・재향군인, ⑥ 교통・주택・도시개발, ⑦ 노동・보건・교육)은 개별 세출법안들이 하나의 법안 패키지로 통합되어 하원을 통과함[165)]
- 나머지 2개의 법안(① 국무부・외교,[166)] ② 입법부[167)])은 개별 법안[168)]으로 하원 통과

1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18년 9월 제2호 동향」, 2018.10.에서 발췌
160) (minibus 법안) 미국 의회 세출위원회는 총 12개 분야의 세출소위원회로 구성되며, 12개 전체 분야 예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omnibus라고 하며, 소수의 분야만 별도로 묶어 처리하는 법안을 minibus라 칭하고 있음(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지출분석센터), 「2018년 9월 제2호 동향」, 2018.10.'에서 발췌)
161) H.R. 4502; H.R. 4373; H.R. 4346)
162)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even-bill-appropriations-package, 검색일자: 2022.3.21.
16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legislation, 검색일자: 2022.3.21.
164)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hr-4502-amendment-tracker, 검색일자: 2022.3.21.
165) ① 농업(H.R. 4356), ② 에너지・수자원(H.R. 4549), ③ 재무・일반정부(H.R. 4345), ④ 내무・환경(H.R. 4372), ⑤ 군사・재향군인(H.R. 4355), ⑥ 교통・주택・도시개발(H.R. 4550), ⑦ 노동・보건・교육(H.R. 4502)
166)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fiscal-year-2022-state-foreign-operations-and-related-programs, 검색일자: 2021.7.30.
167)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fiscal-year-2022-legislative-branch-funding-bill, 검색일자: 2021.7.30.
168) ① 국무부・외교(H.R. 4373), ② 입법부(H.R. 4346)

2) FY2022 확정 예산

□ 2022 회계연도 정규 세출예산법안 최종 입법(H.R. 2471; P.L. 117-103) 완료(2022.3.15.)[169]

* 본 정규 세출예산법은 3월 10일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 (예산 구성 및 규모[170]) 총 12개 세출예산 분야가 모두 포함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6.1% 증가한 1.5조달러[171] 규모로 확정됨

- 세출예산의 주요 구분 기준(국방 vs 비국방 예산)으로 한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7,820억달러, 비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7,300억달러를 보임

○ (농업 등[172]) 총 251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6%(14억 2,600만달러) 증가

-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할 농어촌지역의 개발 및 인프라 예산에 40억달러
- 여성·영아·아동 특별보조(WIC[173])에 60억달러, 미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식량지원 프로그램에 22억달러

○ (통상·사법·과학[174]) 총 758억달러 배정, 전년 예산[175] 대비 약 6.6% 증가

169)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03/15/bill-signed-h-r-2471/, 검색일자: 2022.3.16.
170)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Appropriations%20Division-by-Division%20Summary.pdf, 검색일자: 2022.3.17.
171) CBO에서 법안비용보고서(https://www.cbo.gov/publication/57928)를 통해 발표한 2022 회계연도의 예산 비용(Base Funding 기준)은 1조 4,708억달러
172) Agriculture-Rural Development-FDA
173) Women, Infants, and children
174) Commerce·Justice·Science
175) 통상·사법·과학 분야의 전년도 예산은 의회 세출예산위원회에서 공개한 2021 확정예산 요약본(H.R. 133 Division-by-Division Summary of Appropriations Provisions, 2020.12.21.) 수치(711.2억달러)를 기준으로 작성
관련 링크: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omnibus-appropriations-and-coronavirus-relief-package, 검색일자: 2022.3.23.

- (통상) 국제무역청(ITA[176]), 산업보안국(BIS[177]), 특허상표등록청(PTO[178]) 등이 포함된 상무부에 99억달러 배정
- (사법) 연방수사국(FBI)(약 107억달러), 연방교도국(FBP[179])(약 81억달러) 등
- (과학)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약 240억달러, 미 국립과학재단(NSF[180])에 88억달러 배정

○ (국방[181]) 총 7,285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4.7%(325억달러) 증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과 주변 지역 동맹국 지원 예산에 각각 3억달러,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각각 3천만달러 등
- 현역 군인 약 134만 8천명에 대한 전년 대비 2.7% 증가한 봉급 등이 포함된 인건비 예산에 약 1,668억달러
- 시설 유지 및 보수 등 전력 운영 관리에 2,563억달러 배정
- 전투기, 함대 등 군대 무기 등의 조달 예산에 1,449억달러 배정

○ (에너지 및 수자원 개발[182]) 총 550억달러, 전년 확정 예산 대비 6.2%(32억달러) 증가

- 탄소 감축·완화 등을 위한 화석 에너지 및 탄소 관리 예산에 8억 2천만달러, 에너지 혁신을 위한 과학 관련 예산에 75억달러 배정
- 핵폐기물 임시 처리 공간 관련 예산으로 2,800만달러 등

○ (금융·일반정부[183]) 총 255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11억달러 증가

- 국세청의 납세 서비스·징수집행·운영 등에 4.5%(약 126억달러) 배정

17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77)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178)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79) Federal Bureau of Prisons
18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81) Defense
182) Energy and Water Development
183) 일반정부 분야는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음

- 관리예산처(OMB) 1억 1,600만달러, 국가약물관리정책국(ONDCP[184]) 4억 4,900만달러 등 대통령실 예산으로 약 7억 8,600만달러 배정

○ (국토안보[185]) 총 575억달러,[186] 전년 확정 예산 대비 10.1%(56억달러) 증가

- 관세국경보호청(CBP[187])에 148억달러, 이민세관단속국(ICE[188])에 82억 6천만달러,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USSS[189])에 약 26억달러 배정
- 사이버 안보에 26억달러, 연방재난청(FEMA)에 239억달러 배정

○ (국내·환경[190]) 총 380억달러, 전년 확정 예산 대비 5.2%(18억 9,300만달러) 증가

- 환경보호청(EPA)에 95억 6천만달러, 산불진화 관련 예산에 약 54억 8천만달러, 국립공원관리청에 약 32억 6천만달러, 어류·야생 동물관리국에 약 16억 5천만달러 배정

○ (노동·보건복지·교육[191]) 2,136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7.7%(153억달러) 증가

- (노동) 견습 지원 약 2억 3,500만달러, 직업훈련청에 약 98억달러 배정 등 총 132억달러 배정
- (보건복지) 국립보건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23억달러 증가한 450억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CDC[192])에 전년 대비 약 6억달러 증가한 85억달러 배정 등 총 1,083억달러
- (교육) K12(초·중·고) 교육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달러 증가한 426억달러 및 펠 그랜트(Pell Grant)를 포함한 고등교육 학생 재정지원 예산에 246억달러

184)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185) Homeland Security
186) Off-setting collections를 통해 상계된 규모
187)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88)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189) U.S. Secret Service
190) Interior·Environment
191) Labor·Health and Human services·Education
19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입법[193]) 총 59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11.8%(6억 2,500만달러) 증가

- 입법 분야 예산은 하원(약 17억달러), CBO(약 6,090만달러), 의회 도서관(약 7억 9,400만달러), 감사원(GAO)(약 7억 2천만달러), 의사당 경비대(약 6억달러) 등의 예산 포함

○ (군사시설·보훈[194]) 1,276억달러, 전년 확정 예산 대비 12.7%(144억달러) 증가

- 가족 거주 시설 및 아동발달센터에 각각 14억달러, 2억 2,400만달러, 재향군인 의료서비스에 975억달러(전년 대비 약 75억달러 증가) 배정

○ (국무·외교[195]) 총 561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1.1%(5억 9,500만달러) 증가

- 국무부 관련 예산은 총 172억달러(해외 대사관 안전 및 시설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예산으로 58억달러 포함)
-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향상을 위해 50억달러 배정 등
- 이스라엘(33억달러) 등 주요 동맹국 지원 및 국제안보 지원에 89억달러 배정

○ (교통·주택도시개발[196]) 총 810억달러, 전년 예산 대비 8%(64억달러) 증가

- 미연방항공국(FAA)에 181억달러, 미연방고속도로국(FHA[197])에 575억달러, 임차인 기반 임대 지원[198](Tenant-based Rental Assistance) (274억달러), 공공주택사업(200만명 이상 혜택 전망)에 4억 5천만달러 등 배정

193) Legislative branch
194) Military construction·Veterans affairs
195) State·Foreign operations
196) Transportation·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7)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198) 공과금(utility), 보증금 및 지속적인 임대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 (https://www.commerce.wa.gov/wp-content/plugins/gtranslate/url_addon/gtranslate.php?glang=ko&gurl=serving-communities/homelessness/tenant-based-rental-assistance-tbra/)

3) FY2023 예산안

□ 관리예산처(OMB), 2023 회계연도(2022.10.~2023.9.) 대통령 예산안 발표(2022.3.28.)[199]

○ (예산기조 및 주요정책) 전년 대비 1.0% 감소한 5조 7,920억달러 규모의 ① 국내·외 안보 및 안전 강화, ②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③ 법인세율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200]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편성

- (일자리 창출/경제생산성 향상) 항만/수로/도로/다리 현대화,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 주택 가격 안정화에 500억달러 배정 및 해상 화물 수송량 증대 등
- (글로벌 위협 대응) 글로벌 자유 보호, 글로벌 보건 안보 대비, 이민 체계 개선 등
  - 중국 대응(4억달러) 및 러시아의 침공 상황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6억 8,200만달러), 미국이민서비스국의 효율적 업무 진행 등(7억 6,500만달러)
- (보건 인프라 강화) 세계 최상의 보건 인프라 확립
  - 향후 5년간 보건복지부에 817억달러를 배정하여 미래 대유행 등에 대비한 보건 체계 확립 계획 및 주/지방 등의 신속한 공중보건 대응 강화
- (기후 위기 대응) 제로 탄소 배출 차량 확대, 기후 복원력 강화, 농업지역의 청정에너지 지원
  - 제로 탄소 배출 차량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주요 연방 기관의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등에 7억 5,700만달러의 예산 투입
- (경제 기회 확대) 취약한 지역사회 투자, 실업보험 사기 대응, 주택 기회 확대, 국내 범죄 예방 등

199)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28/statement-by-president-joe-biden-on-the-fy-2023-budget/, 검색일자: 2022.4.21.

200) 법인세율은 28%(현행 21%)로 인상 계획, 부유세의 경우 전체 가구 중 상위 0.01%를 대상으로 최저세율 20% 신설 계획

- 미국에서 가장 취약한 특정 지역의 공평한 개발 촉진 계획, 총기 범죄 대응 등을 위한 연방정부의 법 집행력 지원(174억달러 배정)

○ (경제전망) 올해(2022년) 실질성장률은 전년(5.5%) 대비 1.3%p 감소한 4.2%로 전망하며, 이후 2025년에 저점(2.0%)을 기록한 후 장기적으로 2.3% 전망

- 올해(202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5%p 감소한 3.9%, 내년(2023년)에 저점(3.6%)을 기록한 후 2025년부터 장기적 수준으로 3.8% 전망

표 2-Ⅱ-2 FY2023 대통령 예산안 경제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CY[1])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32
	실적			전망				
GDP 명목규모	20,580	21,433	20,894	22,899	24,631	25,853	…	37,437
실질GDP 성장률	2.9	2.2	-3.4	5.5	4.2	2.8	…	2.3
CPI(Urban)[2]	2.4	1.8	1.2	4.6	4.7	2.3	…	2.3
실업률	3.9	3.7	8.1	5.4	3.9	3.6	…	3.8

주: 1) CY = Calendar Year
2) 계절조정된 도시소비자물가 지수
자료: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9.

○ (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올해(FY2022) 추정치(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올해(FY2022) 재정수입은 전년(FY2021) 실적치 대비 약 9.6%(3,900억달러) 증가한 4조 4,370억달러(GDP 대비 18.3%) 추정

○ (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올해(FY2022) 추정치(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재량지출[201]) FY2023 총 재량지출(outlays) 규모는 전년 추정치 대비 0.9% 증가한 1조 7,090억달러 계획
  - 국방 분야 지출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1.5%)

201)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 아닌 지출(outlays) 수치 기준(Table S-4; Proposed Budget by Category)

• 비국방 분야 지출규모는 두 회계연도(FY2023, FY2025)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양상(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1.6%)

- (의무지출) 코로나19 발생 직후 큰 증가폭을 보였던 의무지출은 올해(FY2022)와 내년(FY2023)에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 전망(향후 10년 연평균 증가율: 4.3%)

○ (국가채무) FY2023 연방정부 채무[202](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도(24조 8,360억달러) 대비 4.8% 증가한 26조 330억달러 전망

* GDP 대비 수치는 감소: (FY2022) 102.4% → (FY2023) 101.8%

표 2-Ⅱ-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추정	전망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2031	2032	2023~2032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2,524	2,105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	6,795	7,083	58,264
지출	2,983	3,518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	8,477	8,867	72,685
재정 적자	459	1,414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	1,682	1,784	14,421
비정부 부문 소유 채무	5,803	7,544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	37,727	39,542	-
경제 규모 (GDP)	14,441	14,119	21,000	22,358	24,256	25,567	26,694	27,787	…	35,498	37,041	-
예산 총량(GDP 대비 %)												
수입	17.7	14.8	16.3	18.1	18.3	18.1	18.3	18.3	…	19.1	19.1	18.8
지출	21.0	24.7	31.2	30.5	24.1	22.7	22.8	23.1	…	23.9	23.9	23.4
재정 적자	3.2	9.9	14.9	12.4	5.8	4.5	4.5	4.8	…	4.7	4.8	4.7
비정부 부문 소유 채무	40.8	53.0	100.1	99.7	102.4	101.8	102.2	103.1	…	106.3	106.7	-

202) 정부 내부거래 제외 →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 지표로 쓰임

참고 2-Ⅱ-2

□ 의의회예산처(CBO), 2022~2032 예산기준선 수정 전망(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발표(2022.5.25.)[203]

*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2년 4월 8일까지 입법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제전망은 2022년 3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작성은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204]을 근거로 함

○ (재정수지) 2022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63%(1.7조달러) 감소한 약 1.0조달러(GDP 대비 4.2%)로 전망

- 재정적자 감소는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감소와 수입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규모 약 1.6조달러 전망
  *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재정적자 연평균은 약 5.1% 전망(지난 50년간 GDP 대비 비중 평균은 3.5%)
- (수입) 2022년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19.5%(7,890억달러) 증가한 4.8조달러 전망(GDP 대비 19.6%)
  *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수입 연평균은 약 18.1% 전망(지난 50년간 GDP 대비 비중 평균은 17.3%)
- 수입 증가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되나, 수입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올해(2022년) GDP 대비 수입 비중 19.6% → 2025년에는 17.6%로 감소 전망
  * 수입 증가율 감소는 개인소득세의 큰 증가세 감소(dissipate) 및 이자율 증가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순수입 감소와 대차대조표 축소 영향 등에 기인함
- 한편, 2017 세금감면법(P.L. 115-97)의 많은 조항들이 2025년에 만료되면서 개인소득세율, 법인세율 등이 기존체계로 복귀함에 따라 이후 연도를 기점으로 GDP 대비 연방수입은 재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03)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7950
204)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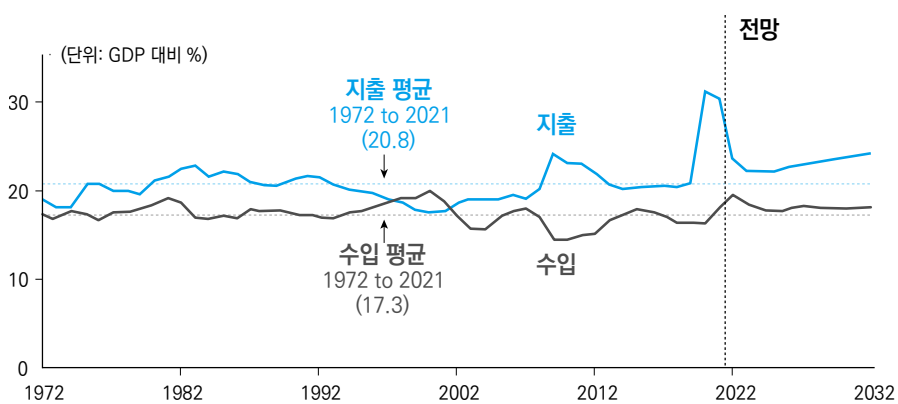
○ (지출) 2022년 연방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지출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3.9%(9,500억달러) 감소한 5.9조달러 전망(GDP 대비 23.8%)

* 향후 10년간 GDP 대비 비중 지출 연평균 약 23.2% 전망(지난 50년간 GDP 대비 비중 지출 연평균은 20.8%)

- 연방 지출규모는 코로나19 이후 올해(2022년) 감소를 제외하고는 이후 계속 증가하나, GDP 대비 수치는 2021년을 기점으로 202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25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
- GDP 대비 기준, 의무지출과 재량 지출 모두 2024년까지 감소세를 보일 전망
  - 2022년 의무지출의 경우, 전년도 대비 실업수당, 중소기업청 예산, 코로나19 완화 자금, 고등교육 예산 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락 전망
  - 의무지출로 구분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아동세제(CTC) 등 환급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 규모는 2022년 2,200억달러로, 2021년(7,330억달러) 대비 큰 폭(약 70%)으로 감소 전망[205)]

* 환급성세액공제로 구분되는 재난지원금(recovery rebates)의 경우, 2020년에 약 2,750억달러, 2021년에 5,700억달러가 소요된 바 있음

그림 2-Ⅱ-1 미국 연방정부 수입/지출 추이 및 전망



자료: CBO,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5.25.

205) 2023년 환급성세액공제 규모는 880억달러 전망

○ (국가채무) 연방정부 채무[206] 수치는 2020년에 GDP 대비 100%를 기록했던 채무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2021년부터 소폭 감소를 시작으로 2022년과 2023년의 GDP 대비 규모 모두 순차적으로 감소

-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된 후, 2027년에는 다시 100% 재진입 전망

표 2-Ⅱ-4 미국 예산 전망 비교(OMB 예산안(5월) vs CBO 기준선(7월))

재정전망		실적		전 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1	2032
예산 총량(십억달러)												
수입	OMB	3,421	4,047	4,437	4,638	4,874	5,076	5,406	5,696	…	6,795	7,083
	CBO			4,836	4,890	4,924	4,982	5,280	5,548	…	6,402	6,662
지출	OMB	6,550	6,822	5,852	5,792	6,075	6,406	6,734	7,048	…	8,477	8,867
	CBO			5,872	5,874	5,980	6,300	6,643	6,958	…	8,469	8,915
재정적자	OMB	3,129	2,775	1,415	1,154	1,201	1,330	1,328	1,352	…	1,682	1,784
	CBO			1,036	984	1,056	1,318	1,364	1,409	…	2,067	2,253
연방채무[1]	OMB	21,017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29,988	31,368	…	37,727	39,542
	CBO			24,173	25,193	26,217	27,561	28,925	30,326	…	37,949	40,213
예산 총량(GDP 대비 %)												
수입	OMB	16.3	18.1	18.3	18.1	18.3	18.3	18.7	18.9	…	19.1	19.1
	CBO			19.6	18.6	18.0	17.6	18.0	18.3	…	18.1	18.2
지출	OMB	31.2	30.5	24.1	22.7	22.8	23.1	23.3	23.4	…	23.9	23.9
	CBO			23.8	22.4	21.9	22.3	22.7	22.9	…	24.0	24.3
재정적자	OMB	14.9	12.4	5.8	4.5	4.5	4.8	4.6	4.5	…	4.7	4.8
	CBO			4.2	3.8	3.9	4.7	4.7	4.6	…	5.9	6.1
연방채무[1]	OMB	100.1	99.6	102.4	101.8	102.2	103.1	103.7	104.3	…	106.3	106.7
	CBO			97.9	96.0	96.1	97.5	98.8	100.0	…	107.5	109.6

주: 1) 국가(연방)채무는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 규모를 의미
자료: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Table S-3.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5.25., Table 1-1.

20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 (경제) 실질성장률은 2020년에 -3.5%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 5.7%로 회복된 후, 올해(2022년) 약 2%p 하락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향후 몇 년간 감소 추세 전망

- (물가) 높게 상승한 물가는 강한 수요와 노동 및 상품·서비스의 공급 제한이 맞물려 2022년에도 지속되다가 공급 차질 현상 소산(dissipate), 에너지가격 하락과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진정 국면(subside)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21년 중반 이래 약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함

- (노동시장) 2022년에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일자리가 410만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중반 정도에 팬데믹 이전 수준(2020년 2월)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참고] 비농업 고용 인구 추이: 2020년 2월(1억 5,250만명) → 2022년 5월(1억 5,168만명)

  • 2023년 실업률은 2002년 대비 개선되는 방향을 보이며 3.5%까지 하락하나, 2024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실업률은 향후 몇 년간 4.0% 이내 유지)

- (이자율) 기준금리(현재 0.75~1.00%)는 2022년 말에 1.9%로 상승, 이후 2023년 말에 2.6%까지 추가적인 인상 전망

표 2-Ⅱ-5 경제전망

(단위: %)

구분(CY[1])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026
	실적				전망			
실질GDP 성장률	3.0	2.2	-3.5	5.7	3.8	2.8	1.6	1.5
CPI(Urban)[2]	2.4	1.8	1.2	4.7	6.1	3.1	2.4	2.3
실업률	3.9	3.7	8.1	5.4	3.8	3.5	3.7	3.9

주: 1) CY = Calendar Year
2) 도시소비자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2 to 2032*, 2022.5.25.

나. 추경 예산

□ 미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추경세출예산안(H.R. 7691) 가결(2022.5.19.)[207]

○ (배경) 관리예산처(OMB)는 지난 4월 28일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경제 수요 대응을 위한 추경세출예산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208), 209)]

○ (입법 주요 내용) 총 약 400억달러 규모의 동 추경세출예산은 장갑차, 소총, 탄약, 무인 전투기 체계 등 우크라이나 군 및 경찰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민 기본 서비스 등을 지원 계획

- 또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및 물가 인상 대응 차원으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전략적 광물·자재(minerals and materials)의 미국 내 생산력 증대 지원 계획

○ (의회 입법 일지) 동 법안은 하원에서 368:57 표결로 하원 통과(5.10.)[210] 및 상원에서 86:11로 통과한(5.19.) 후, 대통령 서명으로 5월 21일 입법(P.L.117-128) 발효[211]

207)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delauro-applauds-senate-passage-of-legislation-to-provide-additional-support-t, 검색일자: 2022.5.25.

208) 관리예산처(OMB),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4/FY_2022_Emergency_Supplemental_Assistance-to-Ukraine_4.28.2022.pdf, 검색일자: 2022.5.12.

209)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4/28/remarks-by-president-biden-on-the-request-to-congress-for-additional-funding-to-support-ukraine/, 검색일자: 2022.5.12.

210)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legislation-to-provide-additional-support-to-ukraine, 검색일자: 2022.5.12.

211)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2/05/21/bills-signed-h-r-7691-and-h-r-7791/, 검색일자: 2022.5.21.

□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추경안(H.R. 7691) 가결(5.19.)에 앞서 통과된 2022 회계연도 정규세출예산법(P.L. 117-103)(3월 15일 통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개별 추경예산조항을 포함함

○ CBO의 비용추계보고서[212]에 따르면, 당해 우크라이나 관련 추경예산은 136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

□ 의회 하원, 영아 분유 대란(infant formula shortage) 대응을 위한 추경세출예산안(H.R. 7790) 가결(2022.5.18.)[213]

○ (배경) 미국 내 한 분유 대형기업의 공장에서 생산된 분유를 먹은 아기 2명이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자 공장 가동 중단 명령과 함께 일부 제품에 대한 분유 리콜이 이루어지면서 분유 대란으로 이어짐[214]

○ (법안 규모) 총 2,800만달러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 동 추경 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2023.9.30.)까지 사용 가능

* (예산 배분) 1,400만달러(2022년) → 1,300만달러(2023년)

○ (주요 내용) 미 FDA의 검사원 인력 강화 및 증원, 분유 이슈 관련 인력 예산, FDA의 부적절한 분유 관련 기업의 시장 진입 관련 역할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상(emergency-designated)지출로 지정됨

212)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3/HR2471_As_Cleared_by_the_Congress.pdf, 검색일자: 2022.6.14.

213)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upplemental-funding-legislation-to-address-infant-formula-shortage, 검색일자: 2022.6.16.

214) CNBC, https://www.cnbc.com/2022/05/21/abbott-ceo-apologizes-for-baby-formula-shortage-in-washington-post.html, 검색일자: 2022.6.16.

다. 결산

□ 미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FY2021(2020년 10월~2021년 9월) 발생주의 결산보고서[215] 발표[216](2022.2.17.)

○ (연방 비용) FY2021 연방정부 순 비용[217](net cost)(발생주의)은 전년(7.41조 달러) 대비 0.8%(622억달러) 감소한 7.35조달러

* 순 비용을 구성하는 지출 비중은 보건복지부(21%), 사회보장국(16%), 국방부(12%), 재무부(11%), 보훈부(10%), 노동부(5%), 이자지출(5%), 중소기업청(5%) 순으로 나타남[218]

○ (재정수지) FY2021 연방정부 재정적자(현금주의)는 전년(3.1조달러) 대비 3,563달러(약 11.4%) 감소한 2.7조달러, 순 운영비용(발생주의)은 전년(3.8조 달러) 대비 7,465억달러(약 19.4%) 감소한 3.1조달러

- FY2021의 순 운영비용과 현금주의 재정적자는 약 3,193억달러 차이를 보임

* 순 운영비용은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관련 비용(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liabilities)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주의 재정적자에는 포함되지 않음

215) FY202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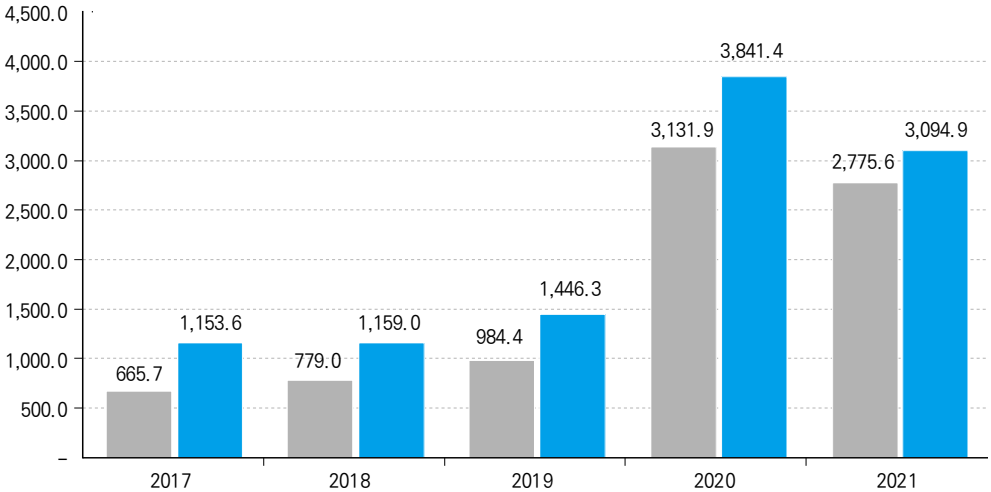
216) 미 재무부,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검색일자: 2022.3.16.

217) 총비용(gross cost)에서 재화와 용역으로 인한 수입(earned revenues)(예: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premiums), 국립공원 입장료(national park entry fees), 우정국 서비스 비용(postal service fees) 등)으로 인한 수입을 차감하고, 손실 또는 이득(gains or losses)(예: 이자율, 물가 인상 등)을 조정(adjust)한 결과 값을 순 비용(net cost)으로 정의함(미 재무부, *FY202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2.2.17., p.21, table 4)

218) 즉, 7개의 연방정부기관 및 이자 지출이 전체 순 비용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50개 이상의 기관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2-Ⅱ-2 미국 재정적자(현금주의)와 순 운영비용(발생주의) 추이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회색: 현금주의 재정적자 / 파란색: 순 운영비용(발생주의)

자료: 미 재무부, "FY202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2.2.17., p.5, Chart 2-U.S. budgetDeficit & Net Operating Cost

표 2-Ⅱ-6 순 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순 운영비용(net operating cost) ①	**3,841.4**	**3,094.9**	**-746.5**	**-19.4**
Federal Employee and Veteran Benefits Payable ②	975.2	767.5	-207.7	-21.3
Investments in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 ③	3.2	-112.0	-115.2	N/A
Advances and Pre-payments ④	-150.6	-150.7	-0.1	0.07
Taxes Receivable, net ⑤	-91.1	-68.0	23.1	-25.4
Timing Differences - Credit Reform Costs ⑥	44.9	-75.1	-120.0	N/A
Other, Net ⑦	-72.1	-42.4	29.7	-41.2
Subtotal - Net difference: ⑧ = ② + … + ⑦	709.5	319.3	-390.2	-55.0
현금주의 재정적자(budget deficit) ⑨ = ① - ⑧	**3,131.9**	**2,775.6**	**-356.3**	**-11.4**

자료: 미 재무부, "FY2021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2.2.17., p.18, Table 2: Net Operating Cost vs. Budget Deficit

○ (자산) FY2021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1.9.30. 기준)은 4조 8,936억달러로 전년(약 5조 9,557억달러) 대비 17.8% 증가

- 자산은 현금/화폐성자산[219](4,750억달러)과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순 대출금[220](1.7조달러), 순 미수금[221](4,010억달러) 및 순 유형자산[222](1.2조달러) 등이 3/4 이상의 비중을 차지

○ (부채) FY2021 부채는 전년(32조 7,440억달러) 대비 6.2%(2조 337억달러) 증가한 34조 7,777억달러(FY2020의 전년도 대비 부채 증가율은 약 21.5% 수준)

- 부채는 정부내부 거래를 제외한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223]) 및 미지급 이자를 합한 22.3조달러,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10.2조달러, 기타(2.2조달러)로 구성

* 연방채무(held by the public)는 전년 대비 6.0%(1.3조달러) 증가한 22.3조달러 기록

□ 의회예산처(CBO), FY2022 상반기(2021.10.1.~2022.3.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2022.4.8.)[224]

○ (재정수지) 2022회계연도 상반기에 집계된 총 누적 재정적자는 6,670억달러, 전년 동기(1.7조달러) 대비 40%(1조 400억달러)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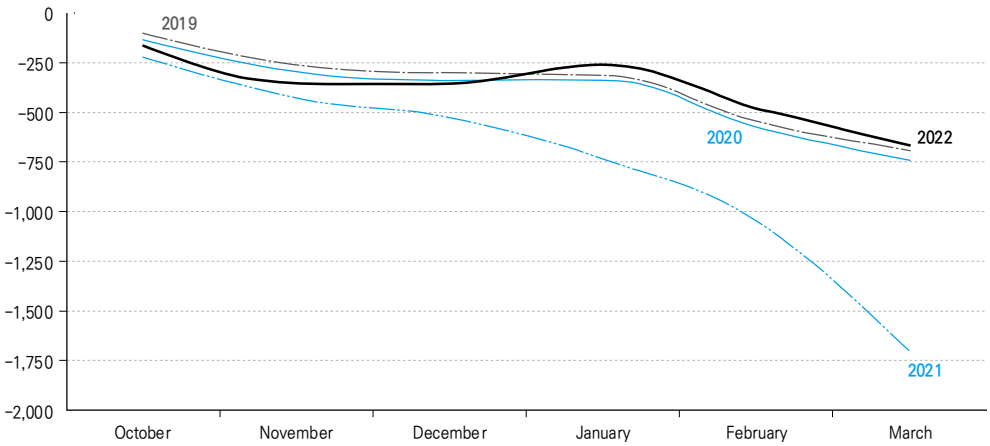
- 2022 회계연도의 재정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영향 직전의 두 회계연도(2019년, 2020년)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FY2019) 6,910억달러 / (FY2020) 7,430억달러

219) 현금/화폐성자산(Cash & Other Monetary Assets)의 FY2019 규모는 5,246억달러를 기록
220) Loans Receivable, Net
221) net accounts receivable
222) net PPE(Property, Plant, Equipment)
223) "public"은 개인, 기업, 주 및 지방정부, 연준(FRB), 외국 정부 및 비정부 부문(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 기관을 뜻하는 개념
224)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4/57909-MBR.pdf, 검색일자: 2022.4.21.

그림 2-Ⅱ-3 FY2019~FY2022 상반기 재정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March 2022," 2022.4.8.

○ (세입) 전년 동기(약 1.7조달러) 대비 25%(4,180억달러) 증가한 총 약 2.1조달러

- 세입 증가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급여세(payroll taxes)를 합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4%(3,570억달러) 증가한 약 1.8조달러

  * 개인소득세 증가율: 36% / 사회보험급여세 증가율: 9%

-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22%(220억달러) 증가한 1,270억달러
- 기타 주요 수입 중 관세수입은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32%(120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전출된 잉여금[225] 수입은 47%(190억달러) 증가

○ (세출) 전년 동기(약 3.4조달러) 대비 18%(6,220달러) 감소한 총 약 2.8조달러이며, 주요 지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구 지원 지출) 재난지원금/실업수당/중소기업 지출 등 대규모 지출 사업 감소

225)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P.L. 114-94)법은 연방준비은행(FRB)의 잉여금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무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지원금(recovery rebates) 및 기타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226]) 규모는 재난지원금의 지출 완료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4%(3,660억달러) 감소
- 실업수당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9%(1,860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 집계
  * 팬데믹 직전인 2020 상반기 실업수당 지출 규모는 약 180억달러
- 재무부 소관의 긴급임대료 지원 지출 규모는 80%(250억달러) 감소

- (중소기업 지원 지출) 중소기업청(SBA) 지출 규모는 1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1,650억달러) 감소
- (농업인 지원 지출) 농무부 지출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지급한 농업인 지원 지출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9%(180억달러) 감소
- (주요 의무지출)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연방채무 순이자지출 모두 증가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와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330억달러) 증가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억달러), 15%(380억달러) 증가
    *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의 경우 대유행 대응 입법[227]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한 것에 기인함
  - 정부채무 순이자지출은 2,19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430억달러) 증가

표 2-Ⅱ-7 FY2021와 FY2022 상반기 재정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구분	FY2021 상반기(A)	FY2022 상반기(B)	증가(B-A)
재정수입	1,704	2,122	418
재정지출	3,410	2,788	-622
재정적자	1,706	667	-1,040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for April 2022*, 2022.4.8.

226)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 공제)등을 포함

227)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02 정책적 이슈

가. 경제 동향

1) 경제 일반

참고 2-Ⅱ-3

□ 베이지북은 2022년 상반기 총 4회(1.12.; 3.2.; 4.20.; 6.1.) 발표됨

○ 베이지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연 8회 발표됨

○ 12개 구역의 지역 연방준비은행별로 전반적 경제 상황, 고용 및 임금, 물가 등의 내용을 담음

- 지난 상반기 베이지북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음
- 고용 및 임금의 경우 지난 상반기 고용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노동 수요가 여전히 많았고, 임금 상승 압력도 강했음
- 물가는 공급망 문제, 임금 상승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1.12.)[228]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경제활동이 증가함

- 2021년 연말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와 노동력 부족이 있었지만, 기업의 원자재 및 노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소비지출은 오미크론 변종의 확산에도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레저, 숙박 레스토랑 등의 분야는 위축되었음
- 제조업은 지역 간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운송업도 전반적으로 활동이 증가함
- 기업들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몇 달 동안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다소 냉각되었다고 평가함

○ (고용 및 임금) 연말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추가 수요가 높음

-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았고,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강력한 임금 상승이 있었음
- 특히,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상승이 강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임금 혜택과 관련된 인건비 상승이 있었음
-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고용을 위해 파트 타임 근무를 수용하거나, 채용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정이 있었음

○ (물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물가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일부 지역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공급망 문제와 임금 상승에 기인함
- 도매 가격 및 원자재 가격 압력은 서비스 및 상품 생산자에게 물가 압력으로 작용했으며, 일부 지역은 운송 병목현상으로 특히 압력이 강했음

228) Fed, *Beige Book-January 2022*, 2022.1.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1.htm, 검색일자: 2022.1.18.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3.2.)[229)]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미국 전역의 경제 활동은 1월 중순 이후 완만하게 증가함

-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 급증 및 추운 겨울 날씨로 기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지장을 받음
- 소비 지출은 이전 베이지북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약해졌지만,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감
- 공급망 문제와 낮은 재고량이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되었고, 건설부문의 성장을 억제한 반면 에너지 부문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임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계절적 추세와 낮은 재고로 매매가 크게 늘지 못했고, 농업은 생육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과 곡물가격 상승의 이득을 받은 지역이 혼재함
- 전반적으로 경제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위원회 위원들은 평가했으나 향후 6개월간 경제는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함

○ (고용 및 임금) 고용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공급이 개선될 조짐이 있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의 수요로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
- 1월 코로나19 확산과 높은 이직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인력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저임금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유연적 노동 도입 및 보상 유인이 확대됨
-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이 둔화될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노동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함

229) Fed, *Beige Book-February 2022*, 2022.3.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3.htm, 검색일자: 2022.3.17.

○ (물가)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인상됨

- 제조 원가 상승으로 광범위한 산업에서 물가가 상승했으며 운송비용 상승이 두드러졌음
- 인건비 상승과 지속되는 자재 부족도 제조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기업들의 가격의 소비자에 대한 전가가 심해짐
-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 인상에도 수요는 여전히 강했고 소비자 전가도 지속되어 향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물가 인상이 예상됨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4.20.)[230]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2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소매 및 비금융 서비스 회사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증가함
- 제조업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견조한 활동을 보였지만, 공급망 정체, 노동시장 문제, 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기업의 수요 충족 능력에 영향을 줌
- 차량 판매는 저재고로 크게 제약을 받았고, 상업용 부동산은 소매활동 증가에 따라 활동이 다소 가속화된 반면, 주거용 부동산은 강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적이었음
- 농작물 가격은 크게 치솟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투입비용 증가가 전국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음
- 최근 물가 상승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 성장 전망에는 부정적인 우려가 있었음

○ (고용 및 임금)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고, 노동 수요는 대부분 지역과 산업에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

230) Fed, *Beige Book-April 20, 2022*, 2022.4.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4.htm, 검색일자: 2022.4.21.

-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 가용성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가용 인력 부족이 여전히 이어졌고,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이직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 지속되는 노동 수요 강세로 임금 인상이 지속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임금 상승에 기여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초기 징후가 있었다고 언급함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했고, 많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함

- 제조업에서 원자재, 운송,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공급망 장애를 악화시켰다고 언급했으며, 강력한 수요로 인해 기업들은 화물 및 항공 운임에 대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했음

□ 미 연방준비제도(Fed), 베이지북 발표(2022.6.1.)[231]

※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 (전반적인 경제활동) 4월 이후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소매업은 높은 소비자 가격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임
- 주거용 부동산은 높은 가격과 높은 이자율에 직면함에 따라 약세를 보였고, 공급망 문제, 노동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에 영향을 받음
- 8개 지역에서는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3개 지역에서는 경기 후퇴(recession)에 대한 우려를 보임

○ (노동시장)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했고, 임금 인상률은 강세를 보임

- 해안 지역의 일부 기업들의 경우 노동시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였지만, 전반

231) Fed, *Beige Book-June 1, 2022*, 2022.6.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eigebook202206.htm, 검색일자: 2022.6.15.

적인 가용 인력 부족이 여전히 이어졌고, 많은 기업들은 업무 자동화 구현, 노동자에 대한 유연 근무, 임금 인상 등으로 대응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임금 인상을 보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 인상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년간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함

○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도 높았음

- 대부분 지역에서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졌음
-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4~5%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 소비자들은 저가 대체품 구매나 구매량 감소로 대응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지표 발표(2022.1.12.)[232)]

○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7.0%로 집계됨

- 2021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6.8%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5%로 11월(0.8%)에 비해 감소해 물가 상승률 감소세를 지속함

○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임

- 식료품 항목의 소비자물가지표는 12월 0.5% 증가해 11월(0.8%) 대비 증가세가 소폭 감소했고, 에너지 제외 서비스(0.3%), 신차(1.0%), 중고차 및 트럭(3.5%) 등 대부분 항목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 에너지 항목은 12월 0.4% 감소해 11월(3.5%)까지 지속되던 물가 상승세가 반전되었고, 중유(-2.4%),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1.2%), 교통 서비스(-0.3) 등의 세부 항목에서도 물가가 감소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다고 평가함

232) BLS, *Consumer Price Index-December 2021,* 2022.1.12.,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1.18.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the Consumer Price Index," 2022.1.1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1/12/statement-by-president-biden-on-consumer-price-index/, 검색일자: 2022.1.19.

- 기름값 하락과 식료품 가격 상승세 하락을 언급하며 물가 상승률 완화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고, 가족 예산은 부족하다고 언급함
-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물가 상승에 대처하고, 강력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표 2-Ⅱ-8 물가 상승률(CPI-U)의 변화율(2021년 12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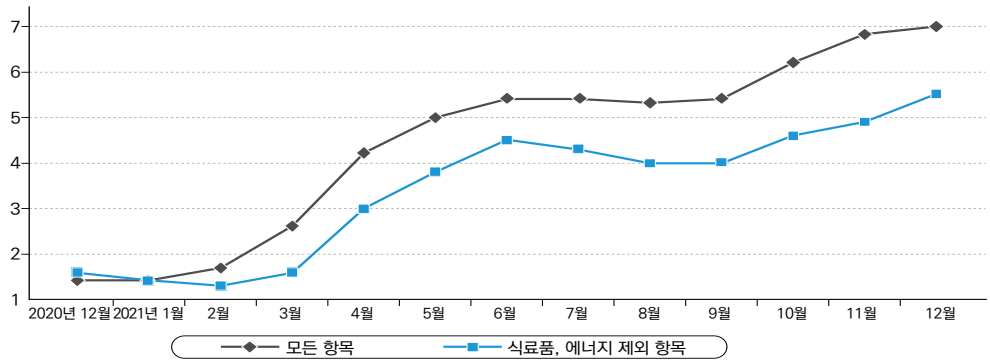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모든 항목	0.9	0.5	0.3	0.4	0.9	0.8	0.5	7.0
식료품	0.8	0.7	0.4	0.9	0.9	0.7	0.5	6.3
가정식	0.8	0.7	0.4	1.2	1.0	0.8	0.4	6.5
외식	0.7	0.8	0.4	0.5	0.8	0.6	0.6	6.0
에너지	1.5	1.6	2.0	1.3	4.8	3.5	-0.4	29.3
에너지 상품	2.6	2.3	2.7	1.3	6.2	5.9	-0.6	48.9
가솔린	2.5	2.4	2.8	1.2	6.1	6.1	-0.5	49.6
중유	2.9	0.6	-2.1	3.9	12.3	3.5	-2.4	41.0
에너지 서비스	0.2	0.8	1.1	1.2	3.0	0.3	-0.1	10.4
전력	-0.3	0.4	1.0	0.8	1.8	0.3	0.3	6.3
유틸리티 가스	1.7	2.2	1.6	2.7	6.6	0.6	-1.2	24.1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9	0.3	0.1	0.2	0.6	0.5	0.6	5.5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2.2	0.5	0.3	0.2	1.0	0.9	1.2	10.7
신차	2.0	1.7	1.2	1.3	1.4	1.1	1.0	11.8
중고차 및 트럭	10.5	0.2	-1.5	-0.7	2.5	2.5	3.5	37.3
의류	0.7	0.0	0.4	-1.1	0.0	1.3	1.7	5.8
의료 상품(medical care commodities)	-0.4	0.2	-0.2	0.3	0.6	0.1	0.0	0.4
에너지 제외 서비스	0.4	0.3	0.0	0.2	0.4	0.4	0.3	3.7
주거	0.5	0.4	0.2	0.4	0.5	0.5	0.4	4.1
교통	1.5	-1.1	-2.3	-0.5	0.4	0.7	-0.3	4.2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0.0	0.3	0.3	-0.1	0.5	0.3	0.3	2.5

주: 1. 외식 항목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비는 조정되지 않음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December 2021*, 2022.1.12., Table A.

그림 2-Ⅱ-4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December 2021*, 2022.1.12., Chart 2.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1월 소비자물가지표 발표(2022.2.10.)[233]

○ 2022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7.5%로 집계됨

- 2021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7.0%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2022년 1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0.6%로 2021년 12월(0.6%) 수준을 지속함

○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목에서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중유 항목의 소비자물가지표는 1월 9.5%로 12월(-2.4%) 대비 크게 반등했고, 전력(2.9%), 가정식(1.0%), 의료 상품(0.9%) 등 대부분 항목에서 증가세를 이어감
- 반면, 가솔린 항목의 소비자물가지표는 1월 -0.6%로 12월(1.3%) 대비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유틸리티 가스[234](-0.5%), 신차(0.0%), 주거(0.3%) 등의 항목에서 일부 하락세를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233) BLS, *Consumer Price Index-January 2022*, 2022.2.10.,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2.20.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January Consumer Price Index," 2022.2.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2/10/statement-by-president-biden-on-january-consumer-price-index-report/, 검색일자: 2022.2.20.

234) 유틸리티 가스(Utility Gas)는 천연 가스, 제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piped gas)를 의미함

- 2022년 1월 CPI에 대해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1/4를 차지한 자동차 가격의 완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긍정적인 실질 임금 상승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감소 등의 현상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인프라와 제조업 재건, 미국 내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표 2-Ⅱ-9 물가 상승률(CPI-U)의 변화율(2022년 1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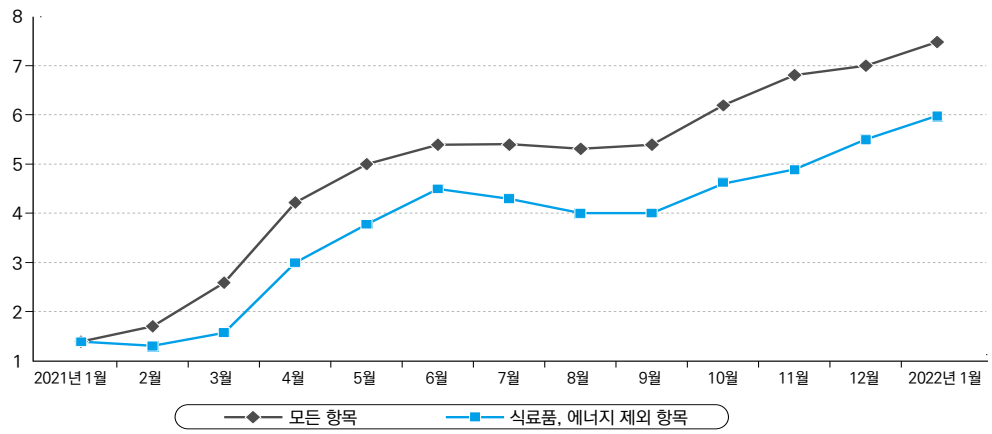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비
	2021년 7월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모든 항목	0.5	0.3	0.4	0.9	0.7	0.6	0.6	7.5
식료품	0.7	0.4	0.9	0.9	0.8	0.5	0.9	7.0
가정식	0.6	0.4	1.2	0.9	0.9	0.4	1.0	7.4
외식	0.8	0.4	0.5	0.8	0.6	0.6	0.7	6.4
에너지	1.6	1.9	1.2	3.7	2.4	0.9	0.9	27.0
에너지 상품	2.4	2.5	1.2	4.7	4.2	1.3	-0.6	39.9
가솔린	2.5	2.5	1.1	4.6	4.5	1.3	-0.8	40.0
중유	0.6	-2.1	3.9	12.3	3.5	-2.4	9.5	46.5
에너지 서비스	0.7	1.2	1.2	2.4	0.2	0.3	2.9	13.6
전력	0.2	1.0	0.6	1.4	0.2	0.5	4.2	10.7
유틸리티 가스	2.2	1.6	2.9	5.9	0.3	-0.3	-0.5	23.9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3	0.2	0.3	0.6	0.5	0.6	0.6	6.0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0.4	0.4	0.3	1.1	0.9	1.2	1.0	11.7
신차	1.5	1.2	1.3	1.3	1.2	1.2	0.0	12.2
중고차 및 트럭	0.0	-1.2	-0.5	2.5	2.4	3.3	1.5	40.5
의류	0.1	0.3	-0.7	0.6	0.7	1.1	1.1	5.3
의료 상품(medical care commodities)	0.2	-0.2	0.3	0.6	0.1	0.0	0.9	1.4
에너지 제외 서비스	0.3	0.1	0.2	0.4	0.4	0.3	0.4	4.1
주거	0.4	0.2	0.4	0.5	0.5	0.4	0.3	4.4
교통	-0.9	-1.2	-1.0	0.2	0.7	0.0	1.0	5.6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0.2	0.2	-0.2	0.4	0.3	0.3	0.6	2.7

주: 1. 외식 항목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비는 조정되지 않음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January 2022*, 2022.2.10., Table A.

그림 2-Ⅱ-5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CPI-U) 변화

(단위: %)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January 2022*, 2022.2.10., Chart 2.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2022.6.10.)[235]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U)이 전년 동월 대비 8.6%로 집계됨

-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1.1%)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0%로 4월(0.3%)에 비해 증가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모든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음

- 항목별 물가 상승률을 볼 때, 모든 항목에서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중유(16.9%), 가솔린(4.1%) 등 에너지 관련 항목이 크게 물가 상승을 보임
-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에서 큰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중유(106.7%), 가솔린(48.7%) 등 에너지 관련 항목 외에도 가정식(11.9%) 등 식료품 관련 항목에서 크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235)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May 2022*, 2022.6.10., https://www.bls.gov/news.release/cpi.nr0.htm, 검색일자: 2022.6.15.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Consumer Price Index(CPI) in May*, 2022.6.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6/10/statement-by-president-biden-on-consumer-price-index-cpi-in-may/, 검색일자: 2022.6.15.

표 2-Ⅱ-10 물가 상승률(CPI-U)의 변화율(202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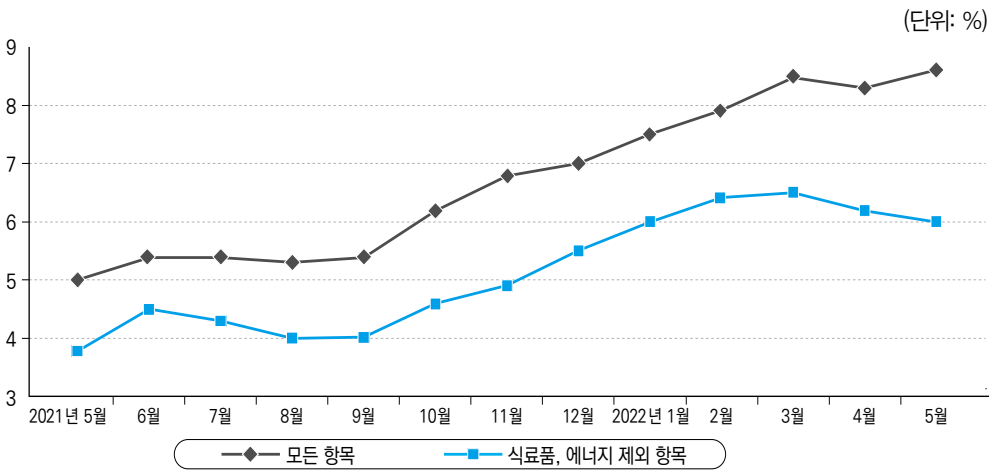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계절조정, 전월 대비							전년 동월비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2022년 5월	
모든 항목	0.7	0.6	0.6	0.8	1.2	0.3	1.0	8.6
식료품	0.8	0.5	0.9	1.0	1.0	0.9	1.2	10.1
가정식	0.9	0.4	1.0	1.4	1.5	1.0	1.4	11.9
외식	0.6	0.6	0.7	0.4	0.3	0.6	0.7	7.4
에너지	2.4	0.9	0.9	3.5	11.0	-2.7	3.9	34.6
에너지 상품	4.2	1.3	-0.6	6.7	18.1	-5.4	4.5	50.3
가솔린	4.5	1.3	-0.8	6.6	18.3	-6.1	4.1	48.7
중유	3.5	-2.4	9.5	7.7	22.3	2.7	16.9	106.7
에너지 서비스	0.2	0.3	2.9	-0.4	1.8	1.3	3.0	16.2
전력	0.2	0.5	4.2	-1.1	2.2	0.7	1.3	12.0
유틸리티 가스	0.3	-0.3	-0.5	1.5	0.6	3.1	8.0	30.2
식료품·에너지 제외 항목	0.5	0.6	0.6	0.5	0.3	0.6	0.6	6.0
식료품·에너지 제외 상품								
상품	0.9	1.2	1.0	0.4	-0.4	0.2	0.7	8.5
신차	1.2	1.2	0.0	0.3	0.2	1.1	1.0	12.6
중고차 및 트럭	2.4	3.3	1.5	-0.2	-3.8	-0.4	1.8	16.1
의류	0.7	1.1	1.1	0.7	0.6	-0.8	0.7	5.0
의료 상품(medical care commodities)	0.1	0.0	0.9	0.3	0.2	0.1	0.3	2.4
에너지 제외 서비스	0.4	0.3	0.4	0.5	0.6	0.7	0.6	5.2
주거	0.5	0.4	0.3	0.5	0.5	0.5	0.6	5.5
교통	0.7	0.0	1.0	1.4	2.0	3.1	1.3	7.9
의료 서비스 (medical care services)	0.3	0.3	0.6	0.1	0.6	0.5	0.4	4.0

주: 1. 외식 항목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전년 동월비는 조정되지 않음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May 2022*, 2022.6.10., Table A.

그림 2-Ⅱ-6 전년 동월비 물가 상승률(CPI-U) 변화



자료: BLS, *Consumer Price Index-May 2022*, 2021.6.10., Chart 2.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statement)를 통해 핵심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이 원하는 만큼 빠른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에너지, 식품 등의 항목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의회의 조속한 운송비 절감 법안 통과를 요구했고, 에너지 요금이나 처방약과 같은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함
- 세제 개혁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산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언급함
-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언급하며 미국은 내년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이윤을 챙기거나, 가격을 인상해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2021년 4분기 GDP(속보) 발표(2022.1.27.)[236]

○ 미국 경제는 2021년 4분기 6.9%(연율, 속보치) 성장하여 2021년 3분기(2.3%)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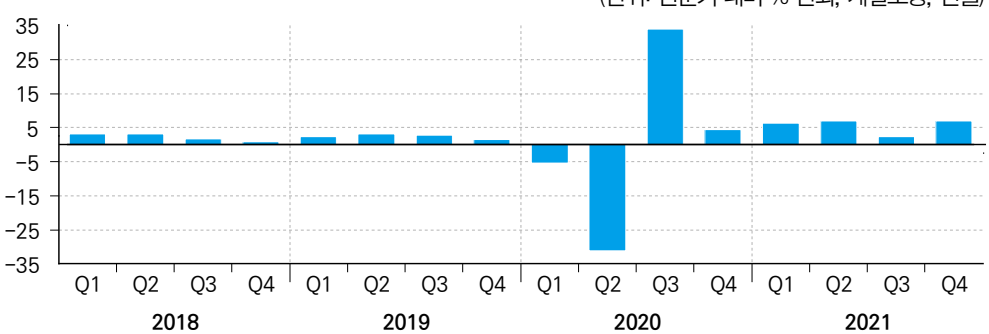
- 전분기와 비교해 민간 재고 투자(0.09 → 0.25, 이하 기여도), 수출(-0.59 → 2.43), 민간소비지출(1.35 → 2.25), 비주거 고정 투자(0.22 → 0.28)의 기여도가 증가했지만, 주 정부지출(0.52 → -0.24), 수입(-0.68 → -2.43), 등의 기여도가 낮아짐
- 명목GDP 성장률은 14.3%로 2021년 3분기 성장률(8.4%)보다 5.9%p 증가함

○ 2021년 연간 성장률은 5.7%로 경제가 위축되었던 2020년(-3.4%) 대비 크게 반등했음

- 전분기와 비교해 민간소비지출(-2.55 → 5.30, 이하 기여도), 비주거 고정 투자(-0.47 → 1.35), 수출(-1.57 → 0.48), 주거 고정 투자(0.26 → 0.38), 민간 재고 투자(-0.52 → -0.32) 등의 기여도가 증가함
- 명목GDP 성장률은 10.0%로 2020년 성장률(2.2%)보다 7.8%p 증가함

그림 2-Ⅱ-7 실질GDP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1 (Advance Estimate)*, 2022.1.27.

236) BEA,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1(Advance Estimate)*, 2022.1.27.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fourth-quarter-and-year-2021-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2.2.22.

표 2-Ⅱ-11 주요 분야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기 대비 % 변화)

구분	연간		2021년 분기별			
	2020	2021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GDP	-3.4	5.7	6.3	6.7	2.3	6.9
개인 소비 지출	-3.8	7.9	11.4	12.0	2.0	3.3
상품	4.6	12.1	27.4	13.0	-8.8	0.5
서비스	-7.5	5.9	3.9	11.5	8.2	4.7
총민간 국내투자	-5.5	9.5	-2.3	-3.9	12.4	32.0
고정투자	-2.7	7.7	13.0	3.3	-0.9	1.3
비주거	-5.3	7.3	12.9	9.2	1.7	2.0
주거	6.8	9.0	13.3	-11.7	-7.7	-0.8
순수출	-	-	-	-	-	-
수출	-13.6	4.6	-2.9	7.6	-5.3	24.5
수입	-8.9	14.0	9.3	7.1	4.7	17.7
정부소비 지출 및 총 투자	2.5	0.5	4.2	-2.0	0.9	-2.9
연방	5.0	0.6	11.3	-5.3	-5.1	-4.0
주 및 지방	0.9	0.3	-0.1	0.2	4.9	-2.2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1(Advance Estimate)*, 2022.1.27.

□ 미 상무부(BEA), 2022년 1분기 GDP(속보) 발표(2022.4.2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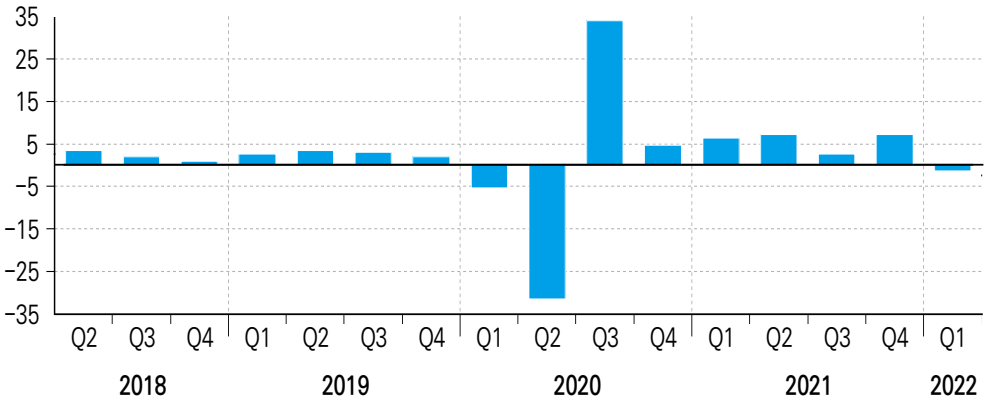
○ 2022년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1.4%(연율, 속보치)로 2021년 4분기(6.9%)까지 5분기 동안 이어진 성장세가 하락세로 전환됨

- 전분기와 비교해 민간 재고 투자(5.82 → 0.43, 이하 기여도), 수출(2.24 → -0.68), 연방 정부지출(-0.29 → -0.39)의 기여도가 감소했지만, 민간소비지출(1.76 → 1.83), 비주거 고정투자(0.40 → 1.17) 등의 기여도가 높아짐
- 명목GDP 성장률은 6.5%로 2021년 4분기 성장률(14.5%)보다 감소함

237) BEA,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4.28., https://www.bea.gov/news/2022/gross-domestic-product-first-quarter-2022-advance-estimate, 검색일자: 2022.5.18.

그림 2-Ⅱ-8 실질GDP 추이

(단위: 전분기 대비 % 변화, 계절조정, 연율)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4.28.

표 2-Ⅱ-12 주요 분야 계절조정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전분기 대비 % 변화)

구분	2021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GDP	5.7	6.3	6.7	2.3	6.9	-1.4
개인 소비 지출	7.9	11.4	12.0	2.0	2.5	2.7
상품	12.2	27.4	13.0	-8.8	1.1	-0.1
서비스	5.8	3.9	11.5	8.2	3.3	4.3
총민간 국내투자	9.8	-2.3	-3.9	12.4	36.7	2.3
고정투자	7.8	13.0	3.3	-0.9	2.7	7.3
비주거	7.4	12.9	9.2	1.7	2.9	9.2
주거	9.2	13.3	-11.7	-7.7	2.2	2.1
순수출	-	-	-	-	-	-
수출	4.5	-2.9	7.6	-5.3	22.4	-5.9
수입	14.0	9.3	7.1	4.7	17.9	17.7
정부소비 지출 및 총투자	0.5	4.2	-2.0	0.9	-2.6	-2.7
연방	0.6	11.3	-5.3	-5.1	-4.3	-5.9
주 및 지방	0.4	-0.1	0.2	4.9	-1.6	-0.8

자료: BEA, *Gross Domestic Product First Quarter 2022(Advance Estimate),* 2022.4.28.

2) 고용·실업 관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1년 12월 고용통계 발표(2022.1.7.)[238]

○ (가계조사) 2021년 12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실업률은 3.9%로 전월 수치(4.2%) 대비 0.3%p 개선되었으며, 두 수치 모두 전년 수치(61.5%, 6.7%) 대비 개선됨

- 고용률은 59.5%로 전월 수준에 비해 0.2%p 증가했고, 전년 대비 2.1%p 증가함
- 성인 남성 실업률 및 성인 여성 실업률은 3.6%로 전월 대비(3.9%, 3.9%) 및 전년 대비(6.4%, 6.3%) 개선됨
- 10대(16~19세) 실업률은 1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대비(15.8%) 개선된 것으로 집계
- 실업자 수는 631.9만명으로 전월(680.2만명)보다 감소했고 전년 대비(1,078.9만명) 약 447만명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실업률은 3.5%였고, 실업자 수는 570만명 수준이었음
- 장기(27주 이상) 실업자 수는 200.8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1.7%를 차지해 전월 대비(219.3만명, 32.5%) 및 전년 대비(397.9만명, 36.9%) 개선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실업자 수는 112.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1.7%를 차지했음

238)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2.1.7.,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toc.htm, 검색일자: 2022.1.17.

표 2-Ⅱ-13 미국 가계조사 지표(2021년 12월)

(단위: 천명, 계절조정)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261,230	261,766	261,908	262,029	262,136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0,671	161,471	161,610	162,126	162,294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1.5	61.7	61.7	61.9	61.9
취업자 수(Employed)	149,883	153,806	154,234	155,324	155,975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57.4	58.8	58.9	59.3	59.5
실업자 수(Unemployed)	10,789	7,666	7,375	6,802	6,319
실업률(Unemployment rate, %)	6.7	4.7	4.6	4.2	3.9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2.1.7.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4,682만명으로 전월 대비 19.9만명 증가했고, 2020년 4월 이후 1,880만명 증가했음

- 전월 대비 제조업(2.6만명), 건설업(2.2만명), 운수·창고업(1.87만명),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4.3만명) 등의 크게 일자리가 증가함
- 비농업 민간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19센트 증가한 31.31달러로 집계되어, 전년(29.91달러) 대비 약 4.7% 증가

표 2-Ⅱ-14 미국 사업체 조사 지표(2021년 12월)

(단위: 천명, 시간, 달러, 계절조정)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1)]	2021년 12월[1)]
전월 대비 고용자 수 변동					
비농업(Total nonfarm)	-306	379	648	249	199
민간(Total private)	-274	424	714	270	211
상품생산(Goods-producing)	82	65	100	72	54
민간서비스제공(Private service-providing)	-356	359	614	198	157
정부(Government)	-32	-45	-66	-21	-12
민간 근로시간 및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34.7	34.8	34.7	34.7	34.7
평균 시급	29.91	30.84	31.01	31.12	31.31
주당 평균 임금	1,037.88	1,073.23	1,076.05	1,079.86	1,086.46

주: 1) 잠정치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2.1.7.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1.12.3.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2월 고용통계 발표(2022.3.4.)[239]

○ (가계조사) 2021년 12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 대비 0.1%p 증가했고, 실업률은 3.8%로 전월 수치(4.0%) 대비 0.2%p 개선됐고, 두 수치 모두 전년 수치(61.5%, 6.2%) 대비 개선됨

- 고용률은 59.9%로 전월 수준에 비해 0.2%p 증가했고, 전년 대비 2.3%p 증가함
- 성인 남성 실업률 및 성인 여성 실업률은 각각 35.%, 3.6%로 여성은 전월 대비 동일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대비(5.9%) 개선됐으며, 남성은 전월 대비 및 전년 대비(3.8%, 6.0%) 개선됨
- 10대(16~19세) 실업률은 10.3%로 전월 대비(10.9%) 개선됐고, 전년 대비(13.9%) 개선된 것으로 집계
- 실업자 수는 627만명으로 전월(651.3만명)보다 감소했고 전년 대비(999.2만명) 약 447만명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실업률은 3.5%였고, 실업자 수는 570만명 수준이었음
- 장기(27주 이상) 실업자 수는 170.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7%를 차지해 전월 대비 및 전년 대비(169.1만명, 415.6만명) 개선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실업자 수는 112.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1.7%를 차지했음

239)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February 2022*, 2022.3.4.,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toc.htm, 검색일자: 2022.3.17.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the February Jobs Repor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04/statement-by-president-biden-on-the-february-jobs-report/, 검색일자: 2022.3.17.

표 2-Ⅱ-15 미국 가계조사 지표(2022년 2월)

(단위: 천명, 계절조정)

구분	2021년 2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전월 대비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260,918	262,136	263,202	263,324	122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0,359	162,294	163,687	163,991	304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1.5	61.9	62.2	62.3	0.1
취업자 수(Employed)	150,367	155,975	157,174	157,722	548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57.6	59.5	59.7	59.9	0.2
실업자 수(Unemployed)	9,992	6,319	6,513	6,270	-243
실업률(Unemployment rate, %)	6.2	3.9	4.0	3.8	-0.2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2.3.4.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5,039만명으로 전월 대비 67.8만명 증가했고, 2021년 2월 이후 667.2만명 증가했음

- 전월 대비 채굴 및 벌목업(10.5만명), 건설업(6만명), 운수·창고업(4.76만명), 소매업(3.69만명) 등의 크게 일자리가 증가함
- 비농업 민간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0.1달러 증가한 34.7달러로 집계됨

표 2-Ⅱ-16 미국 사업체 조사 지표(2022년 2월)

(단위: 천명, 시간, 달러, 계절조정)

구분	2021년 2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1]	2022년 2월[1]
전월 대비 고용자 수 변동				
비농업(Total nonfarm)	710	588	481	678
민간(Total private)	693	561	448	654
상품생산(Goods-producing)	-18	93	24	105
민간서비스제공(Private service-providing)	711	468	424	549
정부(Government)	17	27	33	24
민간 근로시간 및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34.6	34.8	34.6	34.7
평균 시급	30.04	31.38	31.57	31.58
주당 평균 임금	1,039.38	1,092.02	1,092.32	1,095.83

주: 1) 잠정치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2.3.4.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일자리 증가를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statement)를 통해 취임 후 7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2월 67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하락, 제조업과 트럭 운송업의 개선이 있었음을 강조함
- 이러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기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2022년 4월 고용 통계 발표(2022.5.6.)[240]

○ (가계조사) 2022년 4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월 대비 0.2%p 감소했고, 실업률은 3.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 동월(61.7%) 대비 0.5%p 개선되었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6.0%) 대비 2.4%p 개선됨
- 고용률은 60.0%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2.1%p 증가함
- 성인 남성 실업률은 3.5%로 전월 대비 0.1%p 악화되고, 전년 동월(6.0%) 대비 개선된 반면, 성인 여성 실업률은 3.2%로 전월 대비 0.1%p 개선됐고 전년 동월 대비(5.6%) 개선됨
- 10대(16~19세) 실업률은 10.2%로 전월 대비(10.0%) 0.2%p 증가했고, 전년 대비(11.6%) 1.4%p 개선된 것으로 집계
- 실업자 수는 594.1만명으로 전월(595.2만명)보다 감소했고 전년 대비(971.9만명) 약 177.8만명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 실업률은 3.5%였고, 실업자 수는 570만명 수준이었음

240)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April 2022," 2022.5.6.,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nr0.htm, 검색일자: 2022.5.18.
백악관, "Statement by President Biden on the April Jobs Report," 2022.5.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06/statement-by-president-biden-on-the-april-jobs-report/, 검색일자: 2022.5.18.

- 장기(27주 이상) 실업자 수는 148.3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5.2%를 차지해 전월(142.8만명) 대비 약 5.5만명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418.7만명) 개선됨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장기 실업자 수는 112.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1.7%를 차지했음

표 2-Ⅱ-17 미국 가계조사 지표(2022년 4월)

(단위: 천명, 계절조정)

구분	2021년 4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2년 4월	전월 대비
생산가능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	261,103	263,324	263,444	263,559	115
경제활동인구(Civilian labor force)	160,978	163,991	164,409	164,046	-363
경제활동참가율(Participation rate, %)	61.7	62.3	62.4	62.2	-0.2
취업자 수(Employed)	151,259	157,722	158,458	158,105	-353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	57.9	59.9	60.1	60.0	-0.1
실업자 수(Unemployed)	9,719	6,270	5,952	5,941	-11
실업률(Unemployment rate, %)	6.0	3.8	3.6	3.6	0.0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 2022.5.6.

○ (사업체 조사) 비농업 임금노동자(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1억 5,131.4만명으로 전월 대비 약 42.8만명 증가했고,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이후 120만명 증가했음

- 전월 대비 여가 및 접객업(7.8만명), 제조업(5.5만명), 운수·창고업(5.2만명) 등의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
- 비농업 민간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0.1달러 증가한 31.85달러로 집계됨

표 2-Ⅱ-18 미국 사업체 조사 지표(2022년 4월)

(단위: 천명, 시간, 달러, 계절조정)

구분	2022년 4월	2022년 2월	2022년 3월[1)]	2022년 4월[1)]
전월 대비 고용자 수 변동				
비농업(Total nonfarm)	263	714	428	428
민간(Total private)	212	704	424	406
상품생산(Goods-producing)	-40	114	67	66
민간서비스제공(Private service-providing)	252	590	357	340
정부(Government)	51	10	4	22
민간 근로시간 및 임금				
주당 평균 근로시간	34.9	34.7	34.6	34.6
평균 시급	30.20	31.60	31.75	31.85
주당 평균 임금	1,053.98	1,096.52	1,098.55	1,102.01

주: 1) 잠정치
자료: BLS,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B," 2022.5.6.

○ 이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실업률 감소를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statement)를 통해 4월의 42.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취임 후 15개월 만에 8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을 언급했음
- 또한, 1970년 이후 실업급여 혜택자 수가 최저치인 100만명 수준인 것과 3.6%의 실업률을 언급하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초반과 비교해 가장 빠른 실업률 감소임을 강조했고, 이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 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자평함
- 코로나19, 푸틴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원인으로 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으며 공급망 강화, 소득 증가, 에너지가격 하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참고 2-Ⅱ-3 3월 기준 주 및 지역별 실업 통계

□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3월 주 및 지역별 실업 통계 발표(2022.4.15.)[241]

○ 미국 전체 3월 실업률은 3.6%로 전년(6.0%) 및 전월(3.8%) 대비 개선됨

- 각 주별로 볼 때 모든 주에서 전년 대비 실업률이 개선되었으며, 37개 주는 전월 대비 개선됨

○ 네브레스카와 유타가 각각 가장 낮은 실업률(2.0%)을 기록했으며 15개 주의 실업률이 미국 전체 실업률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3월 전월 대비 실업률이 개선된 주는 37개로, 가장 많이 개선된 주는 로드아일랜드(-0.5%p)이고, 캘리포니아,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이 다음을 이었음(각 -0.4%p)
- 비농업 임금 고용(nonfarm payroll employment)는 40개 주 및 콜롬비아 지구에서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6만 200개의 고용이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임

○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률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문을 통해 17개 주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20개 주는 3.0% 미만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함
- 이런 실업률 개선은 우연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언급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241)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 "State Employment And Unemployment-March 2022," 2022.4.15., https://www.bls.gov/news.release/laus.toc.htm, 검색일자: 2022.4.20.
백악관, "Statement from President Biden on State Unemployment Rates," 2022.4.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4/15/statement-from-president-biden-on-state-unemployment-rates/, 검색일자: 2022.4.21.

표 2-Ⅱ-19 2022년 3월 주별 실업률(계절조정)

(단위: %)

구분	실업률			구분	실업률		
	2021년 3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2021년 3월	2022년 2월	2022년 3월
미국	6.0	3.8	3.6	네브레스카	2.6	2.1	2.0
알라바마	3.7	3.0	2.9	네바다	9.2	5.1	5.0
알라스카	7.0	5.3	5.0	뉴햄프셔	3.9	2.7	2.5
애리조나	5.8	3.6	3.3	뉴저지	6.9	4.6	4.2
알칸서스	4.6	3.1	3.1	뉴멕시코	7.2	5.6	5.3
캘리포니아	8.4	5.3	4.9	뉴욕	7.9	4.9	4.6
콜로라도	6.1	4.0	3.7	노스캐롤라이나	5.2	3.7	3.5
코네티컷	7.0	4.9	4.6	노스다코다	4.3	2.9	2.9
델라웨어	5.8	4.6	4.5	오하이오	5.7	4.2	4.1
콜롬비아지구	6.6	6.1	6.0	오클라호마	4.7	2.6	2.7
플로리다	5.4	3.3	3.2	오레곤	6.1	4.0	3.8
조지아	4.4	3.2	3.1	펜실베니아	7.1	5.1	4.9
하와이	6.6	4.2	4.1	로드아일랜드	6.0	3.9	3.4
아이다호	3.9	2.8	2.7	사우스캐롤라이나	4.3	3.5	3.4
일리노이	6.7	4.8	4.7	사우스다코타	3.2	2.6	2.5
인디애나	4.2	2.3	2.2	테네시	4.9	3.4	3.2
아이오와	4.4	3.5	3.3	텍사스	6.4	4.7	4.4
캔사스	3.5	2.5	2.5	유타	3.0	2.1	2.0
켄터키	4.7	4.2	4.0	버몬트	3.8	2.9	2.7
루이지애나	6.1	4.3	4.2	버지니아	4.5	3.2	3.0
메인	4.8	4.0	3.6	워싱턴	5.8	4.3	4.2
메릴랜드	5.7	5.0	4.6	웨스트버지니아	5.6	3.9	3.7
매사추세츠	6.4	4.7	4.3	위스콘신	4.3	2.9	2.8
미시간	6.2	4.7	4.4	와이오밍	5.0	3.6	3.4
미네소타	3.7	2.7	2.5	푸에르토리코	8.2	6.8	6.5
미시시피	6.4	4.5	4.2				
미주리	4.8	3.7	3.6				
몬타나	3.6	2.6	2.3				

자료: BLS, *State Employment and Unemployment-March 2022*, 2022.4.15., Table 1.

3) 통화·금융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공개(2022.2.16.)[242]

○ FOMC 참석자(participants)[243]들은 1월 25~26일 개최된 FOMC 회의[244]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함

- 팬데믹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도 최근 몇 달 동안 개선이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례의 급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견조했고, 실업률도 감소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경제전망과 관련해 오미크론의 대유행이 2022년 1분기 경제활동에 부담을 줄 것으로 봄

- 여행, 레저, 식당 등 팬데믹에 민감한 분야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활동이 위축됨
- 다만, 참석자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소멸되면 경제활동이 빠르게 개선되고 2022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함

○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방준비제도의 장기 목표를 초과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함

- 최대 고용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은 기록적인 수준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고, 노동참여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
-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은 팬데믹과 수요 및 공급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최근 소비 수요가 침체되고 있고,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실질임금 상승,

242)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2.2.1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20126.htm, 검색일자: 2022.2.21.
243)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44) 베이지북 1월호를 참고 바람

주택서비스 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추가적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함

○ 위원(member)[245]들은 자산매입을 축소하고 및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 공급망 문제 등의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반면, 자산매입 규모는 1월(국채 4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200억달러 매입) 및 2월(국채 2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100억달러 매입) 테이퍼링을 시행하기로 결정

□ 미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보고서 발표(2022.2.25.)[246]

※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법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과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논의를 담은 통화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2회 의회에 제출

○ (동향) 2021년 하반기 미국의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2021년 하반기 GDP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4.6%의 견조한 수준을 보였고, 하반기 월 평균 57만 5천개의 일자리 증가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6월 이후 2%p 급락했음
- 다만, 노동 참여 제약은 팬데믹 이후 작년부터 소폭 완화되고 있으나, 노동수요의 지속적이고 큰 수준의 증가는 명목 임금 상승을 유발했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둔화시켰다고 평가함
- 인플레이션은 PCE 물가지수의 경우 지난해 5.8%, 근원 인플레이션은 4.9% 수준으로 1980년대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소폭 상승에 그쳐 FOMC의 장기 목표와 대체로 일치함
- 국제 경제에 대해서 외국 GDP는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활발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작년 하반기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증

245)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246) Fed, *Monetary Policy Report-February 2022*, 2022.2.2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2022-02-mpr-summary.htm, 검색일자: 2022.3.17.

가했는데 이는 공급망 문제와 에너지 및 일부 상품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지적함

○ (전망) 2022년 실질GDP 성장률(중위값[247])은 4.0%로 장기 성장률에 수렴해가고 있고, 장기[248]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이전 몇 년간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임

- 실업률 전망치는 9월 전망치보다 소폭 감소했고, 장기 예측치는 4.0%로 9월 전망 수준과 동일함
- PCE 인플레이션과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2022년에 각 2.6%, 2.7%로 FOMC의 장기 목표인 2%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2024년까지 감소해 2.0%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함
- 기준금리는 9월 전방보다 빠르게 증가해 2023년에 2.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장기 전망치는 기존 2.5%를 유지

표 2-Ⅱ-20 통화정책보고서 경제전망(중위값)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장기
경제성장률	4.0	2.2	2.0	1.8
(9월 전망)	3.8	2.5	2.0	1.8
실업률	3.5	3.5	3.5	4.0
(9월 전망)	3.8	3.5	3.5	4.0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2.6	2.3	2.1	2.0
(9월 전망)	2.2	2.2	2.1	2.0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2.7	2.3	2.1	-
(9월 전망)	2.3	2.2	2.1	-
기준금리(FFR)	0.9	1.6	2.1	2.5
(9월 전망)	0.3	1.0	1.8	2.5

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은 전년 4분기 대비 각 연도 4분기 퍼센트 변화, 실업률은 각 연도 4분기 평균,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

자료: Fed, *Monetary Policy Report - February 2022*, 2022.2.25., Table.1.

247) 통화 정책보고서의 전망치 중위값은 FOMC 회의 참가자들 각각의 경제전망치 중 중위값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함

248) 장기 전망은 적절한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추가적인 충격이 없을 때 각 변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

○ (통화 정책) 2022년에 이자율 상승과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가 전망됨

- 금리정책(interest rate policy)은 현재 0~0.25% 수준을 목표 범위로 두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노동시장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범위를 조만간 올릴 것으로 전망함
- 대차대조표 정책(balance sheet policy)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재무부 증권 월 800억달러, 모기지 증권 월 4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왔으나 작년 11월부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판단해 월별 순자산 매입 속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3월까지 지속적으로 순자산 매입 축소정책을 유지해 올해 말쯤 대차대조표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함

□ 미 연방준비제도(Fed), FOMC 회의록 및 경제전망 공개(2022.4.6.)[249]

○ FOMC 참석자(participants)[250]들은 3월 15~16일 개최된 FOMC 회의[251]에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함

-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는 강하게 증가했고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수급 불균형,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임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추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강세 및 인플레이션의 2% 수준 회귀를 예상함

249) Fed,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2.4.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220316.htm, 검색일자: 2022.4.20. IMF, "IMF Seminar: Debate on the Global Economy," 2022.4.21., https://meetings.imf.org/en/2022/spring/schedule/2022/04/21/imf-seminar-debate-on-the-global-economy 검색일자: 2022.4.26.

250)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51) 베이지북 3월호를 참고 바람

○ 경제전망과 관련해 2021년 말에 비해 GDP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소비와 기업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를 주목함

-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가계와 기업은 탄력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경제에 가볍고 짧은 여파만 남긴 것으로 평가함
- 다만, 참석자들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및 석유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4.0% → 2.8%)

○ 노동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음

- 오미크론 확산이 지나가며 고용 증가세가 강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 일자리 창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 명목 임금은 빠른 속도로 올랐음

○ 위원(member)[252]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된 공급망 병목현상 등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 수준에서 0.25~0.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 최근(4/21) IMF에서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0.5%p 인상안을 5월 FOMC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

○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에서는 16명의 위원 모두 2022년 기준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물가 전망은 12월 대비 상향 조정(2.6% → 4.3%)했으며, 성장률의 경우 2022년 전망치는 12월 대비 하향(4.0% → 2.8%)했으나 2023년 이후 전망치는 유지함

* FOMC의 경제전망은 위원 19명(현재 16명)의 전망치의 중간 값으로 결정하며, <표 2-Ⅱ-21>은 위원들의 경제전망치의 중간 값이고 <표 2-Ⅱ-22>는 이자율 전망치의 점도표임

252)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표 2-Ⅱ-21 FOMC 경제전망(중위값)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장기
실질GDP	2.8	2.2	2.0	1.8
(12월 전망)	4.0	2.2	2.0	1.8
실업률	3.5	3.5	3.6	4.0
(12월 전망)	3.5	3.5	3.5	4.0
PCE 인플레이션	4.3	2.7	2.3	2.0
(12월 전망)	2.6	2.3	2.1	2.0
Core PCE 인플레이션	4.1	2.6	2.3	-
(12월 전망)	2.7	2.3	2.1	-
기준금리(FFR)	1.9	2.8	2.8	2.4
(12월 전망)	0.9	1.6	2.1	2.5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3.16., Table 1.

표 2-Ⅱ-22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장기[1)]
4.000				
3.875				
3.750				
3.625		2	2	
3.500				
3.375		1	2	
3.250				
3.125	1	2	1	
3.000				2
2.875		3	3	
2.750				
2.625	1	3	2	
2.500				5
2.375	3	4	3	1
2.250			1	6
2.125	2	1	2	
2.000				1
1.875	5			
1.750				
1.625	3			
1.500				
1.375	1			
1.250				
1.125				
1.000				

주: 1) 1명의 위원이 장기 전망을 제출하지 않음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3.16., Figure 2.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 발표(2022.5.4.)[253]

○ FOMC 참석자(participants)[254]들은 5월 3~4일 개최된 FOMC 회의[255]에서 1분기 전체 경제활동은 소폭 감소했지만, 가계지출과 기업 고정투자는 호조를 보였다고 평가함

- 일자리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은 에너지가격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고,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나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압력과 경제활동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는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는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함

○ 위원(member)[256]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최대 고용과 장기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 0.25~0.5% 수준에서 0.75~1.00% 수준으로 인상함
- 또한, 6월 1일부터 3개월간 대차대조표 규모를 매월 475억달러(국채 3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150억달러) 감축하고, 9월에 감축 규모를 950억달러(국채 600억달러, 주택담보증권 35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

□ 미 연방준비제도(Fed), 기준 금리 인상 및 경제전망 공개(2022.6.15.)[257]

253)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5.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504a.htm, 검색일자: 2022.5.18.
Fed, *Plans for Reducing the Size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2022.5.4.,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504b.htm, 검색일자: 2022.5.18.

254)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55) 베이지북 4월호를 참고 바람

256)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257) Fed, *Federal Reserve issues FOMC statement*, 2022.6.15.,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20615a.htm, 검색일자: 2022.6.17.
Fed, "June 15, 2022: FOMC Projections materials, accessible verison," 2022.6.15.,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20615.htm, 검색일자: 2022.6.17.

○ FOMC 참석자(participants)[258]들은 6월 14~15일 개최된 FOMC 회의[259]에서 경제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고,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발생했고,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로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보여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추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위원(member)[260]들은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를 0.75%p 인상하기로 결정

-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공공보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금융시장 등의 정보를 고려해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

○ 결정문과 함께 발표된 경제전망에서는 18명의 위원 모두 3월 전망 대비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고, 물가 전망은 3월 대비 상향 조정(4.3% → 5.2%)했으며, 성장률의 경우 2022~2024년 전망치는 3월 대비 하향했으나 장기 전망치는 유지함

* FOMC의 경제전망은 위원 18명의 전망치의 중간 값으로 결정하며, 〈표 2-Ⅱ-23〉은 위원들의 경제전망치의 중간 값이고 〈표 2-Ⅱ-24〉는 이자율 전망치의 점도표임

258) 연준 이사 5명과 지역연준 총재 5명
259) 베이지북 6월호를 참고 바람
260) 기준금리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이사 7명(현재 4명), 뉴욕연준 총재 1명, 기타 지역연준 총재 11명 중 4명

표 2-Ⅱ-23 FOMC 경제전망(중위값)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장기
실질GDP	1.7	1.7	1.9	1.8
(3월 전망)	2.8	2.2	2.0	1.8
실업률	3.7	3.9	4.1	4.0
(3월 전망)	3.5	3.5	3.6	4.0
PCE 인플레이션	5.2	2.6	2.2	2.0
(3월 전망)	4.3	2.7	2.3	2.0
Core PCE 인플레이션	4.3	2.7	2.3	-
(3월 전망)	4.1	2.6	2.3	-
기준금리(FFR)	3.4	3.8	3.4	2.5
(3월 전망)	1.9	2.8	2.8	2.4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6.15., Table 1.

표 2-Ⅱ-24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장기[1)]
4.500				
4.375		1		
4.250				
4.125		4	1	
4.000				
3.875	1	4	1	
3.750				
3.625	4	7	2	
3.500				
3.375	8	1	8	
3.250				
3.125	5		2	
3.000				2
2.875		1	2	
2.750				
2.625				
2.500				7
2.375				1
2.250			1	6
2.125			1	
2.000				1

주: 1) 1명의 위원이 장기 전망을 제출하지 않음

자료: Fed,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2.6.15., Figure 2.

나. 기타

1) 연방재정 절감

□ 미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2022년 연례 보고서[261), 262)] (분절·유사·중복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2022.5.11.)[263)]

○ 본 보고서(2022년)는 비용 절감/수입 증대 및 정부의 효율성/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총 30개(신규 21개, 기존 9개)의 정부정책 사업(areas)을 기준으로 총 94건 신규 시정 요구 조치(actions) 발표

* 지난(2011~2021년) 보고서는 총 394개의 정부정책 사업 중 1,200개의 시정 요구 조치가 제안된 바 있음

○ 2022년 3월 기준, 2011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적사항(1,299개)의 56%에 해당하는 724건에 대해 완전시정조치(full address)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시정(partial address) 240건(18%), 미시정(not addressed) 135건, 기타 106건으로 집계됨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완전 또는 부분)로 인해 발생하는 총 재정적 이익(financial benefits)은 5,520억달러 전망

* 총 이득규모 중 현재(2010~2021년)까지 실현된 이득(estimated accrued benefits): 5,310억달러

* 총 이득규모 중 향후(2022년~이후) 발생이득(projected benefits) 전망규모: 210억달러

261) 2022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262) 해당 연례 보고서는 중복 및 낭비성 지출을 감축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제정된 입법(P.L. 111-139) 의무사항임

263) GAO,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301, 검색일자: 2022.5.30.

분절(fragmentation), 중복(duplication), 유사(overlap) 분야 지적사항[264] 예시

◇ 2022 지적사항 예시 ◇

- (Mission) IT
- (Area) 농업 생산 및 보존 (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IT Duplication and Overlap)
- (내용) 농무부(USDA) 소속의 3개[265]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농업생산 및 보존 역할 임무(FPAC[266])에 대한 전략 계획 및 성과 목표 측정 등을 개발함으로써 불필요한 IT의 유사·중복 활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

◇ 2021 지적사항 예시[267] ◇

- (Mission) 에너지
- (Area) 천연가스 수출시설 (Natural Gas Export Facilities)
- (내용)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The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해상액화천연가스 허가(onshore liquefied natural gas permitting)를 위한 기관 간 협정에 대한 규칙적인 검토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허가 절차 및 미래 정책 변화 대응에 대한 분절 예방 관리가 필요함

264) **분절(Fragmentation):** 1개 이상의 연방기관 또는 기관 내 하부조직이 동일한 분야의 서비스 집행에 관여/**유사(Overlap):** (다수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활동 또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수혜자를 유사하게 설정/**중복(Duplication):** (다수 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사업 진행 또는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2017년 하반기, 2017.12.)에서 발췌

265) ① Farm Service Agency, ② 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③ Risk Management Agency

266) FPAC: Farm Production And Conservation

2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1년 5월호, 2021.에서 발췌

2)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 미 연방대법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 무효화 판결(2022. 1. 13.)

○ 근로자 수 100인을 초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부의 백신접종 의무화 또는 매주 코로나 검사(weekly test) 의무화 조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268]의 해당 조치가 월권 행위였다는 판결을 내림[269]

3)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제재

□ 바이든 정부, 러시아 제재 방침 발표(2022. 3.)

○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특정 무역 대상(수산물, 러시아산 보드카,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등)의 교역 금지 및 신규 투자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함(2022. 3. 11.)[270]

- 추가적으로, 백악관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G7 및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다국적 경제 제재 지속 및 추가 제재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언급[271]

268)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69)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2/01/13/1072165393/supreme-court-blocks-bidens-vaccine-or-test-mandate-for-large-private-companies, 검색일자: 2022. 1. 20.

270)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2/03/11/remarks-by-president-biden-announcing-actions-to-continue-to-hold-russia-accountable/, 검색일자: 2022. 3. 15.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3/11/executive-order-on-prohibiting-certain-imports-exports-and-new-investment-with-respect-to-continued-russian-federation-aggression/, 검색일자: 2022. 3. 15.

271)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11/fact-sheet-united-states-european-union-and-g7-to-announce-further-economic-costs-on-russia/, 검색일자: 2022. 3. 11.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11/joint-statement-by-the-g7-announcing-further-economic-costs-on-russia/, 검색일자: 2022. 3. 16.

* (주요 제재사항) 러시아에 대한 교역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status) 철회, 다자 협력 금융기관(IMF, World Bank, EBRD[272]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 권한 거부, 러시아 지도층 인사와 가족들의 금융거래 차단 및 자산동결 등

- 한편, 백악관은 3월 8일에 러시아산 석유, 액화천연가스 및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음[273]

4)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협정 프레임워크

□ 백악관, 인도태평양 경제협정 프레임워크[274](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출범 발표(2022.5.23.)[275), 276)]

○ (개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주도하에 공동 창립국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 및 기술혁신 시대 준비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협정 프레임워크를 일본에서 공식 출범함

-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대국으로서 IPEF를 통해 해당 지역의 미국 경제리더십을 확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272)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273)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2/02/21/executive-order-on-blocking-property-of-certain-persons-and-prohibiting-certain-transactions-with-respect-to-continued-russian-efforts-to-undermine-the-sovereignty-and-territorial-integrity-of-ukraine/, 검색일자: 2022.3.22.

274)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면서 주요 협력 원칙 공유를 통해 파트너국들과 함께 IPEF 발전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관련 링크: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0/27/readout-of-president-bidens-participation-in-the-east-asia-summit/)

275)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fact-sheet-in-asia-president-biden-and-a-dozen-indo-pacific-partners-launch-the-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 검색일자: 2022.5.24.

276)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5/23/statement-on-indo-pacific-economic-framework-for-prosperity/, 검색일자: 2022.5.25.

* 동 프레임워크를 통한 장기적인 공급망 복구력 개선으로 인해 물가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참여국 구성) 미국을 포함하여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3개국의 창립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GDP의 40%를 대변하고 있음

○ (주요 협력 원칙) ① 경제 연대 ② 경제 복원 ③ 클린 경제 ④ 공정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관계 발전 심화

- (경제연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commerce 분야에서 중소기업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협력
- (경제복원)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한 대비 등 더 나은 경제복원력 창출을 위해 조기 경보 시스템, 주요 광물 공급망 지도 구축 등 공급망 협력
- (클린경제)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등을 추구하며, 기후변화 대응 협력
- (공정경제) 조세 정보 공유, UN 기준에 의한 부패 범죄화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 조세·자금세탁 방지·반부패 협력

Ⅲ 일본(FY2022: 2022.4.~2023.3.)*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17.	재무성, 회계연도 2022년 예산정부안 추가 발표 및 국회 제출
2022.1.18.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
2022.1.18.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2.2.15.	내각부, 2021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21.2.17.	내각부, 2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2022.2.17.	재무성, 2022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
2022.3.3.	기시다 총리, 2022년 제 2차 경제재정자문회의 개최
2022.3.4.	재무성, FY2021 3분기 예산 사용 상황 발표
2022.3.22.	재무성, FY2022 예산안 성립 발표
2022.4.13.	내각부, 2022년 제4회 경제자문회의 개최
2022.4.21.	일본은행, 2022년 4월 금융시스템 보고서 발표
2022.5.2.	내각부, 4월 소비 동향 조사 발표
2022.5.12.	재무성, 2022년 3월 국제수지현황(속보) 개요 발표
2022.5.13.	일본은행, 4월 물가 상승률 전망 및 총재 의견 발표
2022.5.17.	재무성, FY2022 1차 추경예산 발표
2022.6.7.	내각부,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 기본방침 2022' 각의 결정
2022.6.8.	내각부, 2022년 1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2.6.21.	내각부, 첫 번째 회의를 통해 물가 대응 동향을 발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강민채 선임연구원(mckang@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재무성, 회계연도* 2022년 예산정부안 추가 발표 및 국회 제출(2022.1.17.)[277), 278), 279)]

* 일본의 회계연도(Fiscal year: FY)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에 해당됨

※ 재무성은 지난해 12월 24일 발표한 예산안[280)]에서 특별회계,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지출, 지방 관련 보조금, 예산편성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등에 대해 추가 발표함

○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67.3조엔으로 회계 간 이전을 제외한 순계액은 218.5조엔 규모

- 세출 순계액의 대부분은 국채상환비[281)](92.9조엔), 사회보장급부비[282)](73.6조엔), 재정융자 자금으로 편입(재투채[283)]에 의한 자금조달)(25조엔), 지방

277) 재무성, 「令和4年度予算政府案」,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index.html, 검색일자: 2022.1.17.

278) 재무성, 「特別会計について」,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24.pdf, 검색일자: 2022.1.17.

279) 재무성, 「独立行政法人向け財政支出の全体像」,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seifuan2022/25.pdf, 검색일자: 2022.1.17.

280) 재무성은 FY2021 1차 추경과 함께 ①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②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FY2022 예산을 각의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07조 5,964억엔으로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714)

281) 국채의 상환이나 이자의 지불에 필요한 비용

282) 연금이나 건강 보험 급여비 등 법률에 근거하는 사회 보장 자체에 드는 비용

283) 재투채(財投債), 재정 융자자금의 운용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국채. 재투채 발행 수입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재정융자자금 계정'의 세입의 일부가 되며, 세출로 재정융자 자금으로 이월됨. 발행 한도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상품성 또한 일반 국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재정융자 자금의 대부 재원이 되는 동시에 상환이 재정융자자금의 대출 회수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회계의 세출재원이 되고, 상환이 조세 등으로 충당되는 일반 국채와는 다름. 또한 재투채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으며 국가 및 지방의 장기 채무 잔고에도 포함되지 않음

교부세교부금(19.8조엔) 등에 사용되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7.3조엔

- 동일본대지진부흥경비 0.7조엔을 제외하면 총 6.6조엔이고, 이 중 50%는 보험사업, 20%는 에너지대책에 사용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편입이 1.3조엔(특정재원의 일반회계 경유 편입을 포함), 나머지는 그 외 세입(보험료 등)으로 조달

○ (독립행정법인) 회계연도 2022년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재정지출은 전년 당초예산 규모 3조 1,124억엔에 비해 0.2% 증가(59억엔)한 3조 1,183억엔으로 편성

○ (지방관련 보조금 등) FY2022 지방 관련 보조금 총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2,404억엔)한 27조 4,629억엔으로 이 중 부흥특별회계를 제외하면 27조 2,756억엔

- 사회보장에 21.3조엔(78%), 문교 및 과학진흥에 2.2조엔(8%), 공공사업비에 2.7조엔(10%), 그 외 1.1조엔(4%)을 지출할 예정

○ (국회 제출) 재무성은 2022년 1월 17일 FY2022 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284]

- 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예산서류는 1월 19일 국회에 제출되며, 208회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

□ 재무성, FY2022 예산안 성립 발표(2022.3.22.)[285]

○ 재무성은 FY2022 예산안이 국회 예산 심의 후 정부안 대로 성립됨을 발표함

○ FY2022 예산안 규모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9% 증가한 107조 5,964억엔, 일반세출[286]은 67조 3,746억엔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0.7% 증가

- 전체 세입·세출[287] 대비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6.6%p 감소한 34.3%

284) 재무성,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4.html, 검색일자: 2022.1.18.
재무성, https://www.mof.go.jp/public_relations/statement/fiscal_policy_speech/20220117.html, 검색일자: 2022.1.18.

285) 재무성, https://www.bb.mof.go.jp/hdocs/bxss010br4.html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2/0322kaiken.html

286) 총세출에서 국채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인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287) 일본은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국가로 경상수입으로 정부지출을 충당하여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함

○ 2022년 예산은 신형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중점으로 함[288)]

- (감염 확산 방지) FY2021 1차 추경의 의료체제 강화, 백신접종 지원, 치료제 확보 등 조치를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 예비비 5조엔 편성
- (성장) "과학기술국" 도약을 목표로 과학기술 진흥비(1조 3,788억엔)를 확보하고,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실현, 양자 암호통신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 (연구개발)「과학기술입국(立國)」측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진흥비를 확보하고, 디지털, 그린, 양자, AI, 우주, 차세대 반도체 등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며, 박사과정 학생 지원을 내실화하도록 함
  - (디지털)「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실현을 위해 디지털청에 정보 시스템 관련 예산의 일괄 계상 등 추진에 4,720억엔 지원

    * 디지털화를 통해 지역 개성을 살린 지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요 세부 정책으로 ① 지자체 디지털 인프라 통일·표준화, ② 디지털 인재 육성, ③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과제 해결·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추진, ④ 연령·성별·지리적인 제약 등과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및 활용 지원으로 구성

    · 지방교부금 1,660억엔(FY2021년도 추경 포함)을 통해 지자체에 의한 디지털기술 구현을 지원
  - (보안기술)「경제안전보장」[289)]을 위해 양자 암호통신 연구개발 추진과 중요 기술 관리체제,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하고 관련 싱크탱크 구축을 촉진
  - (교육) 초등학교 고학년의 과학, 수학 등 교과목에 '교과중심 교원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 집중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과학 교육 강화(174억엔)

288) 한국조세재정연구원,「주요국 예산안-일본」, 2022,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6792
289) Economic security

- (분배전략) 의료종사자 처우 개선, 인적자원 투자 증대,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 (의료 종사자) 코로나19 의료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직, 개호,[290] 보육, 유아교육 등의 종사자 급여 3% 인상
  - (인재 육성) 3년간 4천억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위한 인력투자 추진(노동보험 특별회계 1,019억엔)
    - 디지털 등 성장분야를 지원할 인재육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함
  - (노동 환경 개선) 하청 왕따 제로 등을 실현하기 위해, 하청 G멘[291]을 2배 증원(120명 → 248명)하고, 전국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공청회 등 감독 강화
- (탄력적인 예산[292]) 「골태방침 2021」[293]에서 결정된 재정정책의 기조를 지속하며, 동시에 예산의 단년도주의 폐해 시정[294] 등 예산의 질 향상
  - 사회보장관계비 +약 4,400억엔(고령화에 의한 증가분), 비사회보장관계비 +330억엔(지금까지의 지출개혁 계속)

290) 개호(介護), 간병·케어의 일본식 표현
291) 2017년 1월부터 중기청에서 파견하는 거래조사원으로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청 중소 기업자를 방문하여 의견을 취합, 정부 기준 개정에 반영함
292) 이전 연도까지의 예산안에서는 "세출 개혁"이었으나, 올해 예산안에서 "탄력적인 예산"으로 변경함
293) 골태방침(骨太の方針, Basic Policy on Economic and Fiscal Management and Reform)은 일본 정부가 작성하는 재정이나 경제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의 통칭
294) ① 약 2.1조엔의 신규 국고채무 부담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시기를 평준화하고, 주요 인프라의 수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원활한 정비를 지원함, ② 지역 데이터센터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 자금을 사전에 확보(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55억엔), ③ 과학기술과 경제안보 분야는 사업의 성질을 고려하여 기금을 활용하는 등 복수년도에 걸친 지원 실시(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2,500억엔), 첨단 반도체 생산 인프라 개발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약 6,200억엔), 백신 개발 강화를 위한 기금(약 7,400억엔))

나. 추경

□ 재무성, FY[295]2022 1차 추경예산 발표(2022.5.17.)[296]

○ 코로나19 상황에서 유가를 비롯한 물가 급등에 따른 종합 긴급 대책으로 2조 7,009억엔(26.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표 2-Ⅲ-2> 참고)

- (세출) 원유가격 급등 완화 대책 1조 1,739억엔, 예비비 1조 5,200억엔,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 이전 70억엔으로 편성
  -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유가·물가 상승 대책 예비비' 1조 1,200억엔, 일반 예비비 4천억엔으로 구성
- (세입) 특례공채[297] 2조 7,009억엔 발행

○ 2022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 107조 5,964억엔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110조 2,973억엔으로 증가함(<표 2-Ⅲ-2> 참고)

- 일반회계 세출 대비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 총액)는 2022년 당초 예산 기준 34.3%에서 1차 추경 예산 편성으로 1.6%p 상승한 35.9%
  - 건설공채는 1차 추경 후 당초 예산과 동일하게 6.3조엔이고, 특례공채는 당초 예산 30.7조엔 규모에서 1차 추경 후 33.4조엔으로 증가

295) 회계연도(Fiscal Year), 일본 2022년 회계연도는 2022.4.1.~2023.3.31.

296)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予算」,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0517.html, 2022.5.17., 검색일자: 2022.5.19.

297) 일본의 보통국채는 공공사업비,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 마련 목적의 '건설공채'와 공공사업비 외 목적인 '특례공채', 이외 '부흥채', '차환채'가 있음. 회계연도 2022년 당초 예산에서 건설공채 발행액은 6.3조엔, 특례공채 발행액은 30.7조엔으로 편성(재무성, 「赤字国債と建設国債の違いを教えてください」,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2.5.24.)

표 2-Ⅲ-2 FY2022 예산(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 반영)

(단위: 억엔, %)

구분		FY2022 당초(A)	FY2022 추경(B)	증감액 (B-A)	증감률 (B/A-1)
세출	1. 일반세출	673,746	700,685	26,939	4.0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58,825	158,825	-	-
	3. 국채비	243,393	243,463	70	0.03
	(1) 중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56,325	156,325	-	-
	(2) 중 이자지급비용	82,472	82,542	70	0.1
	합계	1,075,964	1,102,973	27,009	2.5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652,350	652,350	-	-
	2. 기타 수입	54,354	54,354	-	-
	3. 공채금(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369,260	396,269	27,009	7.3
	(1)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분 제외)	156,325	156,325	-	-
	(2)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2,472	82,542	70	0.1
	(3) 정책적 지출에 의한 적자(기초재정수지 적자) 상당분	130,462	157,401	26,939	20.6
	합계	1,075,964	1,102,973	27,009	2.5

주: 1. 계수는 반올림하여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3. 2022년 일반회계 당초 재정수지 적자(이자지급비용 상당분+정책적 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의 공채금 합계)는 1차 추경예산 후 24.0조엔

자료: 재무성, 「令和4年度補正 後 予算フレーム」, 2022.5.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2/hosei0517d.pdf, 검색일자: 2022.5.19.

다. 결산

□ 재무성, FY2021 3분기 예산 사용 상황 발표(2022.3.4.)[298)]

※ 재무성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세목별 조세 수납 상황 및 특별회계 등 수지 상황에 대한 분기별 집계를 발표함

○ (세입) FY2021 3분기 징수액은 세입예산액의 51.3%(전년 동기 33.3%)인 73조 2,894억엔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 8,513억엔 증가함

- 이는 공채금이 13.2조엔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잉여금 수입 29.1조엔 증가에 기인

○ (세출) FY2021 3분기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16.8%(전년 동기 15.9%)인 29조 2,855억엔이며, 전년 동기 대비 2조 7,195억엔 증가함

- 이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3조 2,501억엔 증가 등에 기인함

표 2-Ⅲ-3 2021년 3분기 일반회계 예산 사용 상황

(단위: 억엔)

구분	세입 예산액(A)	3분기 수납액(B)	세입예산액 대비 국고수납액(B/A)	3분기까지 누계(C)	세입예산액 대비 국고수납액(C/A)
세입	1,425,992	732,894	(전년 동기 33.3%) 51.3%	929,674	(전년 동기 63.0%) 65.1%
구분	금년도 사용 가능액(D)	3분기 지출액(E)	사용 가능액 대비 지출액(E/D)	3분기까지 누계(F)	금년도 사용 가능액 대비 지출액(F/D)
세출	1,733,796	292,855	(전년 동기 15.9%) 16.8%	913,799	(전년 동기 63.9%) 52.7%

주: 억엔 단위 미만은 절사

자료: 재무성, 「FY2021 3분기 예산 사용 상황 개요(令和3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2.3.4,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1/03_3gai.html

298) 재무성, 「令和3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2.3.4.,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1/03_3gai.html, 검색일자: 2022.3.10.
재무성, 「令和3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 2022.3.4.,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1/03_3a.pdf, 검색일자: 2022.3.10.

02 정책적 이슈

가. 재정정책 운용방향

□ 내각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 기본방침[299] 2022' 각의 결정(2022.6.7.)[300]

※ 동 방침은 경제·재정에 관한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6월 각의 결정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세제 개정에 반영

○ (개요)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장 원리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각종 병폐를 야기했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본주의'[301]를 내세우며 금년 6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302]

○ (대·내외 상황) 코로나19 영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 등 대외 환경과 국내 구조적 과제인 수입재 가격 급등,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과 고령화, 잠재성장률 정체, 잦은 재해 발생 등 국내외 과제에 대응이 필요

○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그 자체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 성장 전략으로 삼고, 민관의 중장기 중점 투자와 제도 개혁을 통해 과제 해결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함

- (새로운 자본주의 중점 투자 분야) 인적 자본, 과학기술 혁신, 스타트업,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

299)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 경제재정 운용과 개혁 기본방침, 약칭 골태방침(骨太方針)
300)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2/decision0607.html, 검색일자: 2022.6.9.
301) 2022년 예산에서 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국 위상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 실현, 양자 등 연구개발 추진 등을 시행하고, 분배전략으로 의료 기관 및 교육 기관 종사자 급여 인상, 성장분야 인재 육성,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원활한 노동 이동 지원 등을 제시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일본」, 2022, p.6 참고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6792)
302) 수상관저, 「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기시다 총리 기자 회견)」, 2021.10.4., https://www.kantei.go.jp/jp/100_kishida/statement/2021/1004kaiken.html, 검색일자: 2022.6.22.

- (인적 자본) 디지털 등 성장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술훈련·교육 지원, 텔레워크 촉진, 겸업·부업[303] 등 근로 방식 다양화, 디지털 혁신 인재 육성 등 교육 강화, 임금 인상 및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304] 자산소득배증계획[305] 수립 등
- (과학기술 혁신) 양자, AI, 바이오 테크놀로지, 세포·유전자 의료 기술 등에 민관 제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정보제공 및 자문을 위해 총리실에 과학기술 고문을 설치할 예정
- (스타트업 투자) 2022년 말까지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환경(사업·기술 보증 자금 조달 등) 조성 및 인재 육성 지원 등을 추진
- (녹색 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성장 친화적인 탄소 배출권 규제(Carbon Pricing)의 구체화 및 'GX 경제이행채권(가칭)' 발행을 검토하여 150조엔 이상 규모의 민관 투자 실현 등을 계획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향후 3년간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도록 규제를 일괄 재검토하고, 자율 주행차·드론, 물류 등 DX 표준화, 사이버 보안 전략 강화 및 행정의 디지털화 추진(마이넘버 카드[306] 보급 등)

-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에 민간 연계 추진, 포용적 사회 실현, 다양화 및 지역활성화 추진, 경제 안보 강화

303) 겸업은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업은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하여 갖는 일을 의미
304)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이 최소 1천엔 이상 되도록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노력
305) 개인금융자산 2천조엔 중 절반 이상이 예금·현금으로 보유되고 있어 투자로 연계되지 못하므로 iDeCO(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대 확대, NISA(소액 비과세 투자제도)의 투자 한도액 및 비과세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저축에서 투자로 향하는 2022년 말 종합적인 자산소득배증플랜을 통해 가계투자를 촉진할 예정
306) 2016년부터 시행하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로 각 행정기관별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를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함

- (사회적 가치 창출 민간 연계) 향후 5년간 PPP/PFI[307] 사업의 자율적인 시행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가 지원 및 민간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법인 형태 검토 등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308] 장려
- (포용적 사회 실현)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309] 여성 권익 강화,[310] 고독·고립 감소 정책,[311] 취업 빙하[312] 세대 지원
- (다양화 및 지역 활성화 추진)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313] 구상 실현, 지방분권 및 지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재구조화, 탈중앙화된 가상공간 지원,[314] 중견·중소기업 활력 회복 및 가계·기업 채무 재조정, 관광 중심 국가 입지 부활, 문화·예술·스포츠 진흥 등
- (경제 안전 보장 강화) 에너지 및 식량 등 경제 안전 보장을 철저히 하고, 자유무역 추진과 불공정 경제에 대응 강화

○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 국제 환경 변화 대응으로 외교·안보, 경제 안전, 에너지, 식량안보 등을 강화하고, 대외 경제 협력을 촉진하며, 방재·감재 등 재해 예방 및 대응,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

- (외교·안보) 국제질서 유지·발전을 위한 외교를 적극 전개(미일동맹, 국가·지역 협력 강화, ODA 등)하고,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검토하여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307) • Public-Private 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민간이 위험부담을 지고 도로 등 사회자본시설 투자·건설, 유지 보수 등을 맡고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으며 정부는 세금 감면 및 일부 재정지원하는 방식의 사업
• 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투자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
308) 거래 관행의 개선, 규제를 개혁하는 창도적 역할 강화
309) '어린이 가정청' 창설, 생애단계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 어린이 빈곤 완화 등
310) 남녀 간 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남성 육아휴직 제도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등
311)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고 자살 종합 대책을 시행하며, 지방의 경우 민관 연계 플랫폼 형성을 지원
312) 장기 경기 불황 등으로 미취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2023년부터 2년간 취업 지원, 민간기업 채용 촉진, 공무원 채용 등 정규직 고용자 30만명 증가를 목표로 함
313) 디지털화를 추진을 통해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314) Web 3.0, NFT, 메타버스 등 분산형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 (경제 안전 보장) 경제안전보장법[315]의 단계적 시행, 공급망 강화·민관 기술 협력 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안전 보장)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등 탈탄소 효과가 높은 에너지 최대한 활용
- (식량 안보 및 농림수산업 성장)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 구축, 식품 원재료 및 목재의 국내 생산 전환 등 지원, 수출 촉진(2030년 목표: 5조 엔), 스마트 농림수산업 실현
- (대외 경제 협력)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역을 확대하고, 룰에 기초한 다각적 무역체제 유지 및 강화, 대일 직접투자 촉진(2030년 80조엔 목표), 외국인재 수용 장려 등

○ (중장기 경제·재정운용 및 2023년 예산)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코로나19 상황과 최근 물가 인상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책을 선택

- 민관 협력을 통한 계획적인 중점투자 추진, 단년도 예산 원칙의 폐해[316] 시정,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출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Evidence Based Policy Making: EBPM)', 세제 개혁 시행
-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자본 정비, 지방 행정 및 재정 개혁, 교육·연구 지원 등 추진
- 동 기본방침과 2021년 기본방침을 기반으로 경제·재정 개혁을 추진하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

□ 기시다 총리, 2022년 제2차 경제재정자문회의 개최(2022. 3. 3.)[317), 318)]

315) 「経済施策を一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4年法律第43号)」: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법안을 각국에 요청하여 시행되는 법으로 공급망 강화, 핵심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일본의 경우 경제안보법이 2022년 5월 12일 일본 상원 가결되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

316)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사업 특성에 따른 기금 활용 등을 진행하고, 단년도에 이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적절하게 국가적 과제에 대응

317) 수상관저, 「経済財政諮問会議」, 2022. 3. 3.,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203/03keizaishimon.html, 검색일자: 2022. 3. 14.

318) 내각부, 「第2回経済財政諮問会議 議事要旨」, 2022. 3. 3.,

○ 제2차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및 소득 향상, 인적자본 강화에 대한 논의

- (거시경제 정책 운영)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319] 하청기업이 적정 수준 가격 전가[320]가 가능하도록 하며, 최저임금[321] 인상을 위해 노력
  - 또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민간·공공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의 원천으로 삼음
- (코로나19 대책) 감염 상황을 주시하고, 하루 빨리 경제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함
- (소득 향상과 인적자본 강화) 최근 25년간 경제활동 세대의 소득이 100만엔 이상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의 젊은 단독세대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므로 인생 단계에 따른 세밀한 인적 투자가 중요
  - 인적 투자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사회 커뮤니티와의 제휴 등이 필요

□ 내각부, 2022년 제4회 경제자문회의 개최(2022.4.13.)[322), 323)]

※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활성화' 및 '사회보장개혁'에 대해 논의함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2/0303/gijiyoushi.pdf, 검색일자: 2022.3.14.

319) 원유가격 상승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긴급대책(2022.3.4.)에 근거하여 '연료가격 격변 완화대책 사업'을 통해 완화 조치기간(2021.12월~2022.3.31.) 중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1리터당 170엔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1리터당 5엔을 상한으로 연료 전매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매가격 급등을 억제(경유, 등유 등도 적용)
(경제산업성, 「コロナ感染症及び国際情勢の緊迫化に伴う燃料油価格激変緩和補助金」, 2022.3.4., https://nenryo-gekihenkanwa.jp/, 검색일자: 2022.3.28.)

320) • 트럭 운송이나 내항 해운에 대해 연료가격 상승분이 적정하게 운임에 반영되도록 하주기업 등에 대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나 내항해운업법에 근거하여 부당한 운임의 설치 등에 대해 권고 등 필요한 대응을 실시함
• 중소기업 등이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나 하청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접수하고, 독점금지법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하청대금법상의 '구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국토교통성, 「原油価格高騰に対する緊急対策について」, 2022.3.4.,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66829.pdf, 검색일자: 2022.3.28.)

321) 일본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 다름. 국가 기준금액이 정해지면 그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 2020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동결되었으며, 2021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28엔 인상함. 2021년 전국 평균은 930엔(최저: 오키나와현 820엔/최고: 도쿄도 1,041엔), 후생노동성, https://pc.saiteichingin.info/table/page_list_nationallist.html, 검색일자: 2022.3.22.

322) 내각부, 「令和4年第4回経済財政諮問会議」, 2022.4.13.,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2/0413/agenda.html, 검색일자: 2022.4.14

323)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내각 총리 대신과 관계 국무대신(각 부성(府省)의 장),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 형성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 경제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재정 및 경제 정책의 기본 운영방침인 골태방침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 (지방 활성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혁신 및 중소기업 수출 증대 등 지원

- (배경)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쿄 인구 순유입은 주춤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젊은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중에서 분산으로'를 위한 지방 활성화 추진
- (내용)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활용하여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시스템 강화, 농업 및 중소기업 수출 역량 제고 등을 제안
  -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324](Open innovation) 및 스타트업, 우수 인재 집적 촉진, 취업 기회 확대, 인재교류 촉진, 지방 노동인구 감소 보충[325] 등 강조
  - 디지털 전환을 활용하여 농업 등 1차 산업의 고도화 및 법인 경영을 장려하며, 지방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
  - 지역의 문화나 자연 등 무형자산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

○ (사회보장 개혁) 성장과 분배 선순환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 기능의 강화를 제안

-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
  - 현행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과 육아휴직급여 지원에서 누구나 역량 강화 및 자녀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
    - 고용지원(교육훈련지원금, 구직자지원사업, 공공직업훈련)과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제한하여 비정규직 고용자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2042년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최다로 고령화율 36% 초과가 예상되므로 전(全)세대형 사회보장 체제 구축과 의료·간병비의 효율화, 임금격차 시정 등이 필요
  - 전(全) 세대형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원 및 부담 방식을 재검토하여 현역 세대[326]의 사회보험료 증가를 억제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성별이나 정규·비정규직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 시정을 통한 가처분소득 확대가 중요함

324)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냄(한경 경제용어사전)
325)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아닌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일컫는 '관계인구'를 늘리고, 다양화하여 지방인구 감소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26) 생산연령 인구와 유사

나. 물가 대응 및 통화정책

□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2022.1.18.)[327]

○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앞으로의 금융정책 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함

- 전년과 마찬가지로 ① 신종 코로나 대응 자금조달 지원 특별 프로그램, ② 국채 매입, ③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위해 ETF[328] 및 J-REIT[329] 자산매입을 시행함
- 2022년 3월 예정인 다음 금융정책 결정회의까지 현행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 단기금리: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 잔액에 –0.1%의 마이너스 금리[330] 적용
  -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도록 상한선을 두지 않고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
- ETF 및 J-REIT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 사채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말까지 20조엔 상한으로 매입함

○ “대출 증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에 대출 실행 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금리를 결정하는 양적·질적금융 완화를 유지하기로 함

- 휴대전화 통신료 대폭 인하 효과의 감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초봄에 2%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

327) 일본은행, https://www.boj.or.jp/announcements/release_2022/k220118a.pdf, 검색일자: 2022.1.18.
328) ETF(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329) 부동산투자신탁(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입 등에서 얻은 이익을 투자가에게 분배하는 투자 신탁)으로 일본은 2001년 9월 제1호 J-REIT를 상장함(일본은행, 「J-REIT市場の拡大と価格形成」, https://www.boj.or.jp/research/wps_rev/rev_2005/data/rev05j12.pdf, 검색일자: 2022.1.19.)
330)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중은행은 기준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함.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함(한경 경제용어사전)

나, 일본은행은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지속성에 관해 신중론이 우세함[331]

- 경제·물가 정세 전망(1.18.)에서 2022년 물가 상승률 위험 평가를 2014년 10월 '왜곡된 하방'에서 '대체로 균형'으로 처음으로 변경함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2.1.18.)[332]

○ (경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서비스 소비 하방 압력과 공급 제약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금융 완화, 정부 경제정책 효과로 경제 회복 전망

- (GDP) 2021년 실질GDP를 2.7~2.9%, 2022년 3.3~4.1%, 2023년 1.0~1.4%로 전망(<표 2-Ⅲ-4> 참고)
- (수출) 해외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고 선진국 중심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성장 지속이 기대되며, 디지털 관련 분야 등 글로벌 수요의 견조한 확대와 부품 공급 제약이 완화되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내수) 기업부문은 공급 제약의 영향이 완화되어 견조한 대외수요로 인해 수출과 생산이 증가하고, 기업 수익 개선이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가계부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계감의 완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 및 내구재 소비 증가 전망
- (잠재성장률)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생산성의 개선과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자본 주식의 성장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물가)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과 거시적 공급 제약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의 점진적인 가격 전가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전년에 시행된 휴대전화 통신료 하락의 영향 감소와 Go To Travel[333] 사업

331) 로이터, 「焦点: 日銀、物価の中心見通しの説明修正も金融政策は現状維持の公算」, 2022.1.12., https://jp.reuters.com/article/boj-policy-idJPKBN2JM06F, 검색일자: 2022.1.20.

332)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 (2022年 1月)」,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201a.pdf, 검색일자: 2022.1.18.

33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지역 경제가 악화되자 경제 부흥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여행을 장려하는 Go To Travel 사업을 계획하고, 1조 6,794억엔(2020년 4월 7일 회계연도

의 중단 등 일시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침

- 이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여도는 감소하겠지만 거시적 수급 제약, 중장기 기대 물가 상승률 고조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전망기간 끝인 2023년에 1% 가량의 물가 상승률 유지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0.0~0.1%, 2022년 1.0~1.2%, 2023년 1.0~1.3%로 전망

○ (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등 감염 동향이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의해야 하며, 공급 제약으로 인한 해외 상황과 원자재 가격의 변화가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음

- 경제전망은 코로나19 감염 영향으로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나, 그 후에는 상하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는 대체로 상하방 균형을 이루고 있음

표 2-Ⅲ-4 2021~2024년 정책위원들의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참고) (신선식품·에너지 제외)
2021년	2.0~2.2 (2.1)	+0.1	-0.8
1월 시점 전망	2.7~2.9 (2.8)	0.0~0.1 (0.0)	-
2022년	2.6~3.0 (2.9)	1.8~2.0 (1.9)	0.8~1.0 (0.9)
1월 시점 전망	3.3~4.1 (3.8)	1.0~1.2 (1.1)	-
2023년	1.5~2.1 (1.9)	0.9~1.3 (1.1)	1.1~1.3 (1.2)
1월 시점 전망	1.0~1.4 (1.1)	1.0~1.3 (1.1)	
2024년	1.1~1.3 (1.1)	1.0~1.3 (1.1)	1.2~1.5 (1.5)

주: 1. 9명의 정책위원들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 수치에서 최대치·최소치를 1개씩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으로 예측 오차 등을 근거로 한 전망의 상·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2. ( ) 안 수치는 정책위원들 전망의 중앙치
3.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적치

자료: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展望レポート)」, 2022.4.28., p.9
https://www.boj.or.jp/mopo/outlook/index.htm/

2020년 1차 추경)을 여행·음식·이벤트 등 산업에 지원하도록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0년 12월 14일 동 사업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중지하기로 함

□ 일본은행, 2022년 4월 금융시스템 보고서 발표(2022.4.21.)[334]

○ (총평) 국내·외 경제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나 일본 금융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 대응이 효과적이고, 금융 중개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상황(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실물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조정)을 가정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은 견고성을 갖추고 있음

○ (리스크) 급격한 대규모의 국제금융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세 가지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내 대출 신용비용 상승'으로 향후 지속적 경기회복을 가정할 경우 기업 부실화 및 국내 대출 신용비용 상승은 억제
  - (분석방법) 감염병 확대가 2024년까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률'과 '금융기관의 신용비용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약 75만개 기업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분석
  - (분석결과) 2020년과 비교한 '중소기업 채무불이행률'과 '금융기관 신용비용 비율'은 2024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함
    - 특히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상승률이 높으나, 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상승폭은 한정적이므로 영향이 적음
- 두 번째, '국제금융시장의 조정 등 글로벌 경제금융 변화가 일본의 '해외대출', '유가증권 투자', '외화자금조달' 등에 파급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 '해외대출 신용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억제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될 경우 낮은 신용등급 여신처의 채무불이행률 상승 가능성이 있음
    - 탈탄소에 따른 에너지 관련 대출 및 장래 수요 불확실성이 큰 항공 화물·여객 관련 대출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음

334) 일본은행, 「金融システムレポート(2022年4月号)」, 2022.4.21., https://www.boj.or.jp/research/brp/fsr/fsr220421.htm, 검색일자: 2022.4.21.

•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금융기관과 비은행 금융기관(투자펀드 등) 간에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가격 변동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 시 투자펀드 동향으로 시장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짐

• '외화자금 조달'의 경우 미국 금리 상승 등 외화자금 조달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외화 조달 기반을 강화하면서 자금 융통·관리에 유의할 필요

- 세 번째, '감염병 이전의 기존 취약성'으로 최근 일본 금융기관은 중수준 위험 기업과 부동산업, 대형 M&A 등 레버리지가 높은 대출로 위험을 감수해왔으므로 장기 저금리 상황이 수익성 악화, 중개 기능 정체 등으로 연계될 가능성 있음

□ 일본은행, 4월 물가 상승률 전망 및 5월 '경제·물가 전망과 금융정책 운영'에서 구로다 총재 물가 상승률 평가 의견 발표(2022.4.28.; 2022.5.13.)[335]

○ 일본은행은 4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신선식품 제외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22년 1월 기준 1.1%에서 1.9%로 상향 조정함

- 2022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목표치인 2%에 가까운 수치이지만 단기 금리 -0.1%, 장기 금리 0%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
- 2023년과 2024년 물가 상승률은 모두 1.1%로 전망되어 정책위원들이 2%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봄

335) 일본은행, 「経済·物価情勢の展望(展望レポート)」, 2022.4.28., https://www.boj.or.jp/mopo/outlook/index.htm/
일본은행, 「経済·物価見通しと金融政策運営」, 2022.5.13., https://www.boj.or.jp/announcements/press/koen_2022/data/ko220513a1.pdf

○ 5월 '경제·물가 전망과 금융정책 운영'에서 구로다 총재는 2022년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 정도로 높아지지만, 에너지 관련 외 품목은 0% 대의 변화율이므로 전반적인 품목으로 상승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전망은 2022년 0.9%, 2023년 1.2%, 2024년 1.5%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내각부, 원자재 물가 급등 완화를 위한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336]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통해 물가 대응 동향을 발표(2022.6.21.)[337]

○ 우크라이나 정세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2022년 전년 대비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물가 급등 완화를 위해 빈곤 가구 등 가계부담 완화, 연료가격 급등 억제, 사료·수입 밀 등 가격 급등 완화 정책 등을 실시

- (연료가격 완화) 연료가 완화 조치 시행 가솔린 기준가격(전국 평균)을 172엔에서 168엔으로 낮추고 지급폭을 35엔으로 하며, 초과분도 1/2을 지원
- (전기요금) 2020년 4월 전력자유화[338] 규제요금 경과조치가 종료될 예정이

336)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는 본부장으로 내각총리대신, 본부 구성원은 각 행정부(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의 장(국무대신)과 내각부의 지방창생, 소비자 및 식품안전 장(특명대신) 및 고독·고립 대책 장으로 구성

337) 내각부, 「物価·賃金·生活総合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2.6.21.,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dai1/bukka_tingin.pdf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물가 상승 대책, 2022.6.21., https://www.cas.go.jp/jp/seisaku/bukka/index.html, 검색일자: 2022.6.27.

338) 사설 전력회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소매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 2016년 4월 이전에는 '일반 가정,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 법률에서 정해진 요금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고, '회사빌딩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력자유화 적용을 받았으나, 2016년 4월부터 일반 가정 등에도 전면 전력자유화가 적용되었고, 2020년 4월까지 경과조치로 규제요금을 적용하였음(경제산업성, 「電力自由化で料金設定はどうなったの？」,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fee/stracture/liberalization.html, 검색일자: 2022.6.29.
경제산업성, 「電力の小売全面自由化」, https://www.enecho.meti.go.jp/category/electricity_and_gas/electric/electricity_liberalization/merit/, 검색일자: 2022.6.29.
동아일보, 「日 '전력자유화' 부메랑… 일부 기업 전기료 2배로」, 2022.6.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35379?sid=104, 검색일자: 2022.6.29.)

었으나, 가정 등 사용 전기는 규제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료 상한[339]으로 작용하여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완화

- (수입 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입 밀의 국제가격(매수가격)이 20~30% 오르고 있으나 정부의 국내 제분업체 매도가격은 9월까지 동결함
-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용 상승 완화를 위해 민관기금에서 생산자에게 보전금을 교부(평균 가격과 이전 1년 간 평가 가격과의 차액 보전)
- (전기 절약 포인트 지급) 전기 사용량 감소를 위해 일부 민간 전력회사에서 절약 시 소비자에게는 포인트를 부여
- (가계부담 완화) 아동 양육 가구,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에 대한 임시 특별지원 등
  - (육아 가구) 가구 연수입이 960만엔 이상인 가구를 제외하고 0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당 10만엔 상당의 임시 특별지원금을 지급
  -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주민세 비과세 가구[340] 등 지원금 미신청 세대를 대상으로 2022년 과세정보를 통해 자동적으로 지급, 1세대당 10만엔 지급
  - (저소득 육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수급 가구(저소득 한부모) 및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해 생활 특별지원으로 아동 1인당 5만엔 지급

339) 무역통계 등을 기초로 일반 가정 월 전기사용량을 400kWh로 상정했을 때, 호쿠리쿠(北陸道) 지역은 2022년 2월 규제요금 상한인 1만 1,200엔에 도달했으며, 홋카이도 지역은 2022년 8월 상한(1만 5,700엔)을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340) 주민세 비과세는 생활 보호를 받거나, 미성년자·장애인·미망인·한부모로 전년 소득 합계액이 135만엔 이하이거나, 전년 소득 합계액이 각 지방행정단체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경우 소득할과 균등할 모두 비과세 적용(일본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개인 부담(개인할)은 '소득할(납세의무자의 전년 소득에 준하여 부과)'과 '균등할(모든 납세의무자로부터 균등하게 세금 징수, 도부현과 시정촌 금액 차이가 있음)'로 나뉨)(Money Forward, 「住民税が非課税になる条件と受けられる恩恵のポイントまとめ」, 2021.10.7., https://biz.moneyforward.com/payroll/basic/13062/, 검색일자: 2022.6.30.)

다. 경제동향

□ 내각부, 2월 월례경제보고 발표(2022.2.17.)[341]

○ (경제 기조 판단) 경제 회복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으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정적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하방 리스크 있음

- (GDP) 2021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2분기 만에 플러스를 나타내고, 대체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함
  - 2021년 연간 성장률은 1.7%로 3년만의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냄
  - 긴급사태 선언 등의 해제로 경제·사회 활동의 단계적인 회복과 동남아시아의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어 개인소비, 수출, 설비투자가 모두 플러스에 기여
  - 특히 개인소비 중 자동차 등의 내구재나 여행·외식 등의 서비스 소비가 연말에 증가
- (개인소비) 최근 회복세에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나 향후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 신차 판매는 회복의 움직임이 있으나, 가전제품 판매와 여행, 외식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설비투자) 자본재 공급은 보합 상태이나,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회복 움직임을 보임
  - 선행지표에 따르면 기계 수주 및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장래에는 기업 수익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택건설)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 판매는 회복될 조짐이 있으나, 향후 당분간 주택건설은 약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

341) 내각부, 「月例経済報告, 令和4年 2月」, 2022.2.17.,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getsurei-index.html
내각부, 「月例経済報告等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閣僚会議資料」, 2022.2.17., https://www5.cao.go.jp/keizai3/getsurei/kaigi.html

- (공공투자)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세를 보이고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점차 추경 예산 효과가 발현될 것으로 기대
  - 2021년 추경 예산 및 2022년 예산에서 '방재·감재, 국토강인화의 추진 등 안전·안심의 확보' 등 공공사업관계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2022년 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경비 중 지방 단독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1.6% 증가함
- (수출입) 대 아시아 수출입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및 EU의 경우 수출입이 모두 대체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 장래 수출은 해외 경제회복으로 개선이 기대되나, 해외 경제 동향 및 공급측면 제약에 의한 하방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고용)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가운데 구인 등으로 회복 움직임이 있음

□ 내각부, 2021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2.2.15.)[342]

○ (4분기) 2021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3%, 명목GDP 성장률은 0.5%로 나타남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1.1%,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이 0.2%를 기록함
  - 명목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1.0%,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수출-수입)은 -0.5%로 나타남
- (민간수요)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실질 2.7%(3분기 -0.9%), 명목 2.1%(3분기 -0.8%)
  - '민간주택'은 실질 -0.9%(3분기는 -1.6%), 명목 1.0%(3분기는 1.6%), '민간기업설비'는 실질 0.4%(3분기는 -2.4%), 명목 1.0%(3분기는 -1.7%)
  - '민간재고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1%(3분기 기여도는 0.1%), 명목 -0.1%(3분기 기여도는 0.1%)로 나타남
- (공적수요)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실질 -0.3%(3분기는 1.1%), 명목 -0.9%(3분기는 1.8%)로 나타났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실질 -3.3%(3분기는

342) 내각부, 「2021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2.2.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1/qe214/pdf/gaiyou2141.pdf, 검색일자: 2022.2.16.

-3.0%), 명목 -2.3%(3분기는 -2.0%), '공적재고변동'의 성장률 기여도는 실질 0.0%(3분기 기여도는 -0.0%), 명목 0.0%(3분기 기여도는 -0.0%)로 나타남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의 수출은 실질 1.0%(3분기는 -0.3%), 명목 4.0%(3분기는 1.6%), 재화·서비스의 수입은 실질 -0.3%(3분기는 -0.9%), 명목 6.2%(3분기는 5.4%)

○ (연간) 2021년 연간 실질GDP 성장률은 1.7%, 명목GDP 성장률은 0.8%로 실질 성장률은 전년 -4.5%에서 6.2%p 상승함

- (기여도) GDP 성장률의 내·외수별 기여도는 내수가 0.7%, 외수가 1.0% 기여도를 보임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0.9%로 나타남(3분기는 0.9%)

표 2-Ⅲ-5 분기별 실질 성장률(계절조정) 및 기여도

(단위: %)

항목	2020	2021				2021년 연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질GDP	**1.8**	**-0.5**	**0.6**	**-0.7**	**1.3**	**1.7**
국내수요	1.1	-0.4	0.7	-0.8	1.1	0.7
민간수요	1.1	-0.3	1.0	-1.2	1.9	0.6
민간 최종 소비지출	1.6	-0.8	0.7	-0.9	2.7	1.4
민간 주택	-0.1	0.9	1.0	-1.6	-0.9	-1.8
민간 기업 설비	1.2	0.4	2.0	-2.4	0.4	-0.7
민간 재고 변동	(-0.2)	(0.1)	(0.0)	(0.1)	(-0.1)	-
공공 수요	0.9	-0.8	-0.1	0.2	-0.9	0.9
정부 최종 소비 지출	0.8	-0.6	0.7	1.1	-0.3	2.1
공적 고정자본형성	2.0	-1.6	-3.3	-3.0	-3.3	-3.5
공공 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1)]	(0.8)	(-0.1)	(-0.1)	(0.1)	(0.2)	-
재화·서비스 수출	10.7	2.2	3.1	-0.3	1.0	11.6
재화·서비스 수입	5.5	3.0	3.8	-0.9	-0.3	5.2

주: 1. (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내각부, 「2021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2.2.15., p.11; p.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21/qe214/pdf/gaiyou2141.pdf, 검색일자: 2022.2.17.

□ 내각부, 2022년 1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2.6.8.)[343]

○ 2022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연율 -0.5%), 명목GDP 성장률은 0.2%(연율 0.6%)로 1차 속보치(실질 -0.2%(연율 -1.0%), 명목 0.1%(연율 0.4%)에서 모두 개선된 수치[344]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0.3%p이고,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345]는 -0.4%p를 나타냄
- (민간수요)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민간수요 중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이고, 민간설비투자와 민간주택투자는 감소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통신요금, 자동차 등 지출 증가로 1차 속보치 -0.0%에서 실질 0.1% 증가율로 조정되었고, 민간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0.7% 감소함
  - 민간주택투자는 전분기 대비 -1.2% 변화율로 1차 속보치 -1.1%에서 하향 조정됨
- (공적수요) 세부 항목인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공적고정자본형성이 3.9% 감소함에 따라 공적수요는 전분기 대비 -0.4% 변화율 나타냄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하였고, 수입은 수입 디플레이터의 개정으로 1차 속보치 3.4% 변화율에서 3.3%로 조정
- (디플레이터) 전분기 대비 0.3%(계절조정), 전년 동기 대비 -0.5%

343) 내각부, 「2022年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2.6.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2.6.13. 내각부, 「-ポイント解説-(2022年6月8日)」, 2022.6.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gaiyou_top.html, 검색일자: 2022.6.13.

344) 1차 속보치는 실질 -0.2%(연율 -1.0%), 명목 0.1%(연율 0.4%)

345) 재화·서비스 순수출은 재화·서비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며,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는 수출 기여도와 수입 기여도의 차이

표 2-Ⅲ-6 2022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 2차 속보치(계절조정)

(단위: 전분기 대비, %)

항목	2021년				2022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기여도	1분기 연율환산
국내총생산(GDP)	-0.4	0.6	-0.8	1.0	-0.1	-	-0.5
국내수요	-0.5	0.9	-0.9	0.9	0.3	(0.3)	1.2
민간수요	-0.5	1.3	-1.2	1.6	0.5	(0.4)	2.2
민간최종소비지출	-0.8	0.7	-1.0	2.4	0.1	(0.0)	0.2
민간주택투자	1.0	1.0	-1.7	-1.1	-1.2	(0.0)	-4.8
민간설비투자	0.5	2.0	-2.4	0.1	-0.7	(0.0)	-2.8
민간재고증감	(-0.1)	(0.2)	(0.1)	(-0.1)	-	(-0.0)	-
공적수요	-0.5	-0.1	0.0	-1.1	-0.4	(-0.1)	-1.5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8	1.1	-0.3	0.5	(0.1)	2.0
공적투자	-0.0	-3.7	-3.9	-4.7	-3.9	(-0.2)	-14.7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1)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2]	(0.1)	(-0.2)	(0.1)	(0.1)	-	(-0.4)	-
재화·서비스 수출	2.6	2.8	-0.3	0.9	1.1	(0.2)	4.6
재화·서비스 수입	1.8	4.3	-0.8	0.3	3.3	(-0.6)	13.9

주: 1. (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 = 재화서비스 수출 - 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내각부, 「2022年1-3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2.6.8., 표 3-1

□ 재무성, 2022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2022.2.17.)[346]

* 국민부담률은 조세 및 사회보장부담을 더한 국민소득 대비 공적 부담 비율을 의미[347]

$$\text{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text{국민소득}}$$

$$\text{잠재 국민부담률} = \frac{(\text{국세} + \text{지방세}) + \text{사회보장부담} + \text{재정적자}}{\text{국민소득}}$$

○ 2022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1년 48% 보다 1.5%p 감소한 46.5%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를 더한 '잠재 국민부담률'은 전년도 60.7%보다 3.8%p 감소한 56.9%로 전망

346) 재무성, 「令和4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2022.2.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20217.html, 검색일자: 2022.2.21.

347)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2.2.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202a.pdf, 검색일자: 2022.3.2.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19년 일본은 44.4%이고, 미국은 32.4%, 영국은 46.5%이며, 독일은 54.9%, 스웨덴은 56.4%, 프랑스는 67.1%로 나타남[348](<표 2-Ⅲ-7> 참고)

표 2-Ⅲ-7 국민부담률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22년 일본	2021년 일본	2019년 일본	2019년 미국	2019년 영국	2019년 독일	2019년 스웨덴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담률	18.7	19.3	18.6	8.5	11	22.9	5.2	23.9
조세부담률	27.8	28.7	25.8	23.9	35.5	32	51.3	43.1
국민부담률	**46.5**	**48.0**	**44.4**	**32.4**	**46.5**	**54.9**	**56.4**	**67.1**
(GDP 대비)	33.3	33.8	31.9	25.5	33.9	41.2	37.1	46.9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	10.3	12.7	5.3	8.3	3.1	0	0	4.4
잠재 국민부담률	**56.9**	**60.7**	**49.8**	**40.7**	**49.7**	**54.9**	**56.4**	**71.5**
(GDP 대비)	40.7	39.73)	35.8	32.0	36.1	41.2	37.1	49.9

주: 1. 일본은 2022년 추계 및 2019년 실적, 그 외 국가는 2019년 실적
2. 국민소득 대비 재정적자에서 일본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하지 않고,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을 제외
3. 2021년 국민부담률 발표(2021.2.26.) 수치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102b.pdf)
4. 동 수치는 일본은 내각부 「국민경제계산」 자료 등, 그 외 국가는 National Account(OECD), Revenue Statistics(OECD), Economic Outlook(OECD) 2021년 12월 자료를 사용

자료: 재무성, 「国民負担率の国際比」, 2022.2.17.,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202b.pdf

348) 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19.9%, 2020년은 20%이며, 국민부담률(GDP 대비)은 2019년 27.3%, 2020년 27.9%

〈2020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구분	한국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2019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0.0	19.2	33.5	30.6	23.1	29.4	25.9	24.5
국민부담률	27.9	25.5	42.6	45.4	38.3	42.9	32.8	33.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2021년판);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검색일자: 2022.2.24.

□ 내각부, 4월 소비 동향 조사* 발표(2022.5.2.)[349]

* 소비 동향 조사는 경제·물가 전망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경기 동향 판단의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일반 통계 조사. 일본 전국 가구 중 8,400가구(2인 이상 가구 5,712가구, 1인 가구 2,688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한 결과를 발표

○ (소비자동향지수[350]) 2022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 대비 0.2%p 상승한 33.0%(<표 2-Ⅲ-8> 참고)

- 전월 대비 고용환경이 1.3%p 상승하여 36.1이 되었고, 가계소득은 0.6%p 감소한 36.8, 생활형편 및 내구재 지출 시기 모두 0.1%p 하락하여 각각 31.2, 27.7 기록

○ (소비자동향지수 추이) 2021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동향지수는 감소세였으나, 2022년 4월 전월 대비 증가로 전환함([그림 2-Ⅲ-8] 참고)

○ (물가 전망) 2022년 4월 기준 1년 후의 물가 전망은 '5% 이상 상승한다'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음

표 2-Ⅲ-8 2022년 4월 소비자동향지수(2인 이상 가구, 계절조정)

구분		2021년			2022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동향지수		38.4 (0.7)	38.3 (-0.1)	38.3 (0.0)	36.5 (-1.8)	35.2 (-1.3)	32.8 (-2.4)	33.0 (0.2)
	생활형편	38.6 (-0.4)	37.7 (-0.9)	37.8 (0.1)	36.4 (-1.4)	35.2 (-1.2)	31.3 (-3.9)	31.2 (-0.1)
	가계소득	38.9 (0.6)	39.0 (0.1)	39.4 (0.4)	38. (-0.7)	38.2 (-0.5)	37.4 (-0.8)	36.8 (-0.6)
	고용환경	38.6 (2.6)	40.5 (1.9)	39.9 (-0.6)	37.2 (-2.7)	36.0 (-1.2)	34.8 (-1.2)	36.1 (1.3)
	내구재 지출시기	37.3 (-0.2)	36.1 (-1.2)	35.9 (-0.2)	33.8 (-2.1)	31.5 (-2.3)	27.8 (-3.7)	27.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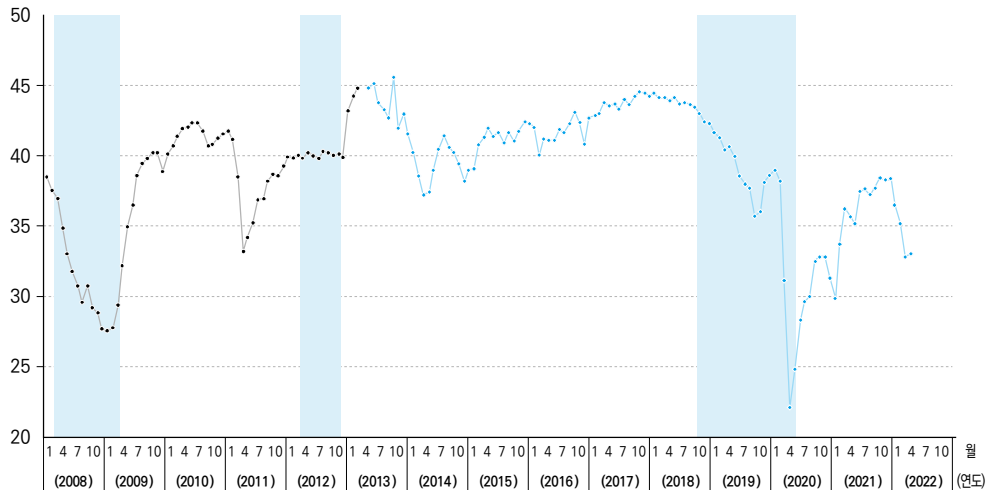
주: ( ) 안 수치는 전월 대비 차이(단위: %p)

자료: 내각부, 「2022년 4월 消費動向調査(月次)結果 - 結果の要点(소비동향조사 (월차) 결과 - 결과 요점)」, p.1, 표 1, https://www.esri.cao.go.jp/jp/stat/shouhi/youten.pdf, 검색일자: 2022.5.9.

349) 내각부, 「消費動向調査」, 2022.5.2., https://www.esri.cao.go.jp/jp/stat/shouhi/shouhi.html, 검색일자: 2022.5.9.

350) 소비자동향지수 산출은 향후 반년 간의 ① 생활 형편, ② 가계 소득, ③ 고용 환경, ④ 내구재 지출 시기 4가지 항목에 대해 더 좋아질(증가할) 것인지/더 나빠질(감소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소비자 응답 의견(5점 척도)을 단순 평균하여 구함

그림 2-Ⅲ-1 소비자동향지수(2인 이상 가구, 계절조정)



주: 1) 파란색 음영처리 부분은 경기 침체기를 의미
2) 2013년 3월까지는 방문 조사, 2013년 4월~2018년 9월 우편 조사, 2018년 10월부터 우편/온라인 병행 조사

자료: 내각부, 「2022년 4월 消費動向調査(月次)結果 - 結果の要点(소비동향조사 (월차) 결과 - 결과 요점」, p. 2, [그림 1], https://www.esri.cao.go.jp/jp/stat/shouhi/youten.pdf, 검색일자: 2022.5.9

□ 재무성, 2022년 3월 국제수지 현황(속보) 개요 발표(2022.5.12.)[351]

○ 경상수지는 해외 투자에서 생긴 이자 및 배당을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352]는 일본 기업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흑자가 확대됨(<표 2-Ⅲ-9> 참고)

- (무역·서비스 수지)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무역·서비스 수지는 전년 대비 1조 2,633억엔 적자 전환

351) 재무성, 「令和4年3月中 国際収支状況(速報)の概要」, 2022.5.12.,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reference/balance_of_payments/preliminary/pg202203.htm, 검색일자: 2022.5.16.

352) • 제1차 소득 수지: 대외 금융 채권/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 수지 상황을 나타냄. 주요 항목으로 직접 투자 수익(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배당금, 이자 등의 수취·지불), 증권 투자 수익(주식 배당금 및 채권 이자의 수취·지불), 기타 투자 수익(대출·차입, 예금 등에 관련된 이자의 수취·지불)이 있음
• 제2차 소득 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제공과 관련되는 수지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공 및 민간의 무상 자금 협력, 기부, 증여의 수취·지불 등을 계상함

• (무역수지)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및 액화 천연 가스 수입액 증가로[353] 적자로 전환됨

· 수출: 8조 4,561억엔(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 13개월 연속 증가

· 수입: 8조 6,221억엔(전년 동월 대비 36.6%) 증가, 14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수지) 여행이나 화물 수송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는 기타 서비스 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됨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3월): 6만 6,100명(전년 동월 대비 438.4%)

· 출국 일본인 수(3월): 7만 700명(전년 동월 대비 144.7%)

- (1차 소득 수지) 직접 투자 수익의 흑자폭 확대 등에 의해 흑자폭이 확대됨

○ 자본수지는 증권 투자에서 순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1조 5,159억엔으로 증가함

- (직접 투자) 대외 직접 투자 7,589억엔 자산 증가, 대내 6,464억엔 부채 증가

- (증권 투자) 전월 대비 2조 8,399억엔 감소한 5조 5,987억엔

• (주식·투자펀드지분 투자) 대외 주식 등 투자 4,714억엔 자산 감소, 대내 2조 4,701억엔 부채 감소

• (중장기채권 투자) 대외 중장기 채권 투자 3조 1,468억엔 자산 감소, 대내 중장기 채권 투자는 2조 6,547억엔 부채 감소

353) 니케이신문, 「3月の経常収支、2兆5493億円の黒字 貿易収支は5カ月連続の赤字」, 2022.5.12., https://www.nikkei.com/article/DGXZASFL12HRP_S2A510C2000000/, 검색일자: 2022.5.26.

표 2-Ⅲ-9 2022년 3월 경상수지 및 금융수지

경상수지	3월	전년 동월 대비
무역·서비스수지	-2,938억엔	-1조 2,633억엔(적자 전환)
무역수지	-1,661억엔	-1조 1,603억엔(적자 전환)
수출	8조 4,561억엔	1조 1,478억엔(15.7% 증가)
수입	8조 6,221억엔	2조 3,081억엔(36.6% 증가)
서비스수지	-1,277억엔	-1,030억엔(적자폭 확대)
1차 소득수지	3조 2,603억엔	1조 4,039억엔(흑자폭 확대)
2차 소득수지	-4,171억엔	-717억엔(적자폭 확대)
경상수지	**2조 5,493억엔**	**689억엔(흑자폭 확대)**
자본수지	**2월**	**3월**
직접 투자	5,009억엔	1,125억엔
증권 투자	-2조 8,399억엔	5조 5,987억엔
주식·투자펀드지분	1조 3,745억엔	1조 9,987억엔
중장기채권	-3조 97억엔	-4,922억엔
단기채	-1조 2,047억엔	4조 921억엔
금융파생상품	3,138억엔	586억엔
기타투자	2조 6,593억엔	-4조 2,784억엔
외환보유 증감[1)]	4,023억엔	245억엔
자본수지	**1조 364억엔**	**1조 5,159억엔**

주: 1) 2022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 3,560억달러로 전월 대비 285억달러 감소
(재무성, 「外貨準備等の状況(令和4年3月末現在)」, 2022. 4. 7.,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reference/official_reserve_assets/data/0403.html, 검색일자: 2022. 5. 26.)

자료: 재무성, 「令和4年3月中 国際収支状況(速報)の概要」, 2022. 5. 12.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reference/balance_of_payments/preliminary/pg202203.htm, 검색일자: 2022. 5. 16.

Ⅳ 독일(FY2022: 2022.1.~2022.12.)*

표 2-Ⅳ-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14.	연방재무부, FY2021 잠정결산 발표
2022.1.26.	연방경제기후부, 2022년 연간경제보고서 발표
2022.2.11.	연방의회,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안 승인
2022.2.23	연방재무부, 종합 구호패키지(1차 패키지) 발표
2022.3.16	연방재무부, 2022년 제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주요 수치 발표
2022.3.16	연방재무부, 독일 연방군 특별기금 설립 및 기본법 개정
2022.3.24.	연정위원회,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패키지(2차 패키지) 발표
2022.3.30.	연방통계청, 2021년 공공부채 잠정실적 발표
2022.4.6.	연방경제기후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부활절 패키지 발표
2022.4.7.	연방통계청, 2021년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
2022.4.8.	연방재무부 및 경제기후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한 포괄적 조치 패키지 발표
2022.4.13.	독일경제연구소그룹,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 발표
2022.4.27.	연방내각, 2022년 제2차 예산안 추가 예산 승인
2022.4.27.	연방정부,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2022 채택
2022.4.27.	연방경제기후부,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
2022.4.28.	안정화위원회, 제25차 회의 개최
2022.5.12.	연방재무부, 제162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22.6.3.	연방하원, 2022년 연방 예산안 승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박지혜 선임연구원(jihye0105@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연방 재무부, 2022 연방 제2차 예산안[354] 및 2023~2026 중기 재정 계획 주요 수치 발표(2022. 3. 16.)[355), 356)]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에서 기후보호, 디지털화, 교육 및 연구 분야, 인프라 등에 필요한 투자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변화해야 함

- 독일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기후 중립적이며 디지털화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함

○ 2022년 연방 제2차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에너지 구호 패키지, 경제적 구조 전환, 탄소저감, 교육 및 디지털화와 같은 중요한 투자를 위한 추가 부담을 반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경로로의 복귀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고, 독일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도록 함

-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 코로나19 지원을 2022년 6월까지 연장
-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을 지원하고, 사회보장을 단순화시켜 보조금을 지원

354) 2021년 9월 연방 선거로 인하여 의회가 그 해 결정된 2022년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잠정 예산(Vorläufige Haushaltsführung 2022)으로 관리. 새 연방 정부가 작성한 2022년 2차 예산안은 2022년 6월에 연방 하원을 통과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연방 재무부, 2022. 1. 2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2/01/Inhalte/Kapitel-3-Analysen/3-4-vorlaeufige-haushaltsfuehrung-2022.html, 검색일자: 2022. 3. 17.)

355) 연방 재무부, 2022. 3.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3/2022-03-16-bundeshaushalte-2022-2023.html, 검색일자: 2022. 3. 17.

356) 연방 정부, 2022. 3.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abinett-bundeshaushalt-2022-2016588, 검색일자: 2022. 3. 17.

○ (미래 투자 촉진) 기후보호, 디지털화,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

- 투자지출은 2026년까지 약 510억유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고, 특히 운송수단에 대한 투자는 도로보다 철도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2026년 약 205억유로 규모까지 증가할 계획
- 기후보호 및 전환 분야는 민간과 공공 분야가 투자 활동을 통하여 최대한의 잠재력 있고 지속가능한 전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을 수립
- 에너지기후기금(EKF)에 6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추가 배정하였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천억유로 이상을 사용할 계획

○ (기후 친화적인 사회주택 확대) 연방정부는 기후 친화적인 사회주택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 정부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2022년에는 20억유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5억유로의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 완화 및 인도적 지원)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 위기관리 및 식량 안보 조치를 위해 10억유로를 지원. 또한, 독일의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15억유로 상당의 가스 매장량을 확보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경을 통해 도입할 예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 2022년 제2차 예산안은 2023년부터 적정 부채 한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규모로 늘었던 신규차입은 2023년부터 100억유로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고, 채무 규정도 2025년까지의 재정계획 내에 충족될 것
-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부채 수준으로 되돌려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실행 능력을 유지하며, 혁신적인 투자 자극을 통해 성장을 강화해야 함

○ 2022년 2차 예산안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은 4,576유로로 1차 예산안에 비하여 약 150억유로가 증가됨

표 2-Ⅳ-2 2022년 2차 예산안 및 2023~2026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구분	2021 잠정결산	2022 2차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3	2024	2025	2026
재정지출	**5,571**	**4,576**	**4,127**	**4,157**	**4,169**	**4,231**
투자지출	458	508	510	509	512	514
재정수입	**5,571**	**4,576**	**4,127**	**4,157**	**4,169**	**4,231**
조세수입	3,135	3,325	3,500	3,635	3,769	3,908
신규차입	2,154	997	75	106	118	137

자료: 연방 재무부, 「2022년 2차 예산안」, 2022.3.16.

□ 연방 재무부, 독일 연방군(Bundeswehr) 특별기금 설립 및 기본법 개정 발표 (2022.3.16.)[357), 358)]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독일 연방군에 필요한 장비를 더 빨리 조달하고, 동맹 및 국방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조치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립

- 기본법 제87a조를 수정하여 특별기금 설립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최대 1천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자체 신용승인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음
- 이러한 일회성 신용 승인은 기본법의 채무 규정의 신용 한도에서 면제

○ 특별 기금은 연방법에 의해 설정되며 연방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

- 특별 기금으로 조달되는 사업은 사업 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전액 특별기금으로 조달해야 함
- 사업 계획은 예산법과 함께 예산연도 2023년부터 매년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57) 연방 재무부, 2022.3.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3/2022-03-16-sondervermoegen-bundeswehr.html, 검색일자: 2022.3.17.

358) 연방 정부, 2022.3.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ondervermoegen-bundeswehr-2016560, 검색일자: 2022.3.17.

○ 2022년 2차 예산안을 기준으로 500억유로가 넘는 기록적인 수치로 늘어난 국방 예산에 특별기금을 추가하여 편성

- 연방예산과 특별 기금을 합쳐서 2026년까지 매년 NATO의 국방비 GDP 2% 목표에 맞추어 지출할 계획

□ 연방 내각, 2022년 추가 예산을 승인(2022.4.27.)[359), 360)]

○ 연방 내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정 조치들이 반영된 2022년 2차 예산안에 대한 추가 예산을 승인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난민을 구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확대
- 지출은 263억유로 증가한 4,839억유로,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29억유로 줄어서 순차입의 규모가 392억유로 늘어남

○ (주요 지출 내역) 3월 23일 발표된 2차 구호 패키지의 내용이 포함

-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거주와 보호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20억유로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 50억유로 지원
- 에너지 매장량 확보를 위한 재원에 10억유로 추가 지원
- 난민지원법이 사회보장법(SGB II 및 SGB XII)으로 변화함에 따른 추가지출에 20억유로 지원
- 협력국 개발 지원(Ertüchtigungsinitiative)[361)]은 기존 계획보다 약 18억유로가 증가하여 20억유로 지원

359) 연방 재무부, 2022.4.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7-ergaenzungshaushalt-2022.html, 검색일자: 2022.5.9.

360) 연방 의회, 2022.4.28.,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891812, 검색일자: 2022.5.9.

361)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협력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연방 국방부, 2022.4.27., https://www.bmvg.de/de/aktuelles/rgaenzungshaushalt-2022-mehr-geld-ertuechtigung-ukraine-5400730, 검색일자: 2022.5.19.)

표 2-Ⅳ-3 2022년 추경 예산안

구분	2021 결산	2022 2차 예산안	추가 지원액	2022 추경 예산안
총지출	**5,571**	**4,576**	**263**	**4,839**
총수입	5,571	4,576	263	4,839
세입	3,135	3,325	-	3,325
순차입	**2,154**	**997**	**392**	**1,389**
투자지출	458	508	-	508

자료: 연방 재무부, *Ergänzungshaushalt 2022*, 2022. 4. 27.

□ 연방 재무부, 제162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362] 결과 발표(2022. 5. 12.)[363), 364]

* 연방 정부의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 주요 거시경제 수치를 기반으로 추계

○ 제162차 세수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난 추계(2021. 11.)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임

-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회복과 전년도에 비해 단축 근로가 감소하여 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영향
- 이번 세수추계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추정된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완전하게 측정하기 어려움

○ 2026년까지 세수추계는 지난 추계 대비 매년 약 440유로가 증가

- 2022년 연방정부는 169억유로, 주정부는 186억유로, 지방자치단체는 49억유로 증가

362) 독일의 세수추계는 일 년에 두 차례(통상 5월, 11월) 발표하며, 세수추계위원회(Arbeitskreis Steuerschätzungen)는 간사 역할을 맡은 연방재무부를 비롯하여 연방 경제기후부, 5대경제연구소, 연방통계청,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1955년 예산안, 1968년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수추계 결과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였고 연방 재무부는 이를 직접 공표함(연방 재무부, "Working Party on Tax Revenue Estimates,"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Topics/Taxation/Articles/working-party-on-tax-revenue-estimates.html, 검색일자: 2022. 5. 26.)

363) 연방 재무부, 2022. 5. 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5/2022-05-12-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2. 5. 16.

364) 연방 정부, 2022. 5. 1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euerschaetzung-lindner-2039080, 검색일자: 2022. 5. 16.

- 그러나 아직 입법 과정에 있거나 계획 중인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세금 감면 조치는 세수추계에 포함되지 않음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구호 패키지의 재정적 영향을 2026년까지 총 511억유로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219억 2천만유로가 해당됨

표 2-Ⅳ-4 제162차 세수추계 결과[1)]

(단위: 억유로,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연방정부	2021년 11월 추계	3,054 (7.9)	3,284 (7.5)	3,455 (5.2)	3,595 (4.0)	3,724 (3.6)	3,855 (3.5)
	2022년 5월 추계	3,137 (10.8)	3,452 (10.1)	3,652 (5.8)	3,787 (3.7)	3,911 (3.3)	4,044 (3.4)
주정부	2021년 11월 추계	3,471 (9.1)	3,564 (2.7)	3,679 (3.2)	3,831 (4.1)	3,967 (3.6)	4,110 (3.6)
	2022년 5월 추계	3,551 (12.3)	3,751 (5.6)	3,884 (3.6)	4,029 (3.7)	4,157 (3.2)	4,299 (3.4)
지방자치단체	2021년 11월 추계	1,205 (12.2)	1,225 (1.6)	1,271 (3.7)	1,337 (5.3)	1,403 (4.9)	1,456 (3.8)
	2022년 5월 추계	1,262 (17.4)	1,274 (0.9)	1,331 (4.4)	1,401 (5.3)	1,463 (4.5)	1,518 (3.7)
EU[2)]	2021년 11월 추계	389 (18.5)	416 (7.1)	416 (0.0)	428 (2.8)	443 (3.6)	454 (2.4)
	2022년 5월 추계	382 (16.5)	416 (8.9)	418 (0.5)	430 (2.8)	446 (3.7)	457 (2.4)
총세수	2021년 11월 추계	8,120 (9.8)	8,489 (4.5)	8,821 (3.9)	9,190 (4.2)	9,538 (3.8)	9,875 (3.5)
	2022년 5월 추계	8,332 (12.6)	8,893 (6.7)	9,284 (4.4)	9,647 (3.9)	9,978 (3.4)	10,317 (3.4)

주: 1)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며, 2022~2026년 해당 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자료: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2. Steuerschätzung," 2022.5.12., Anlage 1,2 참고하여 작성[365), 366)]

365)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2. Steuerschätzung," 2022.5.12., Anlage 1,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2-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5.16.

366)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2. Steuerschätzung," 2022.5.12., Anlage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2-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5.16.

□ 연방 하원, 2022년 연방 예산 승인(2022.6.3.)[367), 368)]

○ 하원에 제출된 2022년 연방 예산은 4,958억유로로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예산안 보다 120억유로가 증가함

○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책 실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예산 내용에 반영
- 2022년 예산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쇄하는 것이 목적이며 내년부터는 다시 헌법상 부채규정을 준수할 계획

○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및 에너지가격 상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조금을 지원

- 장거리 통근자 공제,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lmage) 폐지, 난방 보조금, 아동 수당 및 일시적 보조금, 근로자 일시적 보조금 혜택, 대중교통티켓 및 에너지세 감면 등으로 지원

○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공급망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

- 에너지 안보: 4개의 새로운 LNG 터미널 설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수소 에너지원 개발 등으로 러시아산 가스로부터 독립
- 재생 에너지의 대규모 확대: 부활절 패키지[369)]를 통과시켰으며 여름과 가을에 두 개의 패키지를 더 발표할 계획

367) 연방 정부, 2022.6.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lindner-bundeshaushalt-2022-2043108, 검색일자: 2022.6.7.

368) 연방 정부, 2022.6.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kanzler-scholz-rede-bundestag-2045522, 검색일자: 2022.6.7.

369) 2022년 4월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4월호, 2022 참고)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 및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연방군에 투자

-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연방군을 만들기 위하여 1천억유로의 특별 기금 설립

나. 추경

□ 연방 의회, 2021년 2차 추경 예산안 승인(2022. 2. 11.)[370]

○ 연방 상원은 1월 27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의 조정 절차를 포기하였고, 이 법률은 연방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

○ 600억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에너지기후기금(EKF)으로 이전하여 향후 기후 및 변화 정책 프로젝트에 자금으로 사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계획

- 연방하원은 법률의 초안을 보완하여 EKF로 이전된 예산을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후 중립 산업을 촉진하는 데 투자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을 폐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요를 강화하도록 함

370) 연방의회, 2022.2.11., https://www.bundesrat.de/DE/plenum/bundesrat-kompakt/22/1016/1016-pk.html, 검색일자: 2022.02.15.

다. 결산

□ 연방 재무부, FY2021 잠정결산 발표(2022.1.14.)[371]

○ (총지출) 2021년 잠정결산 기준 총지출은 목표치인 5,727억유로보다 156억유로 감소한 5,571억유로로 나타났고, 이는 제2차 추경에서 600억유로를 에너지 기후 기금(EKF)에 추가 배정한 것을 반영한 수치

○ (총수입) 경제 및 고용이 안정되어 예상보다 더 높은 세수가 발생하였고(+295억유로), 신규차입을 제외한 연방의 세입은 3,417억유로로 제2차 추경안(3,326억유로)에서의 추정보다 92억유로 많을 것으로 나타남

- 그리하여 신규 차입에 대한 의존은 목표보다 현저히 낮아져 2,154억유로(-248억유로)로 감소

○ (채무) 202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계획보다 낮은 약 70.5% 수준일 것으로 예상. 이는 2010년 금융위기 당시의 약 8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며, 또한 다른 G7 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임

표 2-Ⅳ-5 FY2021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구분	2020	2021(목표) (A)	2021(잠정) (B)	B-A
총지출	**4,434**	**5,727**	**5,571**	**-156**
총수입	**4,434**	**5,727**	**5,571**	**-156**
조세수입	2,833	2,840	3,135	+295
세외수입	297	485	282	-204
예비비인출	-	-	-	-
신규차입	**1,305**	**2,402**	**2,154**	**-248**

주: 2021년 2차 추경 예산을 반영한 수치
자료: 연방 재무부, 「FY2021 잠정결산」, 2022.1.14.

371) 연방 재무부, 2022.1.1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1/2022-01-14-vorlaeufiger-haushaltsabschluss-2021.html, 검색일자: 2022.1.18.

0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연방 정부,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2(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채택(2022.4.27.)[372]

○ 2022년 안정화 프로그램은 2022년 1월 26일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2) 및 2021년 11월 11일 발표된 세수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2022년 3월 16일 발표된 2022년 2차 예산안 및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업데이트함

○ (경제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4.6%, 2021년 2.9%, 2022년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소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어 가면서 투자가 늘어 총고정자본형성도 전년 대비 2.6%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5.5%, 수입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어 실업률이 5.7%에서 5.1%로 크게 떨어질 전망

○ (재정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3.7%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3.75% 수준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2026년에는 0.5%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는 2021년 GDP 대비 -2.1%에서 2022년 -3.5%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부터 줄여나가 2026년에는 GDP 대비 -0.5%라는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372) 연방 재무부, 2022.4.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7-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2.html, 검색일자: 2022.5.3.

○ (총채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조치로 인하여 2020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8.7%, 2021년에는 69.3%까지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66.7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전망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여 2026년에는 6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 방향) 재정적자 감소와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설정

- 지난 3년간 부채 수준이 예외적으로 높았으나 향후 4년 동안은 재정을 안정화하도록 노력
- 동시에 독일 경제의 부흥, 기후 친화적 성장,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투자할 계획

표 2-Ⅳ-6 2022~2026년 독일 경제·재정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제전망(%)						
실질GDP 성장률	2.9	3.6	2.3	0.8	0.8	0.8
민간소비	0.1	6.0	2.6	0.8	0.8	0.8
정부소비	3.1	0.0	-0.2	0.1	0.1	0.1
총고정자본형성	1.5	2.6	4.3	2.1	2.1	2.1
수출	9.9	5.5	4.0	3.1	3.1	3.1
수입	9.3	6.3	4.3	3.5	3.5	3.5
재정전망(GDP 대비 %)						
총수입	47.8	45.5	46.0	46.25	47.0	47.25
총지출	51.5	49.25	47.75	48.0	47.75	47.75
일반정부 재정수지	-3.7	-3.75	-2.0	-1.75	-1.0	-0.5
구조적 재정수지	-2.1	-3.5	-2.25	-2.0	-1.0	-0.5
총채무	69.3	66.75	65.75	65.75	65	64.5

자료: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2022.4.27., Tabelle 6, 10, 11, 15. 주요 변수 발췌

□ 안정화위원회, 제25차 회의 개최(2022.4.28.)[373), 374)]

○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공재정은 중단기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불확실성에 노출

- 안정화위원회는 2022년에도 기본법 제109조 제3항 제2절의 예산 균형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비상 상황이나 자연재해로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

○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 2022년 GDP 대비 3.5%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유럽의 중기재정목표(MTO)에 따라 GDP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를 다시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독일 연방 및 주 정부는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공공부채를 줄이고, 양질의 공공투자를 위한 점진적인 재정 조정을 할 계획

○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정전망이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으므로 연간 부채 감소 정도를 늘리는 조치는 필요 없다는 의견

373) 연방 재무부, 2022.4.2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28-stabilitaetsrat-25-sitzung.html, 검색일자: 2022.5.3.

374) 연방 정부, 2022.4.28., https://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_node.html;jsessionid=1099EDD5040D1438367FF5AF2069075C.internet0621, 검색일자: 2022.5.3.

나. 경제전망

□ 경제기후부, 2022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22) 발표(2022. 1. 26.)[375]

○ (경제전망) 2022년 독일의 GDP 성장률은 가을 경제전망(4.1%)에 비해 다소 하락한 3.6%로 전망,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평균 42만 5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보다 0.6%p 하락한 5.1%로 예상

표 2-Ⅳ-7 2022 경제전망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전망)
실질GDP 성장률	**-4.6**	**2.7**	**3.6**
민간소비	-5.9	0.0	6.0
설비투자	-11.2	3.2	4.1
건설투자	2.5	0.5	1.0
내수	-4.0	1.9	3.9
수출	-9.3	9.4	5.5
수입	-8.6	8.6	6.3
실업률	5.9	5.7	5.1

자료: 경제기후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2*, 2022.1.26.

○ (주요 경제 및 재정정책)

-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생태학적(social-ecological) 시장경제로) 계속되는 투자를 통해 혁신과 성장, 경쟁력을 창출하고 높은 내수에 기반을 둔 균형 잡힌 성장 모델로 변화
- (기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설정) 연방기후보호법(KSG)을 발전시키고 기후 보호에 필요한 법률 및 규정·조치를 시작, 신재생에너지 사용 대폭 확대, 석탄 및 원전 폐기 완료(20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 2022년 말

375) 경제기후부, 2022.1.26., https://www.bmwi.de/Redaktion/DE/Schlaglichter-der-Wirtschaftspolitik/2022/02/11-jwb-2022.html, 검색일자: 2022. 2. 17.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저탄소 또는 온실가스 중립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난방 시스템 완료, 운송시스템에서 CO_2 감축 목표, '국가수소전략2022'를 발전시켜 수소경제 구축, 2023년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된 EEG 부담금의 폐지 등

- (미래 및 기후 투자 가속화) 미래에 대한 10년의 투자를 강조하며 연방정부는 민간투자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계획 및 승인 절차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가속화할 계획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독일을 혁신의 거점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GDP의 3.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
- (노동 전환) 성공적인 구조 변화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수용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역할을 강조, 법정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계획, 숙련노동 및 평생교육 전략 개발, 전문적 직업훈련 및 추가 교육 계획 지속적으로 개선
- (포용적 성장) GDP로 측정되는 양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질에 더욱 집중하며 복지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발표(2022.4.13.)[376), 377), 378)]

*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연2회 공동 경제전망(Joint Economic Forecast)을 발표하며 연방 정부의 전망에 방향성을 제공. 2022년 봄 보고서에는 DIW Berlin, ifo Munich, IfW Kiel, IWH Halle and RWI Essen가 참여

376)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2022.4.13., https://www.ifo.de/node/69089, 검색일자: 2022.4.20.

377)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2022.4.13.,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2/04/iwh-press-release_2022-08_Gemeinschaftsdiagnose_1-22_de.pdf, 검색일자: 2022.4.20.

378) 공동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Von der Pandemie zur Energiekrise-Wirtschaft und Politik im Dauerstress," 2022.4.13.,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2/04/13/von-der-pandemie-zur-energiekrise-wirtschaft-und-politik-im-dauerstress/, 검색일자: 2022.4.20.

○ (개요)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부터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회복세가 둔화되었고,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 등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

○ (소비자물가) 독일은 40년 만에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2022년 6.1%, 2023년 2.8%로 독일 통일 이후의 평균 수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도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세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GDP 증가율이 각각 2.7%와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용)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인상된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하여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전년도 5.7%에서 떨어진 5.0%로 예측

○ (재정수지) 재정수지는 520억유로 적자로 전년도 1,325억유로보다 크게 줄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가 적고, 경제가 회복하면서 정부수입이 증가하기 때문
- 2023년에는 임금이 오르고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수입이 늘어나 GDP 대비 재정적자가 0.7%p(약 280억유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위험요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위험 상황에 처함

-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원료 공급의 병목현상, 증가하는 난민 수 등이 현재 독일 경제가 당면한 과제임

표 2-Ⅳ-8 2022년 봄 공동경제전망

(단위: %, 천명,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성장률	1.1	-4.6	2.9	2.7	3.1
취업자 수(천명)	45,268	44,898	44,920	45,454	45,733
실업자 수(천명)	2,267	2,695	2,613	2,293	2,293
실업률	5.0	5.9	5.7	5.0	5.0
소비자물가	1.4	0.5	3.1	6.1	2.8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51.1	-145.2	-132.5	-52.2	-27.9
(GDP 대비 %)	1.5	-4.3	-3.7	-1.4	-0.7
경상수지(십억유로)	262.9	238.7	265.3	214.2	245.8
(GDP 대비 %)	7.6	7.1	7.4	5.6	6.1

자료: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2," 2022. 4. 13.

□ 연방 경제기후부, 2022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2. 4. 27.)[379), 380)]

○ 연방정부는 세수추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2022년 봄 경제전망을 발표

- 2022년 2.2%, 2023년에는 2.5%의 경제성장률을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가격, 각종 제재,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하여 독일 정부는 기대치를 크게 하향 조정
- 석유, 석탄, 가스 등의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크게 상승시켰으며 2022년 물가 상승률을 6.1%로 예상하고, 2023년에는 2.8%로 하락할 전망

379) 연방 경제기후부, 2022. 4. 27.,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27-niedrigeres-wachstum-krieg-in-europa-belastet-wirtschaftliche-erholung.html, 검색일자: 2022. 5. 16.

380) 연방 경제기후부, 2022. 4. 27., https://www.bmwk.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projektionen-der-bundesregierung-fruehjahr-2022.html, 검색일자: 2022. 5. 16.

표 2-Ⅳ-9 2022년 봄 경제전망 주요 수치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실질GDP 성장률	2.9	2.2	2.5
가계최종소비	0.1	3.7	2.3
정부최종소비	3.1	-0.1	-0.8
총고정자본형성	1.5	3.4	4.6
설비	3.4	6.0	9.6
건설	0.7	1.7	2.2
내수	2.2	2.7	2.1
수출증가율	9.9	4.2	5.9
수입증가율	9.3	5.5	5.3
소비자물가 상승률	3.1	6.1	2.8

자료: 연방 경제기후부, "Frühjahrsprojektion 2022," 2022. 4. 27.

다.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 대책

□ 연방 재무부, 종합 구호 패키지 내용 발표(2022. 2. 23.)[381]

○ 에너지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10가지 구호 조치(10 Entlastungschritte für unser Land)'라는 연립 정부 협정의 결과를 발표

- (전기요금 지원 – EEG 부담금 폐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EEG 부담금을 2022년 7월 1일부터 폐지
- (조세지원 – 소득 관련 지출 공제의 증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관련 지출 정액공제가 1,200유로로 증가.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조세지원 – 기본 공제의 증가) 소득세의 기본 공제액이 현행 9,984유로에서 1만 347유로로 증가.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381) 연방 재무부, 2022. 2.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anzen/10-entlastungsschritte-fuer-unser-land.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2. 3. 14.

- (저소득층 지원 – 코로나 보조금 도입) 생계 급여를 받는 성인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 이는 특히 실업급여Ⅱ 또는 기초 보장을 받는 사람에게 혜택
- (아동지원 – 빈곤 아동 보조금 지급) 2022년 7월부터 기초아동보장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빈곤 아동에 대하여 매달 20유로의 보조금을 즉시 지원
- (저소득층 지원 – 최저임금 인상) 연방 내각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여 근로자 수백만명의 순수입이 증가
- (조세지원 – 코로나 지원 패키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는 제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382]을 통과시킴
- (직원 및 기업 지원 – 조업단축지원금 연장) 연방정부는 조업단축지원금에 대한 특별 규정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
- (난방비 보조금) 주거급여 수급자, 학생,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일회성 난방비 보조금 지원. 에너지가격 급상승을 배경으로 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135유로(2인 가족은 175유로, 가족 1인당 35유로 추가), 학생 및 구직자 등은 1인당 115유로를 받을 수 있음

□ 연정위원회, 높은 에너지 요금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발표(2022.3.24.)[383]

○ (개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시장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 및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필요

○ (에너지원의 다양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 중장기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382) 제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 주요 내용: 특정시설(특히 병원)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코로나19 특별급여를 최대 3천유로까지 비과세, 조업단축지원금 비과세혜택 2022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재택근무 소득공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결손전기이월 2023년 말까지 연장, 가속감가상각제도 1년 연장, 투자공제기한 1년 연장, 세금신고기한 연장 등

383) 연방 재무부, 2022.3.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bund-hohe-energiekosten.html, 검색일자: 2022.4.12.

-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지원, 수소경제 활성화,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성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석유 수입 경로 다각화 등

○ (독점 금지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이 최종 소비자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가) 국민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효율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광범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

- 2023년부터 새로운 건축 에너지법에 따라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에너지 효율 주택 55(KfW Effizienzhaus 55[384])로 적용
- 에너지 효율적 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연방 프로그램의 보조금 비율을 인상
- 2024년부터 새로 설치된 모든 난방 시스템의 65%는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도록 법으로 규정
- 2030년까지 지역난방에서 기후중립적 에너지 사용 50% 달성을 목표로 함

○ (국민을 위한 구호 패키지) 2월 발표한 종합 구호 패키지 및 3월 난방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비용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에너지 보조금, 가족 수당, 일회성 생계 지원금, 에너지세 3개월 감면, 대중교통 정액 이용권 등을 지원

□ 연방 재무부, 2022 세금감면법(Steuerentlastungsgesetzes 2022) 통과(2022.3.16.)[385), 386)]

○ 연방 내각은 2022 세금감면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2022년 2월 23일 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384) 독일개발은행(KfW)에서 개발한 에너지 효율형 건물(Effizienzhaus)의 기준.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들고, KfW에서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지원 보조금의 액수는 더 늘어남 (독일개발은행(KfW), "Das Effizienzhaus," https://www.kfw.de/inlandsfoerderung/Privatpersonen/Bestehende-Immobilie/Energieeffizient-sanieren/Das-Effizienzhaus/?redirect=74560, 검색일자: 2022.4.25.)

385) 연방 재무부, 2022.3.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3/2022-03-16-steuerentlastungen-unterstuetzen-buergerinnen.html, 검색일자: 2022.3.17.

386) 연방 정부, 2022.3.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entlastungen-buerger-energie-2010636, 검색일자: 2022.3.17.

- 소득 관련 지출 정액공제(Arbeitnehmer-Pauschbetrags)를 1천유로에서 1,200유로까지 인상
- 2022년 연간 기본 소득 공제액을 1만 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 이동)에 대하여 거리 공제를 2026년까지 38ct로 인상

○ 기본 소득 공제액과 소득 관련 지출공제액 인상으로 인한 면세는 근로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혜택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및 노동사회부, 7월부터 20유로의 추가 아동 보조금 및 일회성 생계 지원금 100유로 지원(2022.3.16.)[387), 388), 389), 390)]

○ 연방 내각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및 노동사회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아동 추가 보조금 및 일회성 보조금 법안을 통과시킴

-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및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월 20유로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

-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기초 아동 보장 제도가 시작될 때까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 예정
- 아동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최대 209유로에서 229유로로 인상
- 가족에게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생활 여건을 개선하며 기회를 부여함

387)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2022.3.16.,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regierung-beschliesst-sofortzuschlag-ab-juli-193758, 검색일자: 2022.3.21.

388) 연방 노동사회부, 2022.3.16.,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mehr-unterstuetzung-fuer-familien-mit-wenig-geld.html, 검색일자: 2022.3.21.

389) 연방 노동사회부, 2022.3.16., https://www.bmas.de/DE/Service/Gesetze-und-Gesetzesvorhaben/sofortzuschlags-und-einmalzahl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2.3.21.

390) 연방 정부, 2022.3.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ofortzahlung-einmalzahlung-2014696, 검색일자: 2022.3.21.

○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2022년 7월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

-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생활비와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

□ 연방 정부, 난방비 보조금 추가 지원 결정(2022.3.18.)[391]

○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저소득층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연방정부는 난방비 보조금을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늘리기로 결정

- 총 210만명이 난방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1만가구 160만명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포함됨. 또한 연방장학법(BAföG) 수급자 약 37만명, 직업훈련보조금 수급자 6만 5천명,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7만 5천명도 포함
- 연방정부는 난방비 보조금에 총 3억 8천만유로를 지원
- 주거급여수급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270유로, 2인 가구는 35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구원 수 추가 시 1인당 70유로. 기타 수급대상자들은 균일하게 230유로 지원

□ 연방 재무부 및 경제기후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패키지 발표(2022.4.8.)[392), 393), 394)]

○ 연방 재무부 및 연방 경제기후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처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391) 연방 정부, 2022.3.1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heizkostenzuschuss-2002324, 검색일자: 2022.3.22.

392) 연방 재무부, 2022.4.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2/04/2022-04-08-schutzschild-fuer-vom-krieg-betroffene-unternehmen.html, 검색일자: 2022.4.15.

393) 연방 재무부, 2022.4.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massnahmenpaket-fuer-vom-krieg-betroffene-unternehmen.html, 검색일자: 2022.4.15.

394) 연방 경제기후부, 2022.4.8.,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08-bundesregierung-beschliesst-schutzschild.html, 검색일자: 2022.4.15.

○ (단기 유동성 지원) 70억유로 규모의 독일개발은행(KfW)의 신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저금리 혹은 무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미 도입되었던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하여 계속

○ (보증 프로그램) 운용자금 및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2022년 말까지 보증은행과 연방정부의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이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크로스 섹터 대기업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유동성 위기 상황의 에너지 기업 지원) 에너지 판매 기업의 마진 콜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금융 프로그램 지원

□ 연방 의회, 에너지 보안법(EnSiG) 및 에너지 산업법(EnWG) 개정 승인(2022.5.22.)[395), 396)]

○ 연방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보안법을 개정

- 에너지 공급에 위협이 되거나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특정 상황에서는 에너지 공급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적용 가능

○ 에너지 보안법(EnSiG)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속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

395) 연방 정부, 2022.5.2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energiesicherheit-2027654, 검색일자: 2022.5.24.
396) 연방 경제기후부, 2022.4.2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4/20220425-bundeskabinett-beschliesst-novelle-des-energiesicherungsgesetztes-aus-dem-jahr-1975.html, 검색일자: 2022.5.24.

- EU 회원국들 간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에너지 보안법에 보장
- 중요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공급 보안이 위험할 경우 연방 정부에서 신탁관리 운영이 가능함
- 에너지 수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공급이 안 될 경우, 가스가격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음

○ 한편, 에너지 산업법(EnWG)의 개정에 따라 가스 저장 시설의 폐쇄 등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이 제3국의 통제를 받아 에너지 보안을 해칠 수 있다면 정부가 금지할 수 있음

□ 연방 정부, LNG 촉진법(LNG-Beschleunigungsgesetz) 시행(2022.6.1.)[397]

○ 연방정부는 LNG 촉진법을 통하여 LNG 수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자 함

- 육상 거점 및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과 이에 필요한 선로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5월 19일 연방하원에서 통과
- 공급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예외를 허용하고 대중참여(Öffentlichkeitsbeteiligung)[398] 기간을 2주로 단축하여 이르면 여름부터 LNG 터미널 및 가스관 인프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정부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재평가하게 되었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함

- LNG 촉진법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스 공급을 확보하여 국가의 에너지 공급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전제 조건은 LNG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임

397) 연방 정부, 2022.6.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ichere-gasversorgung-2037912, 검색일자: 2022.6.10.

398) 대중참여제도(Öffentlichkeitsbeteiligung): 독일의 법체계는 일반 국민들에게 환경 승인 절차와 특정 환경 계획 및 프로그램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및소비자보호부, "Öffentlichkeitsbeteiligung," https://www.bmuv.de/themen/bildung-beteiligung/umweltinformation/oeffentlichkeitsbeteiligung, 검색일자: 2022.6.16.)

○ 2022년 5월 5일 연방정부와 니더작센주는 LNG와 그린가스(수소) 수입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4개의 LNG 터미널을 임대하고 총 29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연방예산 기금을 사용하기로 함

○ LNG 촉진법이 기후보호 정책과 양립하기 위하여 신규 LNG 기반시설은 추후 수소 등의 이산화탄소 중립 에너지를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 LNG 시설의 승인도 독일의 기후보호 목표에 따라 늦어도 2043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될 것이며, 기후중립적인 수소 및 그 파생물에 사용될 경우에만 이 시점 이후에 작동할 수 있음
- 기후중립 목표를 적어도 2045년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

□ 연방 정부, 육상 풍력발전 가속화 및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출(2022.6.15.)[399), 400), 401), 402)]

○ 연방 내각은 자연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친환경적인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

- 풍력에너지의 확장은 화석연료 수입으로부터 독립성을 높이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두 중요함

○ 풍력발전의 확대를 촉진하고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를 풍력 에너지 발전에 사용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현재 국토의 0.8%가 육상 풍력 에너지 발전 영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0.5%만 사용되고 있음

399) 연방 정부, 2022.6.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aenderung-bundesnaturschutzgesetz-2052452, 검색일자: 2022.6.17.

400)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력안전및소비자보호부, 2022.6.15., https://www.bmuv.de/pressemitteilung/bundeskabinett-beschleunigt-naturvertraeglichen-windkraft-ausbau-deutlich, 검색일자: 2022.6.17.

401) 연방 정부, 2022.6.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pressemitteilungen/planungen-und-genehmigungen-beschleunigen-transformation-voranbringen-2053076, 검색일자: 2022.6.17.

402) 연방 정부, 2022.6.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klimaschutz/wind-an-land-gesetz-2052764

○ 연방 주는 풍력 에너지의 확장을 위하여 2032년 말까지 토지 면적의 1.8~2.2%를 사용하도록 의무화[403]하며 2026년까지 1.4%를 잠정 목표로 정함

- 각 연방 주의 풍력 조건, 자연 및 종 보호, 공간 배치를 고려하여 목표를 확정
- 주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풍력발전소와의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계획

○ 연방자연보호법을 개정하여 풍력발전지역에 경관보호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

- 동시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높은 생태계 보호 기준을 보장

○ 종 보호 평가 표준을 정하여 풍력발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

- 풍력터빈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조류 종의 목록은 유의성 테스트를 통해 설정
- 금기영역(taboo area)을 가진 특별 종 및 번식장소 관련 거리 항목이 존재

○ 연방 자연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이 종 보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풍력발전소 운영자들은 종 보호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

□ 급격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구호 대책 정리(2022.6.17.)[404]

○ (첫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2월 23일 광범위한 구호 조치에 합의

- 2022년 7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 부담금(EEG-Umlage) 폐지
- 난방비 보조금: 주거급여 수급자에 270유로 지원(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 추가 1인당 70유로 증가), 직업훈련수당 수급자 및 학생들에게는 균일하게 230유로 지급

403) 베를린, 브레멘 및 함부르크 등 도시 주는 0.5%만 할당

404) 연방 재무부, 2022.6.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Entlastungen/schnelle-spuerbare-entlastungen.html, 검색일자: 2022.6.20.

-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 관련 지출 정액 공제가 1,200유로로 늘어남
- 연간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1만 347유로로 인상
- 장거리 통근자(21km 이상)의 거리 공제를 38ct로 인상

○ (두 번째 구호 패키지) 연정위원회는 2022년 3월 23일 두 번째 구호 조치에 합의

- 에너지세 감면: 2022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휘발유는 1리터당 29.55센트, 경유는 1리터당 14.04센트 인하
-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300유로에 이르는 일회성 보조금 지급
- 자녀가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0유로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2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 지급
-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10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 지급
- 월 9유로의 대중교통 티켓 발행

○ (제4차 코로나 세제 지원법) 2022년 2월 16일 내각이 합의하고, 5월 19일 연방의회를 통과함

- 결손전기이월 2023년 말까지 연장
- 가속감가상각제도 1년 연장
- 재택근무 소득공제 규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특별급여에 대하여 최대 4,500유로까지 비과세
- 2020년, 2021년, 2022년 세금신고 기한 연장

○ (경제 지원 패키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 단기유동성 확보 방안: KfW 대출 프로그램, 연방정부 보증 프로그램, 마진콜 특별금융 프로그램
- 표적 지원: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단일형(targeted) 혹은 복합형(hybrid) 자본 지원

라. 기타

□ 연방정부,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지원금 연장(2022.2.16.)[405), 406)]

○ 연방정부 및 주정부, 중앙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동의

○ 가교지원금 IV(Überbrückungshilfe IV)는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 3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모든 기업은 신청 가능하며 70% 이상 매출 감소 시 고정 비용의 90%까지 지원
- 가교지원금 IV에 1만 3,359건 신청하였고, 금액은 총 6억 4709만유로. 이 중 27%인 1억 7,622만유로를 지급함(2022.2.23. 기준)

○ 새 출발 지원금(Neustarthilfe 2022)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최대 1,500유로, 총 4,5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손실을 겪고 있지만 낮은 고정비용으로 인해 가교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공연업계 단기근로자, 모든 부문의 비정규직이 지원 가능
- 새 출발 지원금에 4만 9,757건 신청하였고, 금액은 총 1억 7,850만유로. 이 중 79%인 1억 4,011만유로를 지급함(2022.2.23. 기준)

405) 경제기후부, 2022.2.16.,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2/02/20220216-corona-wirtschaftshilfen-werden-als-absicherungsinstrument-bis-ende-juni-2022-verlangert-bewahrte-programmbedingungen-werden-fortgesetzt.html, 검색일자: 2022.2.21.

406) 경제기후부, 2022.2.23., https://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UBH/Redaktion/DE/Downloads/corona-hilfen-unternehmen-infografik-antraege-zahlungen.pdf?__blob=publicationFile&v=107, 검색일자: 20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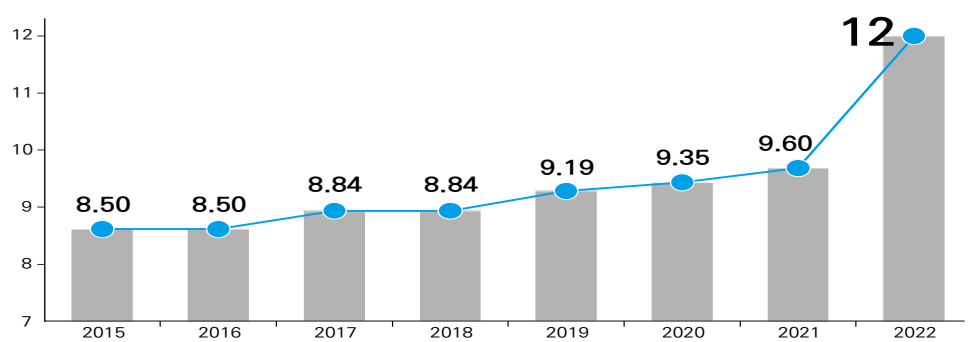
□ 연방 노동사회부, 2022년 10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2022. 2. 23.)[407), 408)]

○ 연방 내각은 법정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

-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한계고용(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분야에 변화를 주려 함
- 최저임금의 인상은 구매력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에도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
- 2022년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인상되고, 미니잡(minijob)[409]의 임금 한도가 450유로에서 520유로까지 인상되어 최저임금으로 주당 10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이는 독일 중위 임금(median wage)의 약 60%에 해당하고, 적절한 최소 보호를 위해 유럽에서 권장되는 임금 기준임

그림 2-Ⅳ-1 독일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

(단위: 유로)



자료: 연방 정부, 2022. 2. 23.

407) 연방 노동사회부, 2022. 2. 2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gesetzlicher-mindestlohn-steigt-auf-12-euro.html, 검색일자: 2022. 3. 11.

408) 연방 정부, 2022. 2. 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zwoelf-euro-mindestlohn-2006858, 검색일자: 2022. 3. 11.

409) 미니잡(minijob): 월 450유로를 받는 저임금, 단기간 일자리로 사회보험 및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면제됨, 미디잡(midijob): 월 450~1,300유로를 받는 일자리로 사회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부담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함(이승현, 「독일 저임금 고용제도의 개정 내용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3. 6. pp. 44~55를 참고하여 작성)

○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

- 미디잡(midijob) 임금 한도를 월 1,300유로에서 1,600유로로 상향 조정
- 미니잡에서 미디잡으로 이행하는 부담을 완화시키고, 미니잡 이상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함

□ 연방 정부, 2022년 연금가치 조정 및 장애연금 혜택 개선 발표(2022.4.13.)[410), 411), 412)]

○ 연방 내각은 2022년 연금 조정[413)]에 대한 법률안을 승인

-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서독의 연금은 5.35%, 동독의 연금은 6.12% 인상. 특히 서독에서는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임
- 연금실질가치액은 서독은 34.19유로에서 36.02유로로, 동독은 33.47유로에서 35.52유로로 증가
- 동독의 연금가치는 서독의 연금가치의 98.6%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7월까지는 연금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 (보충계수(Nachholfaktor) 재도입) 2021년 보충계수를 재도입하여 연금가치를 조정하였고, 이에 연금가치 증가율은 하향 조정되어 연금 수준은 소득대체율 기준 48% 선에 맞춰짐

- 연금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2020년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410) 연방 노동사회부, 2022.4.1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renten-steigen-juli-2022-deutlich.html, 검색일자: 2022.4.18.

411) 연방 노동사회부, 2022.4.1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2/deutliche-rentenerhoehung-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2.4.18.

412) 연방 정부, 2022.4.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rentenerhoehung-2022-2025436, 검색일자: 2022.4.18.

413) 통일 후 독일 정부는 연금단일화법(Rentenüberleitungsgesetz)을 통하여 최소 보장에 중점을 두던 동독의 연금 시스템을 소득과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는 서독의 연금 시스템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두 지역 간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는 서로 다르게 계산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연금가치액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동독의 연금가치액이 서독의 약 95%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독일 정부는 2017년 최종연금단일화법(Rentenüberleitungs-Abschlussgesetz)을 제정하여 2024년 7월 1일까지 연금가치액 조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 동·서독 지역이 같은 기준을 가지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연방 노동사회부, 2017.7.7., "Soziale Einheit bis 2025 vollende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oziale-einheit-bis-2025-vollendet-336842, 검색일자: 2022.4.26.)

연금가치가 조정되지 않음을 상쇄함

○ (장애연금 혜택 개선) 2024년 7월부터 장애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이 인상되어 약 300만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혜택

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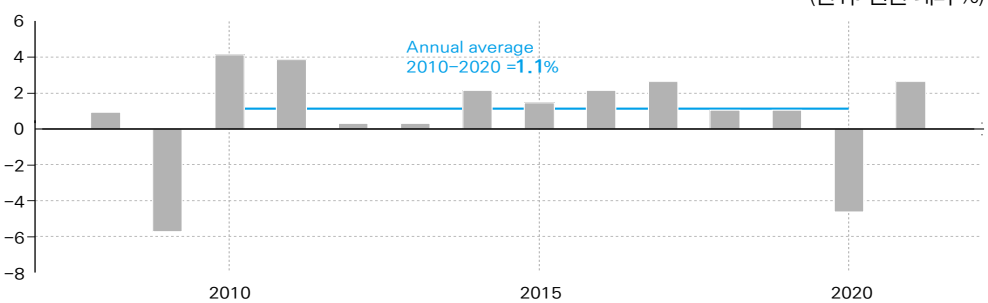
□ 연방통계청, 2021년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2.1.14.)[414]

○ 독일의 2021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21년 GDP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해인 2019년보다 여전히 2.0% 낮음

그림 2-Ⅳ-2 독일 GDP 성장률(가격조정)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연방통계청, 2022.1.14.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실적이 급감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증가

- 제조업은 전년 대비 4.4%로 크게 증가하였고,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5.4%로 주목할 만한 증가가 나타남
-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무역, 교통,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경제성장률은 3.0%로 다소 낮았으며,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

414) 연방통계청, 2022.1.14., https://www.destatis.de/EN/Press/2022/01/PE22_020_811.html, 검색일자: 2022.1.17.

지 않았던 건설업만 소폭 하락함(-0.4%)

-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
- 제조업 실적은 2019년 수준보다 여전히 6.0% 낮고, 코로나19 팬데믹의 큰 타격을 받은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창작활동을 포함한 부문들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9.9% 낮음

○ 2021년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020년보다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낮음

-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3.4% 증가하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독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함
- 특히 정부는 2021년 봄 독일 전역에 무료 신속항원검사 실시, 코로나19 백신 도입, 검사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함

표 2-Ⅳ-10 독일 GDP 성장률(2018~2021년, 가격조정)

(단위: 전년 대비 변화율, %)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가계최종소비지출	1.4	1.6	-5.9	0.0
정부최종소비지출	1.0	3.0	3.5	3.4
총고정자본형성	3.4	1.8	-2.2	1.3
건설	2.6	1.1	2.5	0.5
기계장비	4.4	1.0	-11.2	3.2
기타	3.8	5.5	1.0	0.7
수출	2.3	1.1	-9.3	9.4
수입	3.9	2.9	-8.6	8.6
총부가가치	1.1	1.0	-4.9	2.9
제조업	1.2	-1.7	-10.0	4.4
건설	1.9	0.4	3.8	-0.4
무역, 교통, 숙박 및 음식점업	1.5	3.3	-5.2	3.0
정보, 통신	7.5	3.8	-1.0	3.3
비즈니스 서비스	3.2	0.1	-7.4	5.4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0.6	1.8	-3.2	3.2
기타 서비스	1.6	1.9	-10.5	0.6
GDP	1.1	1.1	-4.6	2.7

자료: 연방통계청, 2022.1.14.

○ 건설업 분야의 총고정자본형성은 5년 연속 증가 후,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2021년 0.5% 성장에 그쳤고, 기계·장비 분야는 2021년 3.2% 증가했지만 사실상 2020년에 급감한 수치의 회복 수준임

○ 2021년 대외 무역은 전년도 급감에서 회복하여 수출 9.4%, 수입 8.6%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9년 수준을 약간 밑도는 수준임

○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21년 말 1,539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 이는 2020년 1,452억유로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로, 독일 통일 이후 두 번째로 큰 적자

○ 2021년 취업자 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4,490만명으로 집계되었음

□ 연방 통계청, 2021년 공공부채 잠정실적 발표(2022.3.30.)[415]

○ 2021년 말 기준으로 독일 정부의 공공부채는 2조 3천억유로로 최고치를 경신

- 2020년과 비교하여 공공부채는 6.8%, 1,469억유로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들로 인함
- 2021년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부채가 1.6%(357억유로) 증가함

○ (부문별 공공부채) 연방정부의 공공부채는 2020년에 비하여 10.3%, 1,450억유로 증가하여 1만 5,485억유로

- 주정부의 부채는 6,381억유로로, 2020년 말보다 0.3%, 21억유로 증가하였고, 2021년 3분기 대비 10억유로, 1.1% 감소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작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사회보장 부문의 부채는 7.8%(300만유로) 감소함

415) 연방 통계청, 2022.3.3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3/PD22_136_713.html, 검색일자: 2022.4.12.

표 2-Ⅳ-11 독일 2021년 공공부채

구분	2021/12/31	2021/9/30	2020/12/31	2021/9/30 대비	2020/12/31 대비
	(백만유로)			(%)	
합계	2,319,773	2,284,049	2,172,888	1.6	6.8
연방	1,548,469	1,504,867	1,403,481	2.9	10.3
주정부	638,141	645,202	636,022	-1.1	0.3
지방자치단체	133,123	133,939	133,340	-0.6	-0.2
사회보장	41	41	44	-0.6	-7.8

자료: 독일 통계청, 「2021년 공공부채 잠정실적」, 2022.3.30.

□ 연방 통계청, 2021년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발표(2022.4.7.)[416]

○ 2021년 공공부문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조 7,624억유로

- 2021년 1,332억유로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20년 1,892억유로에 비하여 감소한 수치
- 공공부문 지출의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과 보조금의 증가 때문

○ 2021년 공공부문 전체 수입은 2020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4.6% 증가

-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세금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

○ 부문별 수입 및 지출은 다음과 같음

- 연방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5,605억유로, 수입은 11.2% 증가한 4,247억유로로 집계되어 1,358억유로 적자
- 주정부지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072억유로, 수입은 12.6% 증가한 5,108억유로로 집계되어 35억유로 흑자
- 지방자치단체는 46억유로 흑자, 사회보험은 55억유로 적자를 기록

416) 연방 통계청, 2022.4.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4/PD22_155_711.html, 검색일자: 2022.4.13.

표 2-Ⅳ-12 공공부문 총예산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유로)

구분	합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지출					
2021	1,762.4	560.5	507.2	303.4	779.7
2020	1,678.6	511.7	487.2	293.2	748.6
2019	1,497.4	397.0	417.2	276.7	679.9
수입					
2021	1,629.3	424.7	510.8	308.0	774.2
2020	1,489.4	381.8	453.8	295.2	720.7
2019	1,542.7	411.8	433.9	282.4	688.1
재정수지					
2021	-133.2	-135.8	3.5	4.6	-5.5
2020	-189.2	-129.9	-33.5	2.0	-27.9
2019	45.2	14.8	16.6	5.6	8.1

주: 2021년 잠정실적
자료: 연방통계청, 「2021년 공공부문 총예산 잠정실적」, 2022.4.7.

□ 연방 통계청, 2022년 1분기 경제 실적 발표(2022.5.25.)[417]

○ (전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독일 국내총생산은 2021년 4분기 대비 0.2%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0.9% 감소

-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2022년 1분기 소폭 성장함
- 민간지출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0.1%)이고, 정부지출도 소폭 상승(0.1%)
- 건설투자는 2021년 4분기에 비하여 4.6%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2.5% 증가
- 수출은 상품 수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분기 대비 2.1% 감소하였고, 수입은 여행 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증가로 인하여 0.9% 상승

417) 연방 통계청, 2022.5.2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5/PD22_215_811.html, 검색일자: 2022.6.13.

표 2-Ⅳ-13 2022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1Q	2Q	3Q	4Q	1Q	2Q	3Q	4Q	1Q
전분기 대비[1)]	-1.8	-10.0	9.0	0.7	-1.7	2.2	1.7	-0.3	0.2
전년 동기 대비[2)]	-1.5	-11.3	-3.6	-1.9	-3.0	10.8	2.8	1.8	4.0

주: 1) 가격 조정, 계절 및 캘린더 조정 값
2) 가격 조정
자료: 연방 통계청, 2022.5.25.

○ (전년 동기 대비) 코로나19 2차 유행의 영향을 받았던 2021년 1분기와 비교하여 2022년 1분기는 4.0% 증가

- 높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락다운이 심했던 2021년 1분기 대비 민간소비는 8.5% 증가[418)]
-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0.4% 소폭 증가
-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수입은 7.2% 증가함

○ (국제 비교) 독일은 20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대비 0.2%로 다른 유럽국가 평균과 대략 비슷함

- 유럽연합 통계국(ESTAT)은 EU 전체의 GDP가 전분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보고[419)]하였고, 미국은 2022년 1분기에 0.4% 감소함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분기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스페인의 2022년 1분기 GDP는 -3.4%로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았고, 독일은 -0.9%, 이탈리아 -0.4%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반면 프랑스(1.0%), 유로지역(0.5%)에서는 GDP가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섬
- 미국은 전분기 대비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이전 기간에 비해 2.8%의 비교적 강한 성장세를 기록

418) 특히,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출(+124.2%)을 함
419) 2022년 5월 17일 발표된 잠정치 기준(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 "GDP and employment flash estimates for the first quarter of 2022," 2022.5.1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4636038/2-17052022-AP-EN.pdf, 검색일자: 2022.6.23.)

표 2-Ⅳ-14 2022년 1분기 GDP(가격 조정, 계절 및 캘린더 조정) 국제 비교

구분	미국	유로지역	EU27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전분기 대비[1]	-0.4	0.3	0.4	0.0	-0.2	0.3	0.2
전년 동기 대비[2]	3.6	5.1	5.2	5.3	5.8	6.4	3.8
코로나19 위기 직전 분기 대비[3]	2.8	0.5	1.1	1.0	-0.4	-3.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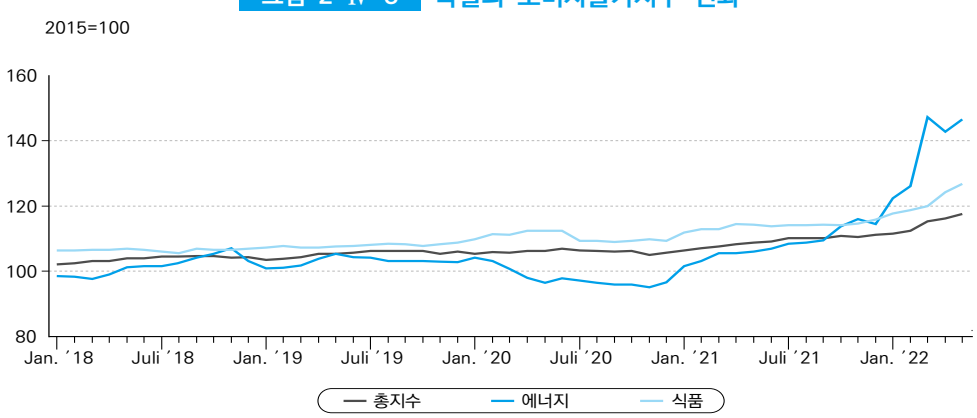
주: 1) 2021년 4분기와 비교
2) 2021년 1분기와 비교
3) 2019년 4분기와 비교
자료: 연방 통계청, 2022.5.25.

□ 연방 통계청, 2022년 5월 물가 상승률 7.9% 발표(2022.6.14.)[420]

○ 2022년 5월 물가 상승률은 7.9%로, 지난 3월의 7.3%, 4월의 7.4%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

- 높은 물가 상승률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가격의 인상이며, 식품가격의 상승도 또 다른 주요 원인임

그림 2-Ⅳ-3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자료: 연방 통계청, 2022.6.14.

420) 연방 통계청, 2022.6.1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2/06/PD22_245_611.html, 검색일자: 2022.6.22.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 공급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식품가격이 점점 상승함

○ 에너지 제품의 가격은 2022년 4월 35.3% 상승한 이후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8.3%까지 증가함

- 가정용 연료(Leichtes Heizöl)의 가격의 상승률은 94.8%로, 두 배 가까이 올랐으며 천연가스(Erdgas) 55.2%, 화석연료(Kraftstoffe) 41.0%, 고체연료(Brennstoffe) 33.4%, 전기(Strom) 21.5%로 전체 에너지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식품가격은 2022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11.1% 상승했고, 4월에는 8.6% 상승한 이후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한 수치

- 식용유 38.7%, 육류 및 육류제품 16.5%, 유제품 및 계란 13.1%, 빵 및 곡류 10.8% 증가함

○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4.5%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은 3.8%로 높은 물가 상승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V

프랑스(FY2022: 2022.1.~2022.12.)*

표 2-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1.12.23. 2021.12.30.	2022년 예산법(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최종 승인 및 공표
2022.2.2.	2021년 예산 집행결과 발표
2022.3.14.	연료가격 인하 지원방안 발표
2022.3.16.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 발표
2022.4.29.	프랑스 통계청,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2022.5.11.	물가안정 정부 지원대책(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발표
2022.6.27.	프랑스 정부, 임대료 인상제한(bouclier loyer) 발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2022년 예산법(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421](2021.12.30.)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422](2021.12.23.) 최종 승인 및 공표

○ 2021년 9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법안[423]에 대해 의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424](2021.12.15.)하고, 프랑스 헌법위원회(Le 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2022년 예산법으로 제정됨(2021.12.28.)

- 2022년 예산법상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전망은 예산법안 전망치인 -4.9%보다 0.1%p 낮아진 -5.0%로 전망됨

421)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1)," 2021.12.30.,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4637640 검색일자: 2022.1.17.

422) 프랑스 법률사이트, "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1)," 2021.12.23.,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44553428?init=true&page=1&query=la+s%C3%A9curit%C3%A9+sociale+pour+2022&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검색일자: 2022.1.17.

423) 프랑스의 2022년 예산법안은 『2021년 KIPF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22 주요국 예산안-프랑스」 참고

424) 프랑스 예산국, "Adoption en lecture définitive du PLF 2022 par l'Assemblée nationale," 2021.12.15.,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112 검색일자: 2022.1.17.

표 2-Ⅴ-2 2022년 예산법의 재정수지 실적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실적)	2021 (실적 전망)	2022 (기존 예산법안 전망)	2022 (예산법 전망)
구조적 재정수지(Solde structurel (1))	-1.3	-5.7	-4.8	-4.0
경기조정치(Solde conjoncturel (2))[1]	-5.0	-2.3	0.1	-0.8
특별조치(Mesures exceptionnelles (3))[2]	-2.8	-0.1	-0.2	-0.2
재정수지(Solde effectif (1 + 2 + 3))	-9.1	-8.2	-4.9	-5.0

주: 1) 경기변동으로 인한 GDP 조정분
2) 단기적으로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자료: 2022년 프랑스 예산법(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 2021년 10월 7일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425]을 의회에서 확정하고(2021.12.16.)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으로 제정됨[426), 427)]

- 계속되는 보건의료 및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22년 사회보장예산은 204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335억유로 대비 131억유로 감소한 수치임(2020년 재정적자 387억유로)

□ 2021년 예산 집행결과 발표(2022.2.2.)[428]

○ 2021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707억유로로 2020년 1,781억유로 대비 74억유로 감소함

425) 프랑스의 2022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은 『2021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22 주요국 예산안-프랑스」 참고
426) 프랑스 의회,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5/dossiers/plfss_pour_2022, 검색일자: 2022.1.17.
427)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Loi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2021.12.23., https://www.vie-publique.fr/loi/281799-loi-de-financement-la-securite-sociale-2022-plfss-budget-secu 검색일자: 2022.1.17.
428)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1," 2022.2.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publications-de-la-direction/situation-mensuelle-du-budget-de-letat-smb/smb-2021 검색일자: 2022.2.15.

- 코로나19 위기 지속의 영향으로 인한 2021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267억유로로 2020년 3,897억유로 대비 370억유로 증가
- 특히, 기업을 위한 연대 기금 자금조달에 15억유로를 지출
- 경제활동의 증가로 세외수입과 기금을 제외한 2021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89억유로 증가하여 2,957억유로를 기록
- 부가세와 사법공익협정[429]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수익은 전년 대비 각각 182억유로, 22억유로 감소하였지만,
- 계약금 수익률 증가에 따라 법인세는 100억유로,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TICPE) 등 국내 소비세는 115억유로 증가함

표 2-V-3 FY2021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2021년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96,912	-172,678	-171,518	-
재정지출(Dépenses)	397,983	455,368	496,472	9.0%
재정수입(Recettes)	301,071	282,690	324,954	15.0%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4,062	-5,421	786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92,850	-178,099	-170,732	-

자료: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1

429) 사법공익협정(Convention Judiciaire D'interet Public: CJIP)은 기소유예 합의제도로 부패 혐의에 연루된 기업이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검찰과의 합의하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

표 2-V-4 FY2021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20	2021	증감률(%)
총재정지출(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455,368	469,472	9.0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89,678	426,732	9.5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94	994	-0.1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133,005	134,716	1.3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64,895	64,806	-0.1
채무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36,202	38,496	6.3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13,640	16,093	18.0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139,234	168,645	21.1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1,707	2,982	74.7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5,690	69,739	6.2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41,999	43,371	3.3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eenne)	23,691	26,368	11.3
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	282,690	324,954	15.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55,953	295,738	15.5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74,009	78,654	6.3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36,329	46,315	27.5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6,864	18,329	167.0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113,770	95,539	-16.0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24,981	56,901	127.8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4,768	21,257	43.9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1)]	11,968	7,960	-33.5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분담금

자료: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1

그림 2-V-1 월별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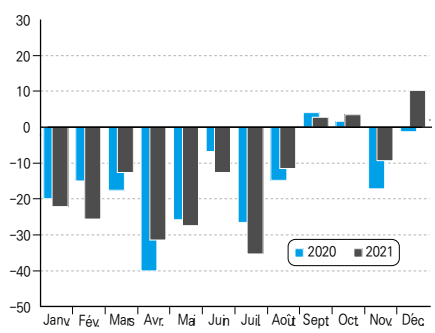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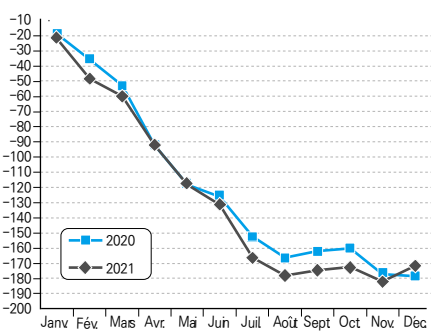


그림 2-V-2 누적 재정수지



자료: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1

02 정책적 이슈

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 백신패스 전환법안 제출 결정(2021.12.27.)[430]

○ 2021년 12월 27일 특별 각료회의에서 기존 보건패스를 백신패스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1월 16일 국회에서 동 법안이 최종 채택됨[431]

- 법안은 16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며 백신 미접종자는 PCR/항원 검사가 음성이어도 식당, 카페, 대형 쇼핑센터 등의 출입이 불가함

  *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패스가 없는 경우 코로나19 테스트 음성결과지로 대체 가능

  • 2차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후 7개월 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하며 특정 장소 및 활동에 대해서 백신패스와 코로나19 음성결과가 동시에 요구될 수 있음

  • 코로나19 양성판정자의 경우 추가 접종 전까지 회복 증명서를 통해 기존의 보건패스를 연장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가짜 백신패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 허위패스 사용 시 사용자 및 대여자뿐만 아니라 백신패스 미확인자에게도 1천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430) 프랑스 정부포털, "≪Pass sanitaire≫ et dose de rappel: ce qui change au 15 janvier," 2022.1.14., https://www.gouvernement.fr/pass-sanitaire-et-dose-de-rappel-ce-qui-change-au-15-janvier 검색일자: 2022.1.18.

431)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Projet de loi renforçant les outils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2022.1.14., https://www.vie-publique.fr/loi/283068-projet-de-loi-pass-vaccinal-gestion-de-la-crise-sanitaire 검색일자: 2022.1.19.

□ 우크라이나에 1억유로 규모의 긴급의료지원 제공(2022.3.1.)[432]

○ 우크라이나 당국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는 분쟁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억유로 규모의 긴급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의 비상 대응은 해당 지역에 직접 전달되는 물질적 지원, NGO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구성됨
  - 이와 같은 지원들은 유럽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Mécanisme de protection civile de l'Union européenne: MPCU)[433]의 일환이며, 우크라이나 또는 폴란드, 몰도바와 같은 인접 국가에 100톤에 달하는 긴급 구호품, 의료 장비 및 의약품, 비상 대피소를 공급함

□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기금 활성화(2022.3.3.)[434]

○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재정 기부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지방정부 대외활동기금(Fonds d'action extérieur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FACECO)과 기업연대기금(Fonds de concours pour les entreprises)을 활성화함

- 지방정부 대외활동기금과 기업연대기금 모두 유럽외무부의 위기대응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 사용할 계획임
  * FACECO는 유럽외무부의 위기대응센터(CDCS)에서 2013년부터 관리하는 기금으로, 갑작스러운 재난 및 분쟁 발발 시 국제기구 및 프랑스 NGO와 협력하는 정부의 전문가

432) 프랑스 유럽외무부, "Ukraine-La France se mobilise et achemine une aide médicale d'urgence en faveur des populations victimes du conflit," 2022.3.1., https://www.diplomatie.gouv.fr/fr/dossiers-pays/ukraine/evenements/article/ukraine-la-france-se-mobilise-et-achemine-une-aide-medicale-d-urgence-en-faveur 검색일자: 2022.3.16.

433) 유럽 연합 시민 보호 메커니즘은 EU 국가와 6개 참여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및 튀르키예(터키))가 2001년 10월 설립한 재난 예방, 대비 및 대응 시스템으로 유럽과 참여국가에서 비상사태가 국가대응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우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434) 프랑스 유럽외무부, "Ukraine-Le ministè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 active le fonds de concours pour les entreprises, complémentaire du fonds de concours destiné aux collectivités locales," 2022.3.3., https://www.diplomatie.gouv.fr/en/country-files/ukraine/news/article/ukraine-the-ministry-for-europe-and-foreign-affairs-activates-the-business 검색일자: 2022.3.16.

를 통해 해당 위기로 인한 피해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제공함

** 위기대응센터(Centre de crise et de soutien: CDCS)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재외국민 보호와 위기대응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국제연대 및 안정화 작업 전담기관임

- 3월 1일부터 활성화된 지방정부 대외활동기금(FACECO)은 이미 160만유로 이상 모금되었고, 기업의 재정지원 참여를 위해 신설된 기업연대기금 역시 희생자 및 분쟁지역의 긴급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대출 시행(2022.4.7.)[435]

○ 지난 3월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증대출(Prêt garanti par l'État: PGE)을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정부보증대출은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에 도입한 보증 시스템으로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1~2.5% 금리를 적용함

- 정부보증대출은 대 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수출 중단에 따른 손실 발생, 에너지·원자재를 비롯한 생산요소의 가격 인상 등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매출액의 15%까지 대출을 허용함
  - 기업이 담당은행에 신청하면 재정 상황, 자금조달 필요성 등에 대해 건별 검토를 거쳐 지원되며, 코로나19 위기 동안 이행된 방식과 동일한 조건 적용
- 정부보증대출은 6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EU 집행위원회의 특별사항 조치[436]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이 연장될 수 있음

435) 프랑스 재무부, "Ukraine: lancement du PGE résilience pour soutenir les entreprises," 2022.4.7., https://www.economie.gouv.fr/ukraine-lancement-pge-resilience-entreprise# 검색일자: 2022.4.14.

436) EU 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U 집행위는 회원국의 재정지원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임체제(State Aid Temporary Framework)를 마련하고 긴급 유동성을 제공함

나. 경기 회복 및 물가안정 정책

□ 여행사 보증기금 운용 시행령 발표(2021.12.30.)[437]

○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를 위한 보증기금 운용을 시행한다고 밝힘

- 관광산업은 프랑스 경제의 주요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여행사 보증기금은 여행사 및 여행업 운영자를 위한 재정 보증시장을 확보하고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짐
- 여행사의 보증기관은 중앙재보험기금(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을 통해 최대 15억유로의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금을 통해 관광법률 조항 L211-18 II-1°(1° du II de l'article L. 211-18 du code du tourisme)에 따라 이루어진 각종 혜택, 운송, 서비스 등 재정적 보장에 대해서 중앙재보험기금을 통해 재보험 보장을 제공함
  -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계약자인 기관도 보험료와 기여금의 75%를 공동기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일부(35%)는 관리비로 반환됨

○ 보증기금과 기관과의 계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최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할 예정임

*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재보험기금의 총괄관리자가 의장을 맡으며, 보증인의 협약 준수 여부 및 기금 회계 상황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함

437)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n° 2021-1912 du 30 décembre 2021 portant modalités d'application de l'article 163 de la loi n° 2021-1900 du 30 décembre 2021 de finances pour 2022 en vue de définir les modalités de fonctionnement du fonds de garantie des opérateurs de voyages et de séjours," 2021.12.30.,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4791541 검색일자: 2022.1.19.

□ 세금 감면 및 공제(RICI)에 대한 선지급 시행(2022.1.10.)[438]

○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 유지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월 17일에 선지급함

- 세금 감면 및 공제의 대상은 2021년 신고한 2020년도분으로 주로 기부, 재택 직원의 고용, 보육비, 요양원에서의 숙박비, 임대 투자 지출 등이며 870만 가구에 평균 605유로가 지급됨

□ 연료가격 인하 지원방안 발표(2022.3.14.)[439]

○ 카스텍스 총리는 연료가격 폭등에 따른 대책으로 4월 1일부터 연료가격을 리터당 15센트씩 인하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함

- 연료비 지원은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약 20억유로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유통업체를 통해 가격할인을 진행하고 관련 소요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표시가격은 동일하지만 지불 시 할인이 적용됨
- 이번 조치는 세금 인하가 아닌 재정지원임을 강조하면서 석유 개발업 및 유통업체의 유류비 인하 노력 동참을 권고함

□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 발표(2022.3.16.)[440), 441]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카스텍스 총리는 France

438) 프랑스 재무부 보도자료, "Réductions et crédits d'impôt: une avance de 605 euros en moyenne pour plus de 8,7 millions de foyers," 2022.1.10., https://www.economie.gouv.fr/reductions-credits-impot-avance-pour-plus-87-millions-foyers 검색일자: 2022.1.18.

439) 프랑스 정부, "15 centimes en moins par litre de carburant dès le 1er avril," 2022.3.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15-centimes-en-moins-par-litre-de-carburant-des-le-1er-avril 검색일자: 2022.3.21.

440) 프랑스 정부, "Plan de résilience économique et sociale," 2022.3.16.

441) 프랑스 정부, "Plan de résilience économique et sociale: France 2030 mobilisé pour sécuriser l'approvisionnement en intrants critiques, renforcer la souveraineté énergétique et renforcer la souveraineté alimentaire de l'Europe," 2022.3.17., https://www.gouvernement.fr/plan-de-resilience-economique-et-sociale-france-2030-mobilise-pour-securiser-l-approvisionnement-en 검색일자: 2022.3.22.

2030의 일환인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을 발표함

-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지속적인 제재,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책으로 France 2030의 틀 내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임

  * France 2030은 5년간 에너지·교통·바이오·우주·해양 등의 부문에 300억유로를 투자하는 차세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임

- 단기적으로 전략적 공급을 확보하고 의존도를 줄여 중기적으로는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 주권 강화, 유럽의 식량 주권 강화, 기업의 파산방지 및 기업지원 등 총 12가지 목표를 설정함

표 2-V-5 경제 및 사회적 회복계획 목표 및 주요 내용

	목표	주요 내용
1	가계 및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방패" 강화	가스 및 전기 가격 상승에 대한 연료가격 인하 지원조치
2	가스 및 전기 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 지원	에너지 소비 지출의 50%를 지원
3	기업의 파산 방지	정부보증대출, 국고보조금 지원 등
4	수출입 및 활동 제한 조치와 국제 무역 위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지원	현지 직원 송환, 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포털 구축 등
5	수출 대체시장 발굴 촉진	수출활성화 수표, VIE(Volontariat international en entreprise)제도 지속 운영 등
6	원가 상승 취약 부문에 표적지원 제공	농업 - 가축 사료 인상분 및 이익 손실 보상 등 어업 - 연료비 지원, 선박 에너지 전환 지원 등 교통 - 연료비 지원, 국내소비세 부분 환급 등 건설 및 공공사업 - 연료비 지원, 공급업체 납품 지연 위약금 미적용 등
7	주요 원자재 공급 확보	자재 공급확보 대책 마련, 수입원료확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
8	거버넌스 제공 및 산업연대	사업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립, 기업을 지원을 위한 부문 간 연대 강화
9	에너지 주권 강화	재생 에너지 개발, 전기 자동차 전환 가속화, 가스보일러 교체 장려 등
10	유럽의 식량 주권 강화	휴경지 복구, 2년 3작물제 추진, 식물성 단백질 연구 개발 지원 등
11	프랑스 정착 촉진	행정절차 간소화, 프로젝트 모니터링 강화 등
12	행정, 기업,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사이버보안 자동화 서비스도 개발, 사고 대응 센터 건설 등

자료: 프랑스 정부, "Plan de résilience économique et sociale," 2022.3.16.

□ 물가안정 정부 지원대책(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발표 (2022.5.11)[442]

○ 국제정세 악화가 원자재 및 에너지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프랑스는 2021년 GDP 성장률 7% 기록, 2021년 4분기 실업률 7.4%(2008년 이후 최저수준) 도달 등 경제 상황이 빠르게 개선 중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와 가격 상승은 기업의 신뢰와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 석유, 전기, 가스 등 에너지가격뿐만 아니라 밀과 같은 필수 농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

○ 급격한 물가 상승에서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각료회의의 결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발표함

- 이에 따른 주요 조치로는 ① 에너지 지원금 지급 연장, ② 저소득층 대상 '푸드 체크(food check)' 지원, ③ 연금 및 사회급여 조기 수령, ④ 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⑤ TV시청료 폐지
  - (에너지 지원금 지급 연장) 기존 6월까지 예정이었던 1리터당 15센트(부가세 제외) 연료가격 인하 지원을 2022년 말까지 연장
  - (푸드체크 지원) 식품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세금소득 기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유로(어린이 1명당 50유로 추가)의 식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영구적인 제도로 전환할 계획임

    * 푸드체크에는 약 10억유로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행령으로 실시하고 추후 각료회의 논의를 통해 재정법안에 포함될 예정
  - (연금 조기수령)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및 사회급여를 재평가받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음

442)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Conseil des ministres du 11 mai 2022.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des Français," 2022.5.11.,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85112-conseil-ministres-11052022-protection-du-pouvoir-d-achat-des-francais 검색일자: 2022.5.23.

• (공무원 임금 동결 해제) 급여회의 결과에 따라 7월 1일부터 570만 공무원의 임금을 3.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최대 증가폭임(총 재정소요 75억유로)[443]

* 총 임금 증가율 5% = 일반임금 인상 3.5%+연평균 개인 증가율 1.5%

• (TV 시청료 폐지) 올해부터 공영방송 시청료를 영구 폐지하며, 이로 인한 가구 구매력은 연간 138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프랑스 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된다면 ECB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연내 점진적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힘[444]

• 금리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실질금리는 상당 기간 마이너스로 유지됨에 따라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일축함

□ 르메르 재무부 장관, 에너지 요금 동결 조치 유지 발표(2022.5.30.)[445], [446]

○ 르메르 재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가격 동결조치[447]를 올 연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 가스 가격은 동결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은 4% 이내로 제한될 것이며 2023년까지 대폭적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함

443) 프랑스 정부, "Hausse de la rémunération des agents de la fonction publique," 2022.6.29.,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hausse-de-la-remuneration-des-agents-de-la-fonction-publique, 검색일자: 2022.6.30.

444) 프랑스 은행, "L'Eurosystème et sa politique monétaire: d'un ≪dilemme impossible≫ à une feuille de route possible pour la normalisation," 2022.5.6., https://www.banque-france.fr/intervention/leurosysteme-et-sa-politique-monetaire-dun-dilemme-impossible-une-feuille-de-route-possible-pour-la 검색일자: 2022.5.26.

445) 국가에너지옴부즈만 정보사이트, "Les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d'ENGIE n'évoluent pas le 1er juin 2022, car ils ont été bloqués depuis le 1er octobre 2021," 2022.5.30., https://www.energie-info.fr/tarifs-reglementes-de-gaz-dengie-toujours-geles-au-1er-juin-2022/, 검색일자: 2022.6.22.

446)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경제정책 주간 정부정책 동향」,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view.do?seq=1332305&page=1 검색일자: 2022.6.20.

447) 에너지가격 동결조치는 유럽의 시장가격의 이례적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동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과 경제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법령조치임(2022년 2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현재 가스가격은 2019년의 4배, 2020년의 6배 더 높은 수준)

- 가스 공급체인 Engie와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관세를 동결하여 가스가격 인상을 차단하는 시행령(Décret n° 2021-1380 du 23 octobre 2021 relatif aux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de gaz naturel fournis par Engie et faisant application du dernier alinéa de l'article R. 445-5 du code de l'énergie)을 실시함
- 전기가격 역시 전력공급업체(EDF)가 일정량의 전력을 고정가격에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관세 인상을 통한 인상폭을 4%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함[448]

○ 하지만 약 20억유로의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월 말 수정예산법안 또는 2023년 예산법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함

□ 프랑스 정부, 임대료 인상제한(bouclier loyer) 발표(2022.6.27.)[449]

○ 정부는 2023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임대료를 3.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임대인은 매년 프랑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대료 참조 지수(Indice de référence des loyers: IRL)를 토대로 임대료 금액을 책정하게 됨(현재 임대료 × 계약 분기의 IRL / 전년 동기의 IRL = 새 임대료)
- 연말까지 임대료 참조 지수는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이 적용되면 1년 동안 임대료 인상이 최대 3.5%까지로 제한됨

  * IRL 증가율: 2022년 1분기 2.48%, 2021년 1분기 0.09%, 2020년 1분기 0.92%

○ 이에 따라, 맞춤형 주거수당(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450]도 3.5% 증가될 것이며, 향후 수정재정법안에 포함될 예정임

448) 프랑스 정부, "Le Gouvernement veut limiter la hausse du tarif de l'électricité à 4%," 2022.1.14.,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gouvernement-veut-limiter-la-hausse-du-tarif-de-l-electricite-a-4., 검색일자: 2022.6.23.

449) 프랑스 정부, "Les loyers plafonnés à 3,5% pendant un an," 2022.6.27.,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s-loyers-plafonnes-a-3-5-pendant-un-an, 검색일자: 2022.6.29.

450) 임대료 보조제도의 하나로 소유자와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임대료 상한 설정 및 임대료 조정 등의 제약을 받게 되며, 임대인에게 지원되는 형태로 임차인은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됨

다. 기타 이슈

□ 2022 프랑스 대선 후보자 명부 발표(2022.3.7.)[451]

○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서 현직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을 포함한 총 12명의 대선 후보들을 발표함

- 3월 28일부터 공식적인 대선운동이 개시되며, 4월 10일에 1차 투표, 4월 24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되었음

표 2-V-6 2022 프랑스 대선 후보 및 주요 공약

기호	후보명	소속정당	주요 공약
1	나탈리 아르토 (Nathalie ARTHAUD)	노동자투쟁 (Lutte ouvrière/극좌)	-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자 기반 공고화 (실업자 급여유지 등)
2	파비앙 루셀 (Fabien ROUSSEL)	공산당 (PCF/급진좌)	- 주 32시간 근무제 - 최저임금 인상 - 소득세 인상
3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전진하는공화국 (LREM/중도)	- 소득세 및 생산세 인하 - 탈석유·석탄화 - 이민통합
4	쟝 라살 (Jean LASSALLE)	저항하자! (Résistons!/기타)	- 최저임금 인상 - 부유세 복원 - 시민발의안 국민투표제(RIC) 도입
5	마린 르 펜 (Marine LE PEN)	국민연합(RN/극우)	- 최저임금 인상 - 에너지제품 부가세 인하 - 결혼과 귀화에 의한 자동시민권 폐지
6	에릭 제무르 (Éric ZEMMOUR)	재정복! (Reconquête!/극우)	- 반이민·반이슬람화 - 생산세 등 세금 인하 - 프랑스 재산업화 정책
7	쟝-뤽 멜랑숑 (Jean-Luc MÉLENCHON)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LFI/급진좌)	- 최저임금 인상 - 사회비상법(ocial emergency law) 제정 (기본 필수품의 가격 동결)

451) 프랑스 헌법위원회, "Élection présidentielle: Laurent Fabius rend publique la liste des candidats," 2022.3.7.,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actualites/election-presidentielle-laurent-fabius-rend-publique-la-liste-des-candidats 검색일자: 2022.3.15.

표 2-V-6 의 계속

기호	후보명	소속정당	주요 공약
8	안 이달고 (Anne HIDALGO)	사회당 (PS/온건좌)	-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격차 해소 - 기후 및 생물 다양성 연대세 신설 - 보편적 실업 보험 등 고용보험 개혁
9	야닉 쟈도 (Yannick JADOT)	유럽생태녹색당 (EELV/좌)	- 부유세 복원 - 경제재건을 위해 매년 500억유로 투자 (인프라, 주택, 교통 등)
10	발레리 페크레스 (Valérie PÉCRESSE)	공화당 (LR/우)	- 최저임금 인상 및 연금시스템 개혁 - 유럽 국경에서의 탄소세 부과 - 원자로 폐쇄
11	필립 푸투 (Philippe POUTOU)	반자본주의신당 (NPA/극좌)	- 해고금지 및 주 4일 최대 32시간 근무 - 이동과 정착의 자유(인종차별 반대)
12	니콜라 뒤퐁-에냥 (Nicolas DUPONT-AIGNAN)	약진하는 프랑스 (DLF/극우)	- 최저임금 인상 - 국경통제 등 이민통제 - 시민발의안 국민투표제(RIC) 도입

자료: 각 후보의 대표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2 프랑스 대선 1차 및 2차 투표결과 발표(2022.4.11.[452]; 2022.4.24.)[453]

○ 2022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결과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과 마린 르 펜이 2차 투표의 최종 후보로 참여하게 됨

* 1차 투표에서 선출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과반수의 득표수를 얻어야 하나 실패 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두 후보자가 2차 투표에 참여하게 됨

452) 프랑스 정부포털, "Élection présidentielle: les résultats du premier tour," 2022.4.11.,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election-presidentielle-les-resultats-du-premier-tour 검색일자: 2022.4.12.

453) 프랑스 내무부, "Élection présidentielle 2022: retrouvez tous les résultats," 2022.4.24.,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actu-du-ministere/election-presidentielle-2022-retrouvez-tous-les-resultats 검색일자: 2022.4.25.

표 2-V-7 2022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결과

(단위: %)

순위	후보명	소속정당	득표율
1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전진하는 공화국(LREM/중도)	27.84
2	마린 르 펜 (Marine LE PEN)	국민연합(RN/극우)	23.15
3	쟝-뤽 멜랑숑 (Jean-Luc MÉLENCHON)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급진좌)	21.95
4	에릭 제무르 (Éric ZEMMOUR)	재정복!(Reconquête!/극우)	7.07
5	발레리 페크레스 (Valérie PÉCRESSE)	공화당(LR/우)	4.78
6	야닉 쟈도 (Yannick JADOT)	유럽생태녹색당(EELV/좌)	4.63
7	쟝 라살 (Jean LASSALLE)	저항하자!(Résistons!/기타)	3.13
8	파비앙 루셀 (Fabien ROUSSEL)	공산당(PCF/급진좌)	2.28
9	니콜라 뒤퐁-에냥 (Nicolas DUPONT-AIGNAN)	약진하는 프랑스(DLF/극우)	2.06
10	안 이달고 (Anne HIDALGO)	사회당(PS/온건좌)	1.75
11	필립 푸투 (Philippe POUTOU)	반자본주의신당(NPA/극좌)	0.77
12	나탈리 아르토 (Nathalie ARTHAUD)	노동자투쟁(Lutte ouvrière/극좌)	0.56

자료: 프랑스 정부포털, "Élection présidentielle: les résultats du premier tour," 2022.4.11.

○ 4월 24일에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이 마린 르 펜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연임에 성공하였음

- 에마뉘엘 마크롱의 득표율은 58.54%, 마린 르 펜의 득표율은 41.46%로 두 후보의 격차는 약 17%p임(2017년 대선 득표율 격차는 약 32%p)
- 내무부가 발표한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율은 63.23%로 4월 10일 1차 투표의 65.0%보다 1.77%p 저조하였음

□ 프랑스 정부, 기후변화 및 폭염 대응 조치 발표(2022.6.14.)[454]

○ 장관회의를 통해 5억유로를 할당하여 전례 없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 및 구조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454) 프랑스 정부, "Compte rendu du Conseil des ministres du 14 juin 2022," 2022.6.14., https://www.gouvernement.fr/conseil-des-ministres/2022-06-14#la-reponse-du-gouvernement-a-la-vague-de-chaleur 검색일자: 2022.6.21.

- 도심 내 캐노피 설치, 녹지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기관 및 지역당국과 함께 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환경, 위험, 이동성, 계획에 대한 연구 및 전문 지식 센터(Climat and Territories de demain: CEREMA), 환경 및 에너지 관리 기관(Agenda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ADEME) 그리고 지방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 및 위탁 기금(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함

    * Caisse des depots et consignations는 1816년에 설립된 프랑스 공공부문 금융기관으로, 의회가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일부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정책 등을 수행함

- 빈번한 폭염은 기후변화의 영향 중 하나로, 향후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율을 2배로 높이는 등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3.8%, 2017년 대비 9.6% 감소함

□ 프랑스 총선결과 발표(2022.6.19.)[455]

○ 2022년 프랑스 총선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연합 앙상블이 577석 중 245석을 얻으며 전체 하원 의석의 과반 확보에 실패함

- 2017년 총선에서 마크롱 지지 세력이 총 350석을 획득하며 약 60%를 차지하였지만, 2022년 총선에서는 105석이 감소함
- 좌파연합인 뉘프는 135석, 대선 경쟁자였던 마린 르 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89석, 공화당 61석 등을 획득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을 20년 만에 맞이함
  -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좌파연합 등 야권은 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어 프랑스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 약화 우려가 있음

455) 프랑스 내무부, "Second tour d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22 - Résultats et taux de participation," 2022.6.19.,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actu-du-ministere/second-tour-des-elections-legislatives-2022-resultats-et-taux-de 검색일자: 2022.6.22.

라. 통계

□ 2021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2.1.28.)[456]

○ 2021년 4분기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은 7.0%로 나타남(2020년 -8.0%)

-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2021년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4분기는 3분기 대비 다소 완만한 속도의 성장세를 보임
  - 4분기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재고투자(+0.4%), 국내수요(+0.5%), 총고정자본형성(+0.5%) 등 전분기 대비 더욱 균일하게 나타남
- 대외무역에서의 증가는 수출(Q3 1.7% → Q4 3.2%)보다 수입(Q3 0.8% → Q4 3.6%)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GDP 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남
- 2021년 프랑스의 GDP 성장률은 중앙은행 및 정부의 전망치를 상회하며 5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GDP 규모 기준으로는 위기 이전인 2019년 GDP 수준을 여전히 하회함(-1.6%)

표 2-Ⅴ-8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1]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1 Q1	2021 Q2	2021 Q3	2021 Q4	2020	2021
GDP 성장률		0.1	1.3	3.1	0.7	-8.0	7.0
가계소비		-0.2	1.3	5.6	0.4	-7.2	4.8
정부소비		-0.3	0.4	2.7	0.3	-3.2	6.2
총고정자본형성[2](GFCF)		0.2	2.5	0.1	0.5	-8.9	11.6
수출		0.4	2.0	1.7	3.2	-16.1	9.0
수입		1.8	1.9	0.8	3.6	-12.2	7.6
GDP 기여도 (%p)	국내수요[3]	-0.1	1.4	3.6	0.5	-6.7	6.8
	재고투자	0.7	-0.1	-0.7	0.4	-0.2	-0.1
	대외무역	-0.4	0.0	0.2	-0.2	-1.1	0.2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7% in Q4 2021. On average in 2021, it increased by 7.0% (after -8.0% in 2020)," 2022.1.28.

456)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7% in Q4 2021. On average in 2021, it increased by 7.0% (after -8.0% in 2020)," 2022.1.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044034 검색일자: 2022.2.15.

□ 프랑스 통계청, 2021년 4분기 실업률 발표(2022.2.18.)[457]

○ 2021년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4%로 전분기 대비 0.6%p, 전년 동기 대비 0.7%p 하락함

- 2021년 4분기 실업률은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0.8%p 감소한 수치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분기 동안 실업자는 18만 9천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15~24세의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함(-3.6%p)
- 4분기 실업률의 감소폭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고, 장기실업률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함

표 2-V-9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천명)

구분	2021 Q3	2021 Q4	증감(%p)		2021 Q4 실업자 수(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8.0**	**7.4**	**-0.6**	**-0.7**	**2,239**
15~24세	19.5	15.9	-3.6	-4.0	490
25~49세	7.1	6.8	-0.3	-0.6	1,205
50세 이상	5.8	5.8	0.0	0.0	543
남자	7.9	7.5	-0.4	-0.7	**1,167**
15~24세	19.3	16.9	-2.4	-2.1	278
25~49세	6.9	6.7	-0.2	-0.9	603
50세 이상	6.0	6.0	0.0	0.2	286
여자	8.1	7.3	-0.8	-0.6	**1,072**
15~24세	19.6	14.7	-4.9	-6.3	212
25~49세	7.4	6.9	-0.5	-0.2	602
50세 이상	5.7	5.5	-0.2	-0.2	257
장기실업률	2.4	2.2	-0.2	0.1	713
고용률	**67.6**	**67.8**	**0.2**	**1.3**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 Q4 2021,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6 points to 7.4%," 2022.2.18.

457) 프랑스 통계청, "In Q4 2021,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6 points to 7.4%," 2022.2.1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052470 검색일자: 2022.2.21.

□ 프랑스 2021년 무역적자 최고치 기록(2022.2.18.)[458]

○ 프랑스 관세청은 2021년 무역적자 규모가 847억유로라고 밝혔으며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11년도의 750억유로를 크게 상회함

- 2021년도 무역적자는 2020년의 652억유로 대비 약 200억유로 증가하였음
  • 2021년 수입은 5,856억유로 수출은 5,009억유로
- 서비스 수지는 362억유로 흑자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 리스테르(Franck Riester) 대외통상·투자유치장관은 2021년의 적자폭 증가가 수출보다는 수입반등에 기인하며 무역과 경제활동이 빠르게 재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경제회복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로 원자재 구매 및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특히, 에너지 수입(2020년 252억유로 → 2021년 431억유로)이 크게 증가함
  • 2021년 12월에는 전력수입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에너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짐

□ 프랑스 통계청, 2021년 프랑스 일반정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발표(2022.3.29.)[459]

○ 2021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0년 8.9%에서 2.4%p 감소한 6.5%(1,609억유로)로 나타남

- 2021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지만 경제활동의 재개로 재정수입이 8.4% 증가하여 재정적자가 감소함

○ 2021년 일반정부의 GDP 대비 총채무 비율은 2020년 114.6%에서 1.7%p 감소한 112.9%로 나타남

- GDP 대비 총채무 비율은 GDP의 회복으로 감소하였으나 총부채는 전년 대비 1,649억유로 증가한 2조 8,131억유로를 기록함

458) 프랑스 관세청, "Résultats du commerce extérieur de la France-Décembre 2021 et bilan 2021," 2022.2.8., https://www.douane.gouv.fr/actualites/resultats-du-commerce-exterieur-de-la-france-decembre-2021-et-bilan-2021 검색일자: 2022.2.22.

459) 프랑스 통계청, "En 2021, le déficit public s'élève à 6,5% du PIB, la dette notifiée à 112,9% du PIB," 2022.3.29.,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324844 검색일자: 2022.4.11.

○ 일반 정부의 적자 및 채무 감소는 프랑스 회복 계획에 따른 유럽연합의 기금조달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 유럽연합의 프랑스 회복계획 재정지원(약 144억유로로 추산)이 포함되는 기타수입이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함

표 2-V-10 프랑스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지(Déficit public)	-2.3	-3.1	-8.9	-6.5
재정지출(Dépenses publiques)	55.6	55.4	61.4	59.2
재정수입(Recettes publiques)	53.4	52.3	52.5	52.8
일반정부 총채무(Dette publique (brute))	97.8	97.4	114.6	112.9
일반정부 순채무(Dette publique nette)[1]	89.2	88.9	102.1	101.2
조세부담률(Prélèvements obligatoires)[2]	44.7	43.8	44.4	44.5

주: 1) 순채무는 총채무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한 금액
2) GDP 대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을 포괄하는 과세 부담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 81, 2022.3.29.

표 2-V-11 지출과 수입 항목별 내역

(단위: 십억유로, %)

구 분	2020	2021	증감률(%)
재정지출(Total des dépenses)	**1,418.6**	**1,475.7**	**4.0**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434.0	450.0	3.7
- 중간 소비(dont conso. intermédiaires)	117.9	125.1	6.1
- 인건비(dont rémunérations)	304.2	312.4	2.7
채무비용(Intérêts)	33.1	38.1	15
사회보장수당(Prestations sociales)	664.1	672.1	1.2
이전지출과 보조금(Autres transferts et subventions)	198.0	222.9	12.6
비금융 자산 취득(Acquisition nette d'actifs non financiers)	89.4	92.6	3.6
재정수입(Total des recettes)	**1,231.1**	**1,314.8**	**8.4**
판매 및 기타 수입(Ventes et autres recettes)	88.0	94.4	7.3
부동산수입(Revenus de la propriété)	11.4	14.8	29.3
조세수입(Impôts)	709.4	757.1	6.7
- 재산세(dont impôts courants sur le revenu et le patrimoine)	304.3	323.2	6.2
- 제품생산세(dont impôts sur les produits et la production)	930.1	415.3	6.5
사회보장부담금(Cotisations sociales effectives)	348.3	374.3	7.4
기타 수입(Autres recettes)	66.7	81.7	22.5
총재정수지(Besoin de financement)	**-205.5**	**-160.9**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INFORMATIONS RAPIDES No 81, 2022.3.29.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2.4.29.)[460]

○ 내수 약세의 영향으로 프랑스의 1분기 GDP는 제로 성장을 기록함

- 전분기 대비 가계소비가 1.3% 감소하였으며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의 감소(-5.4%)가 두드러짐
- 정보통신서비스 및 장비 부문의 주도로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함(0.2%)
- 수출과 수입이 각각 1.5%, 1.1% 증가함에 따라 대외무역이 소폭 상승(0.1%)하여 GDP 성장에 기여함

표 2-Ⅴ-12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1]

(단위: 전분기 대비 %, %p)

구분		2021 Q1	2021 Q2	2021 Q3	2021 Q4	2020	2021
GDP 성장률		1.5	3.0	0.8	0.0	7.0	7.0
가계소비		1.5	5.1	0.6	-1.3	4.8	4.8
정부소비		0.6	2.7	0.4	0.0	6.4	6.2
총고정자본형성[2](GFCF)		2.2	0.0	0.3	0.2	11.5	11.6
수출		2.1	2.6	3.5	1.5	9.8	9.0
수입		2.1	1.1	3.2	1.1	7.9	7.6
GDP 기여도 (%p)	국내수요[3]	1.5	3.3	0.5	-0.6	6.8	6.8
	재고투자	0.0	-0.7	0.3	0.4	-0.2	-0.1
	대외무역	0.0	0.4	0.0	0.1	0.4	0.2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stagnated in Q1 2022(0.0%)," 2022.4.29.

460) 프랑스 통계청(INSEE), "GDP stagnated in Q1 2022(0.0%)," 2022.4.2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39900 검색일자: 2022.5.17.

□ 2022년 1분기 예산 집행결과 발표(2022.5.3)[461]

○ (재정수지) 2022년 1분기 재정적자는 383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17억유로 감소

- 총재정지출은 전년 동기 1,122억유로에서 45억유로 감소한 1,077억유로이며, 일반예산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2억유로 감소한 928억유로로 집계됨
  -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감소함
-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66억유로 증가한 799억유로로 집계됨
  - 세외수입과 협력기금을 제외한 순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0억유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개선에 기인함

표 2-V-13 2021년 1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 분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증감률(%)
재정지출	112,231	107,763	-4.0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	96,117	92,890	-3.4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994	1,013	1.9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l)	34,068	34,450	1.1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14,643	16,486	12.6
채무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617	2,165	251.1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4,374	4,405	0.7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41,114	34,131	-17.0
금융활동(Dépenses d'opérations financières)	307	241	-21.6
지방정부 이전금 및 유럽연합 분담금	8,571	6,557	-23.5
재정수입	63,375	79,955	26.2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net)	15,138	17,439	16.7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net)	9,009	11,109	15.2
에너지제품소비세(TICPE)	4,204	4,331	23.3
부가가치세(TVA)	22,139	26,038	3.0
기타세수(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9,418	10,991	17.6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463	9,336	16.7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1,004	711	-29.2
일반회계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eneral)	-48,857	-27,808	-43.1
특별회계 재정수지(Solde des comptes speciaux)	-11,214	-10,526	-6.1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d'execution)	-60,070	-38,334	-36.2

자료: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mars 2022

46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etaire au 31 mars 2022," 2022.5.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publications-de-la-direction/situation-mensuelle-du-budget-de-letat-smb/smb-2022, 검색일자: 2022.5.19.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1분기 실업률 발표(2022.5.17.)[462]

○ 2022년 1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7.3%로 전분기 대비 0.1%p, 전년 동기 대비 0.8%p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임

- 2022년 1분기 실업률은 위기 이전인 2019년 말보다 0.9%p 감소하여 또 다시 2008년 이후 최저 기록을 갱신함
- 전분기 대비 실업자는 1만 8천명 감소하였으며, 25~49세 및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실업률이 소폭 하락함
- 남성의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7.3%로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함
- 15~64세 고용률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하여 68.0%를 기록하면서 통계청이 측정을 시작한 1975년 이래 최고 수준을 달성함

표 2-V-14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천명)

구분	2021 Q4	2022 Q1	증감(%p)		2022 Q1 실업자 수(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4	7.3	-0.1	-0.8	2,232
15~24세	16.0	16.3	0.3	-4.5	527
25~49세	6.8	6.6	-0.2	-0.8	1,176
50세 이상	5.7	5.6	-0.1	0.1	530
남자	7.5	7.3	-0.2	-1.1	1,144
15~24세	17.0	16.9	-0.1	-3.5	288
25~49세	6.7	6.5	-0.2	-1.0	589
50세 이상	5.9	5.5	-0.4	-0.6	266
여자	7.3	7.3	0.0	-0.5	1,089
15~24세	14.9	15.7	0.8	-5.5	238
25~49세	6.9	6.7	-0.2	-0.6	586
50세 이상	5.5	5.6	0.1	0.7	264
장기실업률	2.2	2.2	0.0	-0.3	684
고용률	67.8	68.0	0.2	1.3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2022.5.17.

462) 프랑스 통계청, "In Q1 2022,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3%," 2022.5.17.,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45457, 검색일자: 2022.5.25.

□ 프랑스 통계청, 2022년 5월 물가지수 발표(2022.6.15.)[463]

○ 2022년 5월 프랑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여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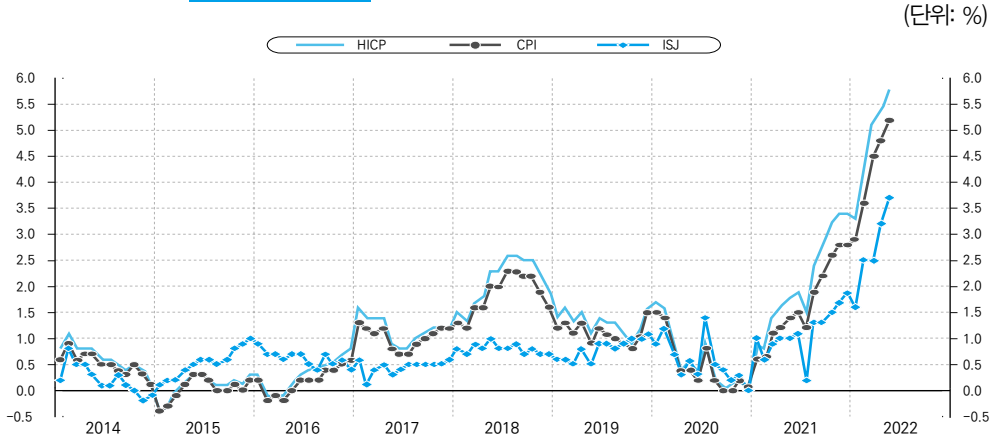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지가격(+28%) 인상뿐만 아니라 식품(+4.2%), 서비스(+3.2%) 등 모든 부문의 상승률이 증가함

○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ICP)[464]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하면서, 1997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프랑스 HICP는 한 달 사이 0.8% 상승하고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5월 근원인플레이션(Inflation sous-jacente: ISJ)[465]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함

그림 2-V-3 CPI, ISJ, HICP 전년 동월 대비 변화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 "En mai 2022, les prix à la consommation augmentent de 0.7% sur un mois et de 5.2% sur un an," 2022.6.15.

463) 프랑스 통계청(INSEE), "En mai 2022, les prix à la consommation augmentent de 0.7% sur un mois et de 5.2% sur un an," 2022.6.15.,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6455415#graphique-ipc-g1-en, 검색일자: 2022.6.20.

464)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HICP는 유로를 통화로 채택한 회원국의 물가지수의 가중 평균임. HICP는 농촌 소비자를 표본에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CPI와 구별됨

465)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 변동의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가뭄, 장마와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국제유가 변동과 같은 일시적 충격에 의한 가격 변동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농산물과 석유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물가지수의 변화

Ⅵ 영국(FY2022-23: 2022.4.~2023.3.)*

표 2-Ⅵ-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2.1.7.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조금 지원
2022.2.2.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Levelling Up' 백서 발표
2022.2.3.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 계획 발표
2022.2.22.	FY2021-22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2022.3.23.	'Spring Statement 2022' 발표
2022.3.23.	예산책임청(OBR), 2022년 3월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2.4.6.	에너지 안보 전략(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 발표
2022.5.13.	FY2022-23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 발표
2022.5.26.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 지원 패키지 발표
2022.5.25.	예산책임청(OBR), '2022년 복지 지출 보고서(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발표
2022.6.6.	FY2019-20 결산보고서 발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한혜란 선임연구원(hrha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Spring Statement 2022' 발표(2022.3.23.)[466]

○ (개요) 3월 23일, 리시 수낙 재무부 장관은 '2022년 Spring Statement'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책임청(OBR)은 '3월 경제·재정전망'을 제시함

* 통상 영국의 예산안은 가을에 발표되며, 다음 해 봄에는 재무부 장관이 경제 현황과 예산안 발표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예산책임청의 최신 경제·재정전망을 반영하는 'Spring Statement'를 발표함

○ (경제전망) 경제 회복 속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러시아 침공의 영향을 고려해 2022년 영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3.8%로 전망(<표 2-Ⅵ-2> 참고)

- (경제성장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과 소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21년 10월 전망치(6.0%) 대비 하향 조정
- (물가) CPI 인플레이션이 2022년 4분기에 8.7%까지 상승해 최근 40여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연간 상승률은 2022년 7.4%, 2023년 4.0%로 예상됨
  - 명목 임금 증가율을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4월에 시작되는 순 조세 증가의 영향으로 FY2022-23에 인당 실질 가처분 가계소득이 2.2% 감소(통계 시작 이후 단일 회계연도 기준 최대 하락)
- (노동시장)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제도 종료 이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반영해 2022년 실업률을 4%로 직전 전망(2021.10.) 대비 하향 조정

466)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tax cuts to support families with cost of living," 2022.3.2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tax-cuts-to-support-families-with-cost-of-living, 검색일자: 2022.3.24.
HM Treasury, *Spring Statement 2022*, 2022.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statement-2022-documents/spring-statement-2022-html, 검색일자: 2022.3.24.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https://obr.uk/docs/dlm_uploads/CCS0222366764-001_OBR-EFO-March-2022_Web-Accessible-2.pdf, 검색일자: 2022.3.24.

표 2-Ⅵ-2 영국 경제전망

(단위: %, %p)

구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실질GDP 성장률	-9.4	7.5	3.8	1.8	2.1	1.8	1.7
(2021년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5	1.0	-2.2	-0.3	0.8	0.2	0.0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0.9	2.6	7.4	4.0	1.5	1.9	2.0
실업률(LFS)	4.6	4.5	4.0	4.2	4.1	4.1	4.1

자료: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March 2022*, 2022.3., Table 1.1; Table 2.7.

○ (재정전망) 팬데믹 대응 이후 재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FY2021-22에 직전 전망(2021.10.)보다 차입이 감소할 전망이나, 정부 채무비용 부담과 한시적 지원 조치 등으로 FY2022-23에는 직전 전망보다 차입이 다소 상승할 전망(<표 2-Ⅵ-3> 참고)

- (수입 및 지출) FY2022-23에 공공부문 경상수입은 9,875억파운드, 총관리지출은 1조 870억파운드로 직전 전망(2021.10.) 대비 모두 상향 조정함
  -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과 채무이자 지출 증가를 반영
- (재정수지) 채무이자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FY2022-23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직전 전망(2021.10.) 대비 161억파운드 상향 조정되었고 GDP 대비 비율은 3.9%를 기록할 전망
- (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21-22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여 FY2026-27에 약 83.1%로 떨어질 전망

표 2-Ⅵ-3 영국 재정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공공부문 경상수입(금액)	793.0	899.5	987.5	1,050	1,090	1,131	1,175
(GDP 대비 비율)	37.0	38.0	39.3	40.1	40.0	40.0	40.1
총관리지출(금액)	1,115	1,027	1,087	1,100	1,127	1,166	1,206
(GDP 대비 비율)	52.1	43.4	43.2	42.0	41.3	41.2	41.1
공공부문 순차입(GDP 대비 비율)	15.0	5.4	3.9	1.9	1.3	1.2	1.1
공공부문 순채무(GDP 대비 비율)	94.0	95.6	95.5	94.1	91.2	85.8	83.1

자료: 예산책임청(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ch 2022*, 2022.3., Table 1.3.

○ (주요 정책)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심화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조세 개혁 및 감면을 위한 '조세 계획(Tax Plan)'을 포함해 가계 및 기업 지원 정책을 추가 발표

- (가계 지원)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 러시아 침공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 지원
  - 2022년 7월부터 국민보험기여금 면제 기준 소득 인상(9,880 → 1만 2,570 파운드)
    * 국민보험기여금 인상(의료 및 사회적 돌봄 분담금 포함)은 4월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
  - 휘발유, 경유에 대한 연료세를 1리터당 5펜스 한시적 인하(3월 23일부터 12개월)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저감 자재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 영세율 추진
  - FY2022-23에 취약계층의 식품, 유틸리티 등 지원을 위한 가계 지원 자금(Household Support Fund)을 추가 5억파운드 배정
- (기업 지원)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추가 기업 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기업의 투자, 혁신, 훈련 등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 2022년 4월부터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기여금에 대한 고용공제(Employment Allowance) 인상(4천 → 5천파운드)
  - 2022년 4월부터 녹색 기술(태양광 패널, 히트 펌프 등)에 대한 비주거 재산세(business rates) 면제
  - 데이터 저장, 순수 수학 연구 등 R&D 투자 공제 범위 확대(2023년 4월) 등
- (공정한 성장 수익 공유) 2024년 4월에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20% → 19%) 추진, 조세 시스템 정비·개선 추진 등

□ 영국 재무부, FY2022-23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Main Supply Estimates) 발표(2022.5.13.)[467]

* 영국은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기 위한 세출예산안을 매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함

467)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Main Supply Estimates*, 2022.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74612/E02741278_HC_53_CGSE_Main_Supply_Estimates_22-23_Web_Accessible.pdf, 검색일자: 2022.5.17.

○ FY2022-23 중앙정부 본세출예산안의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금액은 8,818억파운드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3,076억파운드 감소(<표 2-Ⅵ-4> 참고)

* FY2020~21과 FY2021-22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정부지출 증가가 발생

- 부처별 지출한도(DEL)[468]는 4,443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469]은 3,55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각각 443억파운드, 2,539파운드 감소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470]은 82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94억파운드 감소

○ FY2022-23 총 순현금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은 7,025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543억파운드 감소

표 2-Ⅵ-4 FY2022-23 본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20-21 실적치	2021-22 잠정치	2022-23 계획
부처별 지출한도(DEL)	492,271	488,568	444,264
자원 DEL	407,363	400,085	345,696
자본 DEL	84,908	88,483	98,569
연간관리지출(AME)	357,371	608,947	355,006
자원 AME	321,946	578,139	317,633
자본 AME	35,425	30,808	37,373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849,642	1,097,516	799,270
총 비예산 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87,095	91,944	82,562
총지출 (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936,736	1,189,459	881,832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73,046	-432,666	-179,306
총 순현금소요액 (Total Net Cash Requirement)	763,690	756,793	702,526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2-23*: Main Supply Estimates, 2022. 5. Table 1; Table 2.

468)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469)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470)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나. 추경

□ 영국 재무부, FY2021-22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21-22) 발표(2022. 2. 22.)[471]

* 영국은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통상 매년 2월경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을 편성해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봄에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권한을 수정함

○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FY2021-22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본세출예산 대비 약 3,200억파운드 증액한 1조 1,895억파운드로 편성(의결(voted) 예산 기준)(<표 2-Ⅵ-5> 참고)

- 추경예산안의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4,886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은 6,089억파운드로 본세출예산 대비 각각 123억파운드, 2,914억파운드 증가함
-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은 919억파운드로 본세출예산 대비 164억파운드 증액
- FY2021-22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472]은 7,568억파운드로 본세출예산 대비 215억파운드 증액

○ (주요 증감 내역) 코로나19 관련 NHS 지원, 백신 공급, 진단 및 추적 등 예산 증액, 코로나19 기업 지원 보조금 일부 증액 및 미사용 보조금 감액, 전망 변경을 반영한 일부 에너지 정책 예산 증액, EU 탈퇴 분담금 재평가 반영 증액 등 포함

471)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1-22- Supplementary Estimates*, 2022. 2. 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6313/E02711189_HC_1152_Supply_Estimates_21-22_Text_Elay.pdf, 검색일자: 2022. 2. 23.

472)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를 의미

표 2-Ⅵ-5 FY2021-2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의결 예산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FY2021-22 현재 계획 (a)	FY2021-22 조정 규모 (b)	FY2021-22 수정 계획 (a)+(b)
부처별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DEL)	476,274	12,294	488,568
연간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317,593	291,354	608,947
총 순예산(Total Net Budget)	793,868	303,648	1,097,516
총 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	75,571	16,373	91,944
총 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869,439	320,021	1,189,459
현금주의 조정(Resource to cash adjustments)	-134,102	-298,564	-432,666
총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735,337	21,456	756,793

자료: HM Treasury,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21-22-Supplementary Estimates*, 2022.2.22., Table 1.

다. 결산

□ 영국 재무부, FY2019-20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발표(2022.6.6.)[473]

※ Whole of Government Accounts(WGA)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1만개 이상 기관에 대한 통합 감사 회계보고서임

○ (주요 이슈 반영) EU 탈퇴로 인한 재정적 영향과 2020년 3월 말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비용의 일부도 FY2019-20 결산보고서에 인식되어 추가 설명이 제시됨

- EU와 영국 간 관계에서 EU 분담금, 탈퇴 협정에 따른 EIB 납입 자본금 상환, EU를 대신해 영국이 지급하는 보조금, 기타 우발부채 등 발생
- 코로나19 관련 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여 2020년 3월 말 전에 시행된 기업 지원 보조금, 보호 장비 구입 및 진단 관련 비용 등 일부 비용만 FY2019-20에 반영됨

473)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80609/Whole_of_Government_Accounts_2019-20.pdf, 검색일자: 2022.6.8.

○ (당기 순지출) FY2018-19에는 15억파운드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FY2019-20에는 1,918억파운드의 당기 순지출을 기록(<표 2-Ⅵ-6> 참고)

- (공공서비스 순지출) FY2019-20에 수입과 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77억파운드, 669억파운드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순지출은 전년 대비 약 492억파운드 늘어난 1,054억파운드를 기록
  - 충당금 증가가 지출 증가를 주도했고 사회보장급여, 재화·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 등도 전년 대비 늘어난 반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약 204억파운드 감소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장기 부채 금융 비용은 전년도에 마이너스 비용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충당금 할인율 관련 정책 변경으로 FY2019-20에 660억파운드를 기록

표 2-Ⅵ-6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19-20	2018-19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918.7**	**851.8**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40.0	230.3
인건비(Staff costs)	235.3	255.7
재화/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23.6	206.5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62.2	58.8
감가상각 및 감손(Depreciation and impairment)	51.5	47.9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31.8	31.6
충당금 증가(Increase in provisions)	74.3	21.0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813.3**	**795.6**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696.7	685.7
기타수입(Other revenue)	116.6	109.9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105.4**	**56.2**
장기 부채 금융 비용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66.0	-56.6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 (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20.4	-1.1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474]	**191.8**	**-1.5**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6., p.94

474) 공공서비스에 대한 순지출에서 장기부채 금융비용, 금융자산·부채의 재평가 등을 반영하여 산출함. 연간 순지출이 마이너스(-)인 것은 당기 순이익(Net income for the year)을 의미함

○ (순부채) FY2019-20에 총자산과 총부채는 전년 대비 각각 397억파운드, 4,181억파운드 증가해 순부채가 전년 대비 3,784억파운드 늘어난 2조 8,342억 파운드를 기록(<표 2-Ⅵ-7> 참고)

- 공공부문 연금부채 추계의 기준 할인율 변경으로 인한 부채 증가, EU 관련 부채 신규 발생으로 인한 충당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부채 증가

표 2-Ⅵ-7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19-20	2018-19
총자산(Total assets)	**2,138.5**	**2,098.8**
유형고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13.3	1,268.0
기타 금융자산 (Other financial assets)	516.2	514.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Trade and other receivables)	182.0	190.3
기타 자산 (Other assets)	127.0	125.6
총부채(Total liabilities)	**4,972.7**	**4,554.6**
공공부문연금 (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2,189.5	1,893.9
정부 차입 (Government borrowings)	1,445.4	1,407.2
기타 금융부채 (Other financial liabilities)	761.9	750.2
충당금 (Provisions)	374.8	31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Trade and other payables)	201.1	191.9
순부채(Net liabilities)	**2,834.2**	**2,455.8**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6., pp.8~9; p.96.

02 정책적 이슈

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대응(2022년 상반기)

□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신규 보조금(Omicron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 지원(2022.1.7.)[475]

○ (개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잉글랜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7억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

- 동 보조금은 영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추가 지원 계획(약 10억파운드)의 일환임
- 정부가 1월 7일에 지방 당국(council)에 자금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은 지원금 신청·수급이 가능함

○ (지원 대상)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주거용 재산세(Business Rates)를 납부하는 사업장에서 주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잉글랜드 내 접객, 레저, 숙박 부문 기업

○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6천파운드의 보조금을 1회 지급

※ 기업의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쇄 시 접객부문 기업에 제공했던 현금 보조금(2021년 초 시행)과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

- 부동산 과세 표준 가액(2021년 12월 30일 기준)이 1만 5천파운드 이하 기업에 2,667파운드, 1만 5천~5만 1천파운드인 기업에 4천파운드, 5만 1천파운드 이상인 기업에 6천파운드 지급

475) HM Treasury 외, "Businesses most impacted by Omicron variant to benefit from over £700 million as government delivers funding to local authorities," Press release, 2022.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businesses-most-impacted-by-omicron-variant-to-benefit-from-over-700-million-as-government-delivers-funding-to-local-authorities, 검색일자: 2022.1.13.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Omicron Hospitality and Leisure Grant-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2022.1.1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46032/omicron-hospitality-and-leisure-grant-guidance-rev.pdf, 검색일자: 2022.1.13.

○ (지원 일정)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 2022년 3월 31일까지 지급

○ (기타) 접객, 레저 부문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는 기타 사업체도 정부가 지역 당국에 1억파운드 이상 배정한 '코로나19 제한 조치 관련 보조금(Additional Restrictions Grant)'을 신청할 수 있음

□ 영국 정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조치 발표(2022.1.2.)[476]

○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및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비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

- 공공부문에서 10%, 20%, 25%의 인력 부족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자원봉사자, 퇴직 교사 등 추가 인력을 확인하도록 요청

○ 정부는 이 외에도 인력 및 공급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백신접종자의 코로나 검사 2회 음성 시 자가격리 기간 단축(10일 → 7일 → 5일)
- 성인 사회적 돌봄 부문 인력 유지를 위해 4억 6,200만파운드 이상 투자
- 요양 시설 직원의 자가격리, 검사, 백신접종 비용 지원을 위한 '성인 사회적 돌봄 분야 감염 통제 기금'을 2022년 3월까지 연장 등
- 대형화물차 운전자 수 확대를 위한 면허 시험 간소화, 해외 간호사의 영국 내 등록 간소화 등

476) Cabinet Office, "Government takes action to mitigate workforce disruption," Press release, 2022.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akes-action-to-mitigate-workforce-disruption, 검색일자: 202.1.12.

참고 2-Ⅵ-1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 완화(2022년 상반기)

□ 잉글랜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플랜 B' 방역지침 완화(2022.1.19.)[477]

○ (기존 방역 지침) 영국 정부는 2021년 12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플랜 B'를 적용하여 방역 규제를 강화하였음

-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고, 나이트 클럽 및 대규모 행사장의 백신접종 확인서 의무화 등

○ (방역 규정 완화) 2022년 1월 19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수준 감소와 부스터 백신접종 상황을 고려해 잉글랜드의 '플랜 B' 방역 규제를 종료하기로 결정

- 정부의 재택근무 권고 종료(1월 19일부터)
-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권고 중단(1월 20일부터)
- 특정 시설 및 행사장의 백신접종 확인(NHS COVID Pass) 의무화 중단(자발적 활용 가능, 1월 27일부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단 혼잡한 밀폐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권장(1월 27일부터)

477)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M statement to the House of Commons on COVID-19: 19 January 2022," 2022.1.19.,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to-the-house-of-commons-on-covid-19-19-january-2022, 검색일자: 2022.1.20.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England to return to Plan A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booster programme," Press release, 2022.1.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gland-to-return-to-plan-a-following-the-success-of-the-booster-programme, 검색일자: 2022.1.20.

□ 보리스 존슨 총리,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 계획 발표(2022.2.21.)[478]

○ (배경) 정부는 오미크론 파동의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이 감소하고 감염과 중증 위험 간 연관성이 약화되었으며, 정부 개입을 통한 보호에서 백신·치료제를 통한 대응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면역 수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

○ (주요 내용) 2월 24일에 기존 코로나19 법적 제한 규정이 종료되며 향후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 지원금 제공도 중단 예정

- 확진자의 법적 자가격리 의무가 종료(2.24.)되며 4월 1일 전까지는 확진 시 자가격리가 권고되나 이후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
- 밀접 접촉 추적 중단(2.24.) 및 특정 장소에서의 NHS COVID Pass 사용 권고 종료(4.1.)
-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무료 검사 중단(4.1.), 단 고령층 및 고위험군 유증상자 등은 무료 검사 가능

  * FY2021-22의 코로나19 진단 및 추적 프로그램 관련 비용은 157억파운드 수준

- 저소득층 자가격리 지원금과 약품 배달 서비스 제공 중단(2.24.), 코로나19 법정 병가수당 중단(3.24) 등

○ 이 외에도 정부는 75세 이상 성인, 요양원 거주자,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상 4차 부스터 백신 제공(올해 봄), 감시 및 비상 계획을 통한 신규 변이 바이러스 대응, 생명과학 투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으로부터 혁신과 기회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

478)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rime Minister sets out plan for living with COVID," 2022.2.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plan-for-living-with-covid, 검색일자: 2022.2.23.
HM Government, "COVID-19 RESPONSE: LIVING WITH COVID-19," 202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6229/COVID-19_Response_-_Living_with_COVID-19.pdf, 검색일자: 2022.2.23.

나.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가계 지원 정책

※ 영국 재무부는 2022년 2월, 3월(Spring Statement), 5월에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발표함

표 2-VI-8 영국 재무부의 주요 가계 지원 조치 발표(2022년 상반기)

일시	주요 지원	비고
2022.2.3.	에너지 요금 선할인, 카운슬세 환급 등	-
2022.3.23.	국가보험기여금 면제 기준소득 인상, 연료세 인하, 에너지 저감 자재의 VAT 감면 확대, 취약가구 지원 자금 증액 등	Spring Statement에 포함된 정책임
2022.5.26.	복지급여, 장애급여, 연금 수급자 대상 보조금, 에너지 요금 할인 확대, 취약가구 지원 자금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영국 재무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 계획 발표(2022. 2. 3.)[479]

○ (배경) 지난 1년간 약 4배로 급등한 글로벌 가스가격을 고려해 에너지 규제기관인 Ofgem이 4월 1일부터 일반 가정의 에너지 요금 상한을 693파운드(54%) 인상(연간 1,277 → 1,971파운드)[480]

* 에너지 요금 상한은 에너지 공급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에너지가격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해 연 2회 업데이트됨

○ (주요 지원) 에너지 요금 상한 상향 조정 이후 정부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350파운드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에너지 요금 선할인(Energy Bills Rebate)) 2022년 10월부터 에너지 요금

479) HM Treasury, "Millions to receive £350 boost to help with rising energy costs," Press release, 2022. 2. 3.,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to-receive-350-boost-to-help-with-rising-energy-costs, 검색일자: 2022. 2. 14.
HM Treasury, "Government support for energy bills and the cost of living - factsheets," 2022. 2.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support-for-energy-bills-and-the-cost-of-living-factsheets, 검색일자: 2022. 2. 14.

480) Ofgem, "Price cap to increase by £693 from April," Press release, 2022. 2. 3., https://www.ofgem.gov.uk/publications/price-cap-increase-ps693-april, 검색일자: 2022. 2. 14.

에서 200파운드를 할인

- (지원 대상) 약 2,800만 가구 대상
- (지원금액) 가구당 200파운드의 선할인 제공(FY2022-23에 총 91억파운드 규모)
- (지원방식) 에너지 요금 선 할인 후 이를 향후 5년 동안 40파운드씩 균등 분할하여 자동 상환

  * 세계 가스 도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2023년부터 환수할 것으로 예상

- (카운슬세 환급(Council Tax rebate)) 2022년 4월부터 잉글랜드 내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150파운드의 카운슬세[481]를 할인
  - (지원 대상) 카운슬세 부과 구간 A~D에 해당하는 가구(전체 가구의 약 80%)
  - (지원방식) 지방당국이 추후 상환할 필요가 없는 세금 환급을 제공
  - 정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에 비해 저소득 가구를 더욱 집중 지원하고 10억파운드 이상 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
- 이 외에도 정부는 카운슬세 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카운슬세 부과 구간 E~H에 해당하는 취약계층과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해 지방 당국에 재량적 지원 자금(1억 4,400만파운드)도 제공

□ 영국 재무부의 'Spring Statement 2022(2022.3.23.)'에 포함된 가계 지원정책은 '1. 예산 및 결산' 의 '가. 예산' 부분을 참조

□ 영국 재무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패키지 발표(2022.5.26.)[482]

481) 카운슬세(Council Tax)는 주택의 자산 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수를 바탕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거주하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 구간(A~H)에 따라 차등 세율로 부과됨

482) HM Treasury, "Millions of most vulnerable households will receive £1,200 of help with cost of living," press release, 2022.5.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llions-of-most-vulnerable-households-will-receive-1200-of-help-with-cost-of-living, 검색일자: 2022.6.7.
HM Treasury, "Cost of living support factsheet," 2022.5.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cost-of-living-support-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6.7.

○ (배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

○ (지원규모) 이번 추가 지원 패키지의 규모는 총 153억파운드이며 기존 발표된 정책을 포함한 생활비 지원 정책 규모는 올해 총 370억파운드에 이를 전망

○ (지원내용) 영국 전역에서 약 800만 취약가구가 올해 최소 1,200파운드 이상의 지원(기존 카운슬세 할인 포함)을 받게 되며 보편적 에너지 요금 할인 금액도 400파운드로 증액하고 종전 상환 요건을 폐지(<표 2-Ⅵ-9> 참고)

- 또한 지방당국이 제공하는 취약가구 지원 자금(Household Support Fund)[483]을 추가로 5억파운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약 6개월 연장함

표 2-Ⅵ-9 생활비 지원 계획의 주요 내용

(단위: 파운드)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시기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484] 수급자(800만가구 이상)	650파운드 보조금 (£326(1차) + £324(2차))	54억	1차 7월, 2차 가을
동계 연료 보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800만가구 이상)	기존 동계 연료보조금에 추가 300파운드 보조금	25억	11월 또는 12월
장애급여 수급자(600만명)	150파운드 추가 보조금	9억	9월
에너지 요금 보편적 지원	요금 할인 최대 400파운드 (당초 계획 대비 2배), 상환 요건 폐지	60억	10월부터 6개월 기간
식료품, 에너지, 수도 요금 인상으로 추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Household Support Fund에 추가 자금지원, 기간 연장 (지방당국의 지원 보전)	추가 5억 (총15억)	6개월 연장 (기한: 10월 → 2023년 3월)

자료: 영국 재무부의 보도자료(HM Treasury, "Millions of most vulnerable households will receive £1,200 of help with cost of living," press release, 2022.5.26.)를 토대로 표를 작성

○ (소득분포별 영향) 전체 지원의 약 3/4는 취약가구에 전달될 전망이며 소득분표별 영향 분석 결과, 발표된 조치들은 상당히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남([그림 2-Ⅵ-1], [그림 2-Ⅵ-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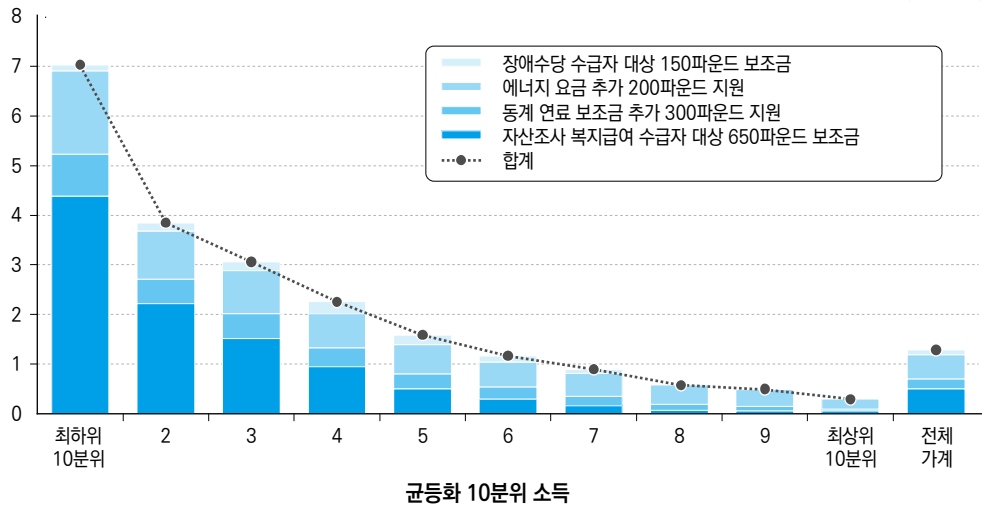
HM Treasury, "Energy Profits Levy Factsheet," 2022.5.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energy-profits-levy-factsheet-26-may-2022, 검색일자: 2022.6.7.

483) 지방당국이 취약가구에 필요한 식품, 에너지 요금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금

484)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소득 기반 구직급여, 소득 기반 실업 급여, 근로세액공제 등

그림 2-Ⅵ-1 5월 지원 조치가 FY2022-23에 소득분위별 가계에 미치는 영향(소득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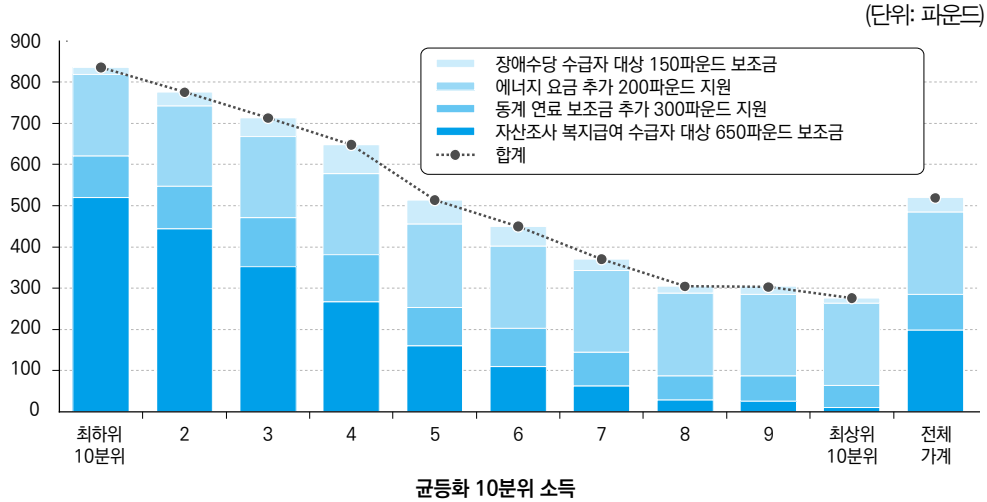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영국 재무부, "Illust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y 2022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and February 2022 Energy Support package on households," 2022.5., Chart 1.A.

그림 2-Ⅵ-2 5월 지원 조치가 FY2022-23에 소득분위별 가계에 미치는 영향(금액 기준)

(단위: 파운드)



자료: 영국 재무부, "Illustr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y 2022 Cost of Living Support package and February 2022 Energy Support package on households," 2022.5., Chart 1.B.

○ (에너지 이익 부담금 부과)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의 석유·가스 기업에 '에너지 기업 이익 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을 신규 부과할 계획

- (목적) 유가 상승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규모 이윤이 발생한 기업들이 생활비 지원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업이 해당 수익을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에 재투자하도록 장려
- (내용) 2022년 5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석유·가스 기업 이익의 25%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유가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단계적으로 부과를 중단
  -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동 부담금에 80%의 신규 투자 공제제도를 포함
    * 기업이 1파운드 투자 시 총 91펜스의 조세 절감효과(기존 공제효과 포함) 발생
  - 다만 전기 발전 부분에는 부담금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전력 요금이 생산비용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개혁을 추진할 예정
- (규모) 처음 12개월 동안 약 50억파운드를 조달할 전망

참고 2-Ⅵ-2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타 지원정책

□ 생활비 상승에 직면한 가계 지원을 위해 2년간 TV 수신료 동결 예정(2022.1.17.)[485]

○ (목적) 정부는 재정 압력을 받고 있는 가계를 보호하고, 방송사에 명확한 자금 흐름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6년(2022.4.1.~2028.3.31.) 동안의 TV 수신료 배정 계획을 발표함

○ (주요 내용) TV 수신료는 2024년까지 연 159파운드로 유지되며, 이후 4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될 예정

- BBC는 2022년에 약 37억파운드, 6년간 약 230억파운드의 수신료 자금을 받을 예정
- 웨일스어 방송 채널인 S4C에 대한 계획도 이와 유사하며 디지털 개발을 위해 연간 750만파운드를 추가 할당
- 이 외에도 정부는 BBC 상업 부문의 차입 한도를 7억 5천만파운드로 두 배 이상 늘려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BBC를 지원하기로 함

○ 정부는 이러한 수신료 계획이 BBC 개혁을 위한 정부 로드맵의 한 단계이며, 올해 말에 BBC의 거버넌스, 규제, 개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처방료 동결 결정(2022.5.15.)[486]

○ (목적)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처방약 이용 보장

○ (내용) NHS의 처방료를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하기로 결정

* 일반적으로 NHS 처방료는 평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있음

- 단일 처방료는 9.35파운드, 3개월 처방 비용 선납(Prescription Prepayment Certificate: PPC)은 30.25파운드, 12개월 PPC는 108.10파운드로 동결
- 처방료 동결 외에도 정부는 연금수급자, 학생, 복지 급여 수급자, 요양원 거주자 등에 대한 무료 처방전과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처방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효과) 잉글랜드에서 처방료를 지출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총 1,700만파운드 절감

485)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TV licence fee frozen for two years," Press release, 2022.1.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tv-licence-fee-frozen-for-two-years, 검색일자: 2022.1.18.

486)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New prescription charge freeze to help ease cost of living," 2022.5.15., 검색일자: 2022.5.17.,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rescription-charge-freeze-to-help-ease-cost-of-living

다. 재정지출 효율화

□ 영국 재무부, 정부지출 절감 계획 발표(2022.3.20.)[487]

○ (개요)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부 장관은 비효율적 정부지출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정부지출 효율화 계획을 발표함

- (NHS(국가의료서비스) 지출 효율화) 진단 및 일선 서비스의 디지털화, 수술 허브의 효율성 개선,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디지털 수단 개발 등
- (준정부기관 지출 절감) 2022년 4월부터 공공기관 검토(Arm's Length Body Review)를 통해 정부 자산 사용 개선, 디지털화 강화, 공유 서비스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절감과 지출 효율화를 위한 벤치마킹 활용 등을 검토
- (기타) 낭비적 지출 절감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공무원들로부터 크라우드 소싱해 추후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혁신 챌린지'[488]에 착수

○ (절감규모) 최소 55억파운드의 지출을 절감하여 절감분은 주요 공공서비스에 직접 활용

- NHS의 연간 효율화 목표를 2.2%로 두 배로 상향 조정하여 향후 약 47억 5천만파운드를 3년간 NHS의 우선 순위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준정부조직(quangos)에서도 최소 8억파운드의 예산 절감 추진

○ (주관) 'Efficiency and Value for Money Committee'를 신설해 '2021 지출검토(2021 Spending Review)'에서 설정한 5%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고 부정 지출과 오류 방지를 위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487) HM Treasury, "New efficiency drive to cut £5.5 billion of government waste," 2022.3.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efficiency-drive-to-cut-55-billion-of-government-waste, 검색일자: 2022.3.22.

488)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효율적 정부 운영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여름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

□ 영국 정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의 FY2020-21 정부부처 비용 감축 실적 발표(2022.3.29.)[489]

○ (배경) 영국 정부는 2021년에 '정부 개혁 선언'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출 통제를 통한 공공지출 효율화로 부처 활동 및 정책 전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능 개선을 약속함

* 2021 지출검토 과정에서도 중앙부처 경상예산에 대한 5% 절감분을 확정한 바 있음. 다만 이번에 발표된 예산 절감규모는 2021 지출검토 이전에 수행된 실적임

○ (절감 실적) FY2020-21에 정부는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개선을 통해 약 34억 파운드의 지출을 절감함(<표 2-Ⅵ-10> 참고)

- 부정 수급·계약 및 오류로 인한 손실 감축, 채무 관리 개선, 보조금 효과성 개선을 통해 19억파운드, 상품 및 서비스 조달 개선을 통해 14억파운드, 디지털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1억 4,200만파운드 절감
- 특히 데이터 사용 개선과 디지털 전문성 향상이 비용 절감에 기여함

표 2-Ⅵ-10 예산 절감규모

(단위: 파운드)

기능(팀)	절감규모
부정 수급·계약 등 방지	13억 8,800만
정부 채무 관리	4억 4,100만
정부 보조금 관리	3,400만
디지털, 데이터, 기술	1억 4,200만
상업기능(복잡한 거래)	11억 9,100만
상업기능(시장 및 공급업체)	2억 1,200만
합계	**34억 800만**

자료: Cabinet Office,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2022.3.28.

489) HM Treasury, "Over £3.4bn saved as government ramps up cost-cutting programme," Press release, 2022.3.29., https://www.gov.uk/government/news/over-34bn-saved-as-government-ramps-up-cost-cutting-programme, 검색일자: 2022.4.13.
Cabinet Office, "Government efficiency savings, 2021," 2022.3.2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efficiency-savings-2021/government-efficiency-savings-2021, 검색일자: 2022.4.13.

□ 노동연금부, 복지 시스템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투자 계획 발표(2022.5.19.)[490]

○ (배경) 팬데믹 이전(2019-20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지출 부정수급 비율이 하락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수급 프로세스를 간소화함에 따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 지난해 복지지출 2,582억파운드(정부지출의 22.5%) 중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63억파운드로 추계되어 직전 연도(28억파운드) 대비 크게 증가

○ (대응 정책)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6억파운드를 투자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인력을 강화하고 다수의 신규 권한 도입을 추진

- 부정수급 방지 전문 인력 추가 배치와 데이터 분석 향상을 위해 투자
- 노동연금부의 조사관에게 체포, 수색 및 압수 관련 신규 권한 도입
- 잠재적 부정 청구를 사전 판별하기 위해 대규모 은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강화
- 부정수급자의 적정 처벌을 위한 신규 민사제재금 부과 등

○ (기대 효과) 향후 3년간 약 20억파운드, 5년간 약 40억파운드 이상 재원 절감 가능

49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New benefit counter-fraud plan set to save taxpayer £2 billion," press release, 2022.5.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benefit-counter-fraud-plan-set-to-save-taxpayer-2-billion, 검색일자: 2022.5.2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Fighting Fraud in the Welfare System," 2022.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ghting-fraud-in-the-welfare-system/fighting-fraud-in-the-welfare-system—2, 검색일자: 2022.5.23.

라. 기타 정책

1) 노동·복지 정책

□ 웨일스 정부,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기본 소득 시범 프로그램 계획 발표(2022.2.15.)[491]

○ (목적)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본 소득 시범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

- 빈곤 및 실업 문제 해결, 건강·재정적 웰빙 개선과 같은 기본 소득의 이점에 대한 테스트를 제공

○ (지원 개요) 18세가 되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2년간 월 1,600파운드의 기본소득 지급

- (지원 금액) 지원액은 실질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별도 조건 없이 지원
- (인원) 프로그램에 약 5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 (기간) 지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시작되며 최소 3년간 운영 예정

□ 영국 정부, 취약 가족을 위한 패키지 지원 계획 발표(2022.4.2.)[492]

○ (개요) 영국 정부는 취약 가족[493]을 위한 약 10억파운드 이상 규모의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출생 시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취약 가정의 아기, 어린이,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 자문, 서비스를 제공

491) Welsh Government, "Basic income for care leavers in Wales, pilot announced," Press release, 2022.2.15., https://gov.wales/basic-income-care-leavers-wales-pilot-announced, 검색일자: 2022.2.17.
Welsh Government, "Written Statement: Basic Income Pilot for Care Leavers in Wales," 2022.2.16., https://gov.wales/written-statement-basic-income-pilot-care-leavers-wales, 검색일자: 2022.2.17.

492)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fants, children and families to benefit from boost in support," 2022.4.2.,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fants-children-and-families-to-benefit-from-boost-in-support, 검색일자: 2022.4.13.

493) 실업, 가정 학대, 정신 건강 문제 등 여러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

○ 패밀리 허브(Family Hubs)와 'Start for Life' 프로그램[494]에 3억 200만파운드 지원(<표 2-Ⅵ-11> 참고)

- (부모 지원) 신규 패밀리 허브 구축을 위해 75개 지방 당국을 지원
  - 패밀리 허브를 통해 부모에게 양육방법,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상담과 양육 및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영유아 지원) 부모-영아 관계, 출산 전후 정신건강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는 지역 당국에 1억파운드의 자금 지원

표 2-Ⅵ-11 Family Hub 및 Start for Life 프로그램 지원

(단위: 파운드)

지원 내용	금액
맞춤형 부모-영아 관계 및 출산 전후 정신 건강 지원	1억
패밀리 허브 네트워크 구축	8,200만
모유 수유 지원 서비스 구축	5,000만
근거 기반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	5,000만
지방당국의 Start for Life를 명확히 공표하도록 지원	1,000만
혁신적인 Start for Life 인력 모델 시범 사업	1,000만
합계	**3억 200만**

자료: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Infants, children and families to benefit from boost in support," 2022. 4. 2.

○ 취약 가족 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Families Programme)[495]을 통해 30만 취약 가족에게 전담 인력의 실질적 지원(실습 포함)을 제공(약 7억파운드)

-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에 지원을 확대
-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향후 3년간 집중 지원 프로그램[496]과 독립 지원을 위한 주택, 금융, 고용 관련 상담도 제공(1억 7,200만파운드)

494) 'Start for Life'는 임신, 출산, 영유아 보육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영유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패밀리 허브는 0~19세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족이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조기 지원하는 센터로 Start for Life 프로그램의 서비스도 제공함

495) 동 프로그램은 실업, 경제적 불안정, 학교 결석,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문제,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 가정 학대 등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조기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96) 18세 이후 21세 이전까지 위탁 가정과의 거주 지원(9,980만파운드), 보육원 인근에서의 거주 지원(3,600만파운드), 25세까지 주택, 건강, 복지급여 등 관련 서비스의 정보와 독립을 위한 실용적, 정서적 지원 제공(3,640만파운드) 등

□ 2022년 영국 최저임금 인상(2022.3.31.)[497]

○ (최저임금[498] 수준) 2022년 4월 1일자로 약 250만명의 근로자의 법정생활임금과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표 2-Ⅵ-12> 참고)

- 2022년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전년 대비 6.6% 인상된 시간당 9.5파운드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법정생활임금 도입 이후 최대 인상임
  * 정부는 2024년까지 법정생활임금을 중위 소득의 2/3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음
- 2022년 법정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은 연령 구간별로 전년 대비 4.1~9.8%, 견습직은 11.9% 인상

○ (기대 효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23세 이상 전일제 근로자의 급여가 연간 1천 파운드 증가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

-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이번 인상이 특히 소매, 접객업, 청소 및 유지 보수 등 부문의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표 2-Ⅵ-12 2022년 영국의 최저임금

(단위: 파운드, %)

구분		2021년 4월~2022년 3월	2022년 4월 이후	증가율(%)
법정생활임금	23세 이상	8.91	9.50	6.6
법정최저임금	21~22세	8.36	9.18	9.8
	18~20세	6.56	6.83	4.1
	16~17세	4.62	4.81	4.1
견습직(Apprentice)[499] 최저임금		4.30	4.81	11.9

자료: HM Treasury, "Pay boost for millions as National Minimum and Living Wage rates go up from 1 April," Press release, 2022.3.31.

497) HM Treasury, "Pay boost for millions as National Minimum and Living Wage rates go up from 1 April," Press release, 2022.3.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pay-boost-for-millions-as-national-minimum-and-living-wage-rates-go-up-from-today, 검색일자: 2022.4.13.
Low Pay Commission, "The National Minimum Wage in 2022," 2022.4.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ational-minimum-wage-in-2022, 검색일자: 2022.4.27.

498) 영국의 최저임금은 연령구간과 견습직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법정생활임금은 23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23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최저임금보다 금액이 높음(일반적인 생활임금과는 차이가 있음)

499) 견습직(apprentices)은 16세 이상 청년 대상, 특정 직업의 기술(skill)과 지식을 얻기 위해 근로와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유급 일자리임

2) 산업·에너지·지역발전 정책

□ 영국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Levelling Up' 백서 발표(2022. 2. 2.)[500]

○ (개요) 영국 정부는 'Levelling Up' 백서를 발표하여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스템 변화 방안을 제시

* '레벨링 업(Levelling Up)'은 경제, 사회, 건강 등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임

○ (주요 미션) 2030년을 목표 기간으로 12개의 중기 미션을 설정(<표 2-Ⅵ-13> 참조)하였으며 향후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지역 격차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

표 2-Ⅵ-13 레벨링 업을 위한 미션

영역		미션
민간부문 성장을 통한 낙후 지역의 생산성, 임금, 일자리, 생활 수준 제고		
	생활 수준	2030년까지 영국 전 지역에서 임금, 고용, 생산성을 제고하고 각 지역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갖추며 타 지역과의 격차를 축소
	R&D	2030년까지 남동부 이외 지역에 대한 국내 R&D 공공투자를 최소 40% 이상 확대
	운송 인프라	2030년까지 지역의 대중 교통 연결을 런던 수준에 근접하게 개선
	디지털 연결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 기가비트 광대역과 4G 커버리지 조성
취약지역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		
	교육	2030년까지 초등학생의 문해/수리력을 향상시켜 잉글랜드 내 90%의 아동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도록 함
	숙련	전 지역 양질의 숙련 교육 이수자 수를 매년 확대(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건강	건강수명(HLE) 지표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2035년까지 HLE 5년 상승
	웰빙	모든 지역의 웰빙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축소
공동체 의식, 지역 자부심, 소속감 회복		
	지역 자부심	타운 센터에 대한 만족도 및 지역 문화·커뮤니티 참여 제고, 격차 완화
	주택	전 지역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수 증대, 수준 미달 임차 주택 수 50% 감축
	범죄	취약 지역의 살인, 폭력 등 범죄 감소
지역 리더와 지역사회의 권한 강화		
	지역 리더십	잉글랜드 전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에 대해 권한 위임 계약 확대 및 간소화

자료: HM Government,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2022. 2., pp. xvii~xviii의 주요 내용 요약

500)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Government unveils levelling up plan that will transform UK,", Press release, 2022. 2.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unveils- levelling-up-plan-that-will-transform-uk, 검색일자: 2022. 2. 17.
HM Government, *Levelling up the United Kingdom*, 2022. 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54769/Levelling_Up_the_United_Kingdom__accessible_version_.pdf, 검색일자: 2022. 2. 17.

○ (신규 정책 발표) 백서에서 레벨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도 제시됨

- (급여 및 생산성 제고) 2024-25년까지 국내 R&D 자금의 최소 55%를 남동부 이외 지역에 투자, 신규 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정부 자금 지원,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160억파운드의 지방정부 연금 제도(Local Government Pension Scheme) 동원 등
- (기회 확산 및 공공서비스 개선) 취약 지역에 신규 '교육 투자 지역(55개)' 선정 및 지원, '지역 특화 숙련(Skills) 개선 계획' 이행·지원, 향후 '건강 불평등' 관련 백서에서 대응 전략 수립 등
- (지역의 자부심 회복)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원, 민간 임대주택 부문의 '적정 주택 기준(Decent Homes Standard)' 준수 의무화, Levelling Up Home Building Fund(15억파운드)[501] 도입, 비수도권에 대한 문화 지출 확대 등
- (지역 리더의 권한 강화) 커뮤니티 재생, 역량 제고, 지역기업 지원 관련 26억파운드의 '공동 번영 기금(UK Shared Prosperity Fund)'을 지역 리더들에게 분권화, 지역 리더들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성장 자금 조건 간소화 등

○ (향후 계획) 이해관계자의 참여·협의 절차에 착수하고 일부 레벨업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 예정

□ 보리스 존슨 총리, 지방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2022.3.10.)[502]

○ (배경) 정부는 수정된 '국가 조선 전략(refreshed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503]'을 발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

501)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고 우선순위 지역의 도시 재생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502)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M drives up regional investment with 30-year strategy to secure shipbuilding future," 2022.3.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pm-drives-up-regional-investment-with-30-year-strategy-to-secure-shipbuilding-future, 검색일자: 2022.3.14.
Ministry of Defence, "New Shipbuilding vision launched," 2022.3.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shipbuilding-vision-launched, 검색일자: 2022.3.14.

503) National Shipbuilding Office,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A refreshed strategy for a globally successful, innovative and sustainable shipbuilding enterprise*, 2022.3.

* 2017년에 정부는 해군 조달 혁신, 해군 함정 수출 및 설계 계약 보장 등의 계획을 담은 '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를 발표해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범위를 확장하여 영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 개발, 투자 제고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유럽 방어력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확대

○ (규모) 정부가 향후 3년간 조선 분야에 4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예정

○ (주요 지원) 향후 30년간 150여척 이상의 신규 군함 및 민간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조선소와 공급업체들을 지원

- (자금 접근성 제고)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국내 조선사의 자금 조달 개선
- (직업 능력 개발) 태스크 포스를 신설해 조선 분야의 주요 직업 기술(skill) 육성·개발
-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 선박 및 인프라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기관(UK SHORE) 설립 및 자금 투자(2억 600만파운드) 등

□ 영국 정부, 에너지 안보 전략(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 발표(2022.4.6.)[504]

○ (개요) 글로벌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국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안보, 번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에너지 안보 전략은 기존에 발표된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505]과 '넷 제로 전략'[506]에 기반하며 기존 계획들과 함께 해상 풍력 등 신규 산업에

504)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Major acceleration of homegrown power in Britain's plan for greater energy independence," Press release, 2022.4.6., https://www.gov.uk/government/news/major-acceleration-of-homegrown-power-in-britains-plan-for-greater-energy-independence, 검색일자: 2022.4.13.
HM Government, *British energy security strategy-Secure, clean and affordable British energy for the long term*, 2022.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67835/british-energy-security-strategy-web.pdf, 검색일자: 2022.4.13.

505) HM Government,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20.11.

506) HM Government, *Net Zero Strategy: Build Back Greener*, 2021.10.

1천억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48만개의 신규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지원할 전망

○ (국내 석유 생산 지원 및 에너지 전환 촉진) 단기적으로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지원하면서 풍력, 신규 원자력, 태양, 수소 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2030년까지 전력의 95%를 저탄소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함

- (원자력) 2050년 원자력 발전 목표를 현재보다 세 배 넘게 늘어난 최대 24GW로 제시(전체 전력 수요 대비 비율이 현재 15%에서 2050년 25%로 확대)
  - 소형 모듈 원자로가 원자력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신규 기관 설립,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Future Nuclear Enabling Fund, 1억 2천만파운드) 출범, 원전 최대 8기 신규 건설 등을 추진
- (해상 풍력) 신규 해상 풍력 단지의 승인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50GW 목표를 달성
- (석유 및 가스) 신규 개발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태스크 포스와 함께 신규 북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위한 허가 입찰이 가을에 시작될 예정
- (태양에너지) 현재 14GW 수준의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2035년까지 최대 70GW로 5배 증대
- (수소)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 목표를 10GW로 기존 목표 대비 두 배 상향 조정
  - 절반 이상을 그린 수소로 생산하고 해상 풍력 잉여 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
- (수요) 가스 수요를 줄이는 히트 펌프 제조 지원, 에너지 효율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품 표준 개선 등

○ (청정 일자리 확대) 이번 조치로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하여 2030년까지 총 4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 2028년까지 해상풍력에서 9만개(추가 3만개), 2028년까지 태양에너지 분야에서 1만개(2배 확대), 2030년까지 수소에서 1만 2천개(추가 3천개)의 일자리를 지원

3) 우크라이나 지원[507]

□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영국의 인도주의 및 경제 지원 계획(2022년 3월 기준)[508]

○ 영국 정부는 2022년 3월 기준, 약 4억파운드 규모의 우크라이나 위기 관련 지원을 약속함

- 의료·생필품 제공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지원(2억 2천만파운드)
  - 2월에 4천만파운드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8천만파운드(3월 1일), 1억파운드(3월 7일) 규모의 추가 원조를 약속
- 우크라이나 경제 강화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ODA 지원(1억파운드)
-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재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을 지원(7,400만파운드)
  - 우크라이나의 공공부문 급여, 사회안전망, 연금 등 국가 주요 기능 유지를 지원

507) 현재까지(2022년 5월 기준)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 및 경제적 지원, 군사적 지원 등을 포함해 약 28억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Ministry of Defence, "Innovation fund launches to support Ukrainian armed forces," 2022.5.30.,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novation-fund-launches-to-support-ukrainian-armed-forces, 검색일자: 2022.6.24.

508)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UK pledges another £80 million in aid to help Ukraine deal with humanitarian crisis," Press release, 2022.3.1.,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raine-uk-pledges-another-80million-in-aid-to-help-ukraine-deal-with-humanitarian-crisis, 검색일자: 2022.3.16.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UK injects $100m into Ukraine's economy as Canadian and Dutch Prime Ministers are welcomed to Downing Street," 2022.3.7.,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injects-100m-into-ukraines-economy-as-canadian-and-dutch-prime-ministers-are-welcomed-to-downing-street, 검색일자: 2022.3.16.,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Ukrainian children brought to England for cancer treatment," Press release, 2022.3.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rainian-children-brought-to-england-for-cancer-treatment, 검색일자: 2022.3.16.
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Homes for Ukraine' scheme launches," Press release, 2022.3.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mes-for-ukraine-scheme-launches, 검색일자: 2022.3.1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Immediate benefit support for those fleeing the invasion in Ukraine," Press release, 2022.3.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immediate-benefit-support-for-those-fleeing-the-invasion-in-ukraine, 검색일자: 2022.3.22.

○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영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지원, 영국 입국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복지 혜택 제공 등을 추진

- 정부는 개인, 자선 단체 등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도울 수 있도록 'Homes for Ukraine'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6개월 이상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월 350파운드를 지원
- 긴급 규정을 통해 영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즉각적인 복지 급여와 구직 지원을 제공할 예정
  - 통합급여(Universal Credit),[509] 주택 수당, 연금 크레딧, 장애인 개인자립수당, 아동 장애 생활수당, 기여형 고용지원수당, 구직수당, 맞춤형 구직지원 등 제공
  - 이주자 거주 심사(Habitual Residence Test 등)를 면제하여 약 3개월의 대기 없이 수급 자격이 있으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통화정책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MPC), 2022년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2022.6.16.)[510]

○ 통화정책위원회(MPC)는 2022년 6월 회의(6월 15일)에서 영국의 기준금리를 종전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표 2-Ⅵ-14> 참고)

* 6인은 0.25%p, 3인은 0.50%p 인상 의견을 제시

- 2021년 12월부터 기준금리가 5회 연속 인상되었으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200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기록
  - 2021년 12월에 0.15%p, 2022년 2월, 3월, 5월에 각각 0.25%p씩 금리 인상
  - 현재의 타이트(tight)한 노동시장과 계속되고 있는 견고한 국내 비용 및 물가 상승 압력 징후, 이러한 압력이 지속될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결정

509) 저소득자 또는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을 위해 수급 자격 충족 시 제공

510)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1.25%-June 2022," 2022.6.16.,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june-2022, 검색일자: 2022.6.21.

- 통화정책위원회는 특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힘

표 2-Ⅵ-14 최근 영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일시	'17.11.2.	'18.8.2.	'20.3.11.	'20.3.19.	'21.12.16.	'22.2.3.	'22.3.17.	'22.5.5.	'22.6.16.
금리	0.50	0.75	0.25	0.10	0.25	0.50	0.75	1.00	1.25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2.6.16.

○ 2022년 6월 15일 기준 APF(Asset Purchase Facility: 자산매입제도) 보유 자산 규모는 8,660억파운드(국채 매입 8,470억파운드, 회사채 매입 193억파운드)로 APF 보유 채권 규모 축소를 결정했던 2월 대비 감소함

- 2022년 2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위원회는 APF의 보유 채권 규모* 축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511]

  * 2022년 2월 기준, APF 보유 자산 규모는 8,950억파운드(국채 매입 8,750억파운드, 회사채 매입 200억파운드)임

  • (국채) 만기 자산의 재투자 중단을 통해 국채매입 잔액을 축소하기로 하고 금리가 최소 1%로 상승한 경우에만 적극적인 국채 매각 절차 개시를 고려할 것임 재확인

  • (회사채) 만기 자산의 재투자 중단과 자산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채 매입 잔액을 축소해 2023년 말까지 회사채 매입 잔고를 완전히 줄이기로 결정

- 또한 2022년 5월 회의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됨에 따라 APF 보유 국채의 매각 절차 개시를 고려할 것이며 8월 회의에서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밝힘[512]

  • 매각 개시 결정은 경제 상황에 달려 있으며, 국채 매각은 금융시장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

511)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0.5%-February 2022," 2022.2.3.,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february-2022, 검색일자: 2022.2.17.

512) Bank of England, "Bank Rate increased to 1% - May 2022," 2022.5.5.,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2/may-2022, 검색일자: 2022.5.17.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 영국 통계청, 2022년 1분기 GDP 성장률(1차 추계) 발표(2022.5.12.)[513]

○ 2022년 1분기 영국의 실질GDP는 직전 분기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함(<표 2-Ⅵ-15> 참고)

- 2022년 1분기 GDP는 팬데믹 이전(2019년 4분기)보다 0.7% 높은 수준

○ (경제활동별) 2022년 1분기 서비스업, 건설업, 생산업의 생산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0.4%, 3.8%, 1.2% 증가

- 서비스업, 건설업의 생산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생산업은 공급망 문제가 일부 반영되어 팬데믹 이전보다 1.8% 낮은 수준임

○ (지출항목별) 레스토랑 및 호텔, 의류 등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2022년 1분기 가계소비는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한 반면, 정부소비는 주로 의료지출 감소로 1.7% 감소

- 또한 수입은 9.3% 증가, 수출은 4.9% 감소한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적자가 명목GDP의 5.3%로 확대됨

513)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anuary to March 2022," 2022.5.12.,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gdpfirstquarterlyestimateuk/januarytomarch2022, 검색일자: 2022.6.23.

표 2-Ⅵ-15 분기별 GDP 성장률과 주요 요소별 증가율(전분기 대비)

(단위: %)

구분		2021				2022
		Q1	Q2	Q3	Q4	Q1
실질GDP 성장률		-1.2	5.6	0.9	1.3	0.8
경제활동별	서비스업	-1.6	6.5	1.2	1.5	0.4
	생산업	-0.3	0.7	0.3	-0.2	1.2
	건설업	1.0	4.0	-1.5	1.0	3.8
	농림어업	2.8	2.7	4.6	0.5	0.6
지출항목별	가계소비	-3.4	8.5	2.6	0.5	0.6
	비영리기관 소비	-7.4	7.4	4.5	-0.7	-2.6
	일반정부소비	1.0	8.5	-0.6	1.5	-1.7
	총고정자본형성	-0.9	1.7	0.4	1.1	5.4
	(기업 투자)	-7.3	7.1	0.7	1.0	-0.5
	수출	-7.9	7.2	-4.1	6.9	-4.9
	수입	-12.4	4.9	4.6	0.3	9.3

자료: ONS, "GDP first quarterly estimate, UK: January to March 2022," 2022.5.12.

□ 영국 통계청, 2022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2022.6.22.)[514]

○ 2022년 5월 영국의 CPIH[515](자가 거주자의 주거비 등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여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표 2-Ⅵ-16>와 [그림 2-Ⅵ-3] 참조)

- 주거 및 가사서비스(주로 전기·가스·기타 연료, 자가거주자의 주거비 상승)와 교통(주로 자동차 연료, 중고차 비용 상승) 부분이 전년 동월 대비 CPIH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

514) ON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2," 2022.6.22.,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may2022, 검색일자: 2022.6.23.

515)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 2022년 5월 영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7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역사적 CPI 추정치 기준으로 1982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

○ 2022년 5월의 전월 대비 CPIH 상승률과 CPI 상승률은 각각 0.6%, 0.7%로 모두 2021년 5월 상승률보다 각각 약 0.1%p 높게 나타남

-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 상승이 5월의 전월 대비 물가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

표 2-Ⅵ-16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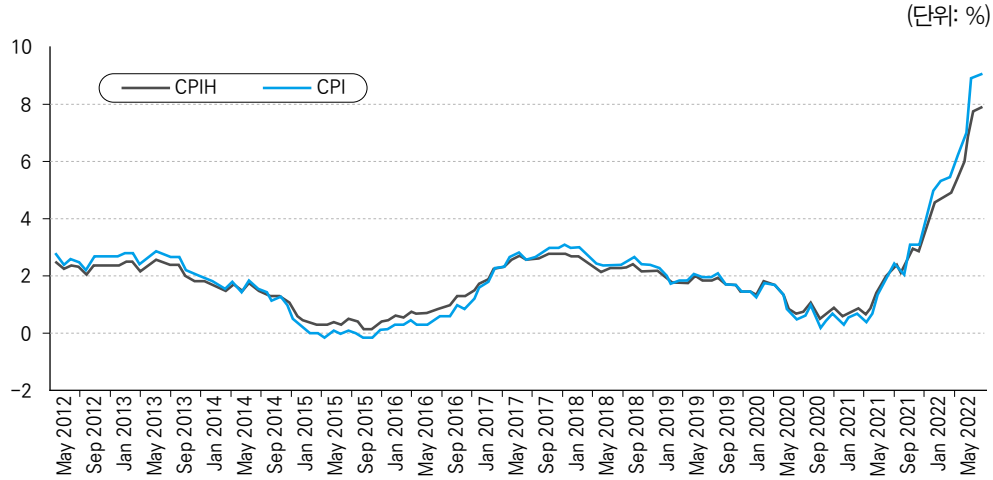
(단위: 지수, %)

구분	CPIH (2015=100)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전월 대비 상승률	CPI (2015=100)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전월 대비 상승률
2021년 5월	111.0	2.1	0.5	110.8	2.1	0.6
2022년 4월	119.0	7.8	2.1	120.0	9.0	2.5
2022년 5월	119.7	7.9	0.6	120.8	9.1	0.7

자료: ON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2," 2022.6.22., Table 1.

그림 2-Ⅵ-3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2012년 5월~2022년 5월)

(단위: %)



자료: ON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May 2022," 2022.6.22., Figure 1.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2년 3월 공공재정 현황(잠정치)' 발표(2022.4.26.)[516]

○ (재정적자) FY2021-22의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공공부문 은행 제외)은 이전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518억파운드로 통계 시작(FY1946-47)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표 2-Ⅵ-17> 참고)

-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공공부문 은행 제외)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FY2020-21에 14.8%로 7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FY2021-22에는 6.4%로 하락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7년 기간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채무) 2022년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public sector net debt, 공공부문 은행 제외)는 2조 3,438억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2,094억파운드 증가

- 2022년 3월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96.2%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해 1960년대 초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임

○ (중앙정부 수입 및 지출) FY2021-22의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8,300억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1,053억파운드 늘어난 반면,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8,933억파운드 전년 동기 대비 503억파운드 감소

- 코로나19 고용유지보조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종료 등이 반영되어 보조금이 674억파운드 감소했고 305억파운드의 채무이자 지급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함

○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 FY2021-22의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517]은 전년 동기 대비 2,503억파운드 감소한 1,292억파운드임

516) ON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rch 2022," 2022.4.26.,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march2022, 검색일자: 2022.5.17.

517)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의 차이로 정부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 규모를 나타냄. UK Asset Resolution과 Network Rail이 제외된 기준임

표 2-Ⅵ-17 공공부문 재정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FY2020-21	FY2021-22	증감
공공부문 순차입	317.6	151.8	-165.7
(GDP 대비 %)	14.8	6.4	-8.4
공공부문 순채무	2,134.4	2,343.8	209.4
(GDP 대비 %)	93.9	96.2	2.3
중앙정부 경상수입	724.7	830.0	105.3
중앙정부 경상지출	943.6	893.3	-50.3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	334.5	129.2	-250.3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은 UK Asset Resolution과 Network Rail이 제외된 기준
자료: ON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rch 2022," 2022.4.26.

다. 기타 통계

□ 영국 통계청, 영국의 2020년 의료비 통계 발표(2022.5.9.)[518]

○ (총 경상의료비) 2020년 영국의 경상의료비는 2,576억파운드(1인당 3,840파운드)로 전년 대비 10.0%(실질 기준) 증가해 통계 시작(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그림 2-Ⅵ-4] 참고)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정부 부담 의료비 급증이 2020년 의료비 증가를 주도했고 정부 부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는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외래 등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와 임의 가입 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은 감소한 반면, 마스크 등 의료 재화에 대한 본인 부담 지출은 증가

518) ONS,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2020," 2022.5.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caresystem/bulletins/ukhealthaccounts/2020, 검색일자: 2022.5.17.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9년 9.9%에서 2020년 12.0%로 상승

○ (정부지출 경상의료비) 2020년 정부 부담 의료비(NHS,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 의료 지출 포함)는 전년 대비 14.9%(실질 기준) 증가한 2,134억파운드로 총 의료비의 83%를 차지함([그림 2-Ⅵ-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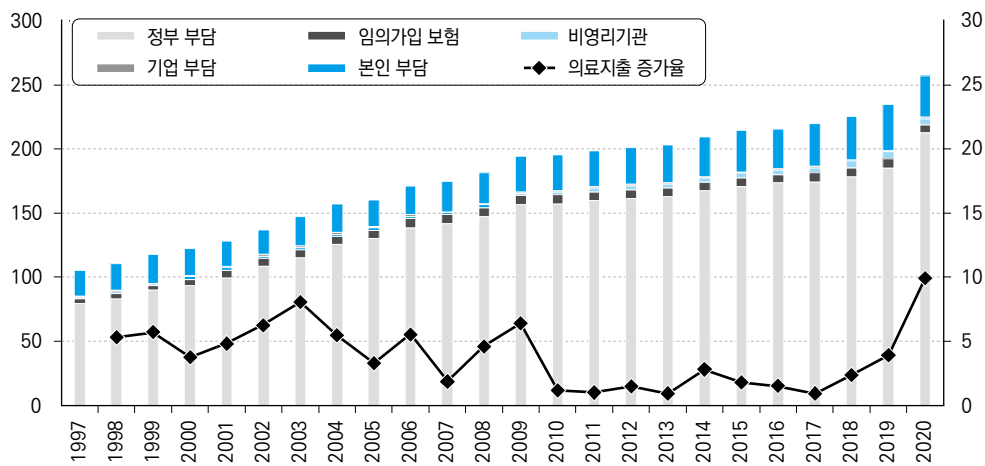
- 기능별로 치료 및 재활(정부 의료비의 62.8%)이 2020년 정부 의료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함
- 2020년에 예방 관련 정부 의료비 지출이 전년 대비 69.0% 늘어나 정부 의료비 지출 중 6.7%를 차지함
  - 이는 코로나19 진단·추적, 관리 비용(공공 캠페인 등), 발병 억제를 위한 지방정부지출 등 팬데믹 기간의 정부 추가 지출로 인한 것임

○ (장기요양 지출) 2020년 장기요양 지출은 54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2%(실질 기준) 증가([그림 2-Ⅵ-6] 참고)

- 팬데믹 기간 장기요양 공급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에 힘입어 정부 부담 지출이 전체 장기 요양 지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함

그림 2-Ⅵ-4 총 경상의료지출(재원별) 추이

(단위: 십억파운드, %)



주: 좌축(막대)은 지출금액(십억파운드), 우축(꺾은선)은 총 경상의료지출의 연간 실질 증가율(%)임
자료: ONS,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2020," 2022.5.9.

그림 2-Ⅵ-5 기능별 정부부담 의료비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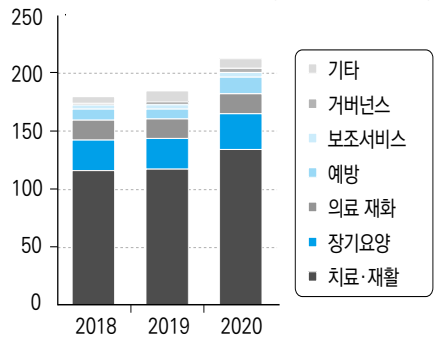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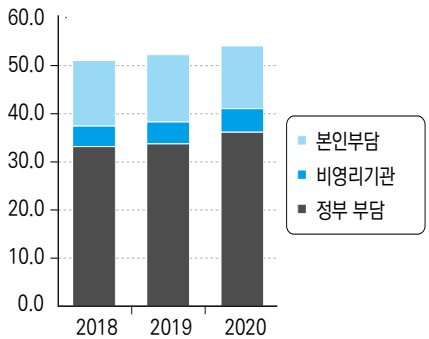


그림 2-Ⅵ-6 장기요양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참고 2-Ⅵ-3 영국의 2021년 의료비(잠정치) 통계(2022.5.9.)[519]

※ 영국 통계청은 2020년 의료비 통계 발표일에 2021년 의료비의 잠정 추정치도 발표하였으며 이 수치는 추후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힘

□ (총 경상의료비) 2021년 영국의 경상의료비(잠정치)는 전년 대비 명목 기준 7.4%, 실질 기준 7.1% 증가한 2,770억파운드로 추계되어 2020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완화됨

□ (정부지출 경상의료비) 코로나19 진단·추적,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힘입어 2021년 정부 부담 의료비는 7.5%(명목 기준) 증가한 2,290억파운드를 기록

○ 2021년 정부 부담 의료비는 영국 정부의 재화·서비스 지출[520]의 약 45%를 차지

□ (비정부지출 경상의료비) 2020년에 3.9% 감소했던 정부 이외 주체가 부담한 의료비는 2021년에 7.0%(명목 기준) 증가한 470억파운드로 추계

519) ONS, "Healthcare expenditure, UK Health Accounts provisional estimates: 2021," 2022.5.9.,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healthcaresystem/bulletins/healthcareexpenditureukhealthaccountsprovisionalestimates/2021, 검색일자: 2022.5.17.

520) General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라. 주요 보고서

□ 예산책임청(OBR), '2022년 복지 지출 보고서(*Welfare trends report-May 2022*)' 발표(2022.5.25.)[521]

○ (개요) 2022년 복지 지출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 40년간 발생한 세 차례의 경기침체의 비교를 통해 경기침체기와 이후 기간에 나타난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522]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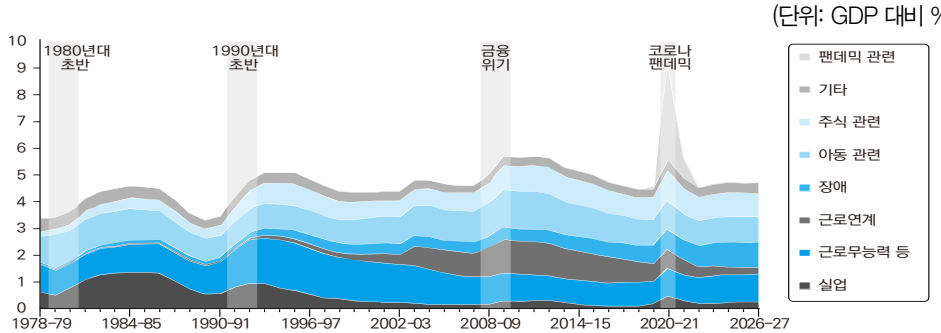
* 예산책임청은 복지지출의 추세와 변동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 지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올해부터 발간 일정을 매년에서 격년으로 변경)

○ (복지지출 규모)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과 같은 전례 없는 대규모 비용으로 인해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은 GDP 대비 약 9%로 과거 경기침체기보다 크게 증가([그림 2-Ⅵ-7] 참고)

- 팬데믹 관련 지원과 기타 한시적 복지 지원이 신속하게 도입·철회되어 기존 경기침체 대비 복지지출의 증가와 이후 감소 속도 모두 두드러짐
- 팬데믹 관련 경기침체는 네 번의 경기침체 중 중기 복지지출 수준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침

그림 2-Ⅵ-7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추이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2.

521) OBR, *Welfare trends report-May 2022*, 2022.5.25., https://obr.uk/wtr/welfare-trends-report-may-2022/, 검색일자: 202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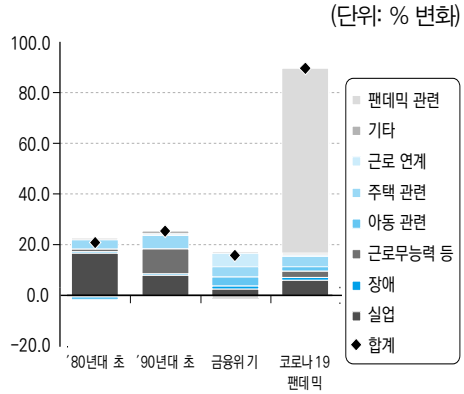
522)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출을 제외한 것으로 주로 생산가능인구와 그 자녀에게 제공하는 복지지출과 관련됨

○ (경기침체기의 복지지출(단기)) 팬데믹 기간의 복지지출(팬데믹 관련 지원제도 포함)은 1년간(2020-21년) 실질 기준 90% 증가해 과거 경기침체의 복지지출 증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그림 2-Ⅵ-8] 참고)

- 이전 경기침체와 달리 팬데믹 시기의 일시적 대규모 지원[523]은 실업과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해 팬데믹이 종래의 복지 지출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상당히 줄였고 기존 복지지출의 증가도 제한적으로 나타남
  - 실업률 증가폭이 더 컸던 1980년대 초 침체는 실업수당 지출의 역할이 팬데믹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컸음
  - 노동시장의 비경제활동 증가와 복지급여 운영의 변화(실업급여에서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로 유입)로 1990년대 초 침체기에 근로무능력 관련 복지지출이 팬데믹 대비 더 많이 증가함
  - 금융위기에는 세액공제액의 재량적 증가와 실질 급여 하락에 따른 근로연계 복지급여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반영되어 근로 연계 복지지출이 더욱 크게 증가

그림 2-Ⅵ-8 침체시기의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초기 변화(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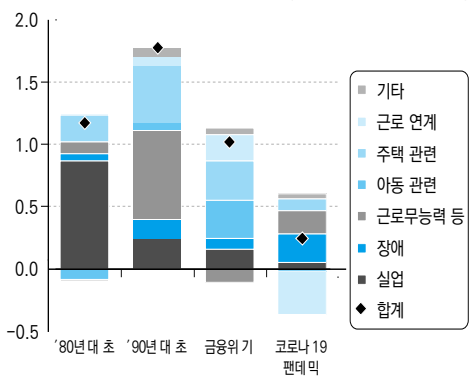
(단위: % 변화)



자료: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3.

그림 2-Ⅵ-9 침체 이후 연금 비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출 중기 변화

(단위: GDP 대비 %)



자료: OBR, *Welfare trends report - May 2022*, 2022., Chart 4.

523) FY2020-21에 872억파운드의 비용을 지출하여 1,150만명의 소득을 지원

○ (경기회복기의 복지지출(중기)) 팬데믹 시작 후 5년간 연금 비수급자 복지지출은 GDP의 0.3% 정도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과거의 경기침체 이후 복지지출 증가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그림 2-Ⅵ-9] 참고)

- 장애와 근로무능력 관련 복지 지출이 주요 증가 요인(각각 GDP의 0.2% 증가)으로 이는 장애 유병률의 지속적 상승, 직접적인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및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등에 기인함
- 반면 근로 연계 복지 지출은 GDP의 0.3%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복지제도 간 분류방식 변화, 기준 세액공제액(CPI 연동)보다 빠른 명목 소득 증가로 수급 자격에서 벗어난 경우 등이 반영된 수급건수 감소에 기인
- FY2024-25에 실업수당 지출은 경기침체 전 대비 GDP의 0.1% 증가해 과거의 경기침체 후 복지지출 증가폭보다는 훨씬 작을 전망[524)]

○ (리스크와 불확실성) 실업률, 건강 상태에 따른 비경제활동, 잠재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경제적 요인'과 복지급여 상향 조정 지연, 실질 소득 관련 압력, 부정수급·오류 등 '정책 및 운영적 요인'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에너지 및 물가 상승에 의한 단기 경제전망 악화로 또 다른 경기침체의 리스크가 상승

524) 고용유지지원금, 자영업자 소득지원 등 노동시장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정부 개입으로 중기적인 실업의 상흔(scar)이 없다는 가정을 반영

주요 자료 출처

EU

- EU 보도자료, https://europa.eu/newsroom/home_en
-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
- EU 의회, https://www.europarl.europa.eu
- 유럽중앙은행, https://www.ecb.europa.eu/
- EU 통계청, https://ec.europa.eu/eurostat

IMF

-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OECD

-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 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oecd-ko/index.do

미국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igned-legislation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일본

- 일본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Japan) http://www.mof.go.jp/
-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http://www.cao.go.jp/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ttp://www.mhlw.go.jp
- 일본 중앙은행(Bank of Japan) http://www.boj.or.jp/
- 일본 수상관저(Prime Minister's Office of Japan) http://kantei.go.jp
- 일본 통계청(Statistics Japan) http://www.stat.go.jp/

독일

- 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연방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연방경제에너지부 http://www.bmwi.de/
- 연방노동청 https://www.bmas.de/
- 안정화위원회 http://www.stabilitaetsrat.de/
- 연방은행 http://www.bundesbank.de/
- 연방환경부 https://www.bmu.de/
-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 ifo경제연구소 https://www.ifo.de/

프랑스

-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 프랑스 예산국 http://www.budget.gouv.fr/
- 프랑스 정부 http://www.gouvernement.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프랑스 내무부 https://www.interieur.gouv.fr/
- 프랑스 법률 및 행정정보국 운영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

영국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ime-ministers-office-10-downing-street
  -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레벨업, 주택, 커뮤니티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levelling-up-housing-and-communities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work-pensions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business-energy-and-industrial-strategy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digital-culture-media-sport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inistry-of-defence
  -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low-pay-commission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budgetresponsibility.independent.gov.uk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 웨일스 정부(Welsh Government), https://gov.wales/

2022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년 7월 27일 인쇄
2022년 7월 29일 발행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세종, 사00002
조판 및 인쇄 ㈜범신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